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0123-10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3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 I

(세부사업계획)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분야

해운·해사·항만 분야

세월호후속대책



해양수산부

목 차

제 I 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해양분야

1. 해양정책관	55
1-1.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57
① 해양교육사업	57
② 해양문화사업, 바다의 날 행사	66
③ 세계해양포럼, 인천동북아포럼	75
④ 해양과학학술대회지원	81
⑤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88
⑥ 서해5도 해양문화체험 및 남북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99
1-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111
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111
②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	121
③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132
④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센터 구축	143
1-3.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	154
1-4. 해양관광육성	165
1-5.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187
1-6.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195
①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95



2023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 I 제 I 권

2. 해양환경정책관	205
2-1. 해양보호구역관리	207
2-2. 해양정원조성사업	224
2-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40
2-4. 연안관리	251
①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251
②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268
③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274
2-5.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280
2-6.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계정 포함)	286
2-7.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92
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292
②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297
③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02
2-8.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307
① 유해교란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307
②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318
3. 국제협력정책관	331
3-1.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333
3-2.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346
3-3.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357
3-4. 연안국과의 협력(ODA)	367

목 차

해운·해사·항만 분야

4. 해운물류국	379
4-1. 물류기업유치지원	381
4-2.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388
①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388
②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416
4-3.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424
① 선원복지고용센터 경상운영비	424
② 선원복지증진사업	430
③ 선원직업안정사업	437
④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443
4-4.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449
①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449
② 선원인권보호교육 사업	457
③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465
4-5.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473
4-6.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479
4-7.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485
4-8. 전환교통 지원	491
4-9.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498
4-10.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512
①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512
②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520



2023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 I 제 I 권

③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지원	527
④ 한국해운물류산업활성화기반마련	534
⑤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	540
⑥ 도선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	546
4-11.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551
① 항만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551
②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DPF) 부착사업	559
4-12.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577
4-13.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지원	585
4-14.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590
4-15.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96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96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601
③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611
4-16.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지자체)	615
4-17.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627
4-18.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633
4-19.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37
5. 해사안전국	645
5-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647
5-2.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656
①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지원	656
②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666
③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지원	677

목 차

5-3.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688
① e-Nav 선박단말기 보급	688
② e-Nav 선박단말기 보급·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95
③ LTE-M 활용 내항선 응급조치지원 시범사업	700
5-4.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705
5-5. 표지시설	716
①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연구개발 사업	716
②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운영	722
6. 항만국	729
6-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731
6-2.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738
6-3. 연안정비	745
① 강릉 순곳 ~ 사근진 지구	745
② 고창 명사십리 지구	751
6-4. 광양항(3단계)	757
① 배후도로 확포장	757
②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762
③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766
6-5. 인천남항	770
6-6. 기타항만 재개발	776
6-7. 항만 육상전력공급설비 구축	780
6-8. 항만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789
6-9. 제주항	808
6-10. 화순항	813



2023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 I 제 I 권

6-11. 추자항	818
6-12. 제주일반항건설	823
6-13.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828

세월호후속대책

7.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833
7-1.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835
①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	835
② 안산 추모시설 건립	842
③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849
④ 4·16재단 운영 지원	856

제 II 권

수산분야

8. 수산정책관	875
8-1. 수산식품산업육성	877
① 가공설비지원	877
② 가공설비지원 외 사업	903
8-2.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922
8-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931

목 차

8-4. 수산물해외시장개척	943
8-5. 수산물 물류환경개선	977
8-6.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991
8-7.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1011
8-8.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021
① 저온·친환경 위판장	1021
②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1031
③ 자동선별기	1041
④ 저온차량	1050
⑤ 수산물 도매시장 냉동·냉장 창고 지원	1059
8-9. 산지유통시설 지원	1068
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1068
② 청정 위판모델 구축	1079
8-10. 수급위기관리체계구축	1089
① 대중성어종 가격조사	1089
8-11.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1105
①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1105
②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1113
8-12.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129
① 어식백세 캠페인 및 판로확대	1129
②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민간보조)	1146
③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자치단체보조)	1163
④ 후쿠시마 대응 홍보	1178
8-13. 수산어업행정지원	1185



2023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 I 제 I 권

8-14.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1199
① 어업경영 통계조사	1199
② 단위수협 감사 지원	1205
③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211
④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	1216
⑤ 어촌계 통계조사	1225
⑥ 남북수산협력 연구과제 지원	1231
⑦ 어촌지역활성화 지역연구	1237
8-15.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1243
①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	1243
8-16.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1249
① 수산장비임대	1249
② 이동수리소 지원	1280
8-17.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301
8-18. 어업인 삶의 질 향상	1374
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1374
②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388
③ 어업활동지원	1402
④ 어촌생활돌봄지원	1421
8-19. 수산 공익직불제	1442
① 경영이양 직불제	1442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1461
③-1 배합사료 직불제	1503
③-2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1533
8-20. 수산정보화(정보화)	1557
8-21. 피해보전직불금	1576

목 차

8-22. 원양어업활성화	1617
① 해외어장 자원조사	1617
② 해외선원 묘지관리	1640
③ 원양산업 통계조사	1651
④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지원	1664
⑤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1672
⑥ 오피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	1679
⑦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1688
⑧ 해상전자저울 설치 지원	1696
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05
9-1. 천일염산업육성	1707
① 천일염포장재 지원	1709
② 염전바닥재개선	1718
③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1728
④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1739
⑤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지원	1750
⑥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설비지원	1764
⑦ 천일염소비촉진홍보	1783
9-2. 수산물위생관리	1789
①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패류생산 지정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설치) ·	1789
②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생산어가 지원	1798
③ 유해생물구제(적조, 기생충·썩)	1813
④ 유해생물구제(해파리)	1832
⑤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1855
9-3. 수산물품질관리	1872



제 III 권

어업·어촌분야

10. 어업자원정책관	1885
10-1. 어업협정이행	1887
① 민간어업협력사업(회의, 어장청소 및 불법어구 철거)	1887
②-1 민간어업협력사업(수산자원조사 및 수산자원 방류) - 수산자원조사사업	1893
②-2 민간어업협력사업(수산자원조사 및 수산종자방류) - 수산종자방류	1907
10-2.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1924
10-3.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1937
10-4. 친환경 어구보급	1947
① 생분해 어구보급	1947
②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1977
③ 굴폐각 친환경처리지원	2026
④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구축	2042
10-5.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055
10-6. 자율관리어업육성	2079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2079
②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2100
③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	2110
10-7. 연근해어선감척(지방자치단체)	2116
①-1 연근해어선감척(2023년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2116
①-2 연근해어선감척(2023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2157

목 차

② 연근해어업실태조사(2023년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활용 지침)	2186
10-8. 어선청년임대	2201
10-9.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2214
①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	2214
②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2249
10-10.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2261
① 바다숲 조성사업	2261
② 수산자원 증대(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2286
③ 수산종자 자원관리	2306
④ 양양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2312
⑤ 환동해 블루카본 연구	2319
10-11. 낚시산업 선진화	2326
10-12.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2338
11. 어촌양식정책관	2355
11-1.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2357
①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2357
②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신축)	2373
11-2.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390
① 양식창업및시설지원(양식기술기반구축&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2390
②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테스트베드&배후단지기반조성)	2417
③ 공동생산시설지원(명계공동생산시설)	2438
④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2460
⑤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2483
⑥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구축	2499



2023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 I 제 I 권

⑦ 청정어장재생사업	2514
⑧ 고수온대응지원	2527
11-3. 수산종자산업육성	2544
11-4.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2562
11-5.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2571
11-6. 관상어산업육성	2591
①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건립	2591
② 시장개척지원	2603
③ 관상어체험전시시설	2616
11-7.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628
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인버터)	2628
② 양식장 용수관리	2677
③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2690
④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2728
11-8. 내수면자원조성	2738
① 인공산란장 조성	2738
② 뱀장어 전용어도 이용효과 모니터링	2749
③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2759
④ 어도개보수	2770
⑤ 내수면양식단지조성	2779
⑥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2790
⑦ 유희저수지 자원화	2803
⑧ 내수면유통판매센터	2811
11-9. 국가어항(제주)	2822

목 차

11-10. 어촌활력기반구축	2843
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2843
② 어촌특화 역량강화	2866
③ 어촌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2881
④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 사업	2892
⑤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시행지침	2917
⑥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시행지침	2952
⑦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시행지침	2968
11-11. 양식등재해대책비	2978
11-12. 귀어귀촌활성화	2987
①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2987
② 귀어학교 개설	3000
③ 어촌에서 살아가기(귀어인의 집)	3010
④ 도시민 기술교육(귀어학교 교육비)	3026
11-13. 청년어촌정착지원	3036
1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3079
12-1.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081
12-2. 어촌뉴딜300	3091
①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조성	3091
② 어촌활력증진(어촌공간재생형)	3097
③ 어촌활력증진 지원(탄소중립형)	3103
12-3.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3113
1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3124

PART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6.] [해양수산부훈령 제681호, 2022. 12. 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자금부서의 장"이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4.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5.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훈령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제출
2.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3.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등
-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 ③ 내역사업 중 하위 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시·군·구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해야 한다.
-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액 통지 후 지체 없이 내역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제8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연도의 1월 1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시·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는 즉시 시·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세부사업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련부서 및 총괄 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
3.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확정된 세부사업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에서 부가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조금시스템
2.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3.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 관련기관·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해야 한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를 확보하였는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이력서를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해당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보조사업자 확정)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당초 심의결과에 따라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확정하고, 차순위자 등이 없을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세부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새로이 확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자 확정 공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 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해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

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제1항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제22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 관련기관·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개정>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개정>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삭제
- ⑥ 삭제

제25조(보조금 교부) ①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 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④ 자금부서의 장은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해야 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26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의2(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

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28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9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데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1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전문개정>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다만,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금융리스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보조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3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

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시·도 또는 관련기관·단체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자금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퍼센트 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 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7조(보조금 반환절차)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2.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반환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3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2항과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39조(검증기관의 책임)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기획재정부의 작성지침과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

- 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4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자료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제 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⑥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4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총괄 부서장은 제4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를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점검실적을 연 1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4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4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부정수급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49조(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 ① 시·도, 시·군·구, 관련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 ① 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공작물·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12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렇지 않다.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별표 7의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재산처분의 승인) ① 중요재산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중요재산의 소재지

4. 중요재산의 설치 또는 취득 연도

5. 취득가액(보조금, 자부담, 기타로 구분) 및 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현재액

6. 중요재산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그 밖에 다음의 참고서류

가. 중요재산을 당초에 목적인 용도외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용도의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중요재산에 중요한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해서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 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중요재산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중요재산을 매각·양도·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

마. 중요재산을 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바. 중요재산을 폐기하려고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매각·양도·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려고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 요청에 대해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나목의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81호, 2022. 12.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27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여부)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여부)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등록·관리 ▪ (작성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3조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 포함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별표 4]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이상)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다. 스티커 표지

이 장비(어선, 철부선 등)는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사업장 :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 정비, 오염해역준설,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등

3. 표시방법

가.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나.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 기준(제53조제3항 관련)

<보조 재산 단독 감정평가액 적용 시>

$$\begin{aligned} & \text{담보제공 승인 한도} \\ & = \text{시설물의 감정평가액} \times (\text{자부담/총사업비}) - \text{기 담보설정액} \end{aligned}$$

<비보조 재산과 결합된 보조 재산 단독 감정평가액 적용 시>

$$\begin{aligned} & \text{담보제공 승인 한도} \\ & = \text{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text{보조율} \times \text{보조재산가액}^{**}) - \text{기 담보설정액} \\ & \quad * \text{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과 연계된 토지 등 포함} \\ & \quad ** \text{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추정치} \end{aligned}$$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처분승인권자가 업체의 신용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려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나.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제5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begin{aligned} & \text{보조금 반환금액} \\ & = (\text{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text{재산상 이득금}) \times (\text{국고보조금/총사업비}) \end{aligned}$$

- 제53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 처분 승인 시 보조금 반환이 필요할 경우 나목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7] 중요재산의 표준내용연수(제52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동 기준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가 상이할 시 상위지침인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표준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보조사업 총괄표(제11조제1항 관련)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세부사업계획 작성요령(제11조제1항 관련)

- 별도의 지시 없이도 어업인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 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단위사업의 순서를 적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만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 기준을 기재해야 함

일련번호	세부사업명
------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0000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과	과 장 사무관	044-200-0000 044-200-0000

I. 사업개요

1. 목 적

○

2. 근거법령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년	'○○년	'○○년	'○○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년	'○○년	'○○년
합 계	-	-	-	-
-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II. '○○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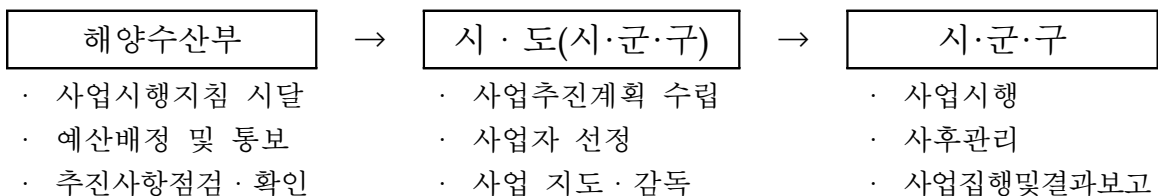
- 사업관리주체:
- 공고시기: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신 청 서(제15조 관련)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량)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p> <p>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 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이력서(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1. 소 속: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성명(명칭):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21조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주) '8. 보조사업 수행 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의 지출 항목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수신: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사업내용:

☐ 예 산 과 목: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별지 제7호서식]

국고송금요청서(제25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분야:
2. 회 계 명:
3. 예 산 과 목:
4. 단위사업명: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연간교부총액	교부결정액	기송금액	금회송금액	누 계	잔 액
합 계						
부 산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을 기재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시·도별 자금송금요청액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제29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다만,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29조제2항 관련)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 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교부확정서(제36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원)

교부결정액(A)	교부확정액(B)	반 납 액			
		계	집행잔액(A-B)	이자	불인정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실태점검계획서(제42조제3항 관련)

I.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점검대상	주요 점검내용

2. 향후 추진일정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구분	사업명	예산		회계	예산 성격	집행기관	유형
		전기	당기				

II.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 사업예산

구분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A)	차년도 예산(B)	증감 (B-A)	
					%

☐ 지원근거

○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절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절차	비고

2. 보조사업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점검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 현장 조사 계획

-

○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

3. 향후 조치계획

☐

[별지 제11호서식]

집행점검결과(제42조제3항 관련)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최근 3개년 예·결산 현황(억원)					
			'○○년		'○○년		'○○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용자 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금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

[붙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금 등 타 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별지 제12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제54조제2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m ²)	
사후관리기간		당초: 연월일 ~ 연월일		변경: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제54조제3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15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제5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PART

해양분야

1. 해양정책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① 해양교육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진승준	044-200-5220 044-200-5226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종합적 해양교육 추진 및 평생교육 체계 추진

2. 근거법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물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교육문화 체험자 수 (단위:만명)	4.2	신규	신규	신규	4	사업 종료 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 체험자 수 (각 행사별 집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92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교육문화법」 제17조, 제18조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 정한 해양교육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전국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해양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해양강좌, 해양동아리 운영, 해양교육포털 운영, 온라인 해양교육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예산 범위 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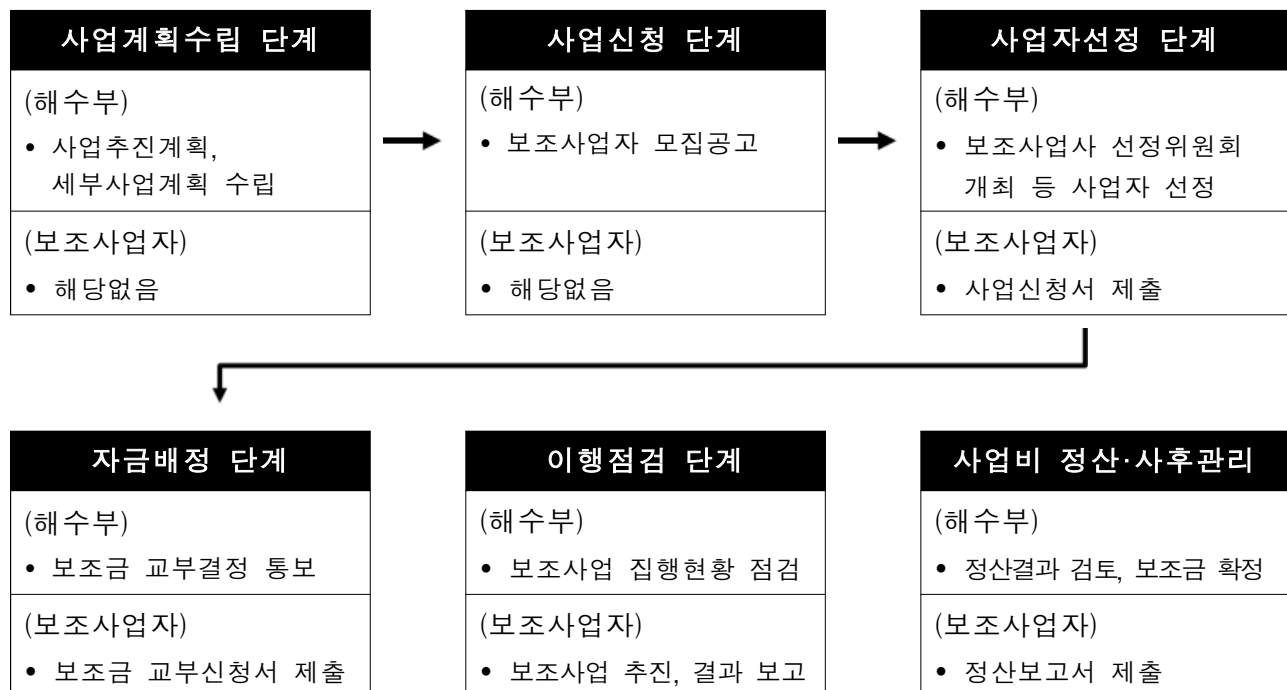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23년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사업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 해양교육사업 추진계획 수립('23.1.)
- 공고시기 : '23년 해양교육사업 보조사업자 공모('23.2.)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해양수산부 우편 및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
 -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1부
 -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 공고시기 : '23년 해양교육사업 보조사업자 공모('23.2.)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해양수산부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
-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1부
-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해양문화사업, 바다의 날 행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진승준 사무관 신강섭	044-200-5220 044-200-5226 044-200-522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등 해양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국민의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권 확대

2. 근거법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교육문화 체험자 수 (단위:만명)	4.2	신규	신규	신규	4	사업 종료 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 체험자 수 (각 행사별 집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1,079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교육문화법」 제17조, 제 18조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 정한 해양문화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전국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해양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의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권 확대를 위해 해양문화콘텐츠 개발·보급 등 해양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문화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해양캠프, 대학생 해양문화대장정, 해양문화나눔, 교원 해양유적지 답사, 바다의 날 기념식, 바다동요대회, 해양사진대전, 장보고대상 공모·선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예산 범위 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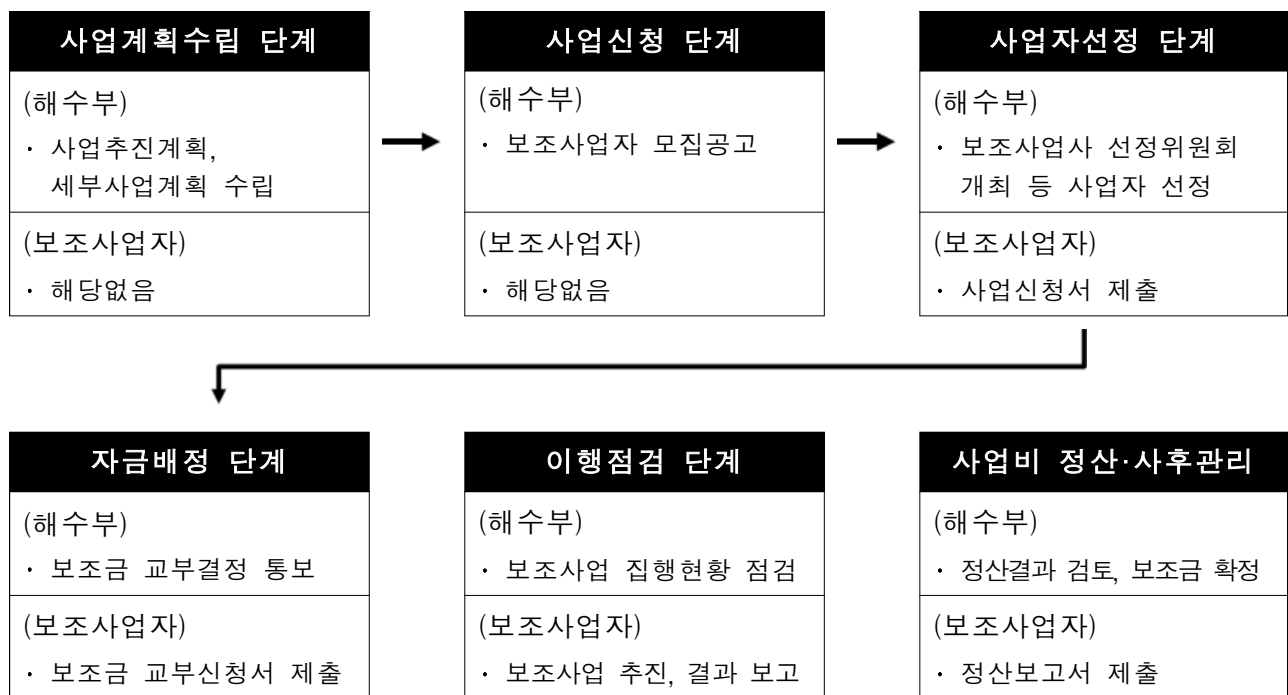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23년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사업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 해양문화사업 추진계획 수립('23.1)
- 공고시기 : '23년 해양문화사업 보조사업자 공모('23.2.)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해양수산부 우편 및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
-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1부
-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 공고시기 : '23년 해양문화사업 보조사업자 공모('23.2)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해양수산부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
-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1부
-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

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③ 세계해양포럼, 인천동북아포럼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김용태 서기관 허서영	044-200-5220 044-200-5221

I. 사업개요

1. 목 적

- (세계해양포럼) 수산·해운항만·해양신산업 등 세계 각국의 해양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주요현안 및 미래 전략 논의
- (인천동북아포럼) 환황해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국가간 직면한 해양관련 이슈 해결방안 논의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교육문화 체험자 수 (단위:만명)	4.2	신규	신규	신규	4	사업 종료 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 체험자 수 (각 행사별 집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세계해양포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822	822	822	822
- 국 비	422	422	422	422
- 지방비	400	400	400	400
- 자부담	0	0	0	0

○ 인천동북아포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00	600	600	600
- 국 비	400	400	400	400
- 지방비	100	100	100	100
- 자부담	100	100	100	1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33조에서 정한 해양정책지원 관련 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지정사업) :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인천항만공사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 지정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세계해양포럼) 해양분야의 다보스포럼 육성, 해양을 통한 지구촌 미래개척, 세계적인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 세계 해양 관계자들의 포럼으로 한국 해양산업협회 주관 행사 지원
- (인천동북아포럼) 동북아 국가 간 해운·항만·환경 협력, 남북경협 등 증진을 위해 바다공동체 및 논의를 위한 해양포럼으로 인천항만공사 주관 행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정액지원
- 사업의무량 : 포럼 1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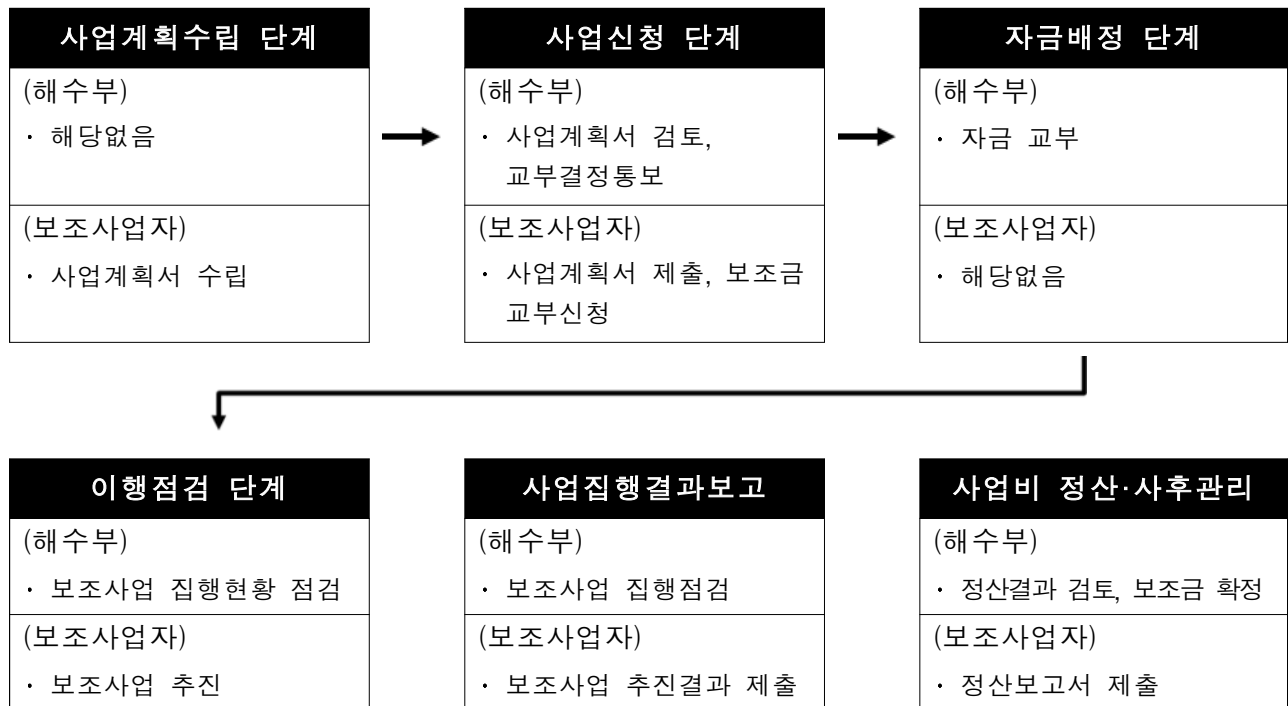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23년 예산 범위 내
- (범위) 사업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3년 1분기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 신청시기 : 세계해양포럼(지정 공모-한국해양산업협회, '23.6월) 인천동북아 포럼(지정 공모-인천항만공사, '23.10월)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해양수산부
- (지원금액 적정성) 소요비용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④ 해양과학학술대회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 장 노재옥 사무관 유현숙	044-200-5240 044-200-5241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각 부문별 전문성 증진과 학회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교육문화 체험자 수 (단위:만명)	4.2	신규	신규	신규	4	사업 종료 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 체험자 수 (각 행사별 집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0	180	180	180
- 국 비	90	90	90	90
- 지방비	-	-	-	-
- 자부담	90	90	90	9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과학기술 분야 학회 등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최 비용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예산 범위 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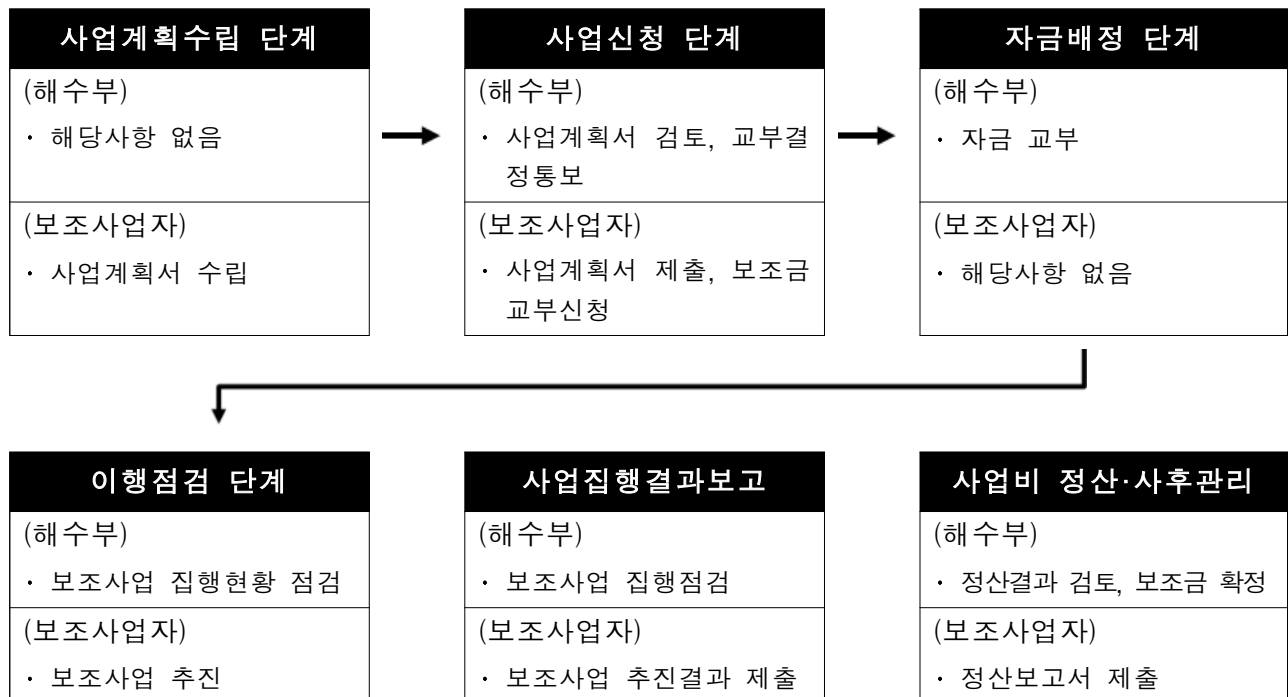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23년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사업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공고시기 : 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지정 공모-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

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⑤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임채호 사무관 장경일	044-200-5350 044-200-5351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양성의 기초 마련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교육문화 체험자 수 (단위:만명)	4.2	신규	신규	신규	4	사업 종료 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 체험자 수 (각 행사별 집계자료)

*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세부사업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중·고등학생, 13~18세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원)생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중·고등학생, 13~18세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원)생 대상 해양법·해양영토 토론회(또는 모의재판) 실시, 시상 관련 업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회(또는 모의재판) 실시, 시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100백만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의무량 : 해양법·해양영토 토론회(또는 모의재판) 각 1회 개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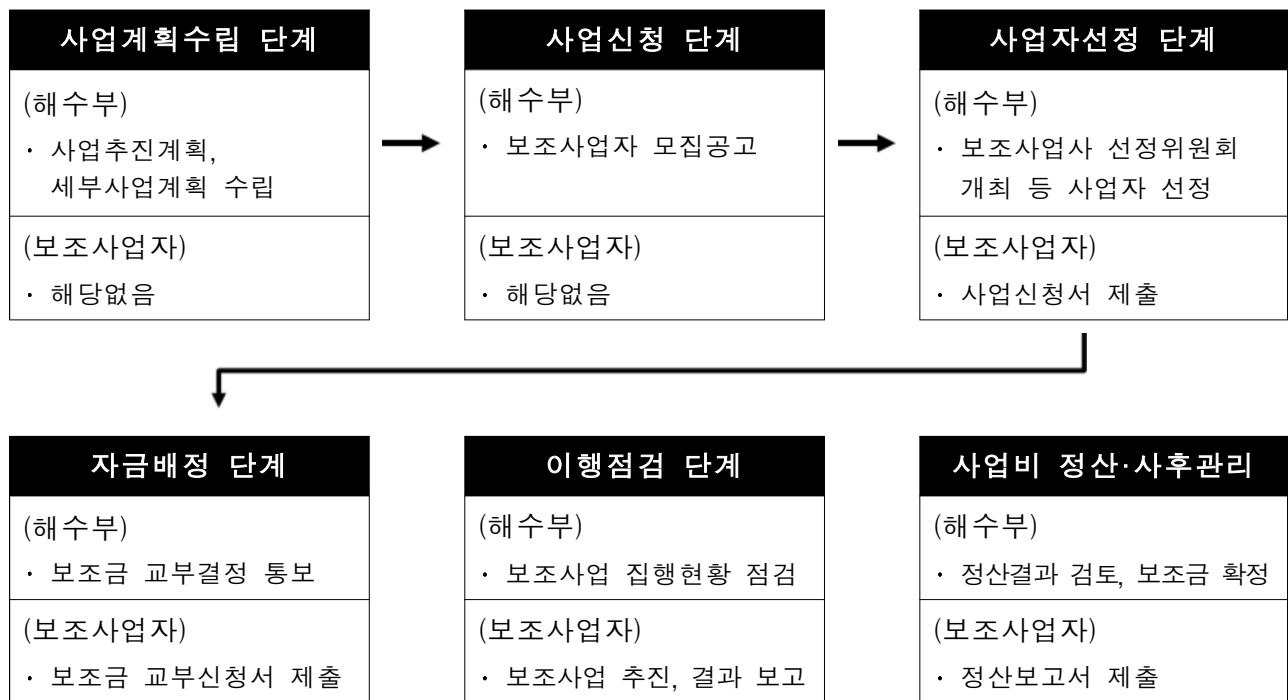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사업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회(또는 모의재판) 추진계획 등 수립('23.1)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 공고시기 : '23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회(또는 모의재판) 사업 공모('23.2)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
 -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 사본 1부
 -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

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

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서해5도 해양문화체험 및 남북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과 장 김해기 사무관 정동명	032-880-6470 032-880-6471

I. 사업개요

1. 목 적

- 대학생 대상 서해5도 연안여객선 승선 체험·해양생태체험 등을 통하여 해양에 대한 소양을 고취하고, 남북접경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남북분단현실을 직시하여 해양영토 수호 의식을 고취

2. 근거법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교육문화 체험자 수 (단위:만명)	4.2	신규	신규	신규	4	사업 종료 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 체험자 수 (각 행사별 집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10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해양교육문화법」 제17조, 제18조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34조에서 정한 해양문화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해양 및 해양문화 관련 법인, 민간단체, 공공단체(기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

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문화 및 남북분단현장 답사 관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민간단체, 공공단체(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적 소양고취를 위한 해양문화 체험·강연, 남북분단현장 및 해양유적지 답사 등 프로그램 제공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예산 범위 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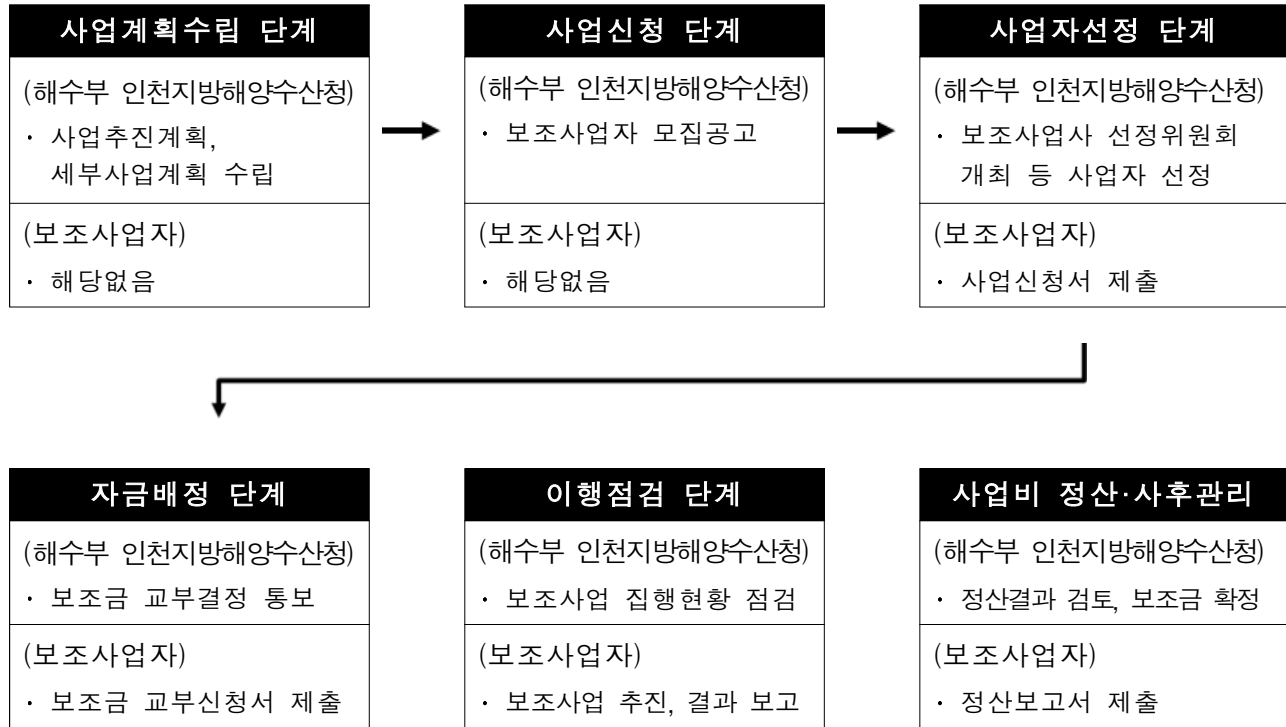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23년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사업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 서해5도 해양문화체험 및 남북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23.1)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고시기 : '23년 서해5도 해양문화체험 및 남북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보조사업자 공모('23.2)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회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과	과 장 김인경 사무관 양동곤	044-200-6220 044-200-6225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STEM* 빌리지조성으로 해양융복합산업 R&D 기능 고도화 및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동력 마련

* STEM :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공정율(%)	50	-	2.9	7.8	35.8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990	14,936	-	-
- 국 비	4,893	7,339	-	-
- 지방비	2,097	7,597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부산광역시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보조, 국고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의 총사업비(33,871백만원)에서 부지조성비(1,711백만원) 및 수목이식(327백만원)을 제외한 총건설비의 70%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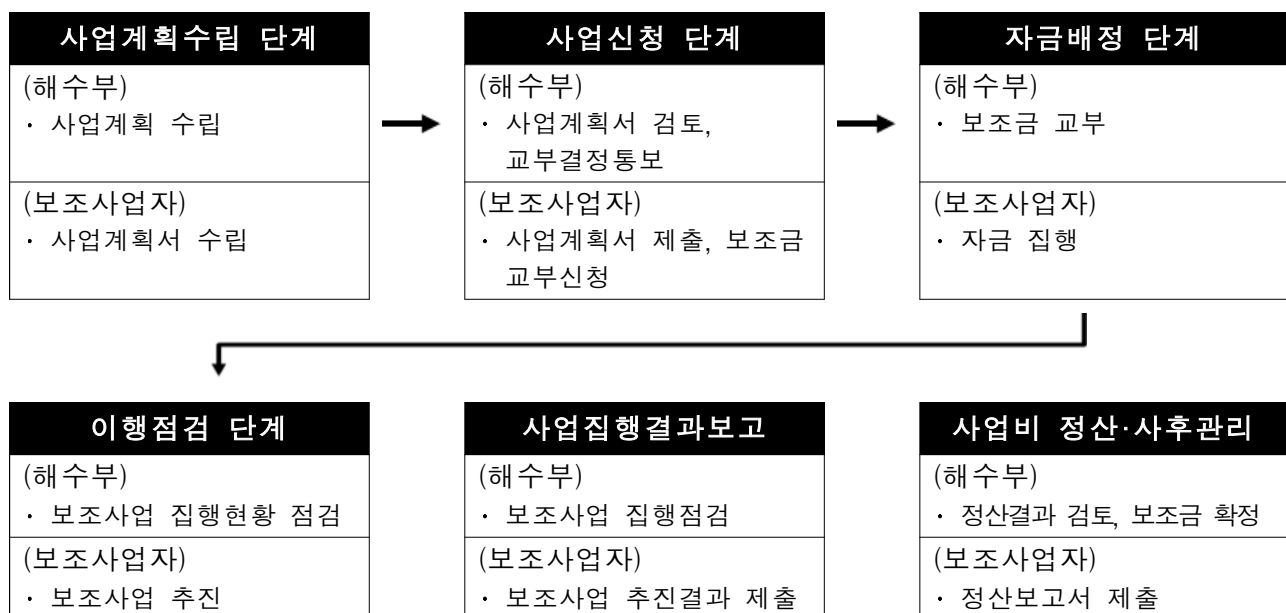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지자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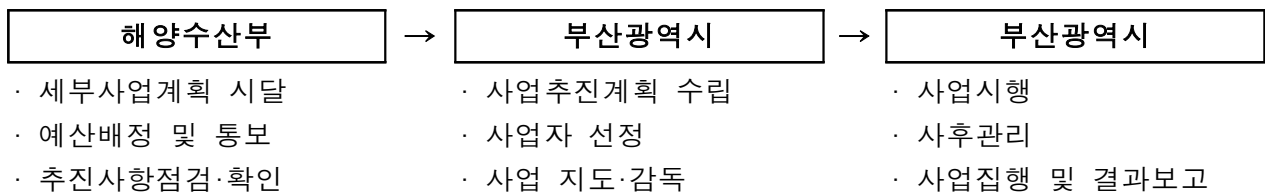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 '23년도 사업시행 지침 시달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제출기한 등은 별도 협의 예정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계획서 검토

부산광역시

-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당사항 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별지 제1호),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실시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집행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

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 장 정재관 사무관 이종근	044-200-5670 044-200-567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바이오 기업에 입주공간, 장비 등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및 생산을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 근거법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제1항(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공정률(%)	75.8	-	3.7	13.3	38.2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028	8,400	-	-
- 국 비	5,870	4,200	-	-
- 지방비	7,158	4,200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체(충청남도) 및 기초지사체(서천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광역·기초 지사체로 국비, 지방비 보조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지방비)을 확보하여야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시·도지사체(충청남도) 및 기초지사체(서천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비 및 장비 구축 비용 등
- 사용용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자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장비비 등 일체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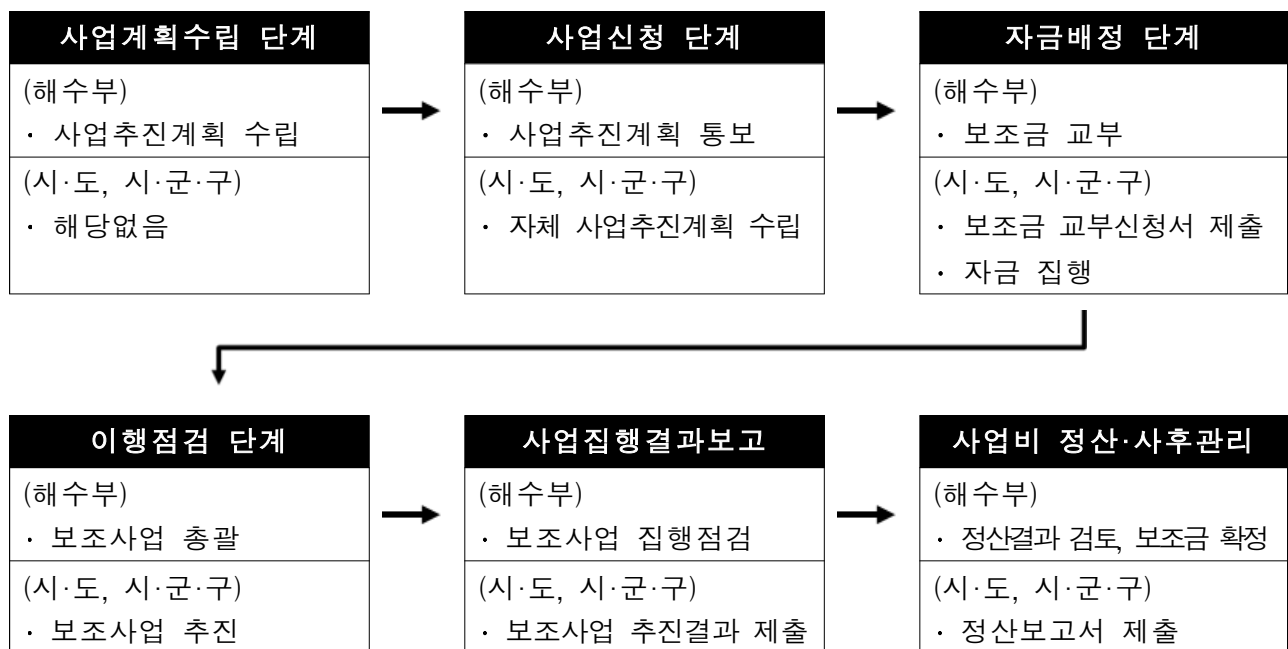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부동산(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0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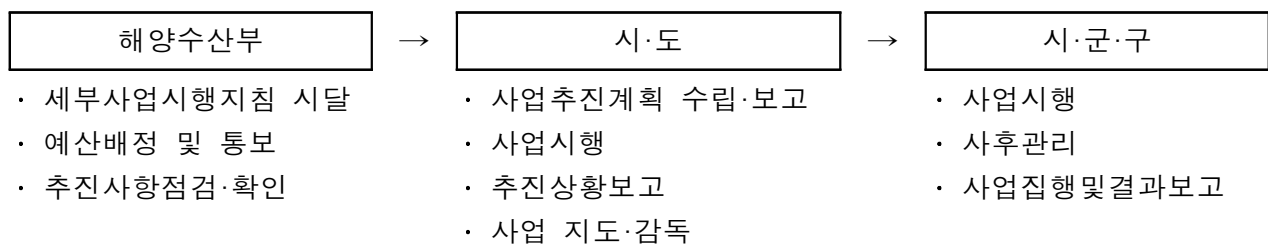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매년 4월~8월)
-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지자체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지방비 보조비율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사업 추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등 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보조사업이력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 없음

5.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

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연2회 이상 분할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점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수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가능)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 명단 공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 장 정재관 사무관 이종근	044-200-5670 044-200-5673

I. 사업개요

1. 목 적

- 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은 해조류 활성 소재를 대량 생산하는 인증 시설을 구축하여 해양 바이오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 육성 도모

2. 근거법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제1항(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 공정률(%)	52	-	-	4	44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000	12,000	-	-
- 국 비	1,000	6,000	-	-
- 지방비	1,000	6,000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체(전라남도) 및 기초지사체(완도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광역·기초지사체로 국비, 지방비 보조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지방비)을 확보하여야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시·도지자체(전라남도) 및 기초지자체(완도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비 및 장비 구축 비용 등
- 사용용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자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장비비 등 일체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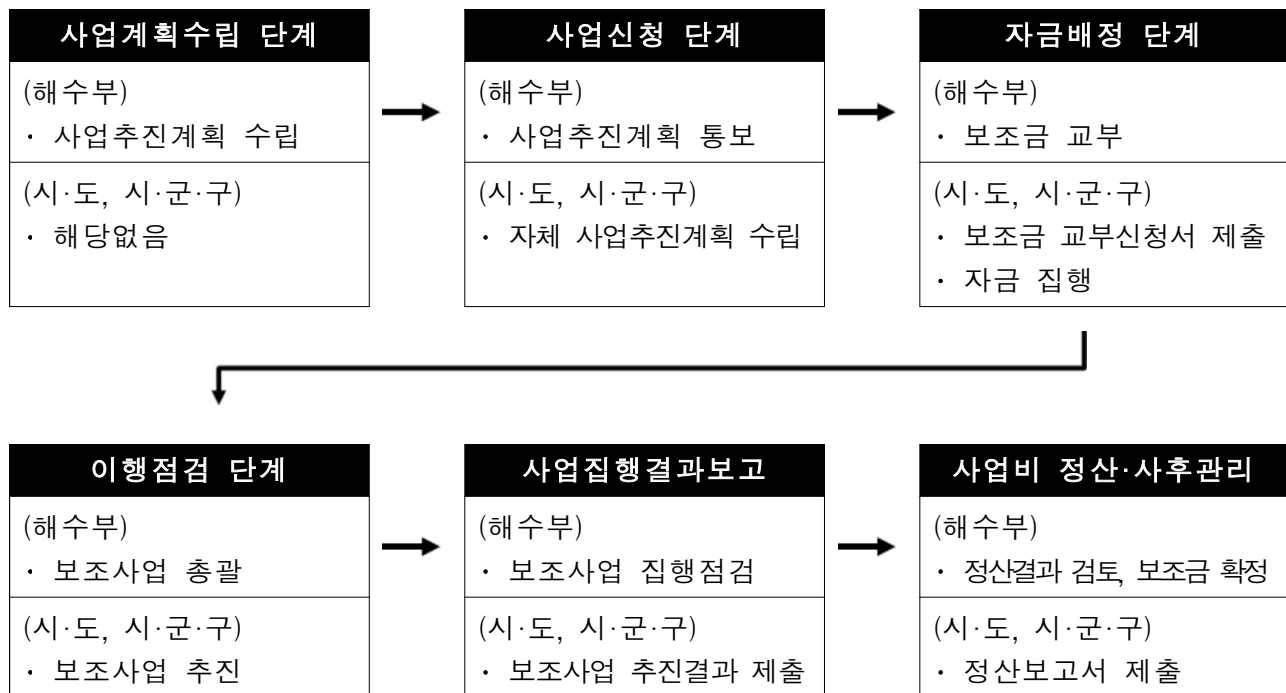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 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부동산(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0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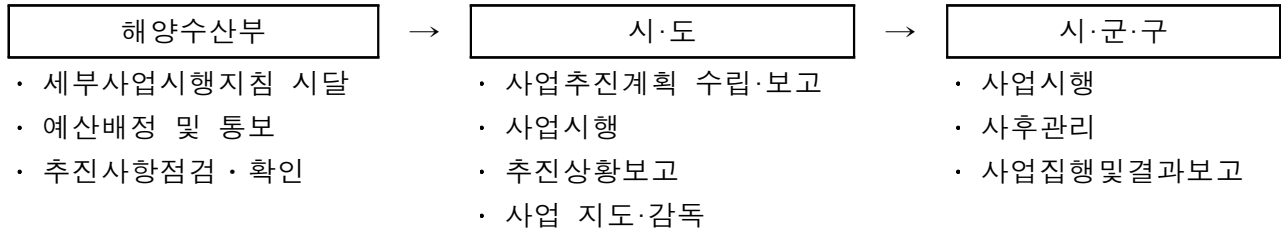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매년 4월~8월)
-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지자체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지방비 보조비율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사업 추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등 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 신청서 및 보조사업이력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 없음

5.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연2회 이상 분할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점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수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가능)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 명단 공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센터 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 장 정재관 사무관 이종근	044-200-5670 044-200-5673

I. 사업개요

1. 목 적

- 동해안의 해양자원과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해양바이오 메디컬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거점센터 건립

2. 근거법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제1항(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 센터 건립 공정률(%)	2.06	-	-	-	-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22년: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20	18,580	7,800	2,000	1,000
- 국 비	310	9,290	3,900	1,000	500
- 지방비	310	9,290	3,900	1,000	500
- 자부담	-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자체(경상북도) 및 기초지자체(포항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로 국비, 지방비 보조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지방비)을 확보하여야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시·도지사체(경상북도) 및 기초지사체(포항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비, 장비 구축 비용 등
- 사용용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자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장비비 등 일체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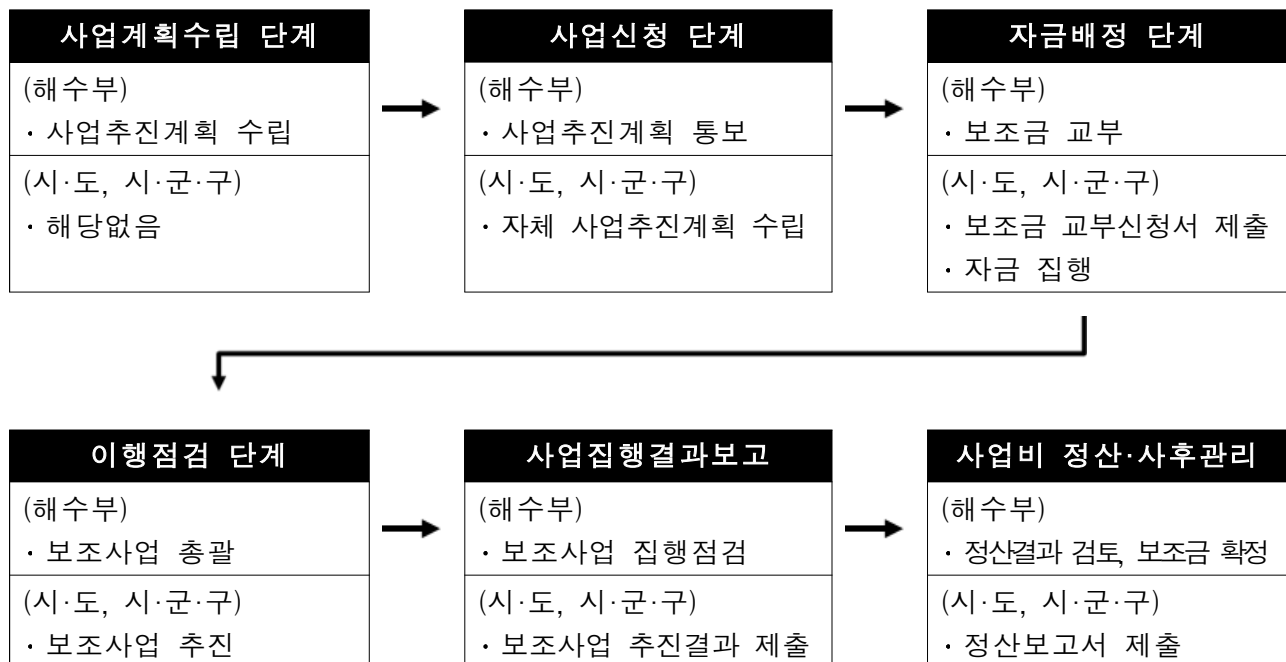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센터 연구개발센터	부동산(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0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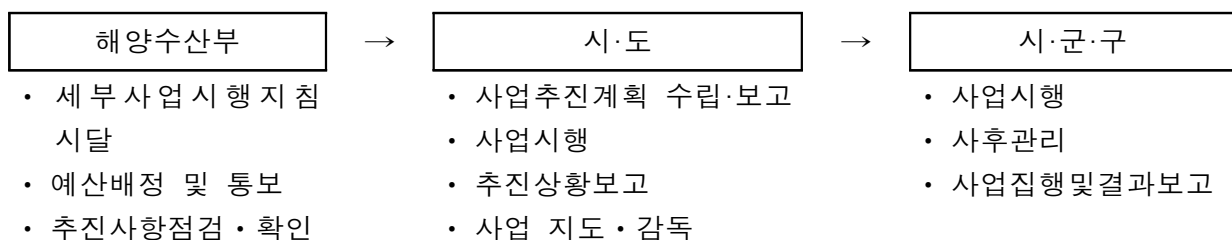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 추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지방비 보조비율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사업 추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등 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 신청서 및 보조사업이력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및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5.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연2회 이상 분할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점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수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가능)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

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 명단 공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지 과학문화행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 장 노재욱 사무관 유윤진	044-200-5240 044-200-6182

I. 사업개요

1. 목 적

- 극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극지 체험 전시회, 청소년 극지 논술공모전 등 문화·홍보 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극지활동 진흥법 제15조(교육·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제4차 '22 ~ '26)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극지체험 전시회 관람객 만족도(점)	65	-	-	95	집계 예정	매년 말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를 실시하여 만족도 점수를 산술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5	255	255	255
- 국 비	255	255	255	255

* 예산 반영 현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자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 대상

- 극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화·홍보 사업

< 극지과학문화행사 주요 내용 >

- (극지체험 전시회) 극지에서의 각종 활동 성과자료를 소개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극지 생활 및 연구 용품 및 장비 체험 공간 마련
-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청소년의 극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논술 공모전 개최
- (극지종합소식지 발간)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극지종합소식지’를 제작하여 학교, 도서관 및 주요기관 등에 배포
- (온라인 홍보) ‘극지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홍보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극지 체험 전시회 개최, 청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종합 소식지 발간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운영
 - 매년 연초에 대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승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진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정액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총 255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예산: '23년 국고 총 255백만원
 - 극지체험전시회 110백만원,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55백만원, 극지종합소식지 발간 50백만원, 온라인 홍보 4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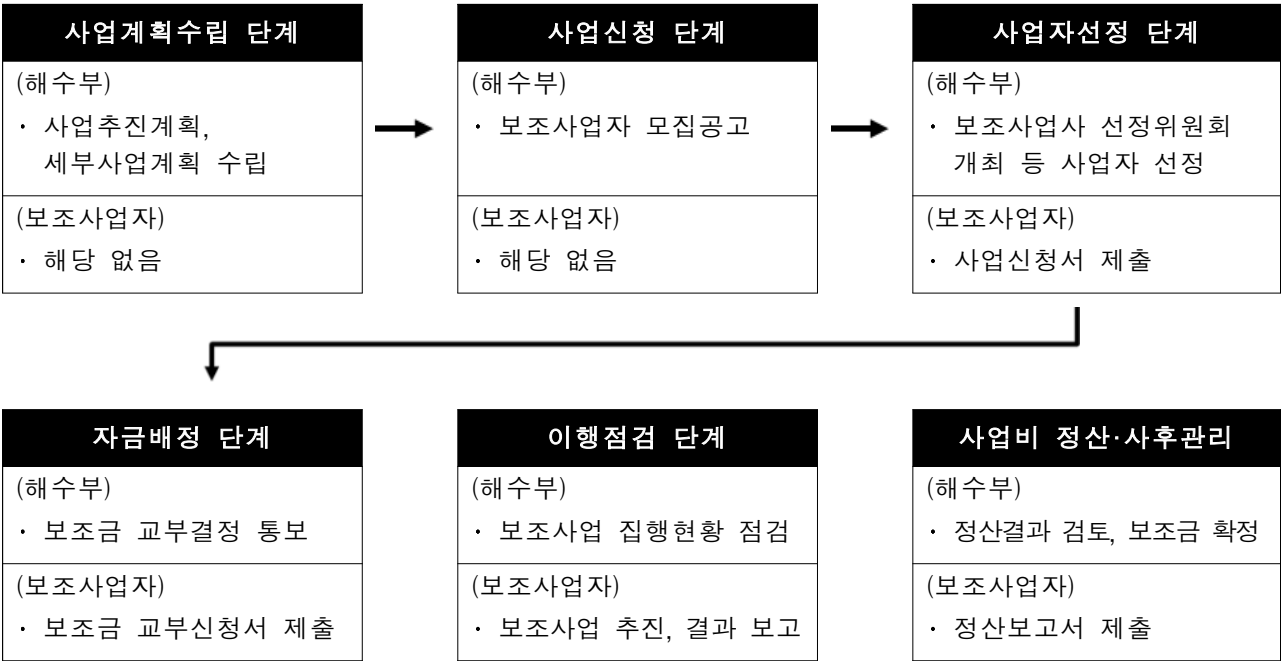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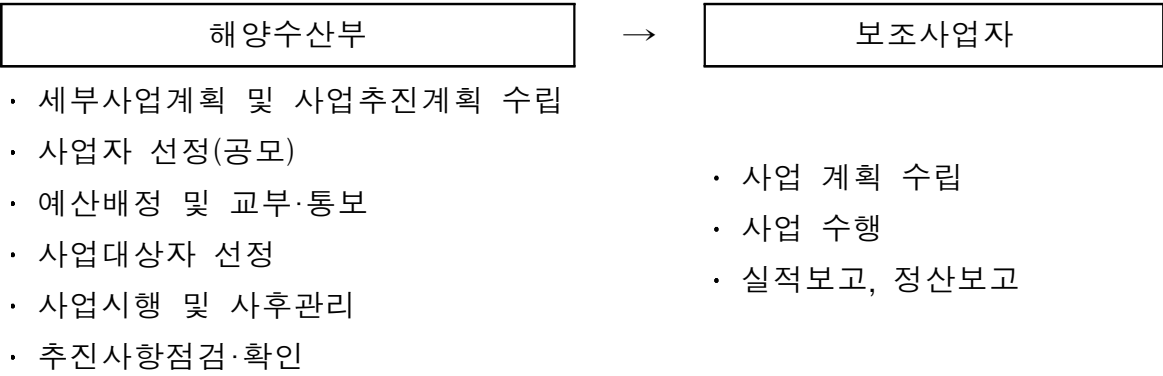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민간경상보조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23.1월
-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공고시기 : 극지과학문화행사 민간경상보조사업자 선정 공고('23.2)
- 신청절차: 공고문(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 접수 : 직접 또는 우편(주소: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사업자선정 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익년도 예산편성(국고 및 자부담)
- 사업자 변경 : 사업수행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6)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매 회계연도 마다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2~5)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제출,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고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함

IV.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스포츠지원 등 20개 내역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서기관 임우현	044-200-6186
		서기관 최영인	044-200-5251
		사무관 조우현	044-200-5275
		사무관 서지원	044-200-5255
		사무관 안숙현	044-200-525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해수욕장 현황조사), 제39조(해수욕장 평가) 등
-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마리아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항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제5조(활성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단위 : %)	100	-	-	-	-	1월	① 콘텐츠 상품화율 (개발 건수 대비 상품운용율 60% 이상)×50% ② 해양관광 증대 행사실적(연 2회 이상 개최)×50%
해양레저신산업 기반 구축 추진율 (단위 : %)	100	-	-	-	-	1월	(해양치유 기반 구축율50%)+ (해양레저산업 정책 내실화율 50%)
해양관광인프라 조성률 (단위 : %)	50	-	-	-	-	1월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 100 *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16~(당해년도-1 년) 집행금액 합계 + 당해연도 집행실적

* 신규설정 지표로 최근 4개년 실적 미해당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6,931	48,612	24,562	28,262
- 국 비	56,931	48,612	24,562	28,262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민간단체, 공공단체(기관) 또는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 해양레저스포츠지원(민간)
 - 해양레저스포츠 인구 저변확대 및 개최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요트,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
- 국제보트쇼 육성지원(민간)
 - 국내 레저선박 제조 및 장비산업체 경쟁력 제고, 대국민 해양레저 저변 확대(홍보·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보트쇼 등 지원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지자체)
 -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
 - * 국비 지원의 30% 이상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사업에 사용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자체)
 - 지역의 특색있는 해양레저 이용환경을 활용하고, 전문 선수 및 동호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 해양레저위크(지자체)
 -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레저문화·바다관광이 결합된 국내 최대·유일의 국제해양레저 축제 개최
- 해양소년단연맹 지원(민간)
 - 안전하고 다양한 해양레저 교육 훈련의 기회 확대를 통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 훈련장비를 구입 지원
 - 해양레저문화 교류·수상레포츠 체험활동 및 수상기능종목(드래곤보트, 카약, 카누)를 겨루는 해양소년단 리갯타대회 개최 지원
- 국제마리나포럼 등(민간)
 -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마리나 동향 및 전망 공유, 관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마리나컨퍼런스 개최 지원
- 해양관광콘텐츠개발지원(해양관광콘텐츠개발지원)(민간)
 -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
- 마리나비즈니스센터 건립(지자체)
 - 해양레저 수요 확대에 맞추어 마리나 선박의 유통, 금융, 수리 등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리나 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지원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지자체)
 -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지자체)
 -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부응하여 해양레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
- 울산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지자체)
 - 고용산업(조선사업) 위기지역의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지자체)
 - 내륙 지방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 해양레저체험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 해양교육원 건립 지원

- 해양치유센터 조성(2-1, 태안)(지자체)
 - 해수·염지하수·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시설 조성 지원
- 해양치유센터 조성(2-2, 경남고성)(지자체)
 - 해수·염지하수·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시설 조성 지원
- 제주해양레저박람회(지자체)
 - 해양레저 국제 전문가 컨퍼런스, 해양레저산업 전시관 및 공모전 개최, 해양레저활동 체험주간 운영 지원
- 해양치유센터 조성(2-3, 울진)(지자체)
 - 해수·염지하수·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반 시설 조성 지원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지자체)
 - 국내최초 아시아요트연맹(ASAF) 공인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통해 요트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험행사를 통한 대중화를 유도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교육(민간)
 -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시행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제도와 관련하여 정비사 교육체계 운영 및 자격·이수 관리 지원
- 생존수영교육지원(민간)
 - 해양활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생존수영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강사 및 지도자 양성 및 일반인 대상 실전형 생존교육 진행, 인증제 도입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70%, 지방비 30%·50%, 일부 정액지원
- 민간 보조 : 국고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부산·경기국제보트쇼,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등 레저장비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1개 업체 당 최대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부산·경기국제보트쇼,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등 레저장비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1개 업체 당 최대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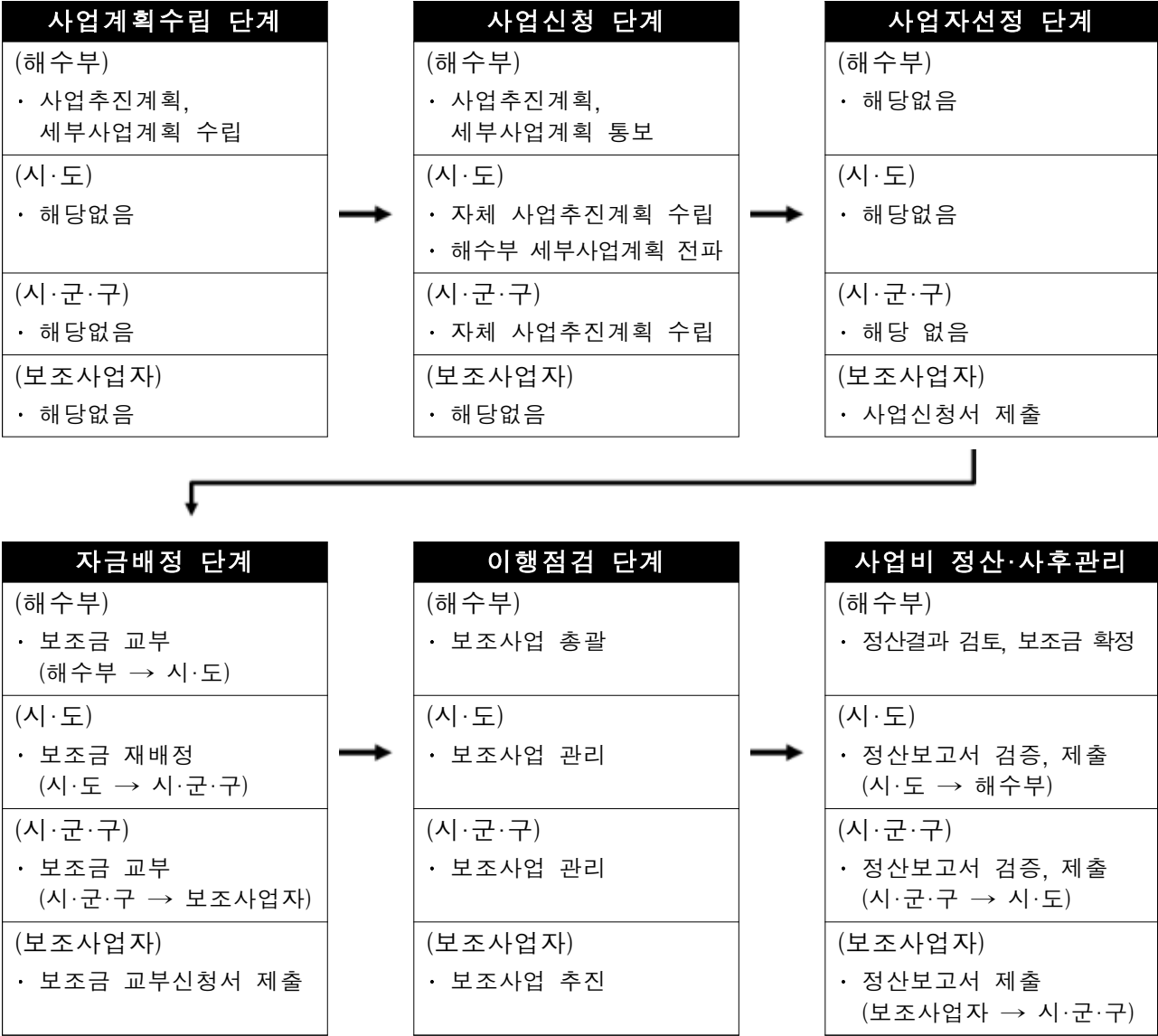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해양치유센터(태안)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해양치유시범센터(완도)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해양치유센터(경남 고성)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치유센터, R&D센터(울진)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울산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35년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군산 해양레저관광거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강원고성 해양레저관광거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보성 해양레저관광거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시흥 해양레저관광거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35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①-1 지자체 보조(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 계획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지방청 및 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
 -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

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지자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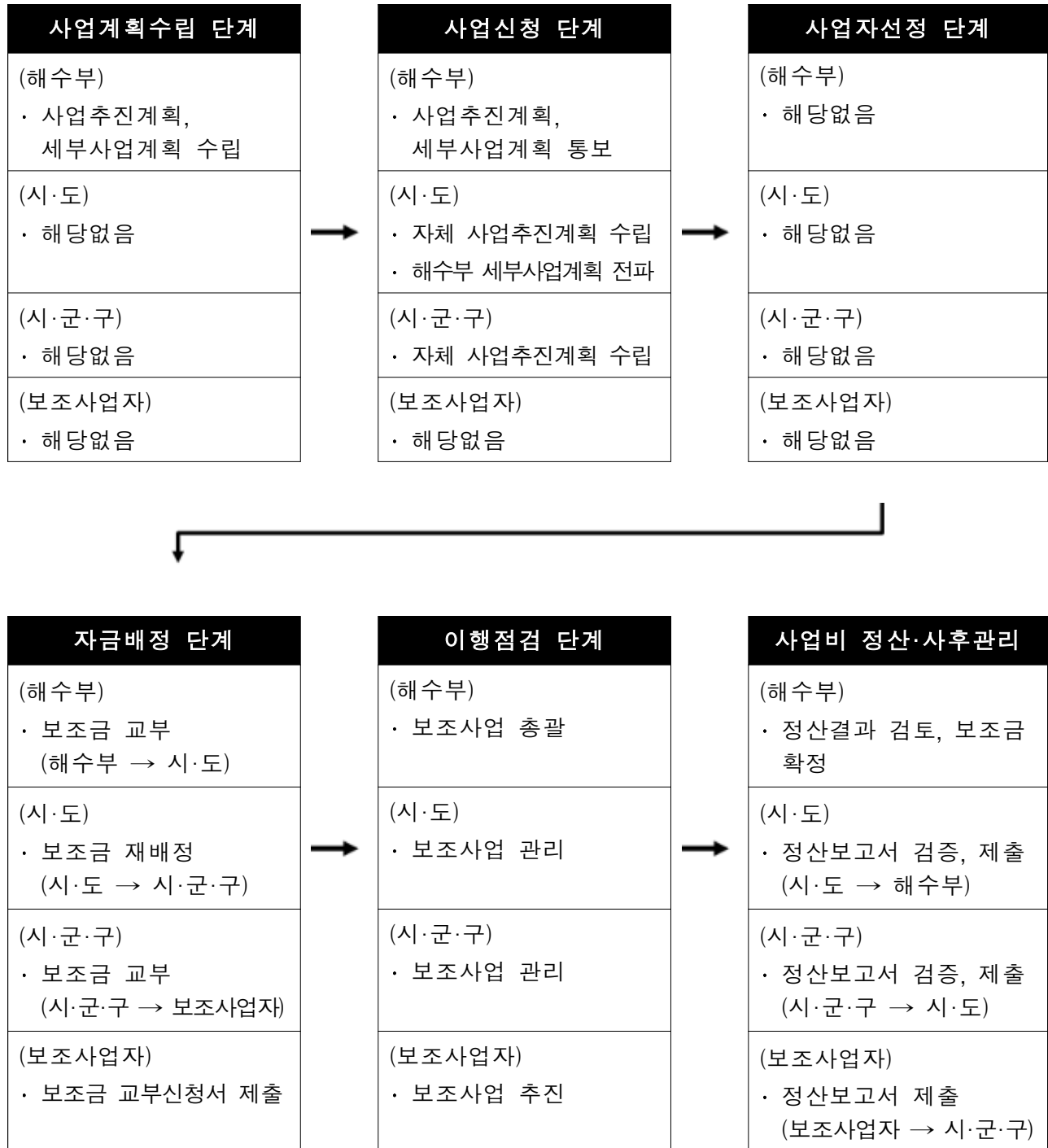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①-2 지자체 보조(비공모)

사업추진 절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 계획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지방청 및 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
 -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 해수욕장 이용환경선진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수요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 해양치유시범지구(센터) 사업의 경우 '17년 선정한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대상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

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지자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②-1 민간 보조(공모)

사업추진절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 공고시기 : 사업 기간과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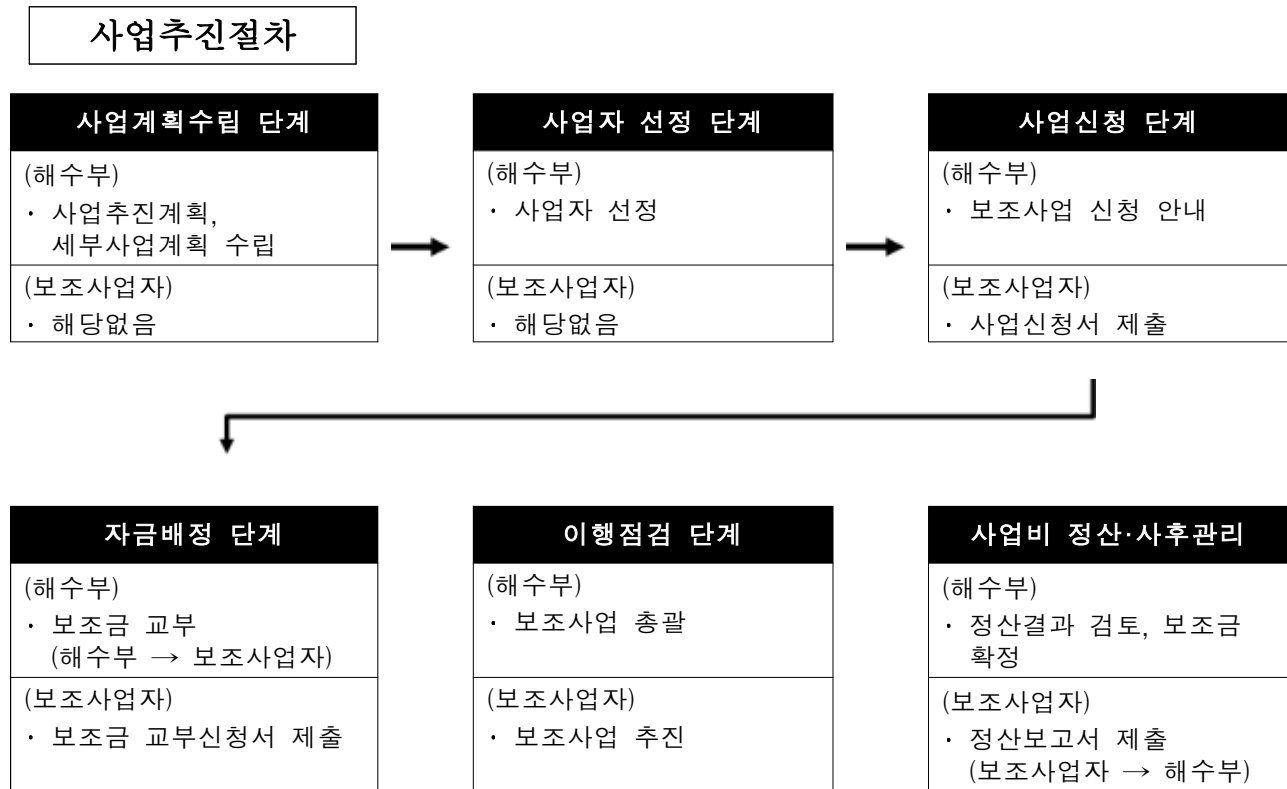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②-2 민간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신청서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그 신

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 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 장 노재옥 사무관 유윤진	044-200-5240 044-200-6182

I. 사업개요

1. 목 적

- 북극항로 진출 우호세력 형성을 위해 러시아(북극항로의 60%를 차지) 북극 원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① 인력양성(명) ② 논문 등 연구성과 발표 건수(건)	8	-	-	-	집계 예정	매년 말	①교육지원 인원 또는 석사 학위 취득 인원(명) 확인(가 중치 0.5) ②논문 등 연구성과 발표 건 수 확인(가중치 0.5)
	8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60	360	360	360
- 국 비	300	300	300	300
- 지방비	-	-	-	-
- 자부담	60	60	60	60

* 예산 반영 현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정책 기본법」 제50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모('21.1~ '21.2)와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심의('21.2.5)를 통해 제1차 사업 기간('21~'25) 동안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인천대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자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러시아 북극원주민을 초청하여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석사학위 취득 지원 가능한 기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 대상

- 러시아 북극 원주민을 국내 물류 대학원에 초청(기존 4명/ '23년 신규 4명 추가)하여 북방 물류 분야 교육 및 장학(석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등록금, 체제비(항공비, 생활비, 의료보험 등) 등 교육생 장학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운영
 - 매년 연초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승인 후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사업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정액보조
 - 연차별로 수행실적 평가와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3차 년도('23년) 중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총 3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예산: '23년 국고 총 300백만원

< 연도별 소요 예산(안) 및 지원 인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					2차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예 산	16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60	2,720
지원인원 (명)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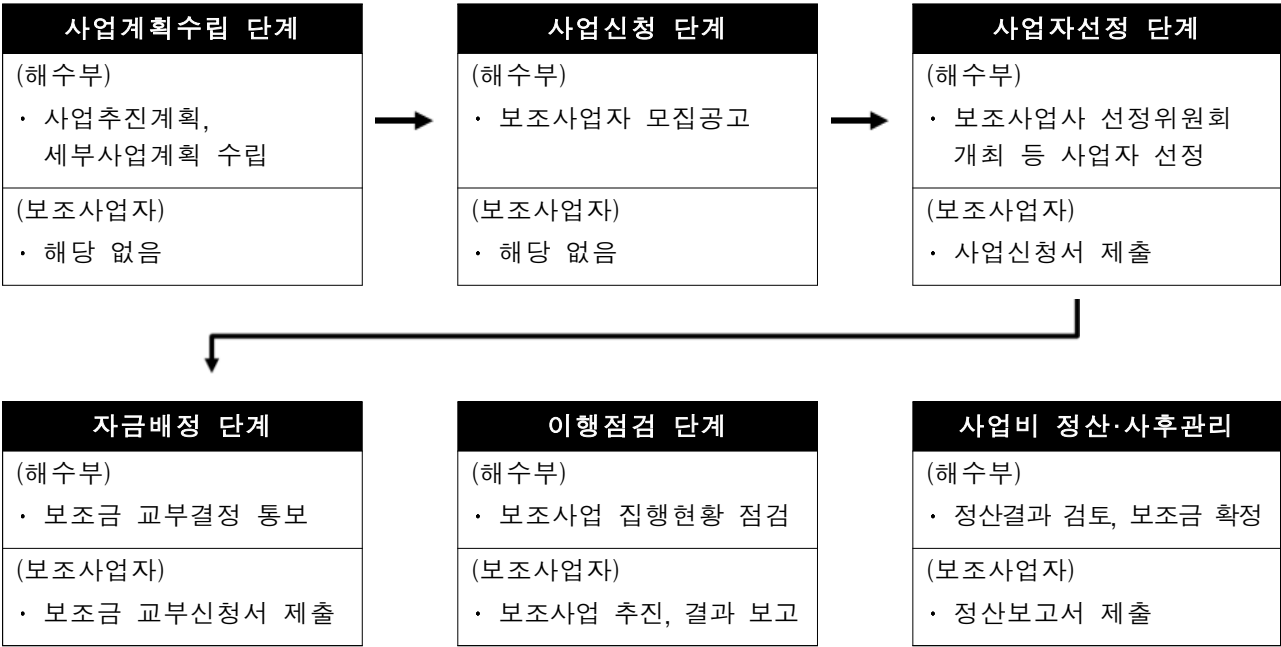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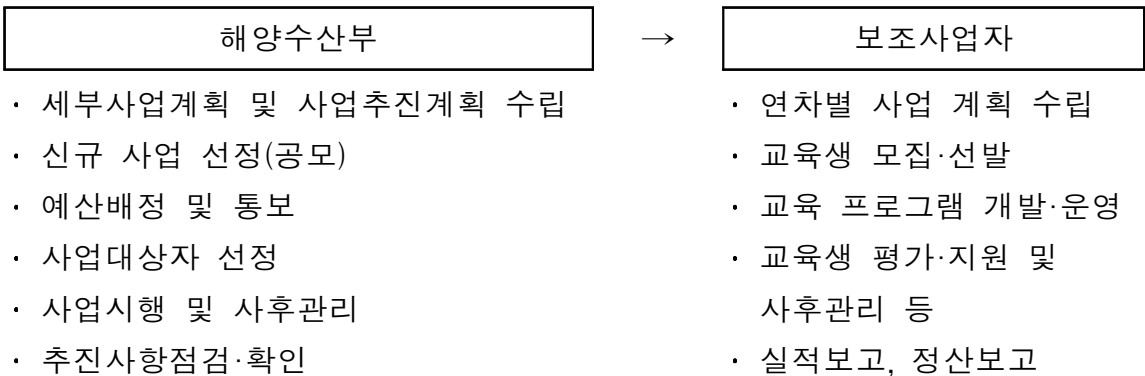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민간경상보조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1~2025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旣 완료('21.1)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旣 완료('21.1~'21.2)
-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공고시기 : 1차 사업기간('21~'25)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완료('21.2)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34호, 제2021-261호, 제2021-392호
- 신청절차: 공고문(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 접수 : 직접 또는 우편(주소: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사업자선정 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선정
 - *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21.2.5)에 따라 1차 사업기간('21~'25) 수행자 선정 완료: 인천대학교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392호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익년도 예산편성(국고 및 자부담)
- 사업자 변경 : 사업수행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매 회계연도 마다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및 기타 구비 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제출,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고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함

IV.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 장 정재관 사무관 이종근	044-200-5670 044-200-567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명자원 활용 의약품·기능성 식품 관련 원료표준화,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 인증지원을 통해 영세한 해양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2. 근거법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제1항(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바이오 인증지원 센터 건립 공정률(%)	2.8	-	-	-	-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22년: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700	4,880	10,614	8,806
- 국 비	350	2,440	5,307	4,403
- 지방비	350	2,440	5,307	4,403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자체(충청남도) 및 기초지자체(서천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로 국비, 지방비 보조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지방비)을 확보하여야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시·도지사체(충청남도) 및 기초지사체(서천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및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비, 장비 구축 비용 등
- 사용용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자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장비비 등 일체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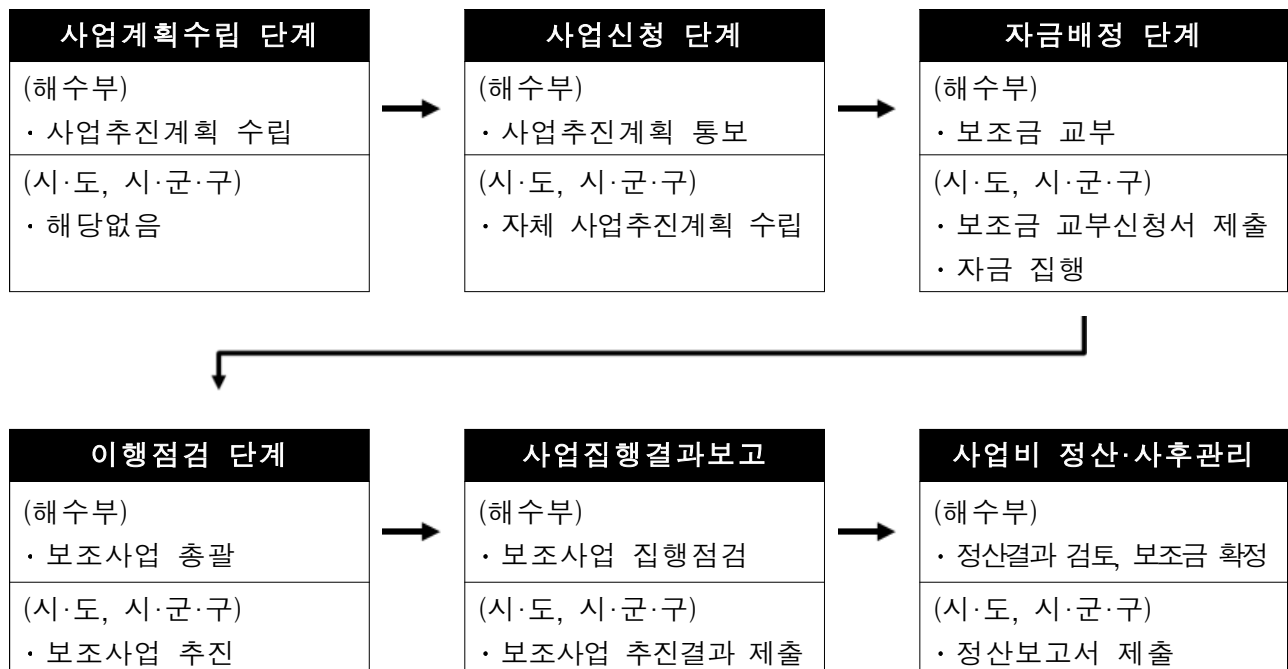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부동산(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0년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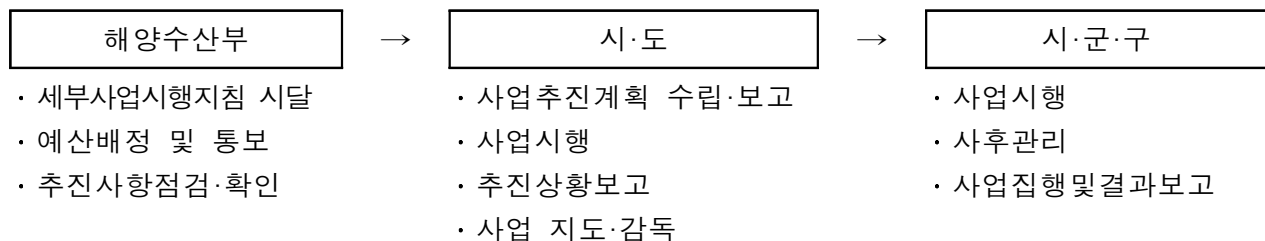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 추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및 지방비 보조비율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부사업계획 시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사업 추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등 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 신청서 및 보조사업이력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및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5.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연2회 이상 분할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점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필요에 따라 수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가능)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 명단 공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해양분야

2. 해양환경정책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사무관 박자현	044-200-5310 044-200-531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보호구역의 지역 자율형 관리 및 인식증진 등을 통하여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도모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2조의2(국고 보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43조(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누계)	36	신규	신규	신규	34	매년 말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9,967	21,964	24,160	26,576
- 국 비	13,977	15,375	16,912	18,603
- 지방비	5,990	6,589	7,248	7,973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로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3. 지원대상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43조(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습지보전법」 제22조의2(국고보조) 등에 포함되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지원
 - 공중화장실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 주민 소득증대 사업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해양보호구역 교육·홍보 사업
 - 해양생태 탐방시설(탐방로, 탐조대 등) 및 지역방문자센터 등 조성
 - 람사르 습지도시 지원 및 발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한도: '23년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23년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상/자본보조를 구분, 면적·성질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경상보조사업) 해당사항 없음
- (자본보조사업)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보조금 시스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 이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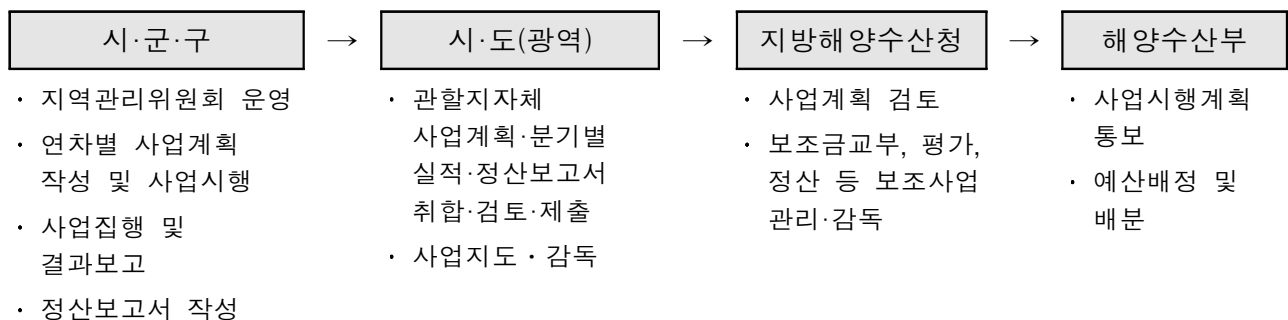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매년 1월중) <별지 서식>
 - '23년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23년도 사업계획은 '22년도 해양수산부가 확정된 사업 및 금액만 제출)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23년도 세부사업 계획은 '23년도 2월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22년 사업실적 평가를 위하여 '22년 집행결과를 '23년도 2월말까지 지방 해양수산청에 제출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수부 훈령)」에 근거하여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보조사업 분기별 실적보고 제출 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포함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청취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다만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해당연도 집행이 어려울 시 회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과 성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승인 이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체계



2.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인식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시달(22.12월)
- 해양수산부는 내시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보조금 예산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
- 지방해양수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서식)를 취합·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지방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중요재산의 내용연수는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은 보조사업자(시장·군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분기별 보고에 포함
-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
- 3 ()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지자체는 중요재산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 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재》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4.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계획서(총괄표)

[해양보호구역 명칭/기초지자체 명칭]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산출근거	예산		
			계	국비 (70%)	지방비 (30%)
경 상	①(기초사업) 교육행사참가, 선진지 답사				
	②(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③(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④(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⑤(평가사업) 000 000 사업				
자 본	①(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②(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③(평가사업) 000 000 사업				

* 기초/평가사업 :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참고

☐ 그간 주요 추진성과

-
-

☐ 향후 추진방향

-
-

[기초/평가사업] 사업명 기재 (세부내역)

□ 사업목적

○

□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연도별	'20		'21		'22		'23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예산(백만원)								
실적								

* 예산 :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기재

* 실적 : 명, 톤 등 (최근 3년 이내)

√ 예) 해양쓰레기 수거 00톤, 교육프로그램 참여 00명, 지역관리위원회 개최 00회 등

□ 2023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00 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 산출내역 :

* 물량, 단가 등 구체적 산출내역

- 수행방법 : 직접집행, 공모,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

○ 추진내용

- 사업수행계획 :

- 예산집행계획 :

○ 기대효과

-

사업명	사업내용(규모)	보조사업 효과	비 고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별지 서식】

2023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시(군·구)/000 해양보호구역]

☐ 지자체경상보조사업(330-0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내역사업명						

☐ 지자체자본보조사업(330-0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내역사업명						
예)생태탐방로 설치						

* 분기별로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우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제고방안 작성 후 반드시 첨부할 것(분기별 제출 실적 없을시, 다음년도 교부액 감액 예정)

* 집행부진사업은 사업개요(규모·위치·기간 등),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서식】

‘23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 잔액(반납액)		
합계	시군명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경상 보조	합계									
자본 보조	합계									

【별지 서식】

사업실적보고서

1. 사업명 : 2023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 사업장소 : ○○ 해양보호구역 일원
3. 사업량
- 해양보호구역 견학,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양생태모니터링 등
4. 사업기간
- 착공 : 2023년 1월 일
- 준공 : 2023년 12월 일
5. 사업비 집행내역
- 총괄

(단위:원)

구분	사업비(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부결정액(A)					
집행액					
교부확정액(B)					
집행잔액(A-B)					

- 세부집행내역(국비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세부사업내역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 잔액
비목	시군구				
경상 보조	합계	계			
	00군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00시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프로그램 운영			
	00시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양쓰레기 수거					
자본 보조	합계				
	00군	전시물교체			
		생태탐방로 설치			
	00시	주민쉼터 설치			
		안내판 설치			

* 반납이자산출내역은 별도 첨부

6. 사업집행 사진(시군구별/비목별 사진 첨부)

○ ○ ○ 군 집행현황 사진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사진(세부내역사업명)	안내판 설치 사진
<경상보조>	<자본보조>

○ ○ ○ 시 집행현황 사진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사진(세부내역사업명)	안내판 설치 사진
<경상보조>	<자본보조>

【별지 서식】

2023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개요(당초)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사업예산) 총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사업기간)

☐ 변경 신청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 준	변 경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변경 사유

○

☐ 향후 계획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사무관 박자현	044-200-5310 044-200-5313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기반한 해양 생태관광(교육·체험 등) 기반 조성으로 지역상생형 발전 선도모델 구축

2.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률(%)	10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매년 말	예산(국비) 집행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3.5	514	514	515.5
- 국 비	21.5	334	334	334.5
- 지방비	12	180	180	181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가해양정원사업 사업지 광역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로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3. 지원대상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포함되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시설
 -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사업성격에 따른 보조비율 차등 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23년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23년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상/자본보조를 구분, 면적·성질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경상보조사업) 해당사항 없음
- (자본보조사업)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보조금 시스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 이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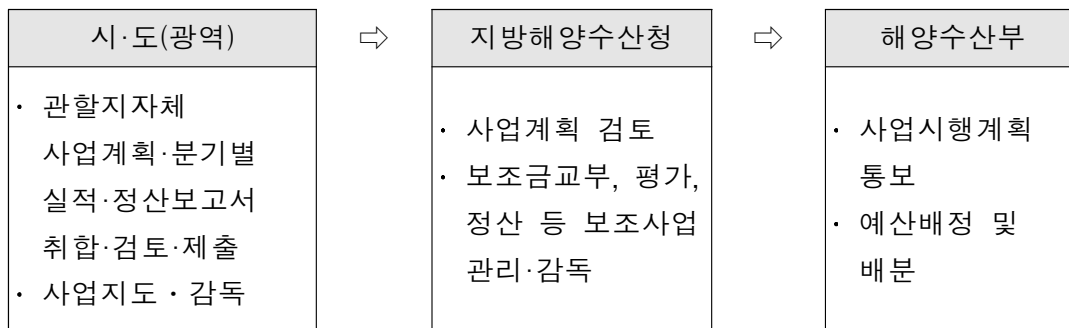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가로림만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비 확보
-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23년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청취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다만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해당연도 집행이 어려울 시 회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과 성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승인 이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체계



2.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예타대상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집행
- 지방해양수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취합·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지방청)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중요재산의 내용연수는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은 보조사업자(시장·군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

업별 추진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보고체계 : 시·도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보조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지자체는 중요재산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 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재》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4.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계획서(총괄표)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산출근거	예산		
			계	국비 (00%)	지방비 (00%)
자 본	①00 조성사업				
	②00 조성사업				
	③00 조성사업				

☐ 그간 주요 추진성과

-
-

☐ 향후 추진방향

-
-

[기초/평가사업] 사업명 기재 (세부내역)

□ 사업목적

○

□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연도별	'20		'21		'22		'23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예산(백만원)								
실적								

* 예산 :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기재

* 실적 : 명, 톤 등 (최근 3년 이내)

□ 2023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 사업예산 : 00 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 산출내역 :

* 물량, 단가 등 구체적 산출내역

- 수행방법 : 직접집행, 공모,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

○ 추진내용

- 사업수행계획 :

- 예산집행계획 :

○ 기대효과

-

사업명	사업내용(규모)	보조사업 효과	비 고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별지 서식】

2023년도 해양정원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4분기]

[○○시(군·구)]

☐ 지자체자본보조사업(330-0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내역사업명						
예)생태탐방로 설치						

- * 분기별로 제출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우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제고방안 작성 후 반드시 첨부할 것(분기별 제출 실적 없을시, 다음년도 교부액 감액 예정)
- * 집행부진사업은 사업개요(규모·위치·기간 등),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서식】

‘23년도 해양정원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 잔액(반납액)		
합계	시·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자본 보조	합계									

【별지 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 : 2023년 해양정원 조성사업

2. 사업장소 : ○○시, ○○군 일원

3. 사 업 량

○

4. 사업기간

○ 착 공 : 2023년 1월 일

○ 준 공 : 2023년 12월 일

5. 사업비 집행내역

○ 총 괄

(단위:원)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부결정액(A)					
집 행 액					
교부확정액(B)					
집행잔액(A-B)					

○ 세부집행내역(국비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세부사업내역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 잔액
비목	시·도				
자본 보조					

* 반납이자산출내역은 별도 첨부

6. 사업집행 사진(시군구별/비목별 사진 첨부)

○ 집행현황 사진

사진 내용	사진 내용

【별지 서식】

2023년도 해양정원조성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개요(당초)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사업예산) 총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사업기간)

☐ 변경 신청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 준	변 경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변경 사유

○

☐ 향후 계획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사무관 이다은	044-200-5310 044-200-5327

I. 사업개요

1. 목 적

- 폐염전, 폐양식장 등으로 오염·훼손된 과거 갯벌지역을 복원함으로써 갯벌 생태계 기능 회복을 통한 갯벌의 공익적 가치 환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 유희 갯벌지역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여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강화 및 해양생물 서식처, 휴게기능 제공 등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제고

2.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갯벌 복원사업의 시행), 제36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갯벌복원사업 만족도(점)	66	-	-	-	-	매년 말	(갯복원사업 지자체 주민 만족도× 0.7)+ (지역 환경시민 단체 만족도×0.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5,969	58,273	102,504	108,503
- 국 비	25,178	40,791	56,877	71,753
- 지방비	10,791	17,482	24,376	30,751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폐염전, 폐양식장 등으로 훼손된 갯벌 등을 자연갯벌로 복원 및 유희 갯벌 지역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흡수능력 강화 및 해양생물 서식처 제공 등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갯벌법(약칭)」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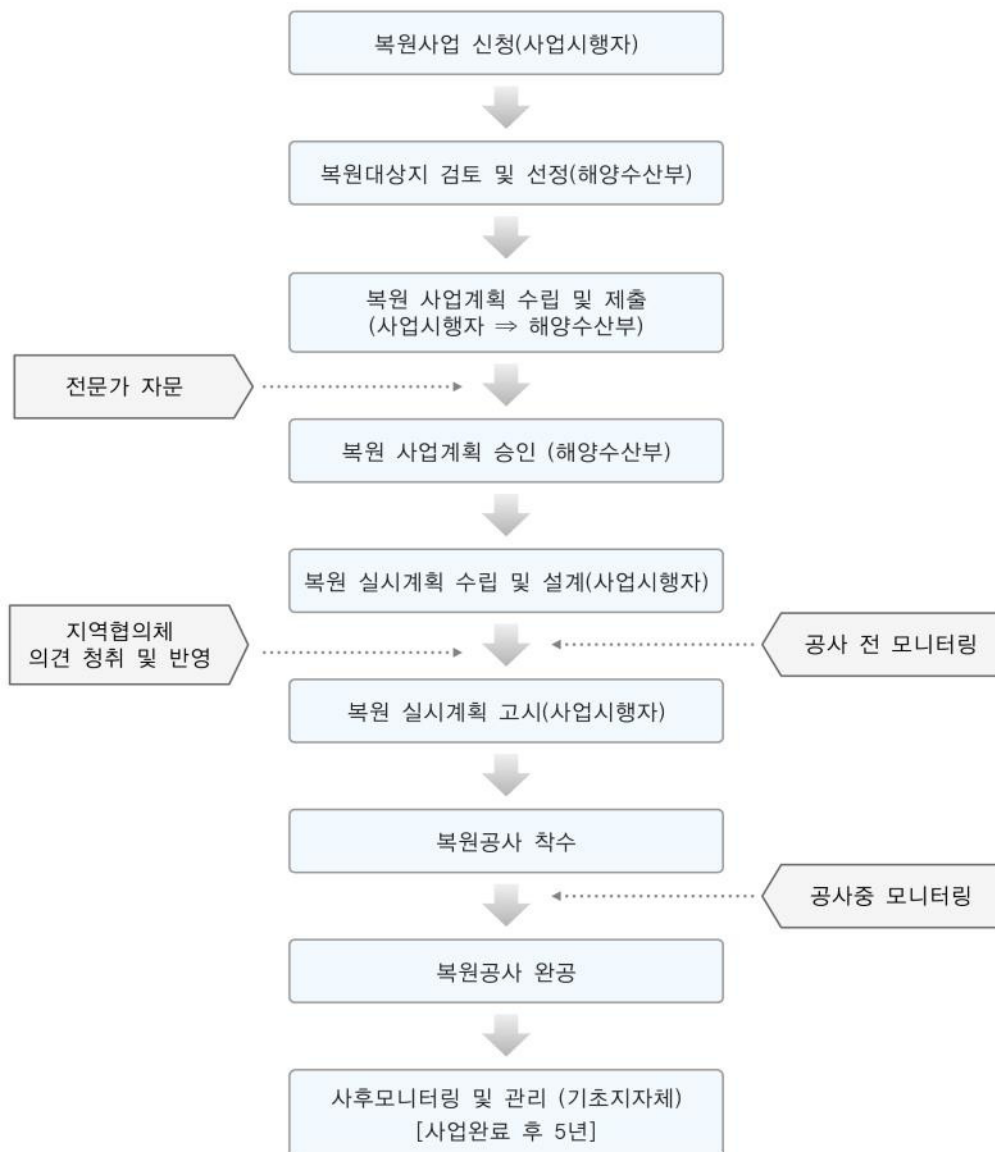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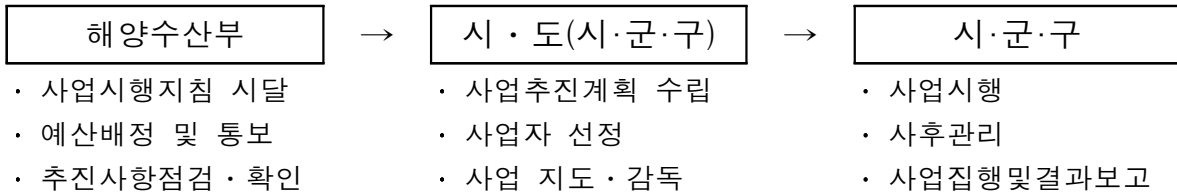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사·도)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사·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신청시기 : 매년 4월말
- 신청절차
 - 사업시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
- 구비서류 : 국고보조사업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해양수산부, 갯벌복원 자문위원회
- 사업자 변경 : 해당없음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 해양수산부
 - *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9월)
-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12월)
- 지자체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 지급절차 : 해수부(지방청)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시·도(시·군·구)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이 종료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종료 이후 3년간 효과성 검증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매년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지자체는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은재현	044-200-5300 044-200-5307

I.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로 국민에게 쾌적한 해양공간 제공 및 해양환경 보호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 수거), 제13조(부유 폐기물 수거), 제29조(재정적 기술적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쓰레기 처리(피해복구) (톤)	3,000	2,210	3,337	1,082	5,390	-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00	3,000	3,000	3,000
- 국 비	1,500	1,500	1,500	1,500
- 지방비	1,500	1,500	1,500	1,50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의 재난에 따른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재해쓰레기 수거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 운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미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 재원으로는 수거·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 선박·장비 임차료, 수거용품, 보험료, 처리수수료 등
 - 자원봉사인력의 경우 간식비 지급* 및 쓰레기의 임시야적에 필요한 경비 등
- * 바닷가 쓰레기 대청결 운동 등 자원봉사 성격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동원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재난쓰레기 발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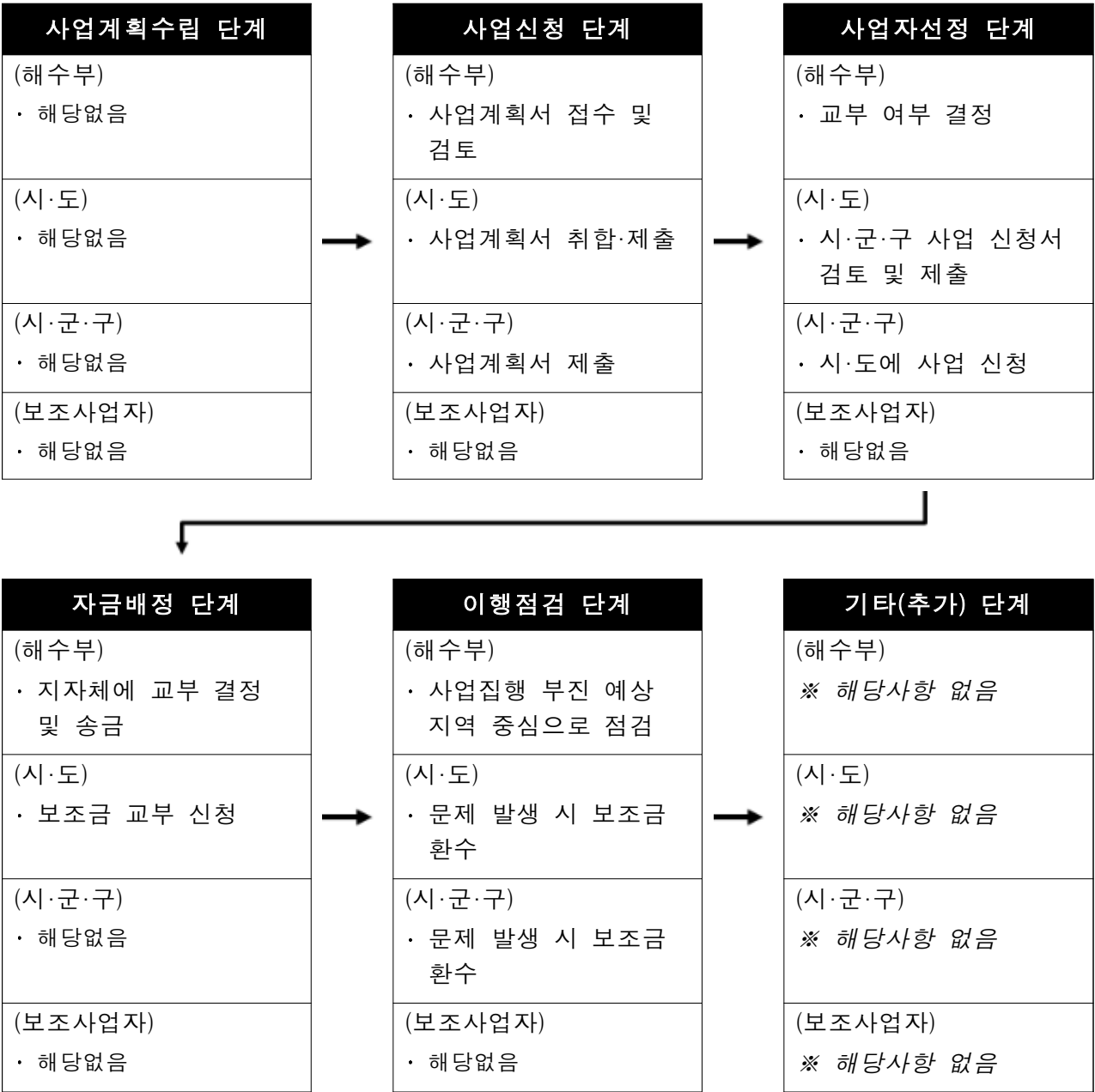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 계획이 제외된 지자체에서 피해량, 수거·처리비, 수거·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 사업신청서 상의 피해량을 현장 실사 및 확인 후 해당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 예산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 여부 결정

시·도(시·군·구)

-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가 시·도에 사업신청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사유 발생시)
-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사유 발생시)
-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정산시점 등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추진현황 및 실적, 예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추진 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결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사업 시행]

- 사업집행주체는 해안가 등의 해양쓰레기(수중침적·부유쓰레기 등) 수거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의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등록된 어장정화·정비업체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
-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집행(인력 고용 등)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적격업체와의 도급계약, 사무위탁, 용역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 집행 가능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조류 등에 의하여 수거대상 쓰레기가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역별 사업비를 조정, 집행하되 실적보고 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해양쓰레기 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는 항만(어항 포함)의 운영 및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위탁수수료는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위탁을 말함

-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사무위탁 집행하는 경우 : 위탁수수료 등
- 용역계약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서 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00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 원)

$$\left(\begin{array}{c} \cdot \\ \cdot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vdots \\ \vdots \end{array} \right)$$
[illegible]

가. 보조금(국비) 집행내역

(:)

나. 보조금(도비) 집행내역

(:)

다. 보조금(시비) 집행내역

(:)

·

(:)

()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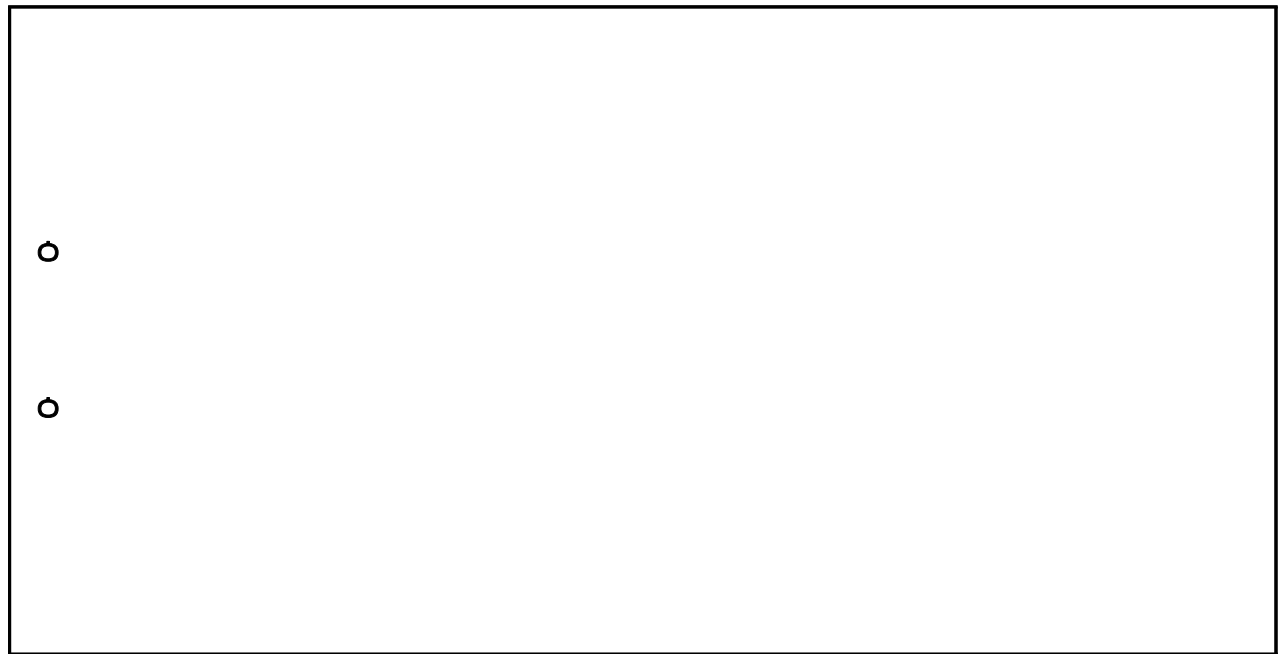
			00 (%)
			00 (%)
			00 (%)

.

.

0

. 가



. .



▪

<div>- 결과물 사진 최소 4장 이상 - 각 시·군별 2장 이상</div>	

[붙임 1]

2022년도 보조금 정산서

1.

:

@@@@

@@@@ ()
2.

:

@@@@

()

[: @@ &&]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

202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이자 확인 서류

1. 집행잔액 확인 서류
 2. 이자발생 내역 확인 서류
- * ()
- ,

②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0 044-200-5301

I. 사업개요

1. 목 적

- 페스티로폼 감용기(건축자재 등으로 활용되는 잉코트 생산) 보급을 통한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규모(기)	4	1	2	2	4	익년 3월	지자체 실적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800	800	800	800
- 지방비	200	200	200	20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페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결정 취소 대상 :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사업 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장비 제작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페스티로폼 감용기 제작 비용(부지 확보 또는 건물 신축·보수에 드는 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의무량 : 별도 배정규모 감용기 설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감용기 1기당 최대 200백만원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페스티로폼 감용기	기계	준공일로부터 15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전국 수요조사 실시 후, 지역별 지원 규모 결정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광역시자체

- 소속 시군구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 제출
- 해양수산부의 사업규모 확정안에 대한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송부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2. 사업수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 수행상황 점검을 보조금 2차 교부 전에 실시

광역시·기초지자체

- 시도의 관리·감독 하에 시군구에서 수행
- 시도는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종료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여 보조금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광역시·기초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3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가确定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후 조속히 반납

4.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광역·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별지 제1호 서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추진상황 보고(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도급업체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계						
시·군명						

○ 부지 소유현황 : 국공유지, 사유지 등 기입

3. 그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시설 전·중·후 사진 첨부

③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0 044-200-5301

I. 사업개요

1. 목 적

-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강하구를 통해 해안가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400	2,400	2,400	2,400
- 국 비	1,200	1,200	1,200	1,200
- 지방비	1,200	1,200	1,200	1,200
- 자부담	-	-	-	-

II. '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강하구 인근 연안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적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결정 취소 대상 :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사업 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재원 배분 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중장비 구입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예산 범위 내 주요 강하구 인근 쓰레기 수거·처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광역시자체

- 해양수산부의 사업규모 확정안에 대한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송부

기초지자체

-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2. 사업수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 수행상황 점검을 보조금 2차 교부 전에 실시

광역시·기초지자체

- 시도의 관리·감독 하에 시군구에서 수행
- 시도는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도 수시점검 등을 실시
- 시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종료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여 보조금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광역시·기초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3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가 확인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후 조속히 반납

4.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광역·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별지 제1호 서식】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실적 보고(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별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 장비 투입현황 : 수량, 장비별 임차단가 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종류별 수거·처리물량, 처리비용, 처리업체 현황
-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시군명	추진방법 (직접/도급)	동원장비	해양쓰레기 종류	처리 물량 (kg)	자체처리			위탁처리			비고 (처리업체)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	매립	재활용	
			플라스틱 목재 금속 기타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다목적 대형방제선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 장 송종준 사무관 박선용	044-200-5280 044-200-5283

I.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07.12) 사고와 같은 악천후 및 외해에서의 대형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5천톤급 대형방제선 1척 운영

2. 근거법령

-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 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3항(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제3항(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대형방제선 운영율(%)	100	신규	신규	신규	100	매년 말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사고대응 건수/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건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944	4,939	4,939	4,939
- 국 비	4,944	4,939	4,939	4,939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해양환경공단

* 수행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3항 및 제119조 제3항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 악천후 및 외해에서의 해양오염사고 즉시 방제조치 등을 통한 해양환경개선(평상시 준설 및 폐기물 수거 등 사업에 활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형방제선의 운영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금액내 대형방제선의 운영 업무에 사용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예산 범위내
- 범위 : 지원금액 내 대형방제선의 운영업무에 사용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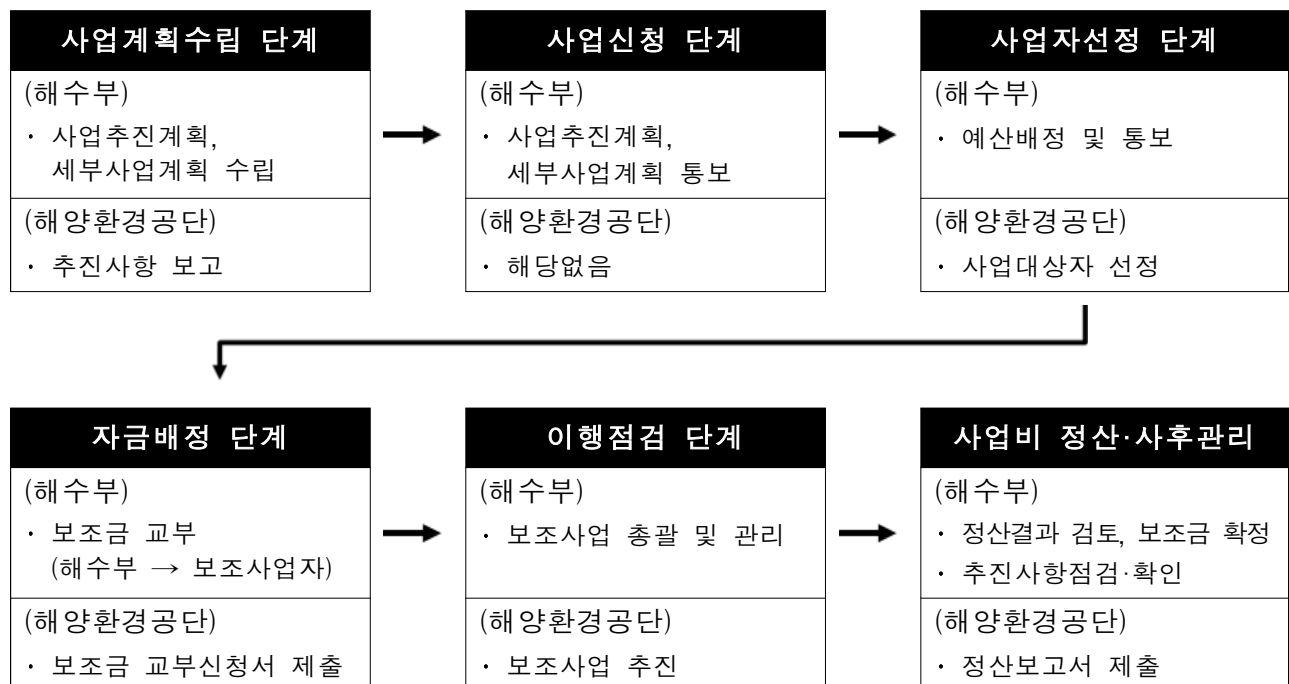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엔담호	선박	준공일로부터 30년

- 중요재산 관리대상

재산명	재산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취득가액 (백만원)	현재가액 (백만원)	담보설정	
						여부	설정금액 (백만원)
엔담호	선박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996	2022-5-31	74,490	74,490	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보조사업자에 사전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보조사업자에 통보(12월말)
- 사업추진계획 수립(12월말)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 신청절차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환경공단

-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 후 사업 신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검토·승인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따라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고려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 회수 조치

해양환경공단

- 사업계획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 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해양환경공단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추진상황 수시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해 정산보고서 검증

해양환경공단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보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해양쓰레기 정화

▶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0 044-200-5301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조성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 내지 제14조(해안·부유·침적 쓰레기의 수거),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5,286	35,286	35,286	35,286
- 국 비	17,643	17,643	17,643	17,643
- 지방비	17,643	17,643	17,643	17,643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결정 취소 대상 :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사업 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시행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중장비 구입, 집하장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
-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광역시자체

- 해양수산부의 사업규모 확정안에 대한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송부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2. 사업수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 수행상황 점검을 보조금 2차 교부 전에 실시

광역시·기초지자체

- 시도의 관리·감독 하에 시군구에서 수행
- 시도는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시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종료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여 보조금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광역시·기초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3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가确定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을 조속히 반납

4.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광역·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별지 제1호 서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실적 보고(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별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 장비 투입현황 : 수량, 장비별 임차단가 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종류별 수거·처리물량, 처리비용, 처리업체 현황
-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시군명	추진방법 (직접/도급)	동원장비	해양쓰레기 종류	처리 물량 (kg)	자체처리			위탁처리			비고 (처리업체)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	매립	재활용	
			플라스틱 목재 금속 기타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

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0 044-200-5301

I. 사업개요

1. 목 적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상시수거·관리 인력을 두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

* 해안쓰레기 수거를 주 업무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발생예방, 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 가능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제29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바다환경지킴이 배치인원(명)	1,200	200	1,000	1,000	1,200	익년 3월	지자체 실적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9,148	19,148	19,148	19,148
- 국 비	9,574	9,574	9,574	9,574
- 지방비	9,574	9,574	9,574	9,574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결정 취소 대상 :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사업 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후 현장 배치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인건비 및 부대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지자체별 별도 배정인력규모 채용·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전국 수요조사 실시 후, 전년도 사업실적,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및 인원 배정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광역시자체

- 사업예산과 인력 배정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서 작성·송부
- 해양수산부의 사업규모 확정안에 대한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송부

기초지자체

- 사업인원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2. 사업수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 수행상황 점검을 보조금 2차 교부 전에 실시

광역·기초지자체

- 시도의 관리·감독 하에 시군구에서 수행
- 특히 해안에 표착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구역의 특성 상 작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시도는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와 근로자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사업종료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여 보조금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광역·기초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3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가 확정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후 조속히 반납

4.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광역·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IV. 기타사항

- 본 사업계획과 별도로,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함

②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0 044-200-5301

I. 사업개요

1. 목 적

-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규모(개소)	130	-	40	70	100	익년 3월	지자체 실적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400	6,300	7,200	7,650
- 국 비	2,550	3,000	3,450	3,900
- 지방비	2,400	2,850	3,300	3,75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결정 취소 대상 :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사업 운영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설 준공 및 해양쓰레기 처리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쓰레기 집하장 건축 비용 및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의무량 : 예산범위 내에서 집하장 설치 및 해양쓰레기 처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집하장 설치) 국고 70%, 지방비 30%
(처리 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해양쓰레기 집하장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35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전국 수요조사 실시 후, 지역별 지원 규모 결정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광역시자체

- 소속 시군구 수요조사 실시 후 결과 제출
- 해양수산부의 사업규모 확정안에 대한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송부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2. 사업수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 수행상황 점검을 보조금 2차 교부 전에 실시

광역시·기초지자체

- 시도의 관리·감독 하에 시군구에서 수행
- 시도는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사업종료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여 보조금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광역시·기초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3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가 확정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후 조속히 반납

4.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광역·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IV. 기타사항

- 본 사업계획과 별도로,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함

③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 이 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신재영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0 044-200-5301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의 전국적 배치를 통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2.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규모(척)	1	-	-	-	6	익년 3월	지자체 실적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750	-	-	-
- 국 비	1,875	-	-	-
- 지방비	1,875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결정 취소 대상 : 해수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사업 운영 : 해수부가 제시한 표준설계안에 따라 지자체별로 건조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배정예산에 해당하는 선박 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선박	준공일로부터 30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광역지자체

- 해양수산부의 사업규모 확정안에 대한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송부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2. 사업수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 수행상황 점검을 보조금 2차 교부 전에 실시

광역시·기초지자체

- 시도의 관리·감독 하에 시군구에서 수행
- 시도는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사업종료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여 보조금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광역시·기초지자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3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가 확인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후 조속히 반납

4.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

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광역시·기초지자체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유해교란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서기관 최재용 주무관 손슬기	044-200-5310 044-200-5315 044-200-5317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된 해양생태계 개선·복원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 유해교란해양생물(갯끈풀) 제거·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2.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갯끈풀 제거사업 추진율(100%)	100	100	100	100	100	매년 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714	714	714	714
- 국 비	500	500	500	500
- 지방비	214	214	214	214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유해교란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지자체

-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지자체
 -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취소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갯끈풀 제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유해해양생물)으로 지정된 종의 제거 및 관리를 포함하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수산발전기금) 70%, 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 당해 연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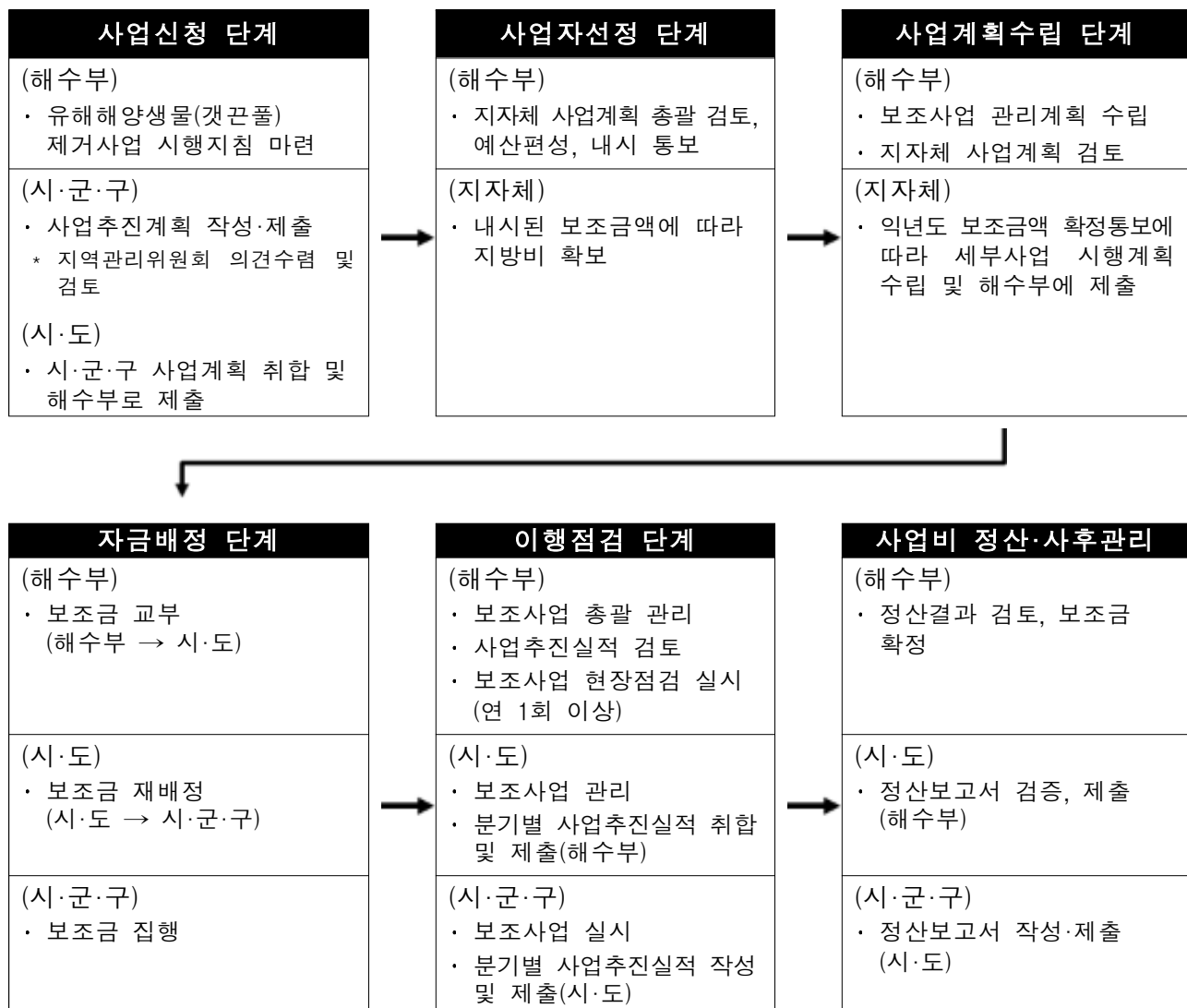
-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 연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사업량 및 예산
 - (지자체 보조)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 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7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군·구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준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 등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당 권역 지자체 사업계획을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전년 3월 이내)
-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해수부, 매년 4월~8월)
-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15일 이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관련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 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1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각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5.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취합·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자체

-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제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금 및 예산운용 계획(기획재정부)」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함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23. 2월말)
- 시·도는 2024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2024년도 사업은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23. 12월)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서기관 최재용 주무관 손슬기	044-200-5310 044-200-5315 044-200-5317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된 해양생태계 개선·복원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특성을 반영한 해양생물 종증식·복원·구조·치료·연구와 인식증진(교육·생태체험·관광 등)을 위한 거점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

2.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추진율(%)	100	100	100	100	100	매년 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집행률 등의 달성도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8,670	5,600	-	-
- 국 비	4,335	2,800	-	-
- 지방비	4,335	2,800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지자체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해양생태과학관조성 지자체
 -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취소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해양생태과학관조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제3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수산발전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 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사업량 :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776㎡,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 연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사업량 및 예산

- (지자체 보조)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 4,335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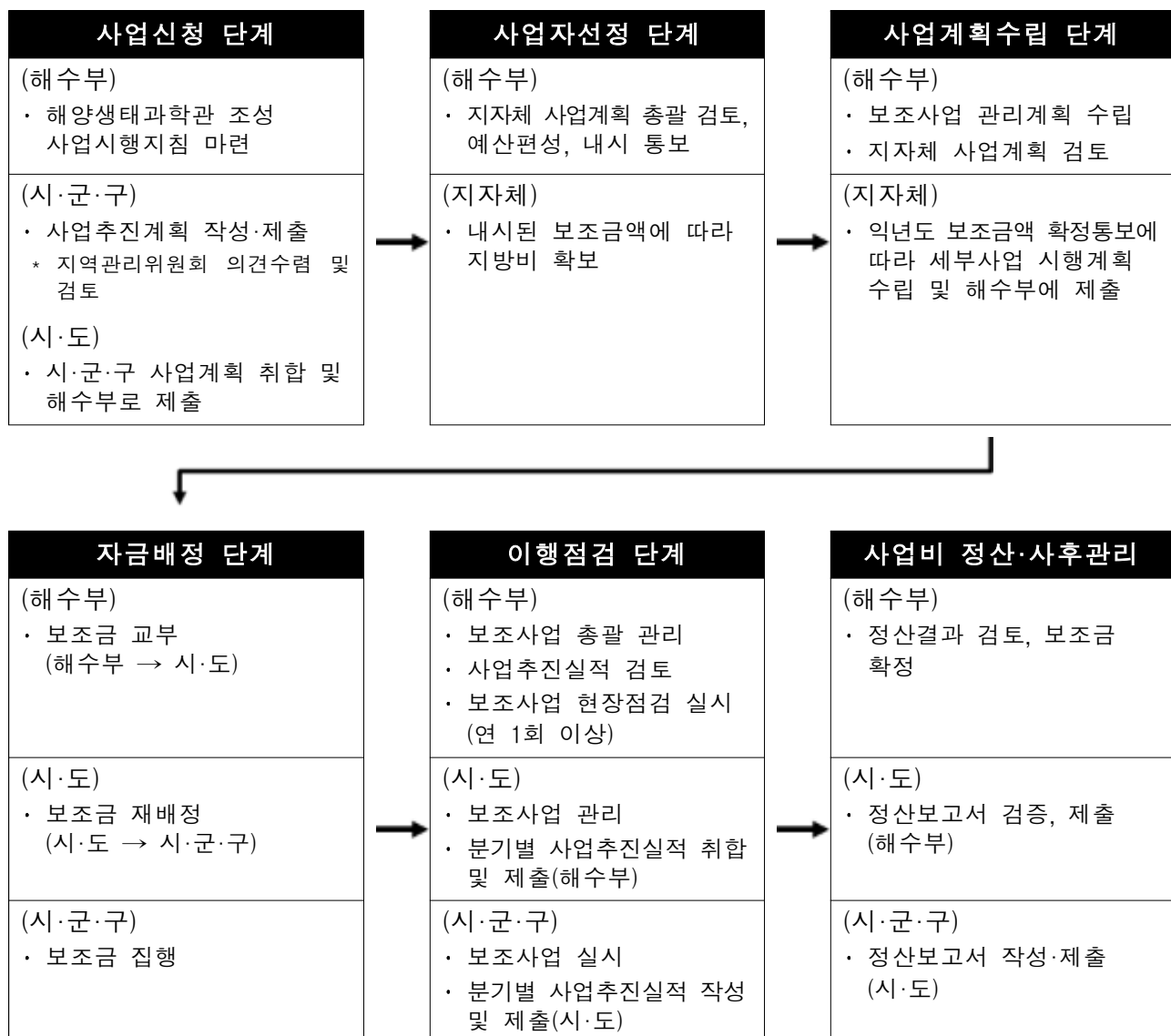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양생태과학관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군·구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준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 등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당 권역 지자체 사업계획을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전년 3월 이내)
-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해수부, 매년 4월~8월)
-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15일 이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관련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1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각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5.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취합·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자체

○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제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금 및 예산운용 계획(기획재정부)」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함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해양분야

3. 국제협력정책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임채호 서기관 김성국	044-200-5350 044-200-5353

I. 사업개요

1. 목 적

-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주요시설 운영, 독도 홍보·연구 분야 민간전문성 활용·향상을 위한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독도탐방 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2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독도탐방사업 만족도 (단위 : 점)	90점	88.75	88.22	90.19	93	'22.11.	독도탐방 사업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리커트 척도 사 용 : 0,25,50,75,100) *100점(매우만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지자체 보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3,570	4,970	4,270	4,894
- 지방비	2,281	2,881	2,581	3,149
- 자부담	-	-	-	-

○ 민간보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790	790	790	79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호에서 제12호에 따른 독도 안 시설 관리·운영, 독도 취항 선박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경북도, 울릉군) 및 독도관련 민간단체(공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가. 지자체 보조

- 독도 관할 지자체로서, 독도 관련 주요 시설 운영·관리 등 독도 관련 총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울릉군)

나. 민간 보조

- 독도 관련 연구·조사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공모)

*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신청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보조금법」 교부결정 취소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지자체 보조

- 독도 관련 시설물* 건립·운영 주체인 지자체(경상북도, 울릉군)

* 독도박물관(안용복기념관), 독도관리선, 독도주민숙소, 독도입도영상시스템 등

○ 민간 보조

- 독도탐방 사업 및 독도관련 연구·조사·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공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 보조

- 독도 입도객 지원, 안전관리 및 독도홍보 등을 위한 울릉도·독도 소재 주요 시설 설립·관리·운영비

가. 민간 보조

- 사회적 배려층·문화예술인 대상 독도탐방 사업 및 독도 관련 학술·연구·홍보 사업 수행단체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100%
 - 민간 보조 : 정액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예산
 - (지자체 보조) 독도박물관 운영 : 890백만원($1,780 \times$ 보조율 50%)
 - (지자체 보조) 독도주민숙소 운영 : 120백만원($172 \times$ 보조율 70%)
 - (지자체 보조) 독도관리선 운영 : 1,050백만원($1,500 \times$ 보조율 70%)
 - (지자체 보조)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100 \times$ 보조율 100%)
 - (지자체 보조) 독도안전지원센터 기본·실시설계 : 700백만원($1,000 \times$ 보조율 70%)
 - (지자체 보조) 독도 현지조사연구활동 지원 : 500백만원($1,000 \times$ 보조율 50%)
 - (지자체 보조) 외국인독도체험 : 210백만원($300 \times$ 보조율 70%)
 - (민간 보조) 독도탐방 사업 : 580백만원(정액)
 - (민간 보조)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 : 210백만원(정액)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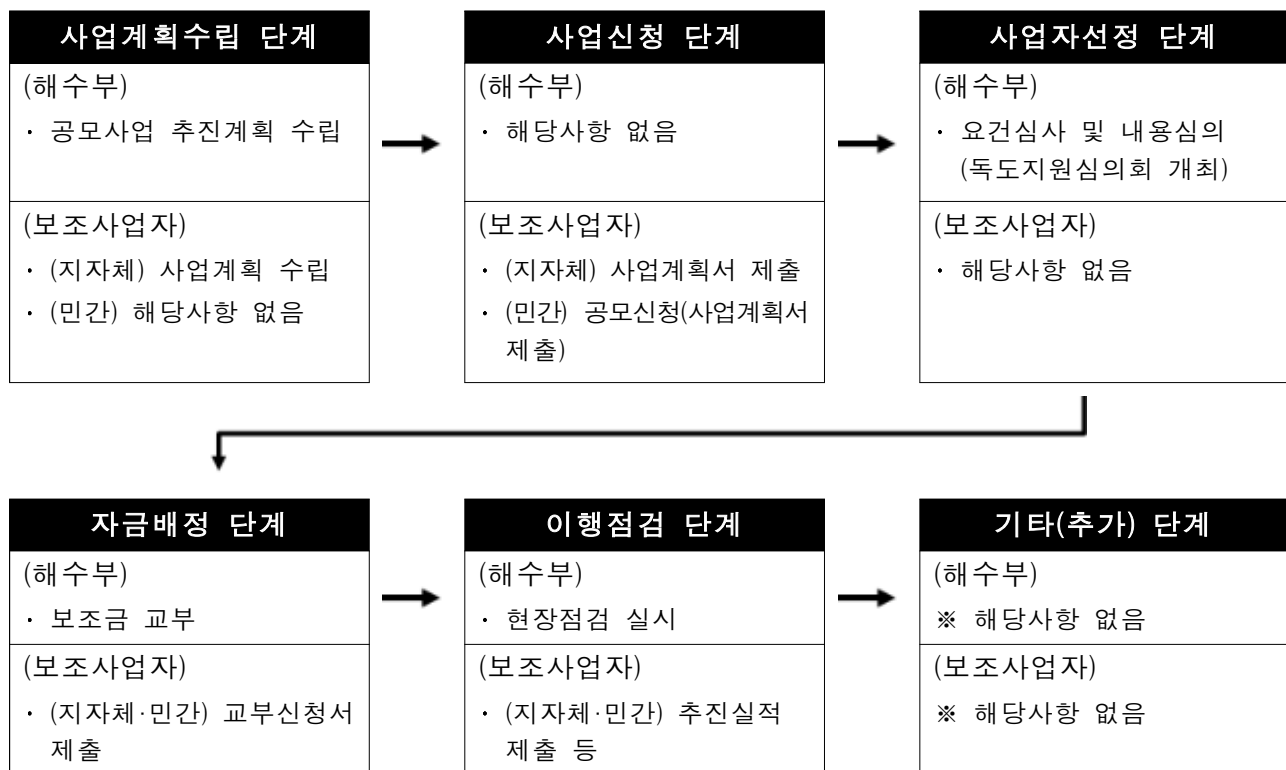
- 중요재산 취득
 - 해당 없음(미정)
- 중요재산 관리대장 ('21~)

재산명	재산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취득가액 (백만원)	현재가액 (백만원)	담보설정	
						여부	설정금액 (백만원)
(독도주민숙소) 독도 주민숙소 화재예방 및 방범용 cctv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2.04.11	6.4	6.4	부	-
(독도관리선) 진공청소기 2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	2022.03.03	3.6	3.6	부	-
(입도영상시스템) 텔레비전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	2021.08.26	0.4	0.4	부	-
(입도영상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9.17	5.3	5.3	부	-
(입도영상시스템) 디지털비디오레코더 5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	2021.09.07	7.5	7.5	부	-
(입도영상시스템) 보안용카메라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6.10	40	40	부	-
(입도영상시스템) 네트워크스위치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18	1	1	부	-

재산명	재산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취득가액 (백만원)	현재가액 (백만원)	담보설정	
						여부	설정금액 (백만원)
(입도영상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2021.01.25	1.7	1.7	부	-
(입도영상시스템) 네트워크스위치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2.4	2.4	부	-
(입도영상시스템) 방화벽 장치 3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19.5	19.5	부	-
(입도영상시스템) 무선랜엑세스포인트 2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6.2	6.2	부	-
(입도영상시스템) 네트워크스위치 4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4.4	4.4	부	-
(입도영상시스템) 디지털비디오레코더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1.3	1.3	부	-
(입도영상시스템) 컴퓨터서버 2식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18	18	부	-
(입도영상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3.8	3.8	부	-
(입도영상시스템) 영상감시장치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북길 3	2021.01.25	4.7	4.7	부	-
(독도관리선) 진공청소기	기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	2021.07.13	1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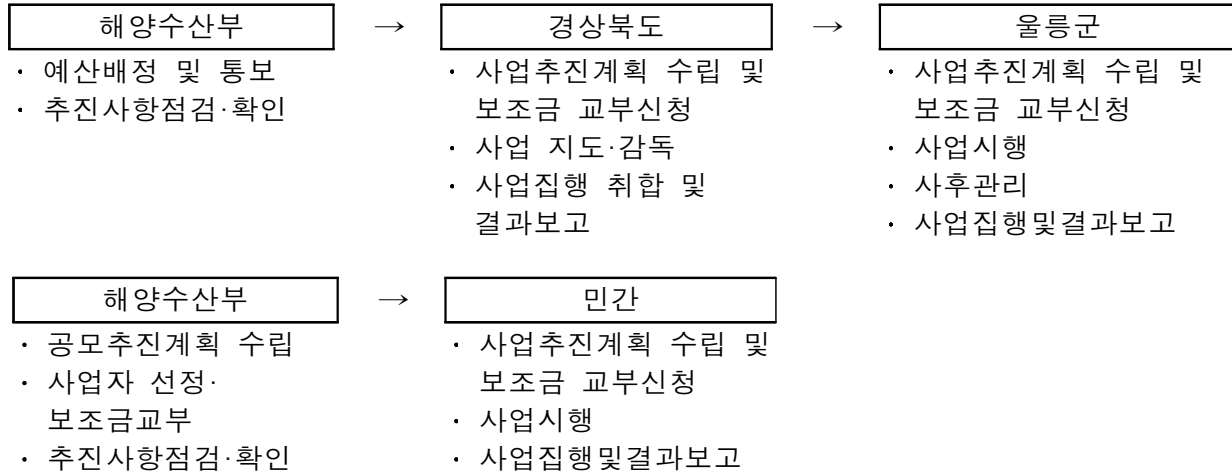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 공모사업 및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2월~3월
- 2023년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23.2~3월



3. 사업신청단계

지자체(경상북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신청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해양수산부, 공문)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민간 단체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공고시기 : 2023.2~3월
- 신청절차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실행계획서 등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 및 익년도 예산 편성(매년 4월~8월)
- 지자체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15일 이내)

지자체(경상북도)

- 도지사(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민간 단체

- 해양수산부 독도지원심의회(「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 * 위원장(국제협력정책관) 포함 총 7명(외부 위촉위원 2명)으로 구성
 - 1차 요건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내용심의를 거쳐 사업자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분할교부(1차 : 상반기, 2차: 하반기)

지자체(경상북도)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 계획서와 교부신청서를 검토·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민간 단체

- 사업수행 단체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중간점검 실시

- 예산집행·사업수행 현황 및 「보조금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확인
 - * 현장점검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 가능)
- 조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요청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 「보조금법」 등 중요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 사항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공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확정한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 회수 조치

지자체(경상북도)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예산집행 현황, 「보조금법」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확인 등 사업집행점검 상시모니터링(집행현황 해양수산부로 주기적 보고)
- 중요재산 취득 보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등 결과 보고

민간 단체

- 예산집행 현황, 「보조금법」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확인 등 사업집행 관련 사항 상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사업계획 변경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지자체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도 홍보를 위한 이어도연구회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임채호 사무관 송완섭	044-200-5350 044-200-5357

I. 사업개요

1. 목 적

- 이어도 수호와 이어도의 자연, 해양, 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 활동 추진
- 제주의 역사와 문화 속 이어도에 대한 조명을 통한 이어도 스토리텔링 강화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이어도 및 해양주권 학술 홍보 성과(%)	100	100	100	100	100	'23.12.	학술논문 2편(1건*10%)+ 이어도 관련 저서 간행 2권 (1권*20%)+국내·외 전문가 포럼 2회(1회*10%)+ 해양 아카데미 개최 2회(1회*1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50	450	450	450
- 국 비	450	450	450	4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 이어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
 - * '15년부터 국가보조사업(민간)으로 추진, 해양수산부 예산각목명세서 상 「이어도 홍보를 위한 이어도 연구회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확정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민법」 제 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이어도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 진흥을 위해 이어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학술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이어도 저변확대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이어도 해양주권 수호와 관할권 강화를 위한 학술·홍보·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기반 구축사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 보조(국고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해양수산부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라 교부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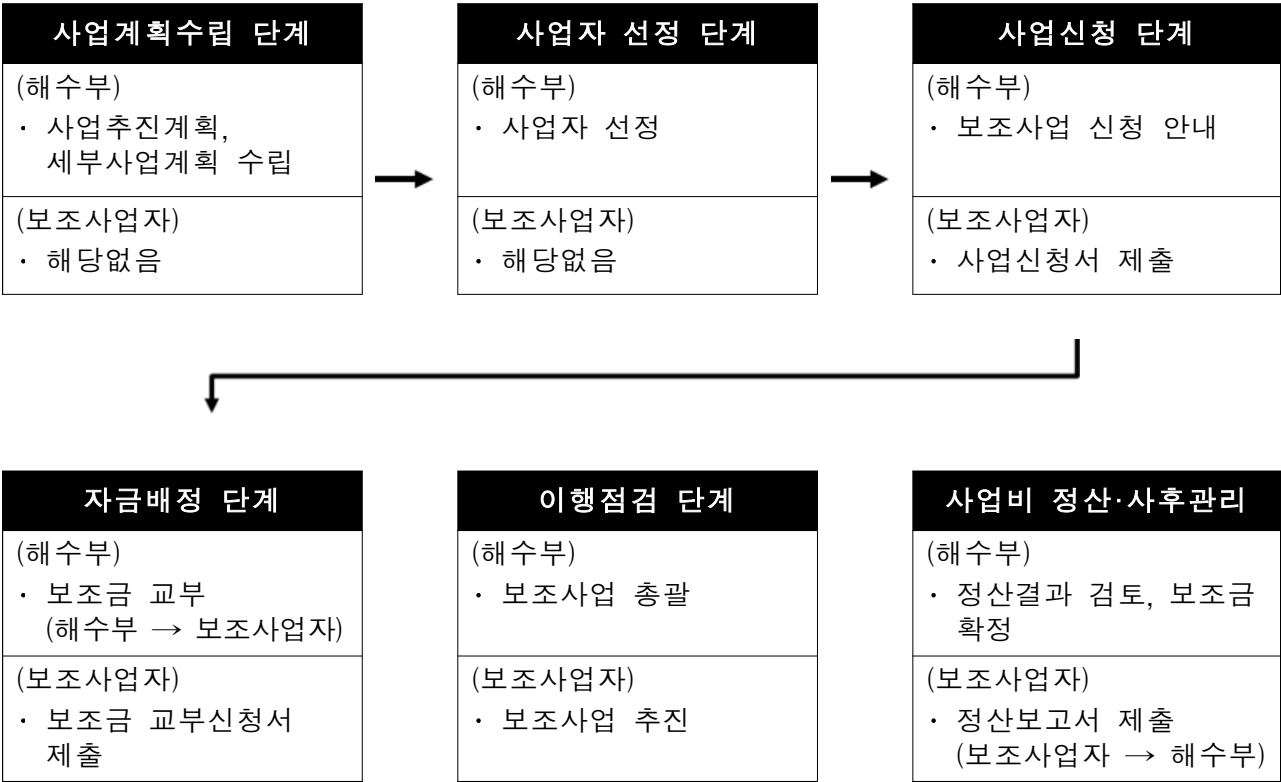
- 지원 조건 : 국고 100%, 정액지원(450백만원 이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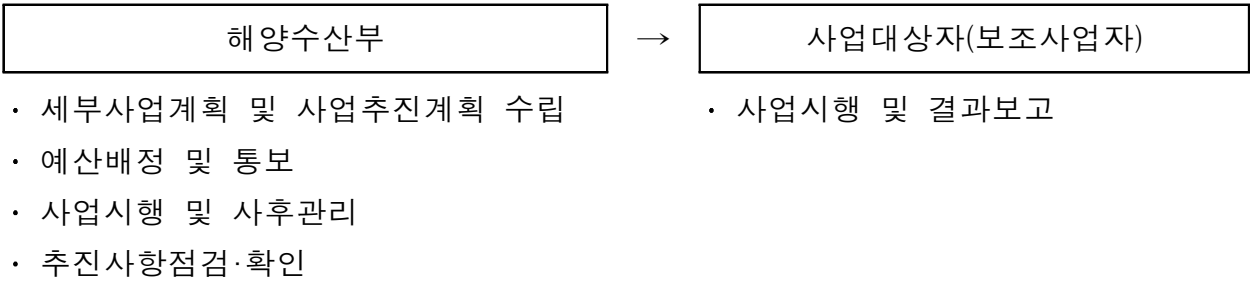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3.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 (신청절차) :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추진계획 기준으로 계획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조금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

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이어도 홍보를 위한 이어도연구회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과 장 박용한 사무관 권오승 주무관 전우석	044-200-5380 044-200-5383 044-200-5386

I. 사업개요

1. 목 적

- 한-뉴질랜드 FTA 협정 체결('15.12 발효) 시 양국간 수산물 교역촉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수산협력사업을 반영, 양국 정부가 가용 재원의 부담을 통해 우리측 수산분야 중·고등·대학생 및 수산전문가에게 뉴질랜드 현지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영어권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수산업 훈련연수)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열 대학생에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학 및 직무교육 기회 제공
 - (수산전문가 훈련) 1차산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양국 간 공동연구 및 교류 촉진

2. 근거법령

-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14장(농수산협력), 한-뉴질랜드 FTA 협력분야 이행약정, 농림수산협력에 대한 이행약정 <(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프로그램 만족도	95	94.8	-	-	-	매년 12월	당해연도 어학연수 참가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100점 만점 환산)

* '20~'21년 어학연수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뉴질랜드 측 입국 제한('20. 3~'22.7)으로 미 실시, '22년 어학연수 사업은 국내 어학캠프로 대체하였으나, 어촌분야 지원자가 없어 미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7	307	307	307
- 국 비	307	307	307	307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한)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Education New Zealand) 간 체결된 양해각서('16.3.21)에 따라 양국의 사업관리기관을 지정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한-뉴질랜드 FTA 협정('15.12) 및 이에 근거한 (한)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 (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Education New Zealand) 간 체결된 양해각서('16.3.21)에 따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동 사업의 단일 시행자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아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보조금법과 아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최대 25명) 어촌지역 어업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 2~3학년, 고 1~2학년)

* 참가인원은 매년 소요비용(항공료, 현지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수산업 훈련연수, 최대 4명) 수산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해양수산업 관련 학과 대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 참가인원은 매년 소요비용(항공료, 현지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수산전문가 훈련, 최대 6명) 수산분야 전문가

* 참가인원은 매년 소요비용(항공료, 현지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매년 한-뉴 농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당해연도 전문가 훈련계획 협의 실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의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사업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별 지원조건(재원)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기초생활수급자 : 자부담 없음, 차상위계층 : 자부담 10%, 일반 : 자부담 20%

- 수산업 훈련연수 : 국고 100%

* 단, 홈스테이 비용의 20% 자부담

- 수산전문가 훈련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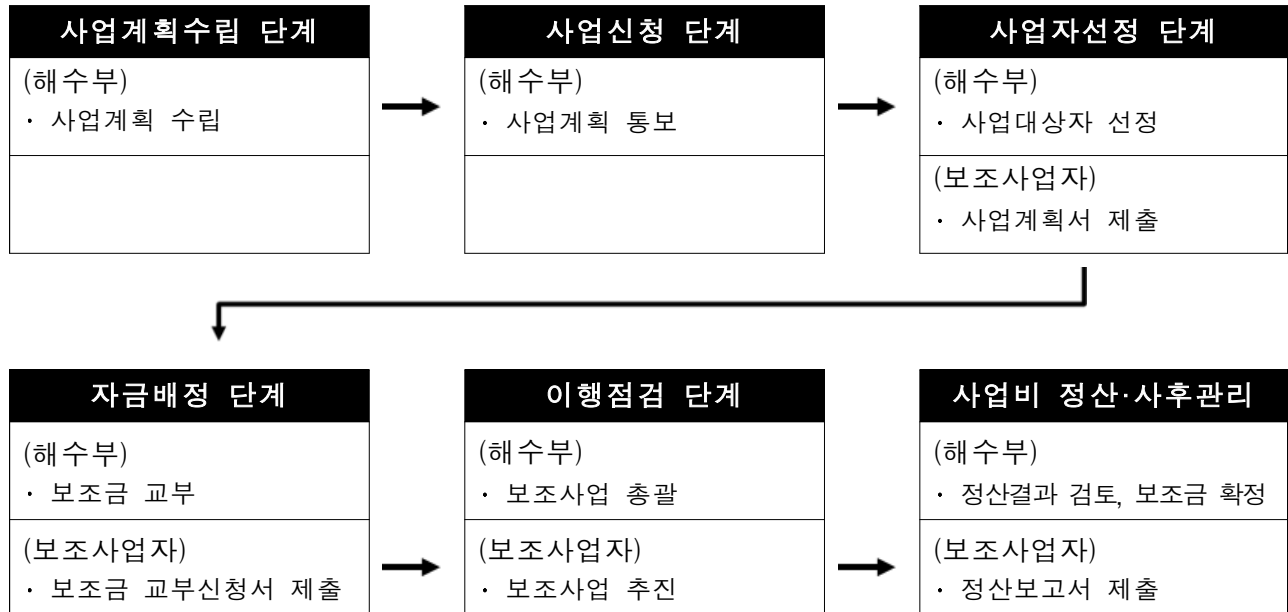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당해 연도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3.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통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은 해수부가 통보한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5. 이행점검단계

《이행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해양수산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을 위해 사전에 뉴질랜드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을 추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 게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알림 활동 추진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프로그램 목적에 적합한 지원자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고 뉴질랜드 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해당 사업집행

<지원대상 선정>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 신청접수 → 서류전형(영어평가 포함) → 면접전형 → 최종선발

* 전국 중·고등학교장은 지원자격(어촌거주, 어업인 자녀)에 적합한 학생을 추

천하기 위해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사(영어 과목 등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성실도 등)후, 학교당 최대 2명 추천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선발 절차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예 : 학교장 추천자 대상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발 등)

- 수산업 훈련연수 : 신청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선발

-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을 보고(농정원)
-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설문 조사 실시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보고서를 평가 및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 결과 점검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 사업 정산 완료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1.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항로표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유은원 사무관 김지현	044-200-5330 044-200-5335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과 장 정준호 주무관 배용찬	044-200-5870 044-200-5881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 수산자원 확보도모
 - (신남방국가 대상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신남방국가 대상 해기사 후보생 대상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선실습 교육 훈련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단기 연수) 세네갈 해양수산경제부 고위직 초청연수 및 석박사 학위과정 연수
 - (키르기즈스탄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이식쿨주 통지역의 Tonsky양식장을 활용하여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를 구축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시범 운영 실시
 - (연안도서국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훈련)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 도모
 - (가나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수산물 가공·위생·보관시설(훈연, 수로, 냉장창고 등) 개선, 현지 어업인단체 연계 여성 어업인 교육 진행,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방안 제시 등
 - (스리랑카 콜롬보항·골항 항로표지 개발사업) 스리랑카 항로표지 분야 정책자문, 초청연수, 항로표지 인프라 개선, 장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교통안전 기반 마련과 선박사고 예방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2. 근거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제수산기구 쿼터유지 (단위: 천톤)	63	47.9	67	62	63	매년12월	쿼터 확보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099	5,350	5,600	5,999
- 국 비	5,099	5,350	5,600	5,999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남방국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의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실습선박 및 강사)를 활용한 승선 실습을 개도국 등에 제공하기 위한 ODA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세네갈 수산해양 경제부 역량강화 사업, 연안도서국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사업 : (사)해외어업협력센터
 - * (사)해외어업협력센터는 해외어업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연구, 기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책 수립·집행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사업과 연안도서국을 대상 수산분야 기술교육 ODA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키르키즈스탄 국립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가나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 강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으로, 키르키즈스탄 농림수산부와 MOU를 체결('19.7)하고 수산업 증진을 위한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가나 수산위원회와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를 위한 ODA 사업 발굴 및 추진
- 스리랑카 골롬보항·골항 항로표지 개발사업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 설치 및 기능 조사·연구·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스리랑카의 항로표지개발 기본계획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확보와 스리랑카 해역에서의 해상운송 효율 향상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사)해외어업협력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지원대상

- (연안도서국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훈련)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국격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 도모

- (신남방국가 대상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신남방 국가의 해기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선실습 교육훈련비 지원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연안도서국 수산분야 고위급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 (키르기즈스탄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이식쿨주 통지역의 Tonsky양식장을 활용하여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를 구축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시범 운영 실시
- (가나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 강화) 가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 개선으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성평등 달성 및 수산 협력 강화 도모
- (스리랑카 골롬보항·골항 항로표지 개발사업) 스리랑카 항로표지 분야 정책 자문, 초청연수, 항로표지 인프라 개선, 장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교통안전 기반 마련과 선박사고 예방을 통한 해양환경보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의 승선실습 교육훈련비, 초청연수비, 항로표지 인프라 개선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비용, 정책연수 훈련 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해당사항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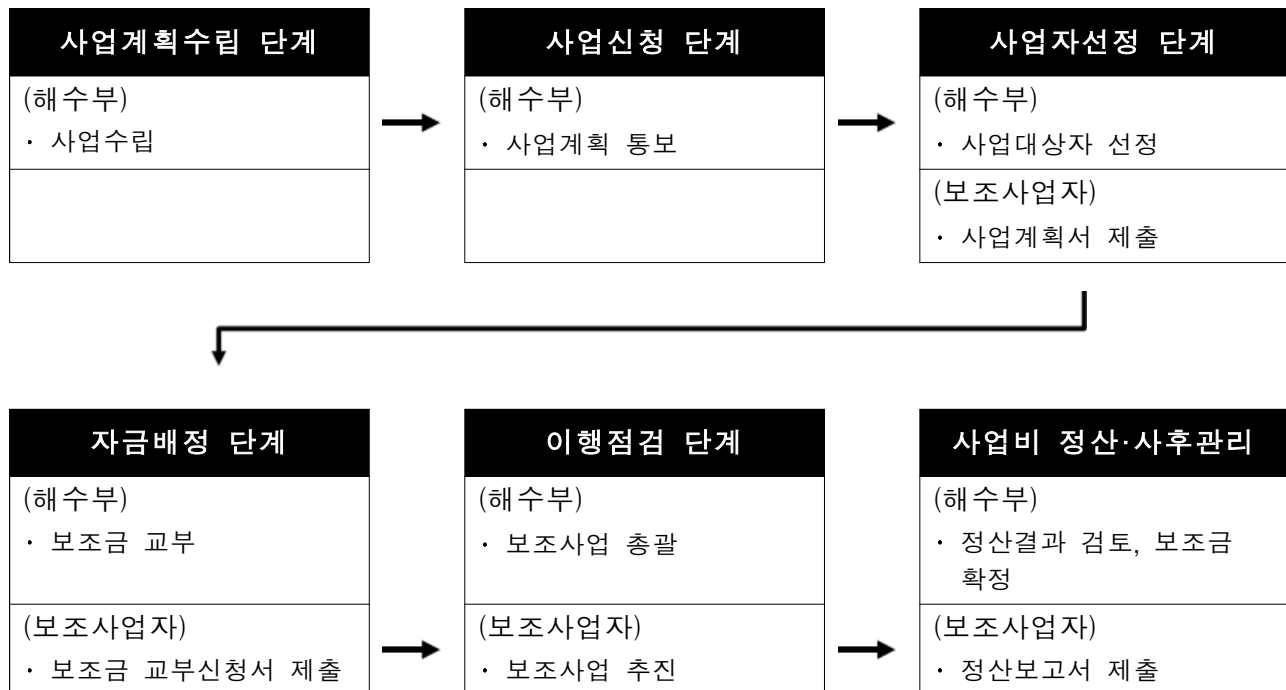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

각 수행기관

- 각 기관은 해수부가 통보한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자금배정단계

각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수행기관은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보고서를 평가 및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 결과 점검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수행기관

- 지원 사업 정산 완료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

해운·해사·항만 분야

4. 해운물류국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팀 장 홍근형 사무관 박재민	044-200-6205 044-200-6204

I. 사업개요

1. 목 적

- 전자상거래 등 국내외 물류수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항만법」 제8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업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업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업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업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업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공정률(%)	48	-	-	14	41	연말	수행기관 제출자료 * 공정별(타당성 용역, 설계, 착공, 공사 등) 예상 소요 기간 기준으로 공정률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081	53,050	44,248	-
- 국 비	3,530	15,574	13,274	-
- 지방비	-	-	-	-
- 자부담	21,551	37,476	30,974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기준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부산항과 인천항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반시설 설치공사 비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정액보조(사업비의 약 30%)
-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53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당해 연도 사업예산 범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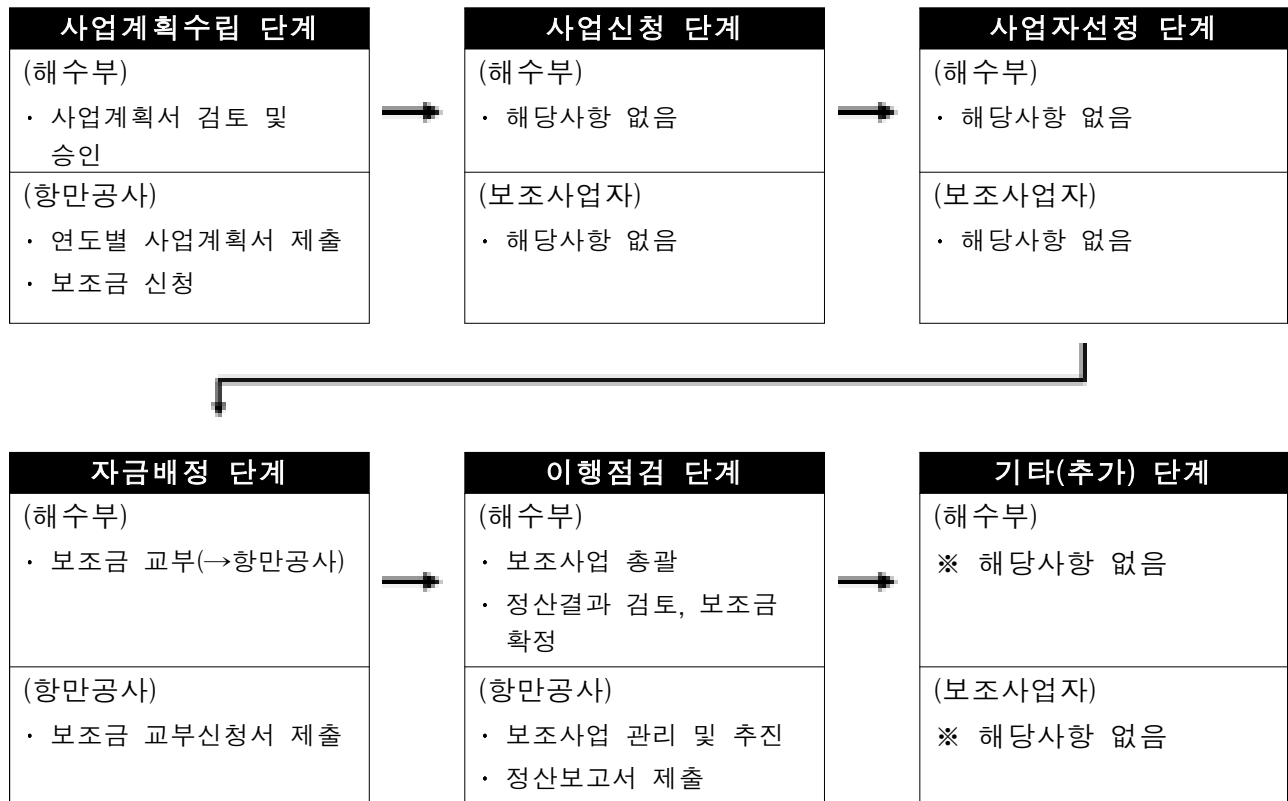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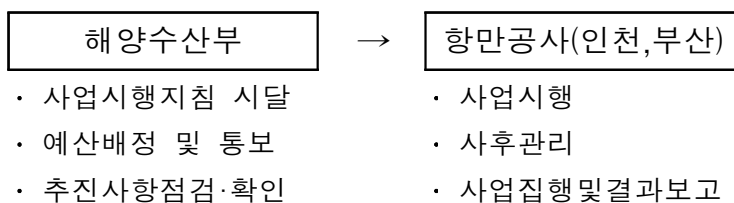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검토 및 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신청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사업시행자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항만공사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공사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이 민 석 사무관 김 수 연	044-200-5750 044-200-5757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인수합병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 법률, 기술적 조사분석 등 지원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위한 현지 물류시장 조사 지원 또는 화주-물류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도 제고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 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대상 지원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 지원건수(건)	7	10	10	10	10	년말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 지원 건수≥7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542	542	542	542
- 지방비	-	-	-	-
- 자부담	50%	50%	50%	50%

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 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상기 '1.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인수합병, 시설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등)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창고, 포워딩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등) 진출 유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인수합병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 법률, 기술적 조사분석 등 지원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 수혜기업 자체활동 비용은 불인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최대 50 %, 자부담 최소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최대 50%
시설투자형		

-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023년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1월

3.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주체 : 사업시행자
- 공고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공고 가능)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 예산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 범위내 추가 공고
- 신청절차 : 기업 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규모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증명서류)
 -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 / 신청서 등 서류는 공고 시 첨부예정
- 신청서 접수
 - 사업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시행자
 - * 해운·물류 관련 기관·협회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 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타당성 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결과보고

해양수산부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관리주체가 보고한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3년도 사업 수혜기업 간담회 및 2024년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 ○ ○ ○ 회 계 ○ ○ 계 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출 및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년 ○ ○ 월 ○ ○ 일

해양수산부장관

나.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기업

☐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컨소시엄

①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상기 ‘1.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사업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위해 현지 물류시장을 조사하는 비용 지원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최대 50 %, 자부담 최소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사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단독진출의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화주·물류기업 간 컨소시엄의 경우 4천만원까지 지원

* 사업예산 중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사업예산 비율의 80% 이하로 책정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023년도 해외시장 조사 지원사업 : 2023.1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교부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사업시행자

3.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주체 : 사업시행자
- 공고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공고 가능)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 예산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 범위내 추가 공고
- 신청절차 : 기업 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0부(<별지 제2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규모 확인서 (중소/중견기업 증명서류)
 - 최근 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

○ 신청서 접수

- 사업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시행자

- * 해운·물류 관련 기관·협회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해외시장 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해외시장 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결과보고

해양수산부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관리주체가 보고한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해외시장 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해외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3년도 사업 수혜기업 간담회 및 2024년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요 조사 실시

2. 202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 ○ ○ ○ 회 계 ○ ○ 계 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출 및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년 ○ ○ 월 ○ ○ 일

해양수산부장관

②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 장 노재옥 사무관 유윤진	044-200-5240 044-200-6182

I. 사업개요

1. 목 적

- 북극항로 진출 우호세력 형성을 위해 러시아(북극항로의 60%를 차지) 북극 원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① 인력양성(명) ② 논문 등 연구성과 발표 건수(건)	8	-	-	-	집계 예정	매년 말	①교육지원 인원 또는 석사 학위 취득 인원(명) 확인(가 중치 0.5) ②논문 등 연구성과 발표 건 수 확인(가중치 0.5)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60	360	360	360
- 국 비	300	300	300	300
- 지방비	-	-	-	-
- 자부담	60	60	60	60

* 예산 반영 현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정책 기본법」 제50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모('21.1~'21.2)와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심의('21.2.5)를 통해 제1차 사업 기간('21~'25) 동안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인천대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자격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러시아 북극원주민을 초청하여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석사학위 취득 지원 가능한 기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 대상

- 러시아 북극 원주민을 국내 물류 대학원에 초청(기존 4명/ '23년 신규 4명 추가)하여 북방 물류 분야 교육 및 장학(석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등록금, 체제비(항공비, 생활비, 의료보험 등) 등 교육생 장학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운영
 - 매년 연초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승인 후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사업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정책보조
 - 연차별로 수행실적 평가와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3차년도('23년) 중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기준 및 한도 : '23년 총 3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예산: '23년 국고 총 300백만원

< 연도별 소요 예산(안) 및 지원 인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					2차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예 산	16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60	2,720
지원인원 (명)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신규4	계속4	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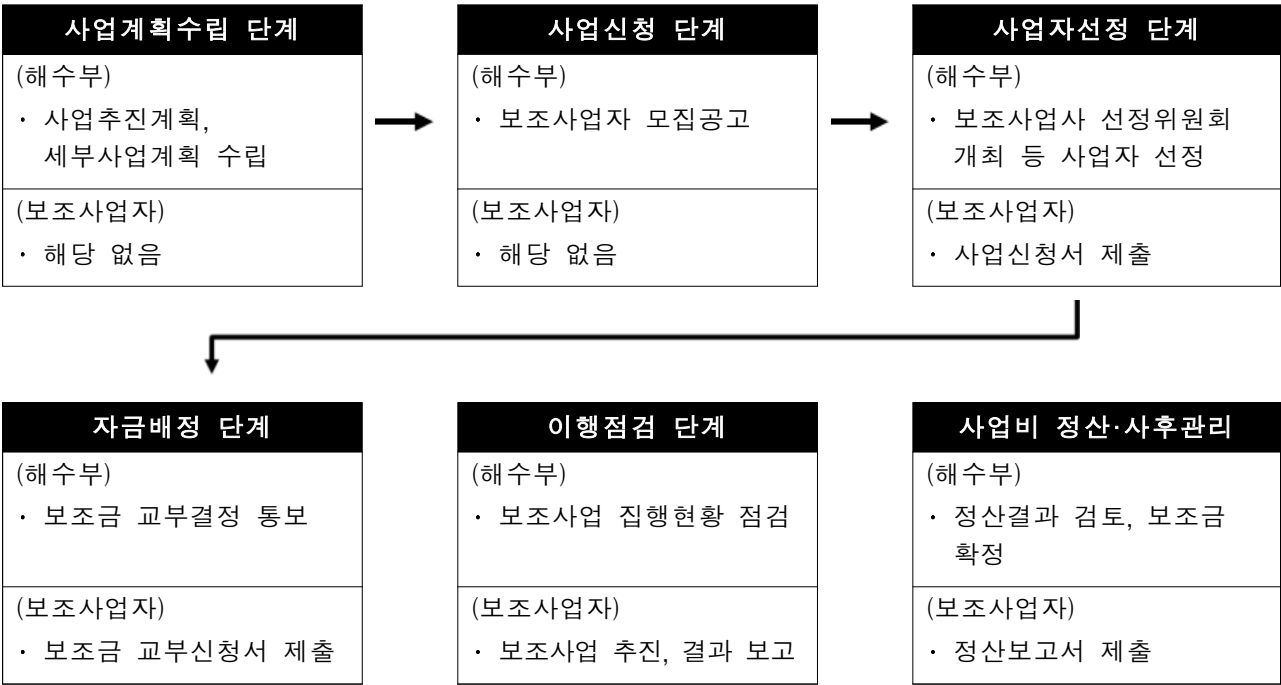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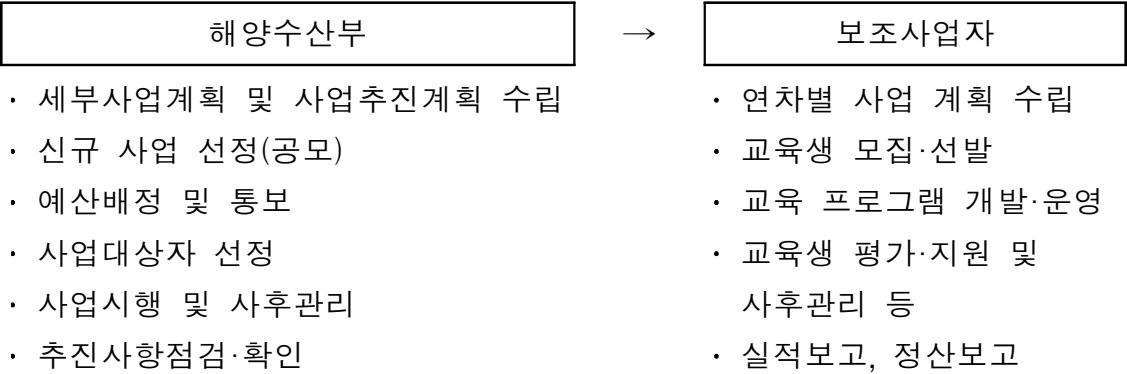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민간경상보조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3.2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既 완료('21.1~'21.2)
-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공고시기 : 1차 사업기간('21~'25)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완료('21.2)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34호, 제2021-261호, 제2021-392호
- 신청절차: 공고문(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 접수 : 직접 또는 우편(주소: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사업자선정 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선정
 - *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21.2.5)에 따라 1차 사업기간('21~'25) 수행자 선정 완료: 인천대학교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392호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익년도 예산편성(국고 및 자부담)
- 사업자 변경 : 사업수행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매 회계연도 마다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제출,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매월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고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함

IV.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선원복지고용센터 경상운영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을 통해 선원 복지사업 수혜 확대 및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 도모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 (단위 : 점)	81.1	79.3	81.8	81.9	80.2	매년 말	선원복지 수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선원 사용자 만족도 (단위 : 점)	83.7	81.8	84.3	84.6	82.6	매년 말	해운선사 중 5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구직등록자 취업률 (단위 : %)	92.5	90.1	88.1	90.3	89.6	매년 말	구직등록자 중 구직자 수/취업 희망 등록자 수×100
고용 서비스 수혜율 (단위 : %)	94.9	91.0	94.2	99.1	93.1	매년 말	고용 서비스 수혜 인원/목표 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2,031	2,031	2,031	2,031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원대상

- 선원, 선원가족, 선원 사용자 및 선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사업시행의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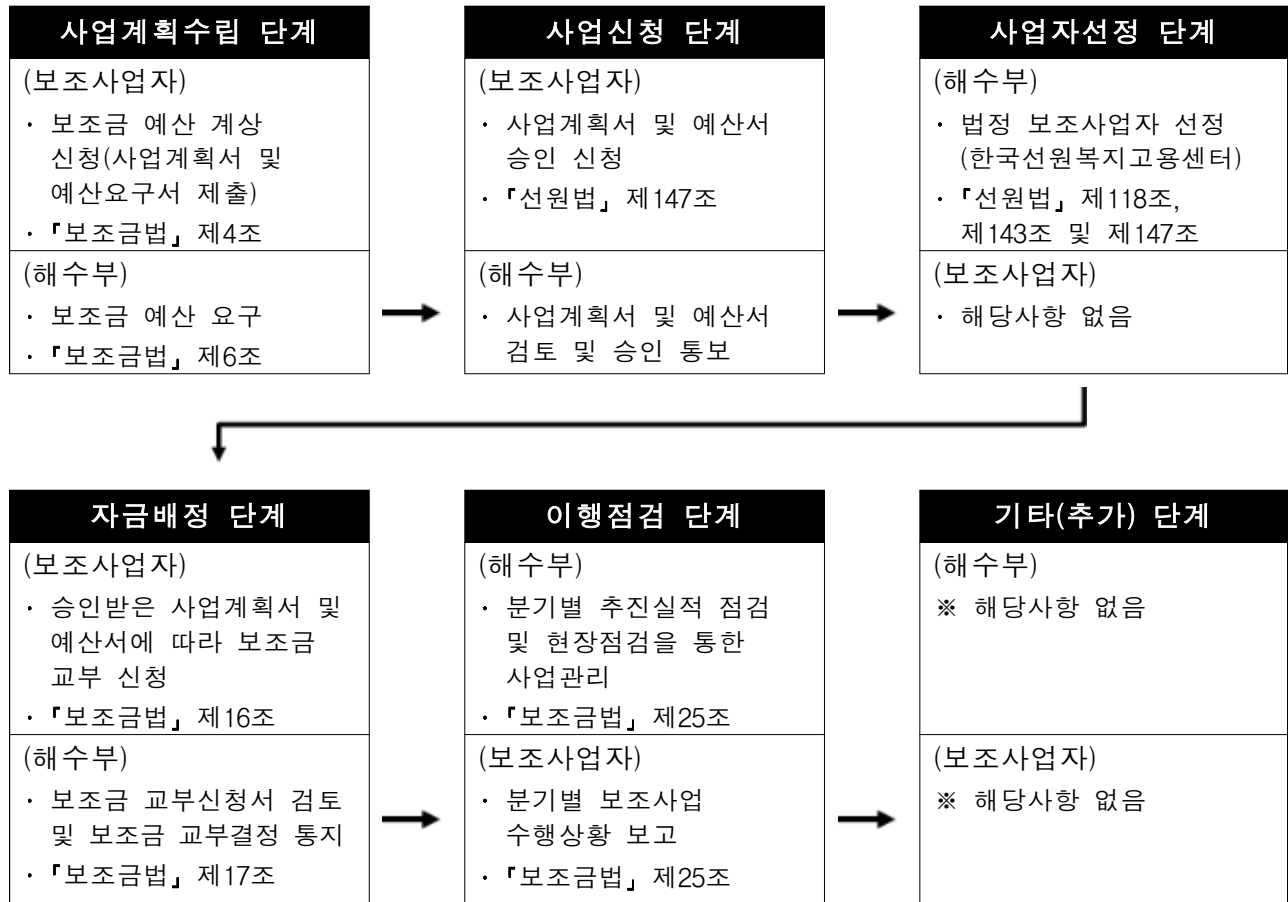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수지차 보전기관)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신청(「선원법」 제147조)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및 승인 통보(「선원법」 제147조)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18조, 제143조, 제147조) 선정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선원복지증진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선원무료법률구조사업, 선원가족장학사업, 선원회관운영, 교통편의시설운영, 선원휴양시설운영, 장애선원재활지원, 순직선원추모사업, 원양어선원가족현지방문, 외국인선원고충상담지원, 선원전자도서관운영, 선원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복지 사업 수행을 통해 선원의 복지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 (단위 : 점)	81.1	79.3	81.8	81.9	80.2	매년 말	선원복지 수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선원 사용자 만족도 (단위 : 점)	83.7	81.8	84.3	84.6	82.6	매년 말	해운선사 중 5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구직등록자 취업률 (단위 : %)	92.5	90.1	88.1	90.3	89.6	매년 말	구직등록자 중 구직자 수/취업 희망 등록자 수×100
고용 서비스 수혜율 (단위 : %)	94.9	91.0	94.2	99.1	93.1	매년 말	고용 서비스 수혜 인원/목표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2,273	2,273	2,273	2,273
- 자부담	424	424	424	424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원대상

- 선원, 선원가족, 선원 사용자 및 선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사업시행의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수지차 보전기관)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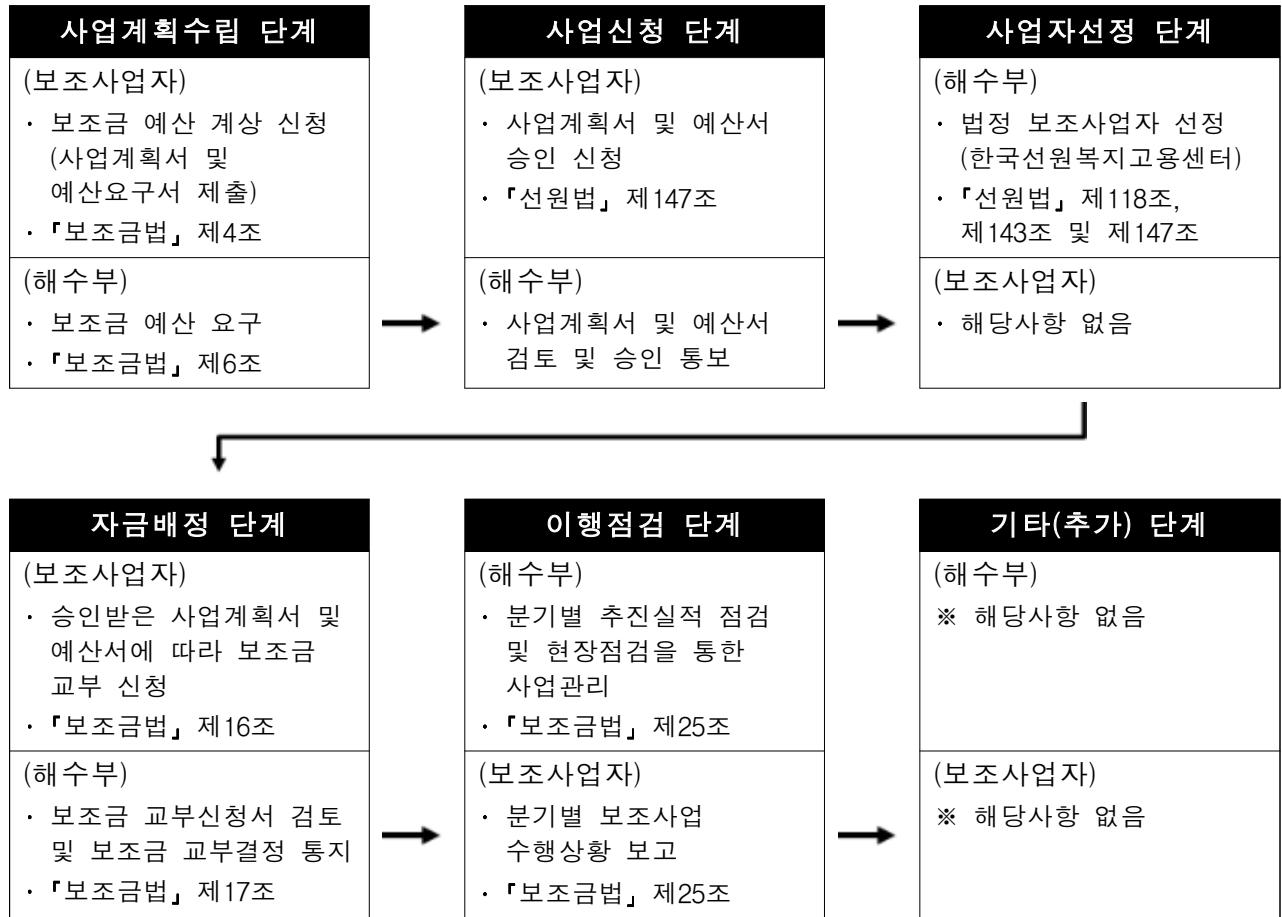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스트레스 측정기기(설치형)	기타 동산	10년 +5년
스트레스 측정기기(이동형)	기타 동산	10년+5년
업소용 식기세척기	기타 동산	7년+5년
쇼케이스 냉장고 2대	기타 동산	10년+5년
당구대	기타 동산	10년+5년
이발의자 2대	기타 동산	10년+5년
파우더장	기타 동산	8년+5년
이발소 거울대	기타 동산	8년+5년
냉장고	기타 동산	9년+5년
카운터 하부장	기타 동산	9년+5년

○ 중요재산 관리대장

재산명	재산구분	소재지	취득 일자	취득 가액 (백만원)	현재 가액 (백만원)	담보설정	
						여부	설정 금액 (백만원)
스트레스 측정기기(설치형)	기타동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13번 길20, 101호	'22.3.18.	9.6	9.6	부	
스트레스 측정기기(이동형)	기타동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13번 길20, 101호	'22.3.18.	6.6	6.6	부	-
업소용 식기세척기	기타동산	부산시 사하구 구평로35 원 양복지교육원	'22.4.1.	2.7	2.7	부	-
쇼케이스 냉장고	기타동산	부산시 사하구 구평로35 원 양복지교육원	'22.4.1.	0.68	0.68	부	-
쇼케이스 냉장고	기타동산	부산시 사하구 구평로35 원 양복지교육원	'22.4.1.	0.68	0.68	부	
당구대	기타동산	부산시 사하구 구평로35 원 양복지교육원	'22.4.1.	3.982	3.982	부	
이발의자	기타동산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 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2.7.25.	1.5	1.5	부	
이발의자	기타동산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 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2.7.25.	1.5	1.5	부	
파우더장	기타동산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 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2.8.5.	0.76	0.76	부	
이발소 거울대	기타동산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 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2.8.5.	0.98	0.98	부	-
냉장고	기타동산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39, 한림향선원복지회관	'22.10.5.	0.52	0.52	부	-
카운터 하부장	기타동산	부산시 서구 해안새벽시장 길 88, 남향어선원복지회관	'22.9.7.	0.6	0.6	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신청(「선원법」 제147조)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및 승인 통보(「선원법」 제147조)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18조, 제143조, 제147조) 선정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선원직업안정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선원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 도모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 (단위 : 점)	81.1	79.3	81.8	81.9	80.2	매년 말	선원복지 수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선원 사용자 만족도 (단위 : 점)	83.7	81.8	84.3	84.6	82.6	매년 말	해운선사 중 5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구직등록자 취업률 (단위 : %)	92.5	90.1	88.1	90.3	89.6	매년 말	구직등록자 중 구직자 수/취업 희망 등록자 수×100
고용 서비스 수혜율 (단위 : %)	94.9	91.0	94.2	99.1	93.1	매년 말	고용 서비스 수혜 인원/목표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1,378	1,378	1,378	1,378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원대상

- 선원, 선원가족, 선원 사용자 및 선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사업시행의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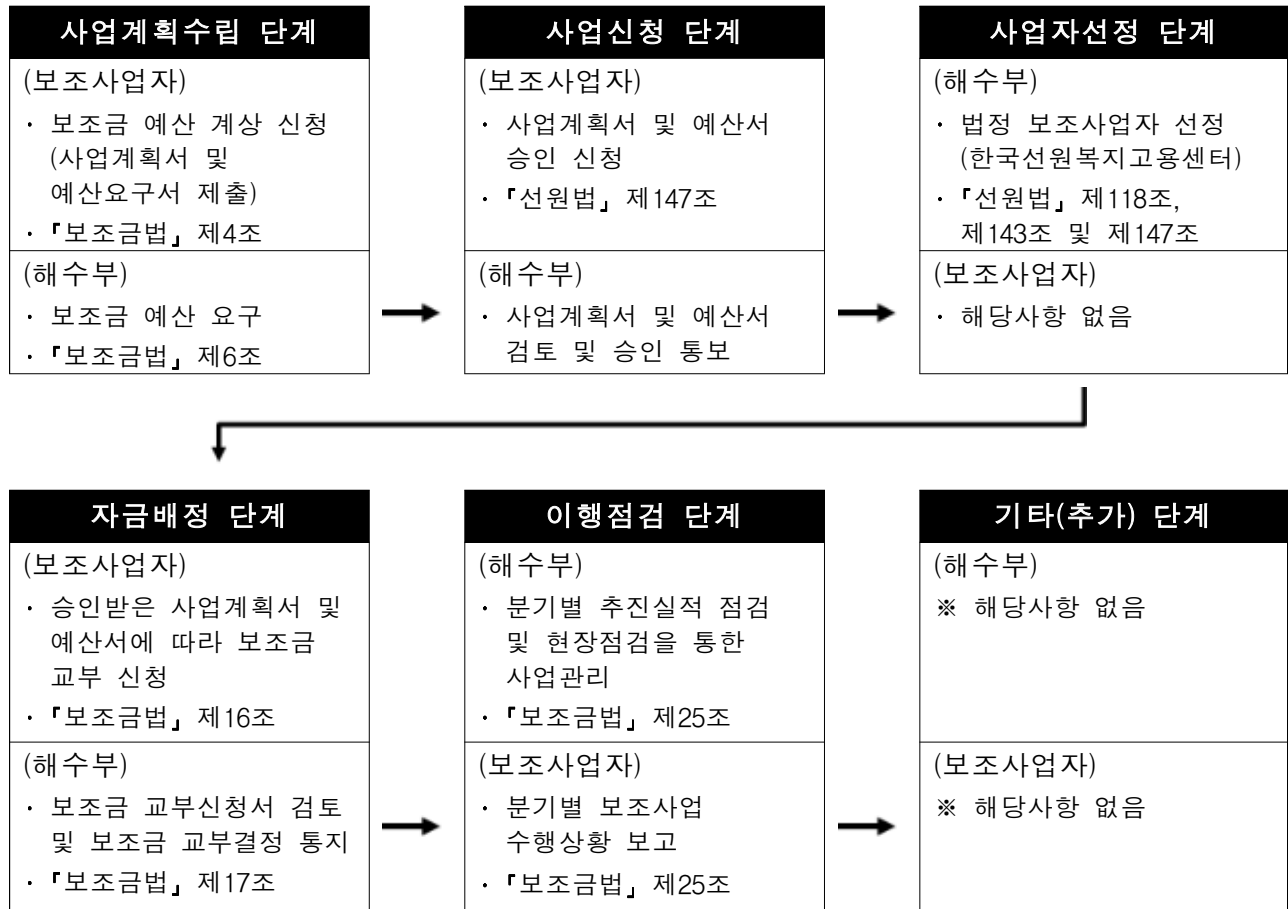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수지차 보전기관)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신청(「선원법」 제147조)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및 승인 통보(「선원법」 제147조)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18조, 제143조, 제147조) 선정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운산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원양선원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선원 복지 실현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 (단위 : 점)	81.1	79.3	81.8	81.9	80.2	매년 말	선원복지 수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선원 사용자 만족도 (단위 : 점)	83.7	81.8	84.3	84.6	82.6	매년 말	해운선사 중 5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 또는 전화 조사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구직등록자 취업률 (단위 : %)	92.5	90.1	88.1	90.3	89.6	매년 말	구직등록자 중 구직자 수/취업 희망 등록자 수×100
고용 서비스 수혜율 (단위 : %)	94.9	91.0	94.2	99.1	93.1	매년 말	고용 서비스 수혜 인원/목표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866	866	866	866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선원법」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 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된 의료기관

3. 지원대상

- 승선 중 의료 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양구역 운항 선원의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시행의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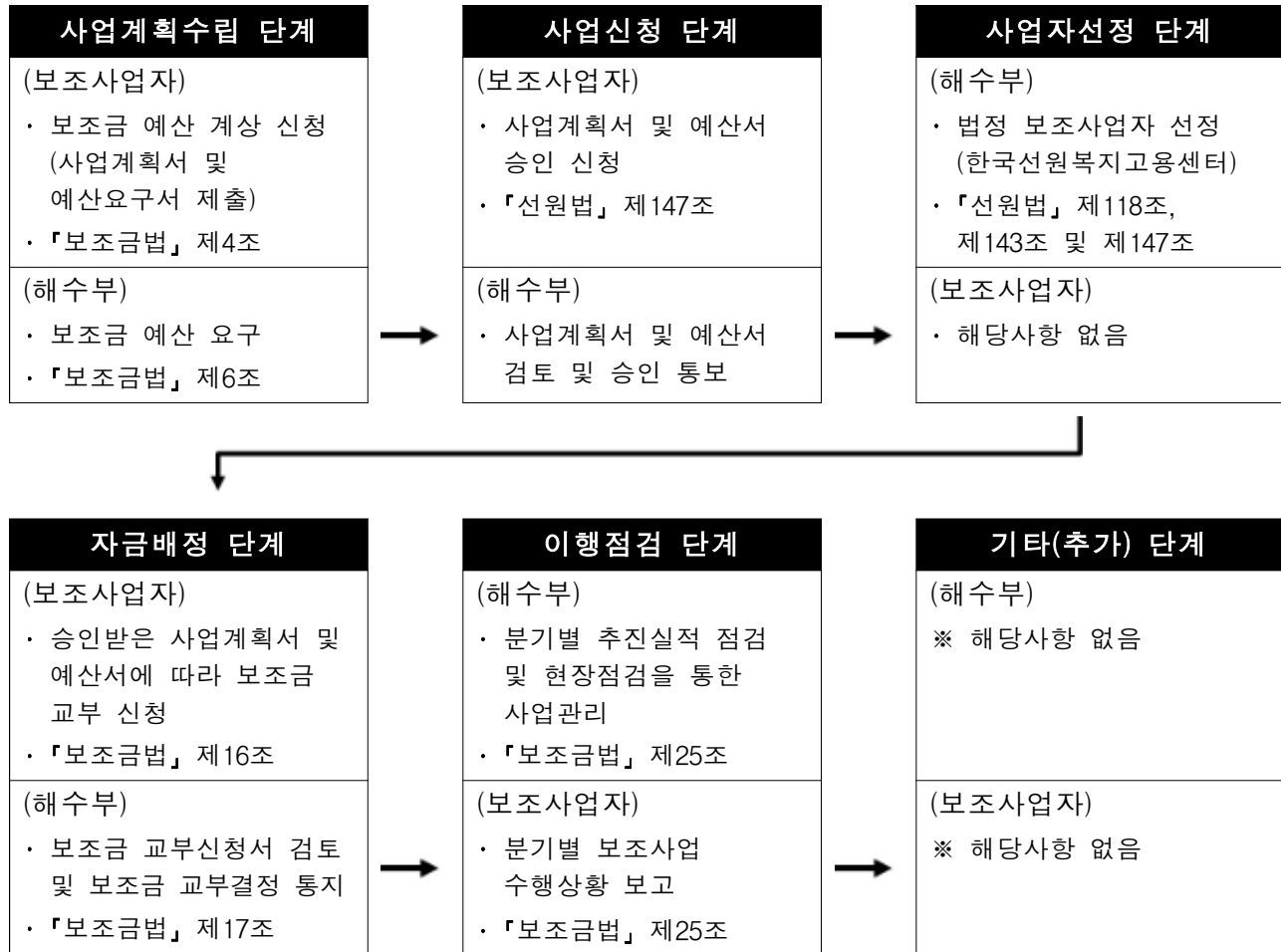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수지차 보전기관)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신청(「선원법」 제147조)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및 승인 통보(「선원법」 제147조)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18조, 제143조, 제147조) 선정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적인 선박관리 전문 인력 양정으로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리선박 유치확대 등 발전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13조(선박관리 전문가의 육성 등) 및 제14조(교육훈련기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율(%)	95	101	80	103	123	매년 말	양성 인원/양성 목표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90	190	190	190
- 국 비	190	190	190	19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선박관리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박관리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등 육성·지원의 범정부사업 수행 등을 위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선박관리사업자, 선사, 선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박관리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신규 선박관리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 선박관리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교육훈련 시행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목	교육훈련 기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1. 4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수산업 관련 정부기관, 단체 또는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박관리입문 선박관리실무 선원관리 운항관리 상업적 관리 검사 및 심사	2개월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과정	1. 3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선박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원관리	26시간
		선박관리 I (운항)	40시간
		선박관리 II (공무·보수·보급)	22시간
		안전·품질관리	20시간
		상업적 관리과정	30시간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의 경우 2개월간의 전 과목 수료자에게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증을 발급하고,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수료자에게 과목 이수증을 각각 발급한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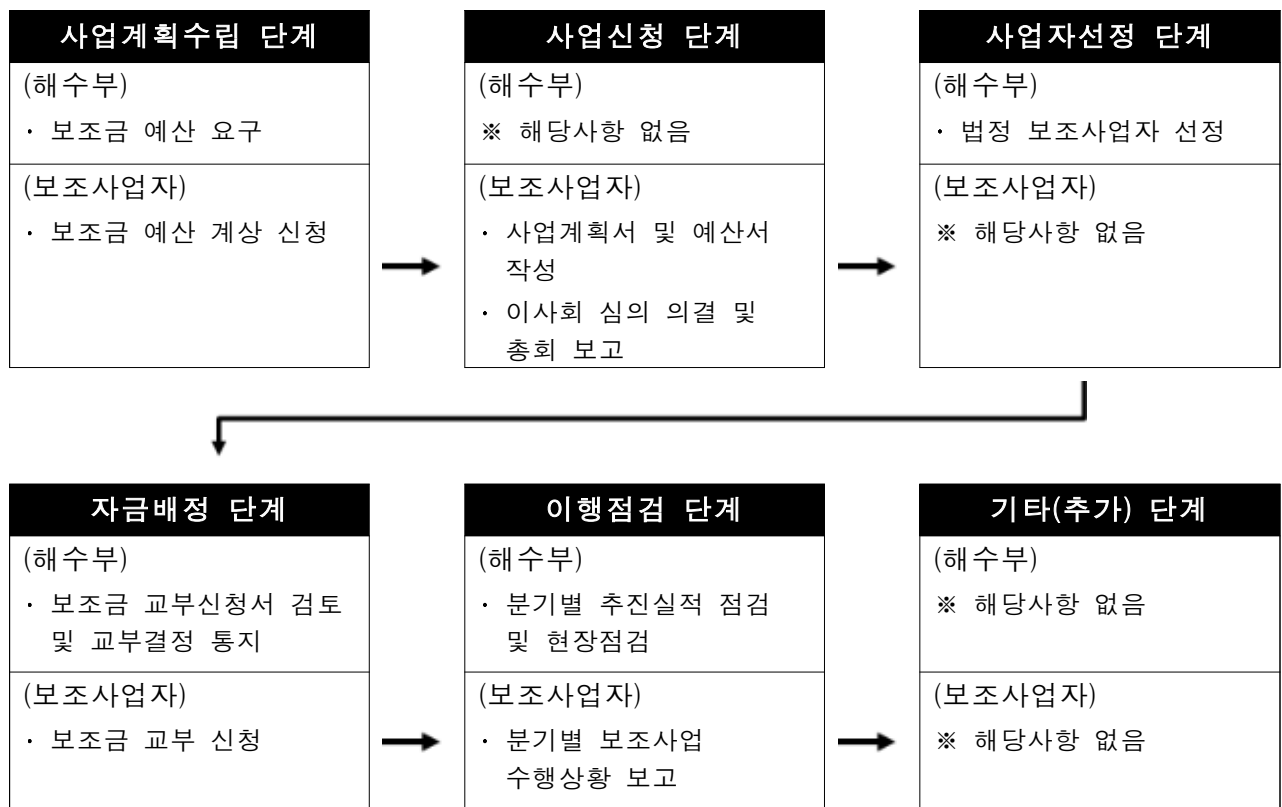
- 사업량 및 예산
 - (민간경상 보조)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운영 : 190백만 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협회 정관)
-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총회에 보고(협회 정관)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보조사업자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자체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조치(「보조금법」 제26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선원인권보호교육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서기관 안준영 주무관 김진용	044-200-5740 044-200-5745 044-200-5768

I. 사업개요

1. 목 적

- 선원의 노동권·인권 보호 및 갈등해소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장기승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기전승을 실현하여 고급사관의 양성을 장려
- 한국 해기인력의 안전운항 확보와 해기전승 실현으로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선원법」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이수인원(명)	10,000	-	-	-	-	매년 말	수료증 발급인원/ 10,000명(교육목표인원)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0	300	300	300
- 국 비	300	300	300	3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선박관리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박관리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등 육성·지원의 범정부사업 수행 등을 위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박관리사업자 등 「선원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원 노동권 및 인권 보호교육 시행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개발 및 콘텐츠 제작, 플랫폼 등 교육운영
 - 콘텐츠 제작 : 온라인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교육용 교재개발 등
 - 임차료 :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서버 호스팅 등
 - 시설사용료 :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장, 전담인력 사무실 사용료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사업 교육운영
 - 매년 이슈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선장 및 기관장 대상 추가 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정 : 선원 인권/노동권의 개념, 선내 프라이버시권, 선내폭력,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심화과정 : 여성선원과 실습선원 인권 및 보호의무, 따돌림 및 괴롭힘, 선내 인권 경영 및 권리구제 등 시니어 해기사와 육상관리자를 위한 구체적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외국인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동일 콘텐츠의 번역 및 자막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기관장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롤플레이 등을 통한 교육과정 구성 • 교육과정 예시 : 노동권·인권의 개념, 역사, 법, 선원 노동권·인권보호를 위한 철학적 사고 방법, 선원 노동권·인권보호를 위한 당위성 및 동기부여, 선원 노동권·인권의 세계적 추세와 대응방법 등

○ 교육운영 평가

- 교과 편성, 운영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예산

- (민간경상 보조) 선원인권보호 교육사업 이러닝 개발 및 교육운영, 교육콘텐츠 제작 : 300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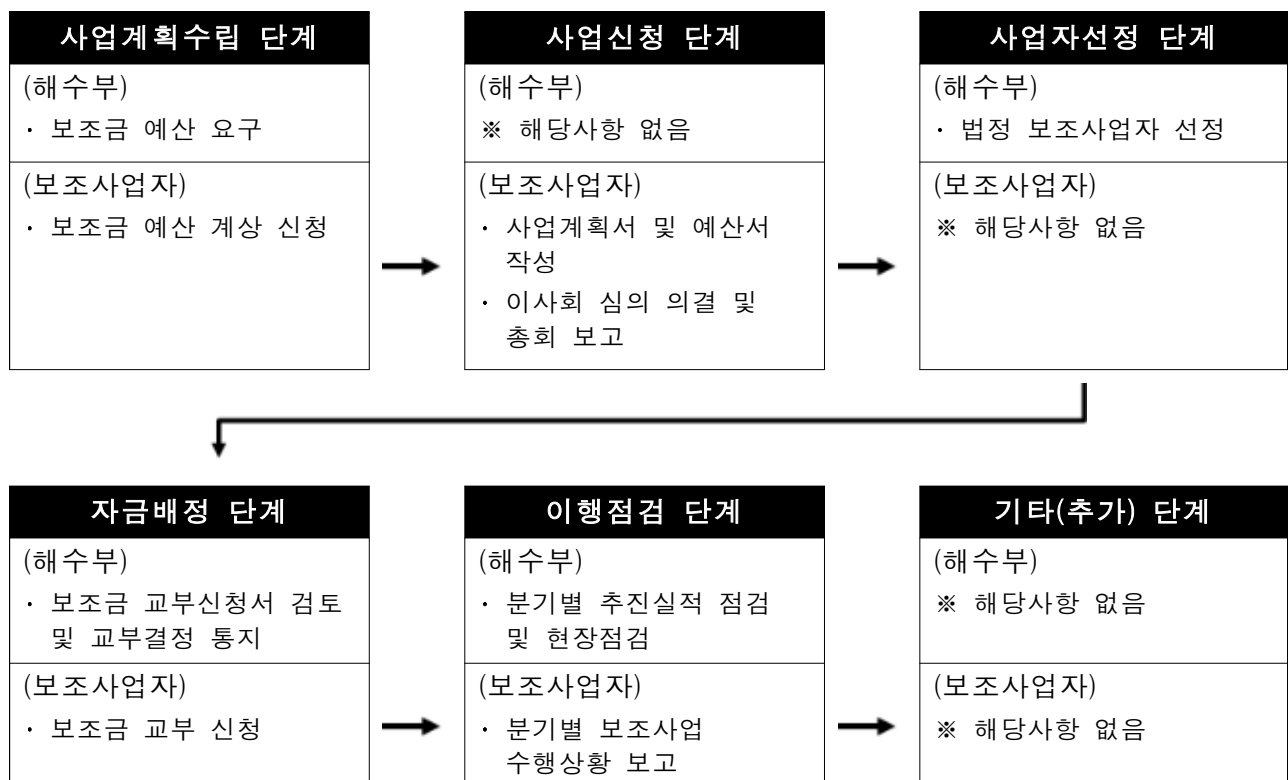
○ 지원조건 : 국고 10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협회 정관)
-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총회에 보고(협회 정관)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보조사업자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자체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조치(「보조금법」 제26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③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산·학 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하여 미취업 국적 청년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 참여기업·해양대학·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업으로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차별화로 국적 해기사 취업 지원

2. 근거법령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청년해기인력 취업률(%)	75	89	87	82.5	82.5 (추정)	매년 말	취업연계 인원/ 양성 목표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60	360	360	360
- 국 비	360	360	360	36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선박관리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박관리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등 육성·지원의 범정부사업 사업수행 등을 위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선박관리사업자, 선사, 선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미취업 해기사를 대상으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선사 취업연계를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교육과정
 - 미취업 해기사를 대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무특화 교육을 시행하고 참여기업 소속 멘토를 매칭하여 해기마인드 교육(멘토링) 진행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 중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와 유사하고 학교시설과 차별화된 시뮬레이터 장비를 유일하게 보유
 - 항해·기관부문의 해기역량 교육을 단계적으로 구성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과목	
	항해	기관
해기역량 I (64h)	SHS심화(24h), ECDIS심화(24h), 선박평형수관리실무(16h)	선박기기 정비기술(16h), 선박전기실무(24h), ERS(24h)
해기역량 II (16h)	선내 의사소통과 공감(4h), 선상갈등관리와 문화인식(4h), 해기사 비전과 목표수립(4h), 프로와 프로페셔널(4h)	
해기역량 III (3h)	해기사 경력관리, 선상 조직 적응과 소통법, 승선근무 특성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 및 기타 상담	

- 취업지원 : 참여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취업연계 약정 체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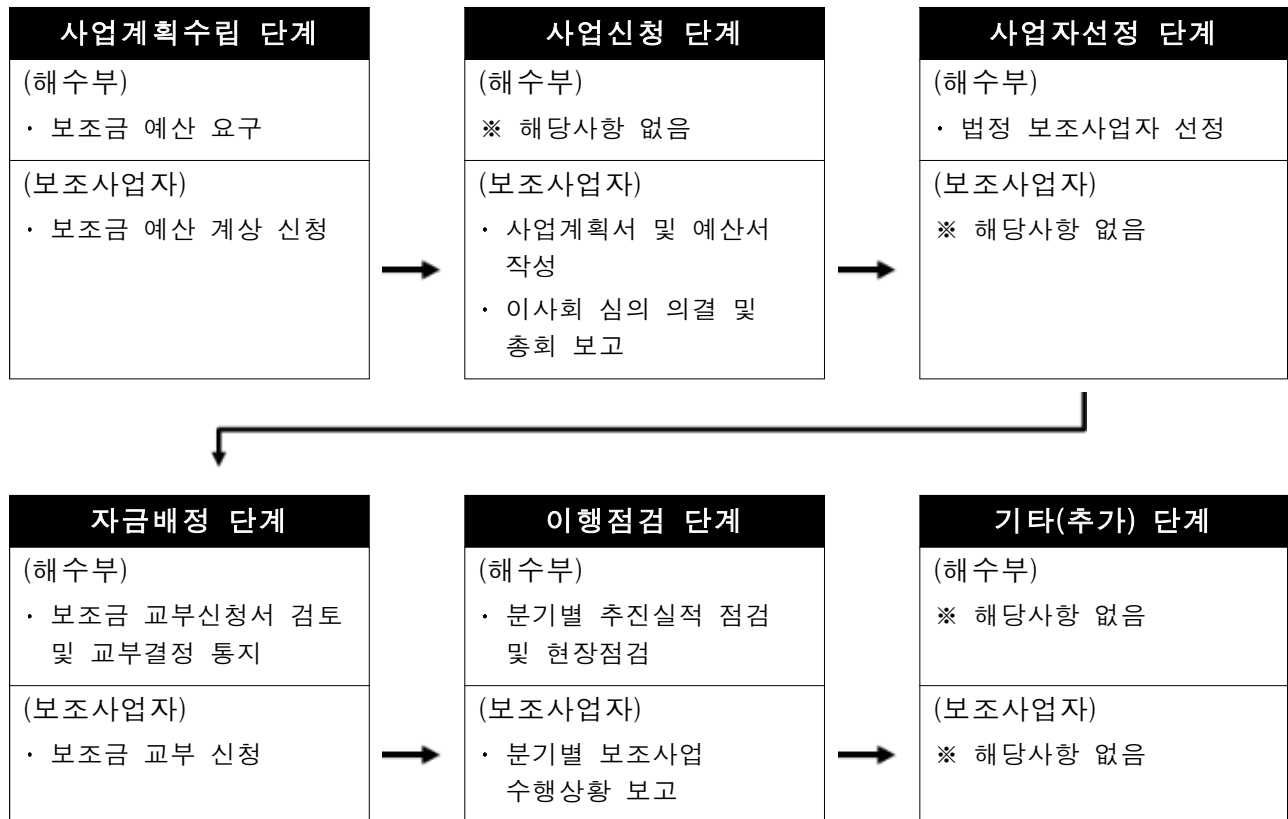
- 사업량 및 예산
 - (민간경상 보조)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운영 : 360백만 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협회 정관)
-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총회에 보고(협회 정관)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보조사업자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자체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조치(「보조금법」 제26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Ⅳ.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윤현석 주무관 김익균	044-200-5740 044-200-5741 044-200-5748

I. 사업개요

1. 목 적

- 대한민국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 해기사로 육성 및 해외취업 연계 지원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사업) 및 제1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기사 해외취업 일자리 창출(%)	61	-	88.9	60	55 (당초 계획)	사업 완료 시	목표대비 실적 취업인원/수료인원×100 (내부 실적보고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180	200	200	2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선원법 제117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선원법 제117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에서 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3. 지원대상

- 해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해기사, 부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글로벌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 해기사의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 청년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
 - 해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처 발굴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재량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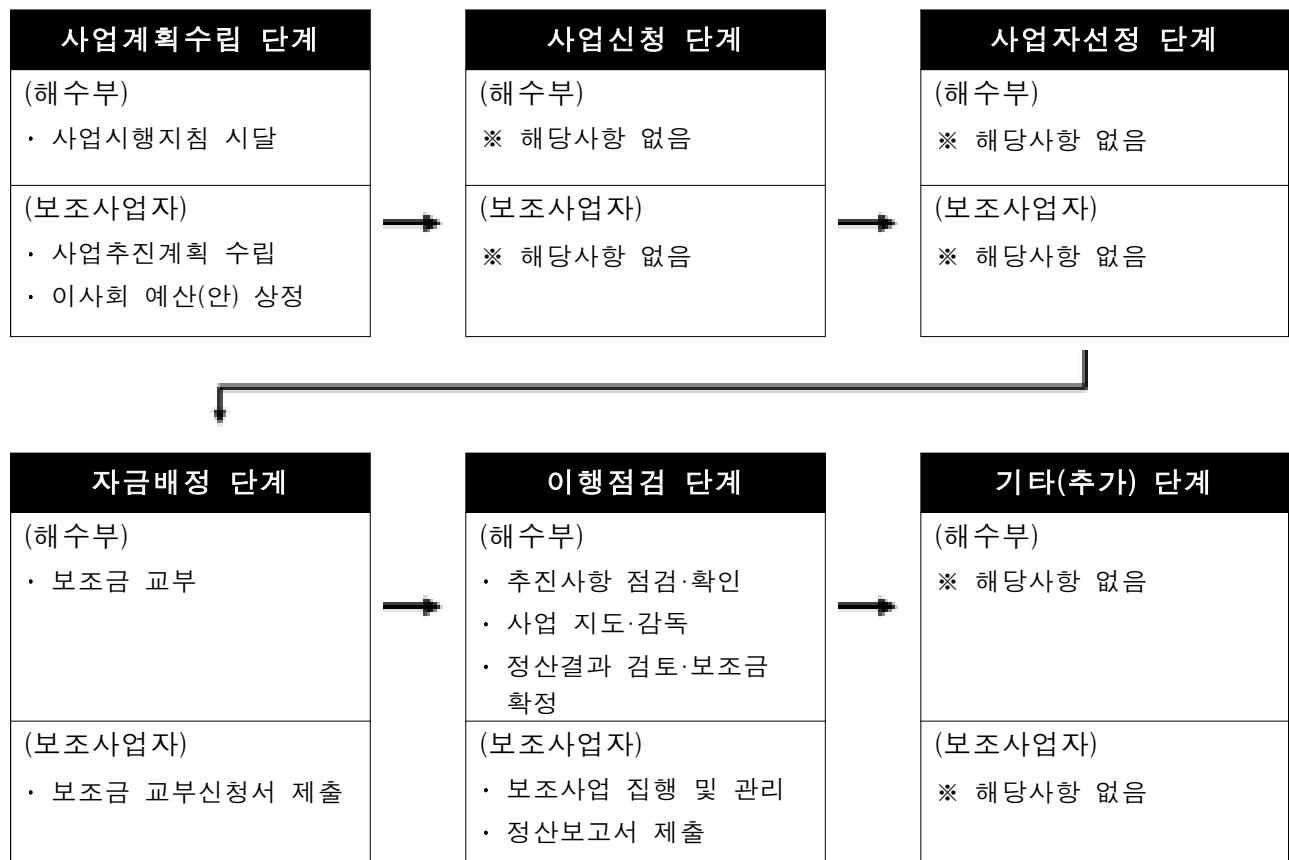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재량
- 기준 및 범위 :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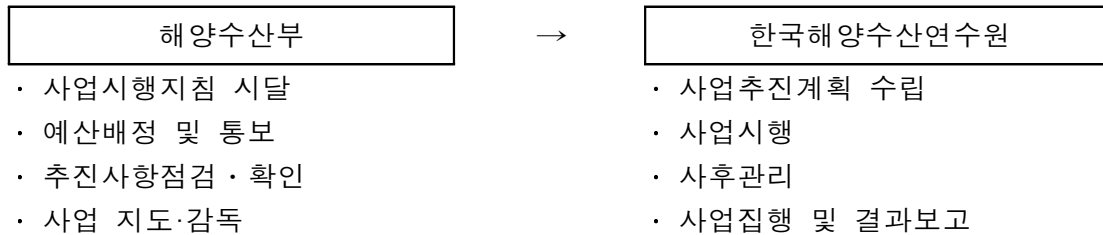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지행지침 시달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 이사회 예산(안) 상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 선원법, 해양수산연수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 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 지원금액은 총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계획된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기관의 사업계획 적정여부, 예산 확보 여부 및 계획 등을 확인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실적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윤현석 주무관 김익균	044-200-5740 044-200-5741 044-200-5748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수산인력 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 우수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배출하여 해양수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 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사업) 및 제1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수산전문 인력교육실적 (단위:명)	39,000	33,391	30,229	53,708	55,000	12월 말	연수원 교육 인원(결산서)
교육생 평균만족도 (단위:점)	82.8	84.8	82.89	85.72	83.6	12월 말	(고객만족도 결과 /고객만족도 목표)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9,099	58,625	64,948	122,687
- 국 비	42,502	52,028	58,351	116,090
- 자부담	6,597	6,597	6,597	6,597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선원법 제117조, 선박직원법 제23조에서 정한 선원교육 및 해기사 시험관리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선원법 제117조, 선박직원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3. 지원대상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사고 등 초급해기사 양성과정 승선훈련비 및 국제협약과 국내법 준수를 위한 노후실습장비 교체 등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 시험의 관리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85% ~ 90%, 자부담 15% ~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재량
- (기준 및 범위) 선원의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 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세부내역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한반도호	선박	30년
한미르호	선박	30년

- 중요재산 관리대장

재산명	재산 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취득가액 (백만원)	현재가액 (백만원)	사후관리 기간	담보설정	
							여부	설정금액 (백만원)
한반도호	선박	해양수산연수원	2017.9.28.	44,233	35,648	30년	여	4,613
한미르호	선박	해양수산연수원	2018.10.22	33,181	29,494	30년	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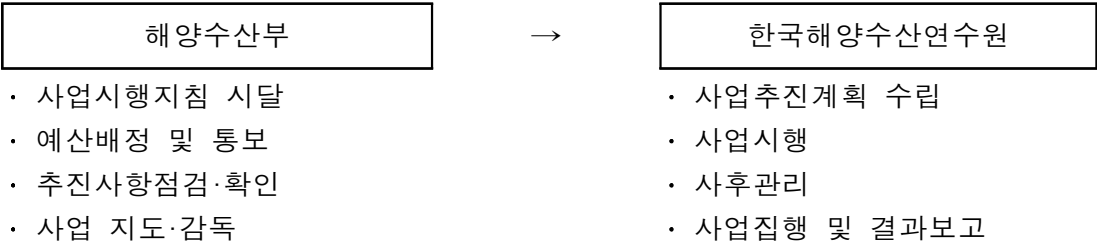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2023.1월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 선원법, 해양수산연수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김석훈 사무관 강종욱	044-200-5740 044-200-5747

I. 사업개요

1. 목 적

- 외국인 선원 비중 증가, 국적 선원 노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청년 국적 해기사 급감에 대비하여 재난 등 비상사태 시 전략 물자 수송 가능한 일정 규모의 국적 해기사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18조(정부의 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인원 수	100	-	-	-	100	매년 말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 선사 선정 및 지급 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500	500	500	500
-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업운영) 국적 청년 해기사의 임금차액 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 외국인 해기사를 대체하는 국적 청년 해기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국인 해기사를 대체하는 국적 청년 해기사의 평균 임금차액의 50%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노·사 출연금 10억원(노·사 각각 5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적 청년 해기사의 평균 임금차액의 50% 지원(약 1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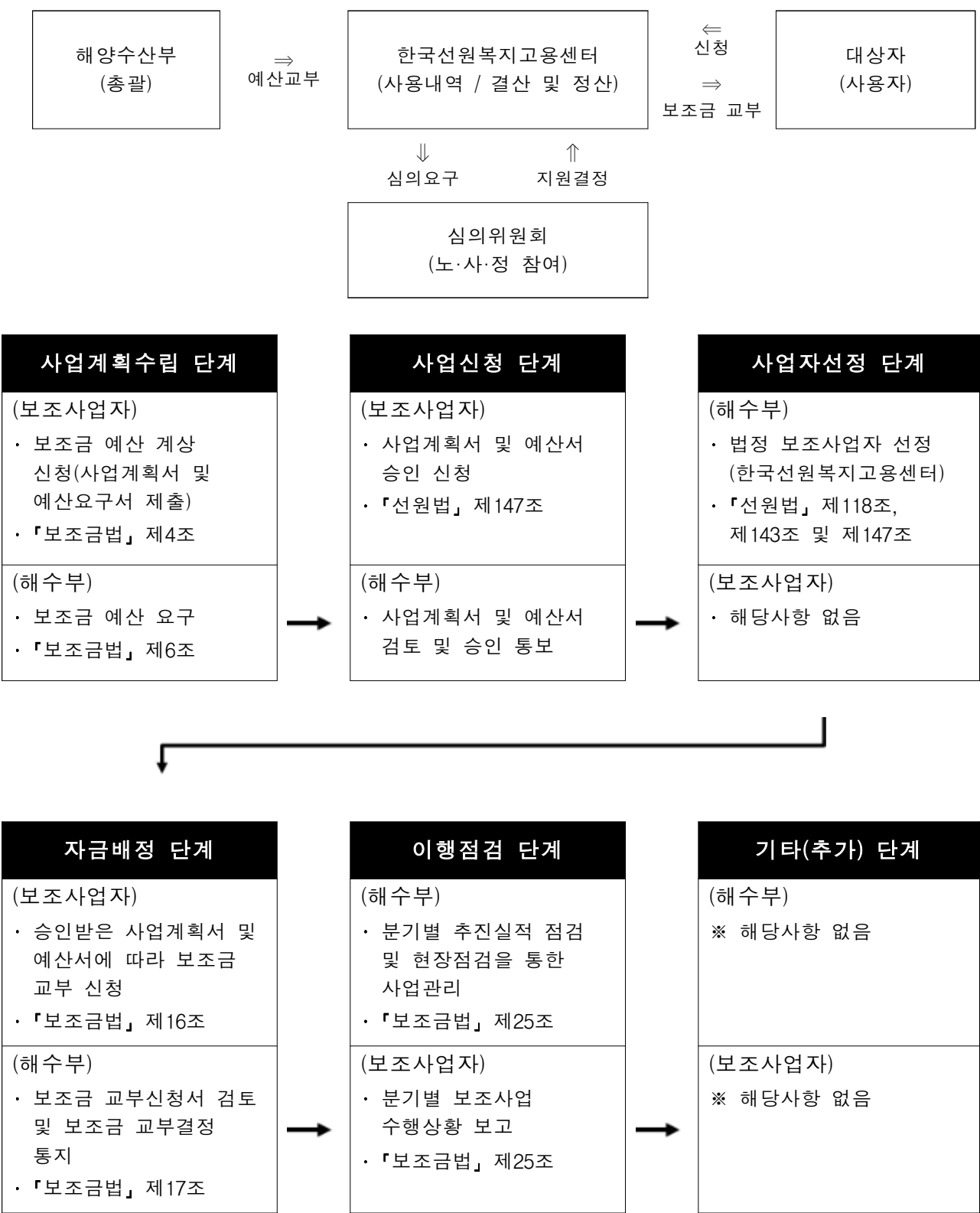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사업 운영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업대상 선정,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주요 결정은 노·사·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2. 사업계획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예산 요구(「보조금법」 제6조)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신청(「선원법」 제147조)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및 승인 통보(「선원법」 제147조)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제118조, 제143조, 제147조) 선정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기타사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백정호	044-200-5730 044-200-5735

I. 사업개요

1. 목 적

-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친환경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의 화물수송 확대

2. 근거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전환교통 온실가스 감 축량(단위 : 만톤)	39.6	41.3	42.8	45.4	집계 예정	당해연도 + 1년의 2월말	전환실적×수단별 탄소배출 단위절감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700	2,700	2,700	2,700
- 국 비	2,700	2,700	2,700	2,7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화주 및 물류업체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이 전환되는 화물 또는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전환교통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송수단 전환 시 발생하는 운임차액을 보조하여 운송비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지원
- 사업 운영
 - 업무위탁 이후 협약사업자 선정공고,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협약사업자를 결정하고, 협약물량 달성여부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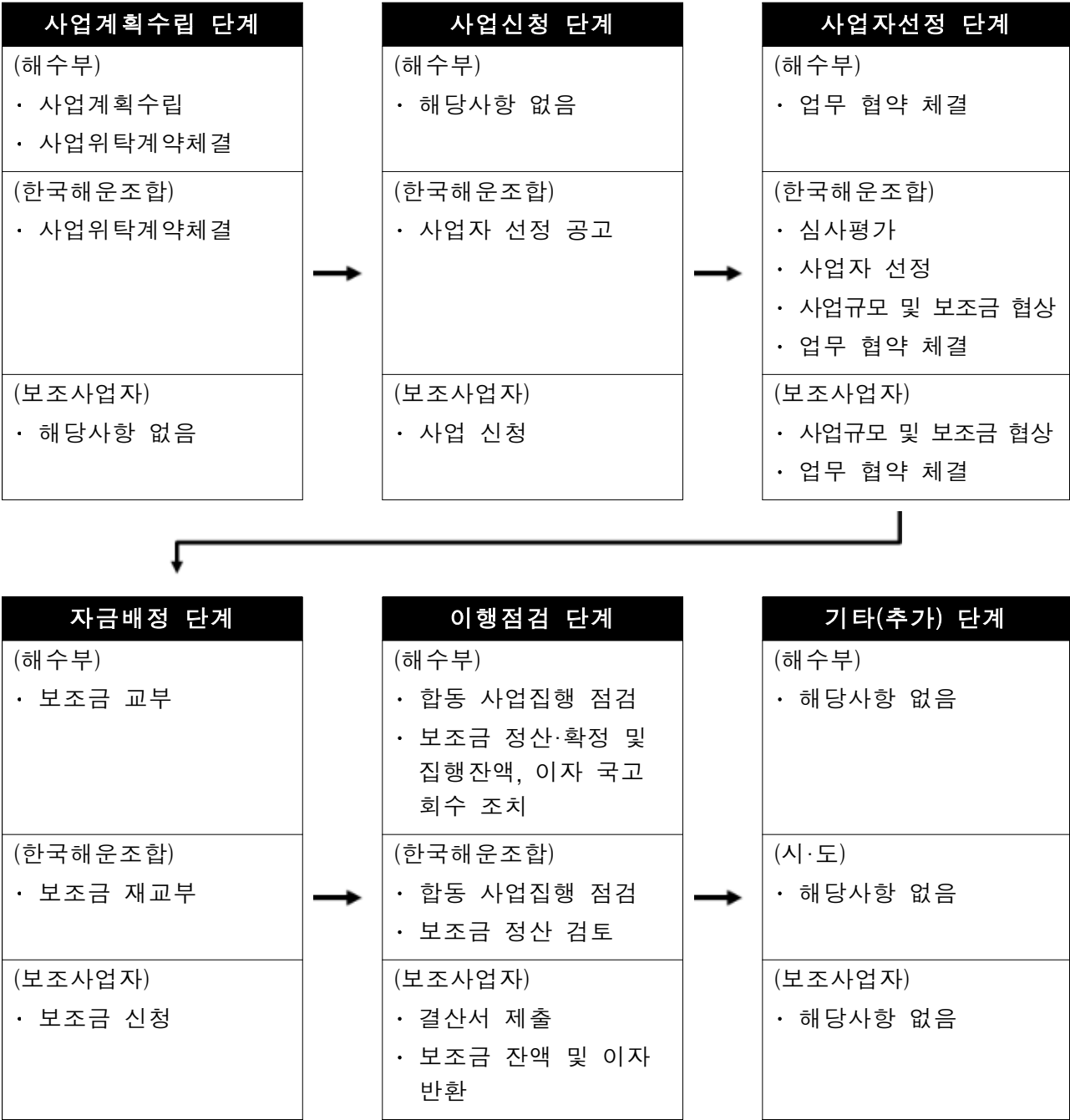
- 협약업체의 전환물량 중 협약체결 기준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약정금액 지원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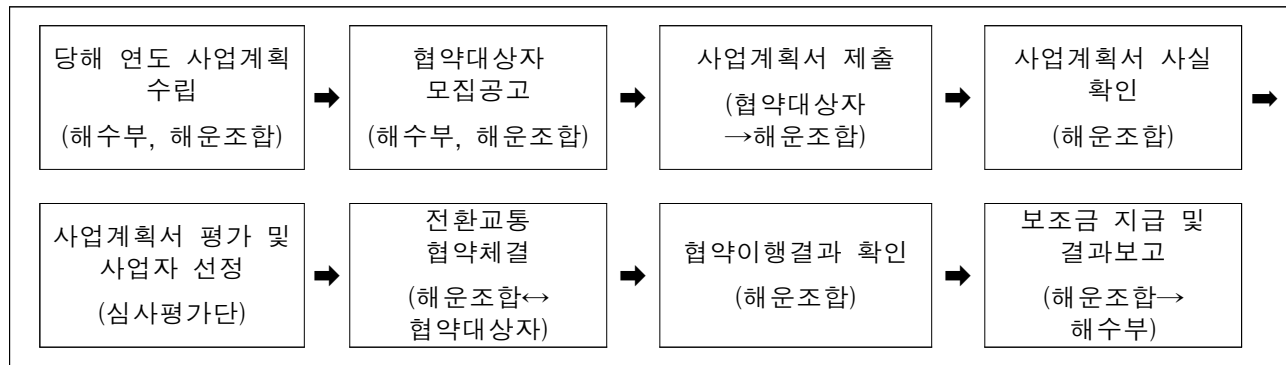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 추진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매년 1월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간 업무 위탁계약 체결 : 매년 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해운조합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한국해운조합
- 공고시기 : 매년 2월중 협약사업자 모집공고

보조사업자

- 신청절차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 1부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해운조합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 사업자 선정심의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협약 체결 : 심사평가단의 평가 시행 등을 거쳐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전환교통 협약 체결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해운조합

- 전환교통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전환교통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보조사업자

-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전환교통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허만욱 사무관 소현수	044-200-5710 044-200-5725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가비상 시 국가 주요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기반 마련을 위한 국적선대 및 국적선원 확보 유지

2. 근거법령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가필수선박 지정운영실적(척)	83	83	88	88	88	매년 말	국가필수선박 지정척수 94% (운영유지목표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545	7,917	7,917	7,917
- 국 비	6,545	7,917	7,917	7,917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 간접보조사업자 : 국가필수선박 지정 참여선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선령 20년 미만인 선박(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를 받은 경우 선령 기준 미적용)으로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 원료 등을 운송하는 선박을 소유한 선사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금 결정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 간접보조사업자 : 국가필수선박 지정 참여선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적선원 2명 추가 고용에 대한 선사의 임금 부담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매년 말 국가필수선박 참여 선사에 대해 선박의 운항결과, 국적선원 고용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손실보상금 지급(국비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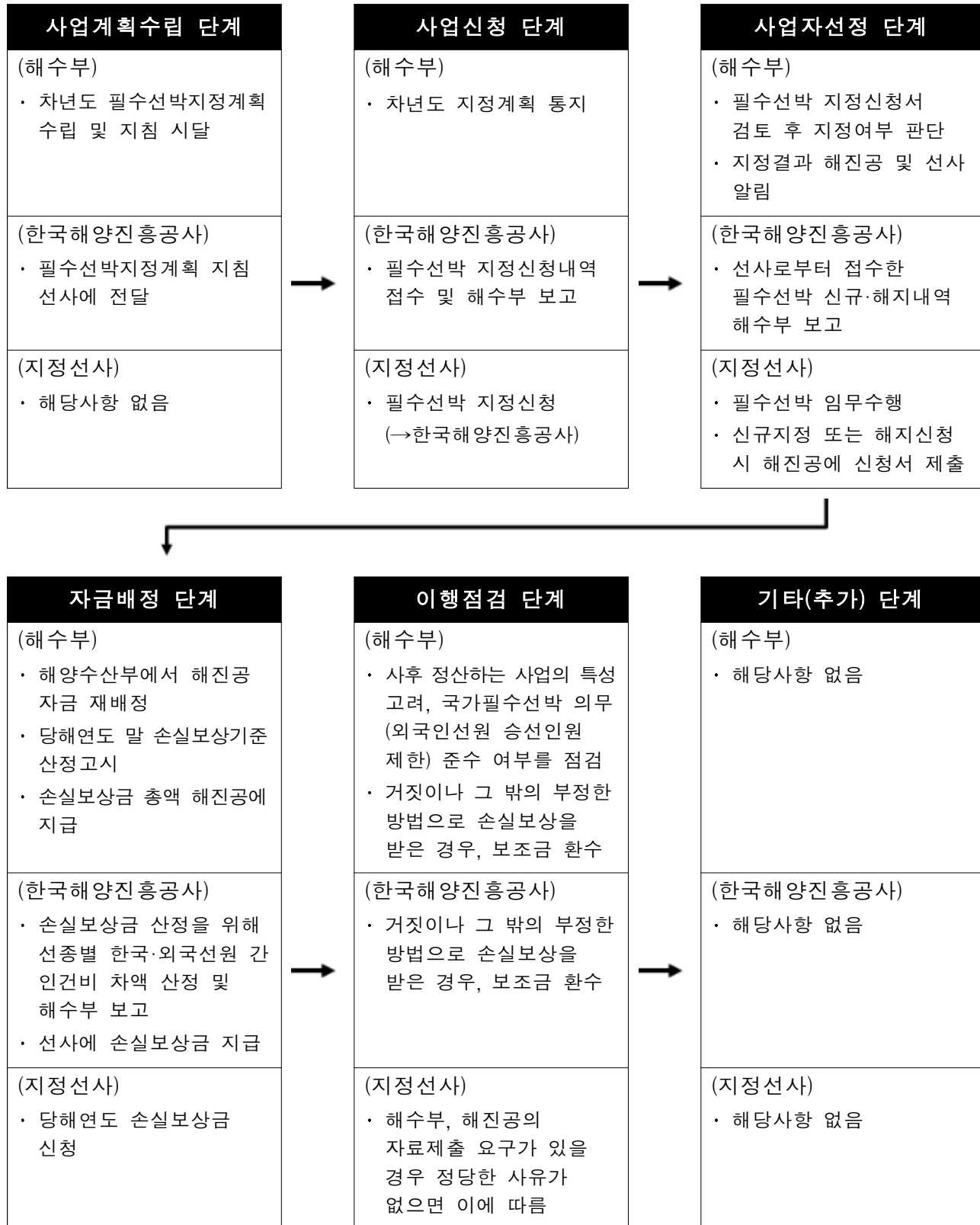
○ 지원기준 및 한도 : 부원 2명에 대한 국적선원과 외국적선원의 임금차액을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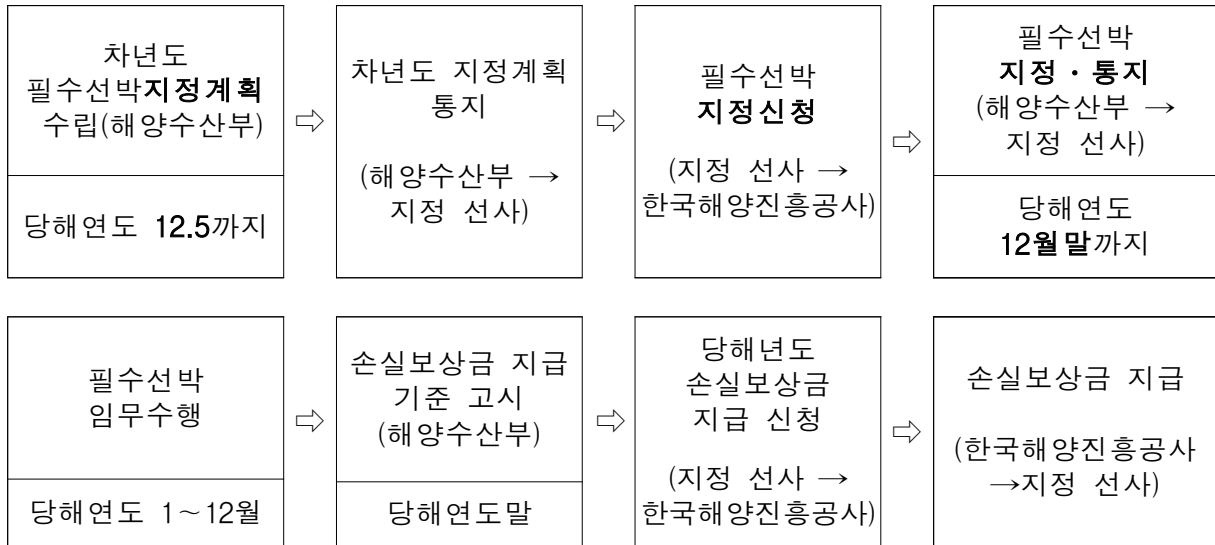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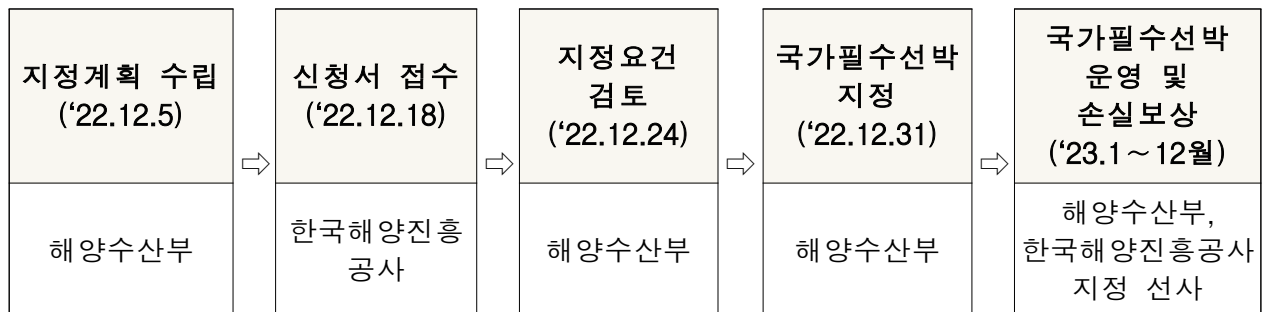
- '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참여선사)
-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한국해양진흥공사
- 공고시기 : 전년도 12월(당해연도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신청 접수)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신청서,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신청 당시 승무원 명부, 선박운항 계획
- 신청서 접수 : 한국해양진흥공사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 당해연도 말 손실보상기준 산정고시 후 선박별 손실보상금 지급
- 사업자 변경 : 선사에서 지정 변경 신청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지정결과 선사 통보(전년도 12월말)

5. 자금배정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국가필수선박 참여선사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포함)

- 사후 정산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국가필수선박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선원명부, 운항기록 등)
 - 사전 승인이 없거나 승인을 위반하여 실제 승선한 외국인 선원이 승선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부 감액 지급

《제재》

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포함)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보조금의 환수 등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국제충돈수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선적항(국적)				
	지정기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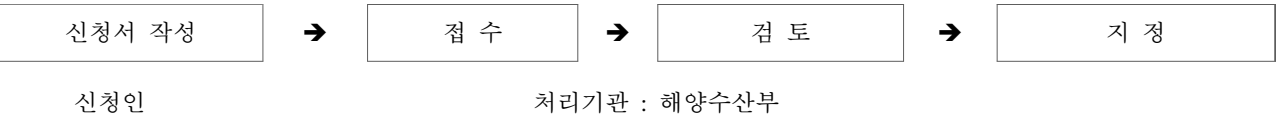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국제충돈수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지정 해제 신청 사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정 해제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0일
청구인	성명 / 상호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개요	손실 내용 및 신청 이유			
	손실금액의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 방법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청구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 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팀 장 홍근형 사무관 박재민	044-200-6205 044-200-6204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운·항만물류 분야 재직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실무 및 전문지식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수강생 만족도 (단위: %)	91	92	90.3	93.3	집계 예정	매년 말	Σ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가중치) *가중치는 당해연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775	2,080	2,080	2,080
- 국 비	1,479	1,733	1,733	1,733
- 지방비	-	-	-	-
- 자부담	296	347	347	347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물류 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관련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자격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제4차 사업('20~'24)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전담운영기관) 및 하위보조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선정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전일제/비전일제 석·박사과정, 현업종사자 및 취업준비생, 국내외 기업과 대학생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을 총괄하고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를 전담기관(상위보조사업자)에게 지급
- 학생직접지원, 교육과정지원, 사업운영경비 등 대상 기관에서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상의 프로그램 진행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정액보조(국고보조금 20% 이상 매칭)

○ 사업의무량

-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 수행기관은 수혜 학생의 성과에 기반한 연구성과 지원금 지급이 원칙
 - * 지급 기준은 지원기관의 제반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
- 맞춤형 실무교육 : 분야별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최신 물류동향 등을 반영
-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 : 인턴십과 학점 연계를 통한 실습학기제 운영 및 단기·장기 인턴십 실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 1,479백만원

- *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 기관별 160백만원, 맞춤형 실무교육 기관별 157백만원, 산학연계 인턴십 기관별 92백만원, 전담운영기관 130백만원
- ** 중간평가('23.上) 결과에 따라, 사업단별 예산 조정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제4차('20~'24)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예산 확정

전담운영기관

- 사업비 확보,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등 작성·제출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스마트해운물류팀)
-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전담운영기관이 보조사업자 공모 추진
- 신청절차 : 전담기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공모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운영기관에 지정된 기일 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전담운영기관

-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등 작성·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담기관)
- 보조사업자 공모(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운항만물류전문 인력양성사업 참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수행협약 체결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
- 사업자 선정결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절차 진행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2회 교부 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 → 전담운영기관 → 하위보조사업자)

전담운영기관

-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과 장 홍근형 사무관 김창묵	044-200-6205 044-200-6201

I. 사업개요

1. 목 적

- 4차 산업혁명 변화 속에서 해상물류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스마트항만, 스마트 선박, 해상통신)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해운물류와 ICT 융합인재 양성

2. 근거법령

-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스타트업 창업 수(개)	33개		13	27	집계중	익년 1월	23 년도 보조사업자 보조를 통해서 창업한 기업 수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율(%)	80%		79%	73.2	집계중	익년 3월	23 년도 프로그램 이수 대학 생 취업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000	2,000	-	-
- 국 비	1,000	1,000	-	-
- 지방비	-	-	-	-
- 자부담	1,000	1,000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3조와 관련된 시책(스마트 해산물류 구축전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스마트 해산물류 구축전략’ 스타트업 육성 및 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 실증 및 시범항만에 소재한 해양수산 관련기관
 - 스마트 해산물류 일자리 생태계 조성 전담지원체계 프로그램을 갖춘 운영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산업융합 촉진법」,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에 의한 ‘스마트 해산물류 구축 전략’ 실증 및 시범항만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스마트 해양물류 관심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 MaritimeXL 프로그램 운영(국고보조금: 실무형 인재양성, 창업멘토링 / 자부담금: 실무형 R&D, 판로지원)
 - (실무형 인재양성) 전문가와의 프로젝트 수행 및 문제해결 경진대회로 현장 실무능력 배양
 - * (실무 프로젝트 훈련) 현직 업계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고, 멘토가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과기부의 ICT 한이음 사업 협력 운영)
 - * (문제해결 능력 배양) 캡스톤·해커톤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훈련 실시
 - (실무형 R&D) 실무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 훈련 등에서 도출된 결과물 중 유망한 아이템에 대해 고도화 R&D 추진(국비 지원 불필요)
 - (창업 멘토링) 사업화 보완 멘토링(아이디어 구체화 등), 사업아이템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지원, 해운·항만 물류 현장 견학 등
 - (테스트베드 및 판로지원) 항만공사가 시제품의 테스트베드 제공 및 공공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판로지원(국비 지원 불필요)
- 판로지원 대상 스타트업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참여 시 매칭자금 지원
- 스마트해상물류 관리자 자격제도 운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민간부담(울산항만공사 등)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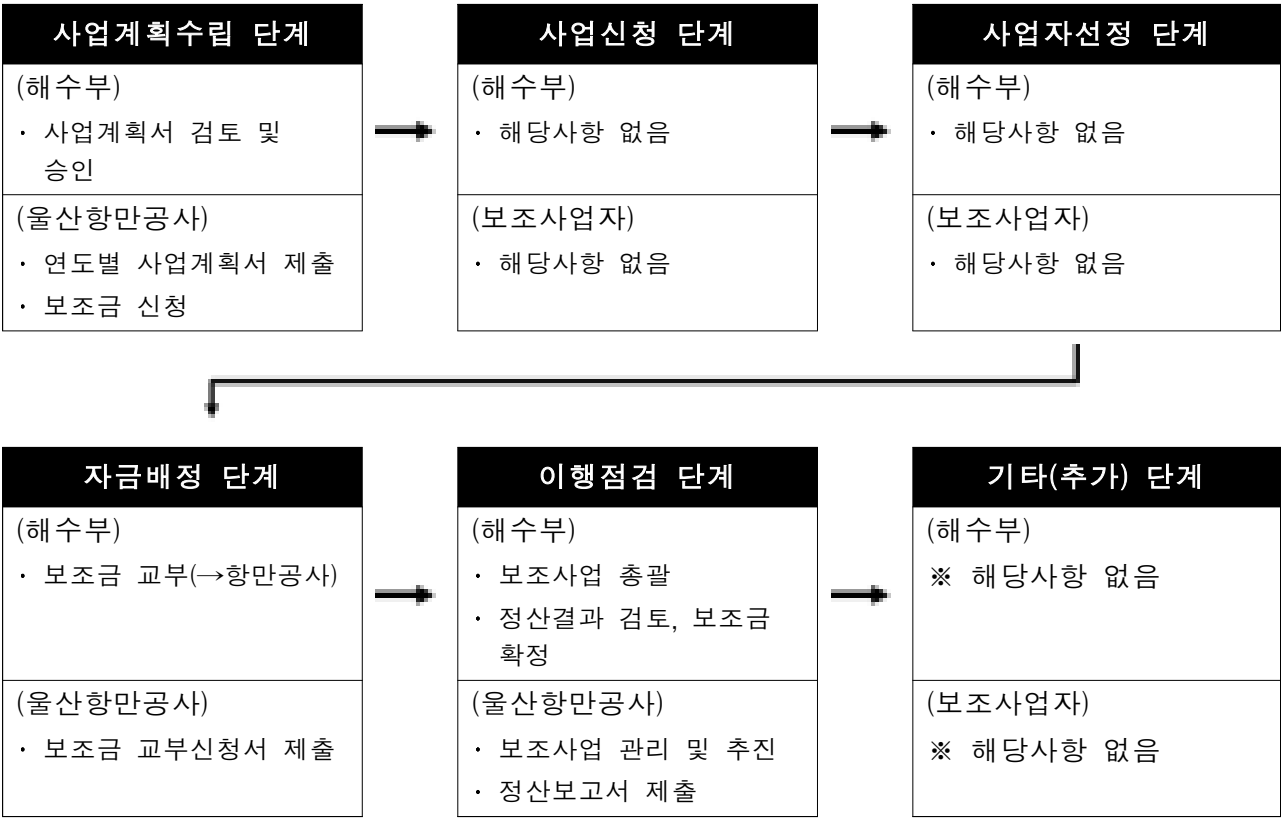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1,0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당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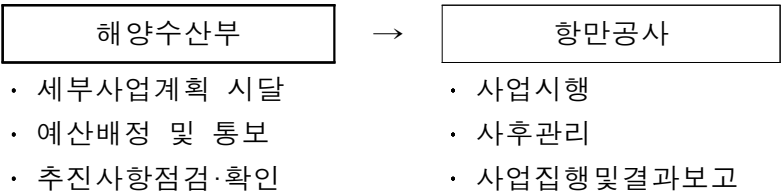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시행자인 울산항만공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신청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 추가 제출 서류: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③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팀 장 홍근형 사무관 박재민	044-200-6205 044-200-6204

I. 사업개요

1. 목 적

-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업종 종사자의 직무전환 교육 및 실직자 재취업 지원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운항만산업 재교육자 수	100명	-	99명	121명	집계 중	연말	교육 수료증
해운항만산업 재취업자 수	50명	-	67명	55명	집계 중	연말	재직증명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050	2,050	2,050	2,050
- 국 비	2,050	2,050	2,050	2,050
- 자부담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항만연관 산업 종사자 및 실직자의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사업이 가능한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운항만산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있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해운항만물류 관련산업 실직자 중 직무전환 교육 등을 통한 동종 및 이종업계에 재취업 희망자, 경영난으로 추가 인력수급이 어려운 구인기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운항만 종사자 맞춤형 직무교육, 재취업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센터 운영, 사업운영경비 등 사업수행 대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운영계획서 상의 프로그램 추진 목적에 맞게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정액)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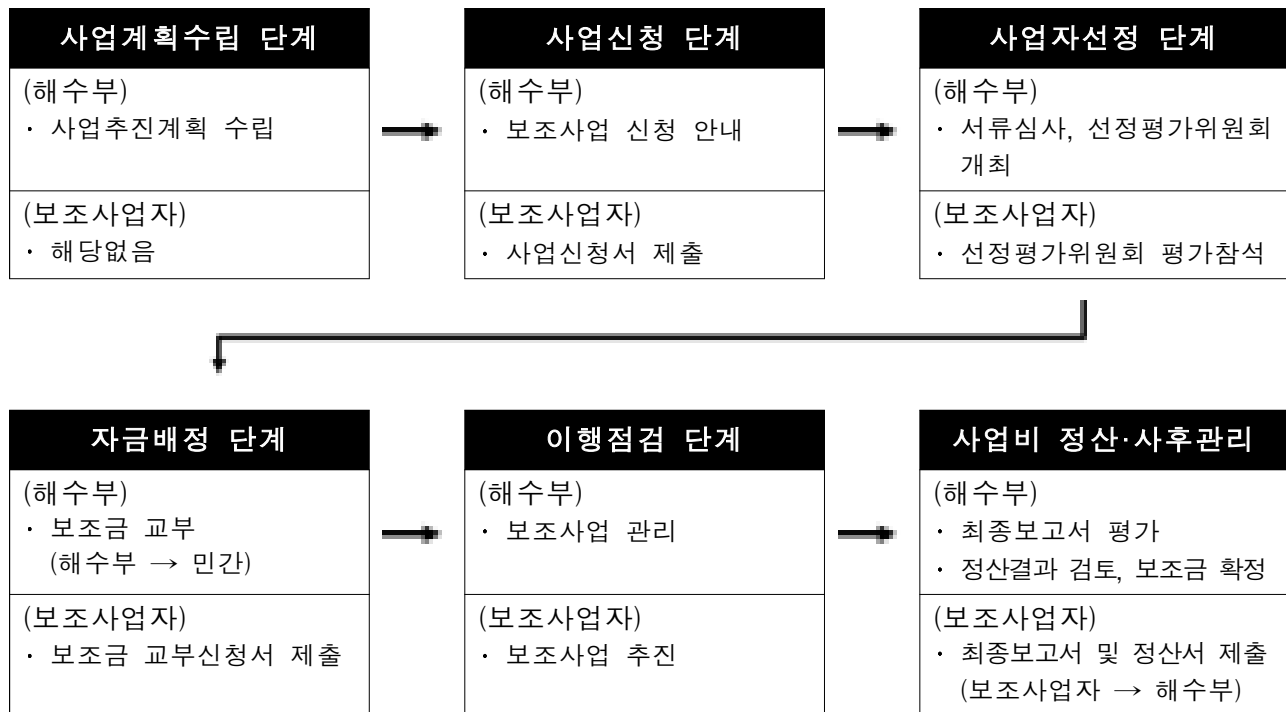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2023년 20.5억원(사업비 지원한도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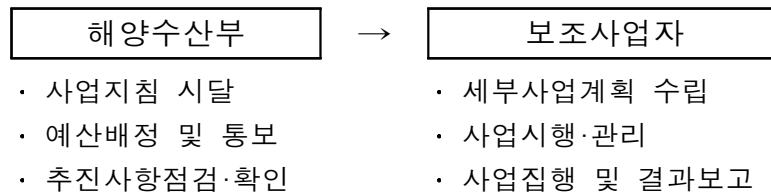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해양수산부) 결정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스마트해운물류팀)
-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원칙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형식적 요건 심사) 및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위원회 결과는 선정기업에 개별통보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사업계획서 승인 후 1차(70%) 교부, 중간점검 후 2차(30%) 교부
 - 정산시점 : 최종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세금 계산서, 외국환송금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실적에 대하여는 해수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화 성과 및 재취업 인원 등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사업수행 대상자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3년간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④ 한국해운물류산업활성화기반마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허만욱 사무관 김지홍	044-200-5710 044-200-5711

I. 사업개요

1. 목 적

-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에 따른 해운산업 중장기 목표(~'25)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정책 제언 등 학술대회 개최로 미래 해운항만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2. 근거법령

- 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사항 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단법인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치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사단법인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운항만 분야 공동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등 개최
 - 해운항만 연구성과 공유, 정책 협의,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 및 글로벌 해운물류 이슈 논의 등 미래 해운항만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
 - *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정액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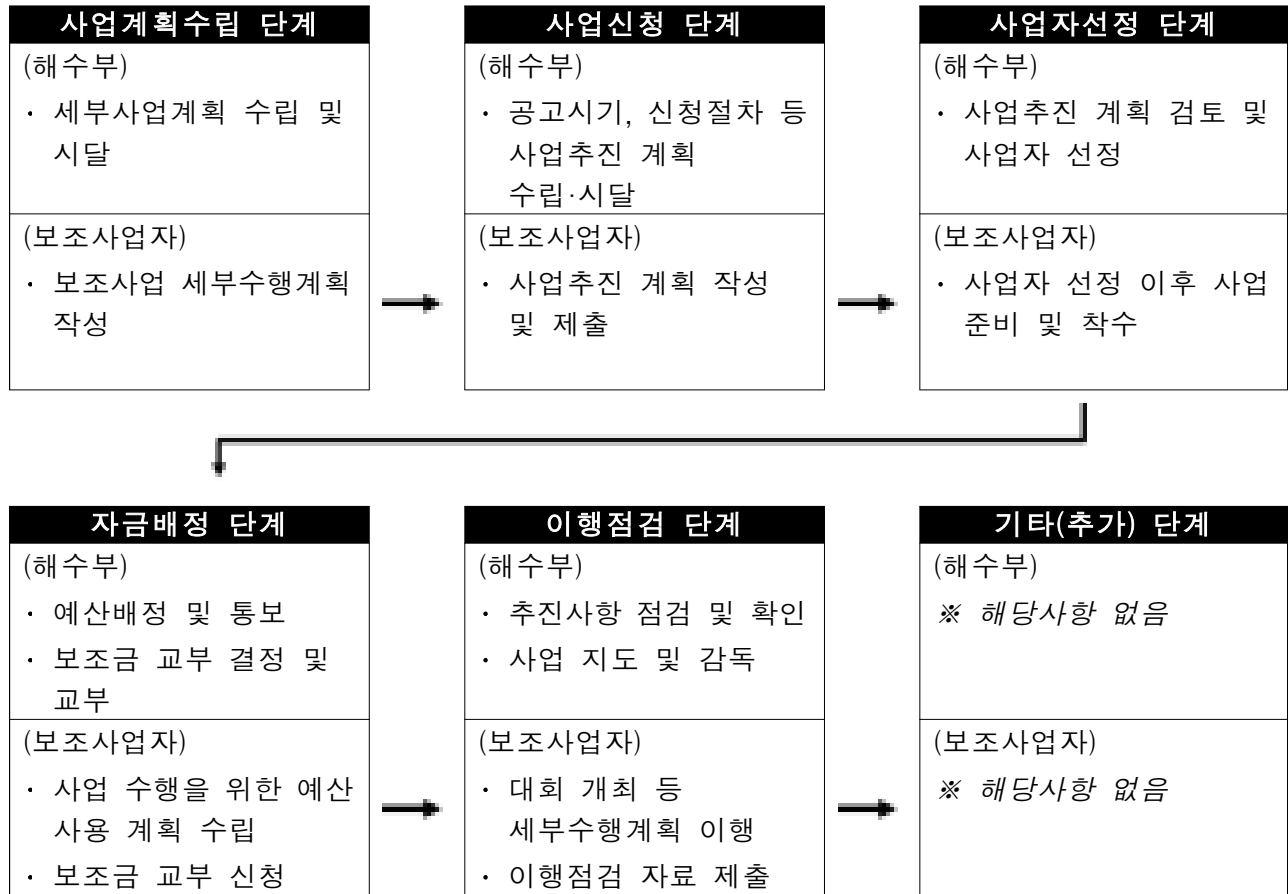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총 1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정액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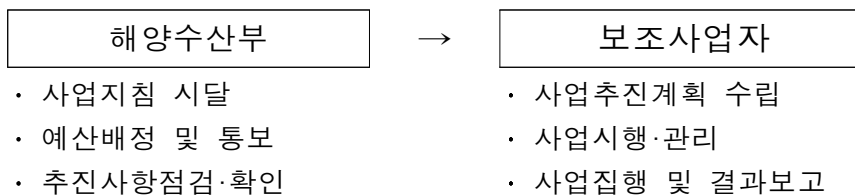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상반기 / 해양수산부-보조사업자 협의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 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 사업계획 수립 : '23.1분기

- 신청절차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제출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출계획 등

4. 사업자선정 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정 보조금 교부
- 사업자 변경 : 필요시 공문 등으로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공문 등으로 사업선정자에게 별도 통보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⑤ 해운물류안전교육인력양성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김 환	044-200-5770 044-200-5775

I. 사업개요

1. 목 적

- 우리나라 벌크터미널 하역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개도국 항만 운영사 핵심관리자를 해운물류 교육기관에 초청하여 교육 실시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0	-	-	-
- 국 비	10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각국 항만운영사 핵심관리자(국내 항만운영사 포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에 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물류연수기관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별크터미널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PDPⅡ 보급교육과정 운영 지원(ILO협력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과정 운영, 교재개발, 교육컨설턴트 초청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100%)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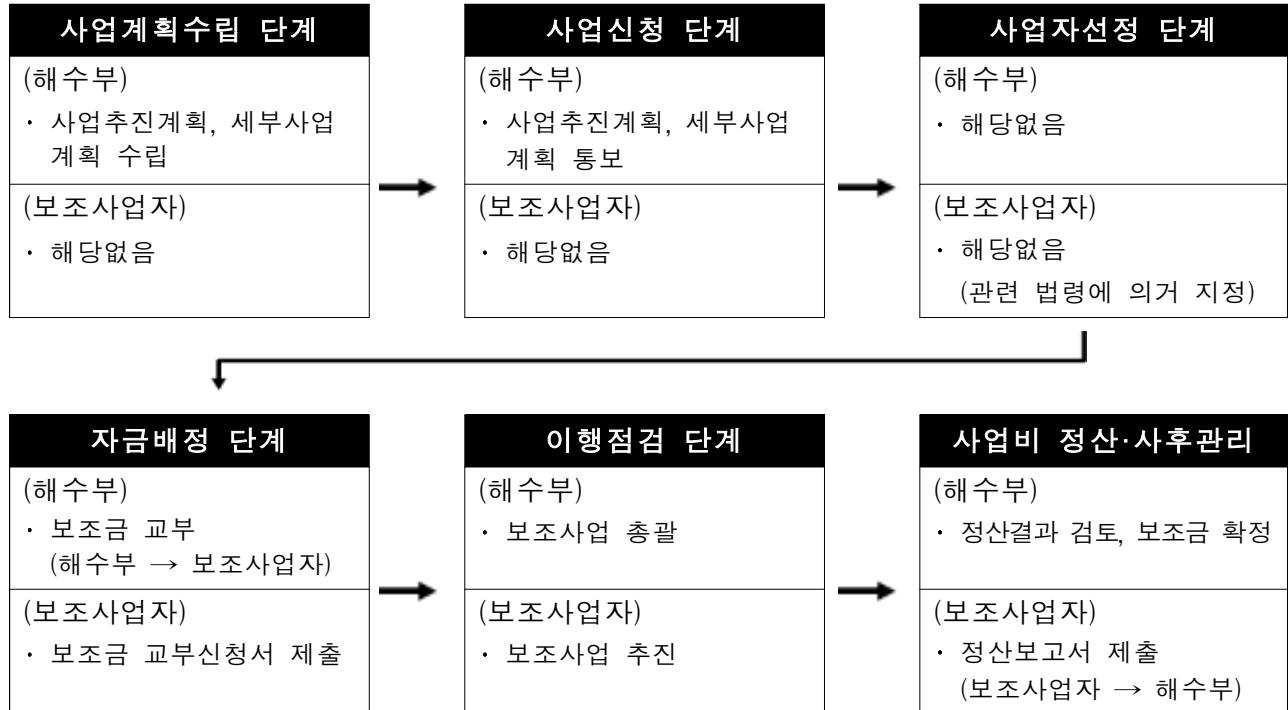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재량
- 기준 및 범위 :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과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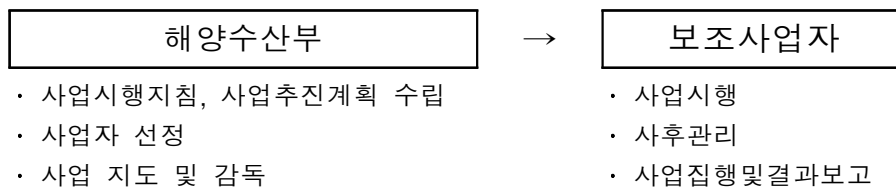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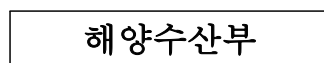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공고시기 : 21년 상반기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공모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사업대상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공고절차에 따름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절차 진행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사업자선정 후 교부(100%)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세금 계산서, 외국환송금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실적에 대하여는 해수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화 성과 및 재취업 인원 등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사업수행 대상자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3년간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⑥ 도선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최종욱 서기관 고규환	044-200-5770 044-200-5771

I. 사업개요

1. 목 적

- 선박 대형화 등 항만여건 변화로 인한 도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선사 법정교육 위탁 비영리법인 교육기관에 시뮬레이터 등 교육장비 지원*

*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교육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나, 교육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2. 근거법령

- 「도선법」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도선사 교육역량지원 사업공정률 (단위 : %)	10	-	-	-	-	연말	(누계집행실적/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0	3,000	-	-
- 국 비	150	1,350	-	-
- 자부담	150	1,350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3. 지원대상

- 「도선법」 제2조, 제4조에 따른 도선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선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장비, 프로그램 및 활용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설계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50%, 민간 50%
- (사업의무량) 해당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의 기준 및 범위) 150백만원 이내 보조(국비 50%, 민간 5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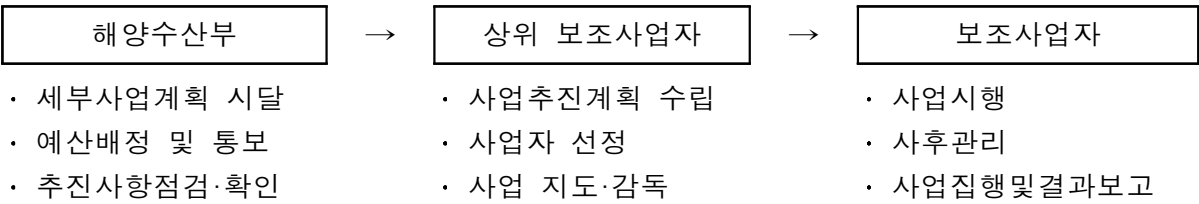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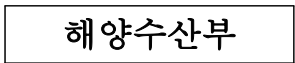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신청	사업시행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 확정,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 전담기관의 세부 사업 추진 일정 등 검토 · 사업계획에 따라 설명회 및 보조사업자 선정	(해수부)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 착수, 진행, 완료 보고회 참석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등 요청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시 사업점검 및 중간평가	(해수부) · 보조금 정산 ·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조기 종료 검토 · 보조사업 이행 완료 확인 등 ·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사용계획 수립 · 보조금 요청	(보조사업자) · 사업세부 공정 등 관리 · 이행 점검 관련 자료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실적 보고 · 보조사업 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제출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시달(해양수산부) : 2023.3월
- 사업자 선정 : 2023.4~5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공고시기)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공모 추진

- (신청절차) 전담기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공모 신청
- (구비서류)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4. 사업자 선정단계

- 보조사업자 공모(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스마트항만 전문 인력양성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수행협약 체결
- 사업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심의·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2회 교부 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사업기간 도래 전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 준공확인서 및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사업비 지출 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집행 시 국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실적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항만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이민석 서기관 구본찬 주무관 조성진	044-200-5750 044-200-5753 044-200-5754

I. 사업개요

1. 목 적

- 항만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동력원을 기존 경유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2. 근거법령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
 - 항만 내 운송수단(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지원 관련 근거 명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으로의 전환촉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YT LNG 전환대수(대)	50	100	54	56	50	매년 말	항만 YT LNG 전환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52	2,552	2,552	2,552
- 국 비	638	638	638	638
- 항만공사	638	638	638	638
- 자부담	1,276	1,276	1,276	1,276

* '24년 이후 사업비는 항만별 하역장비 운영상황, 민간(터미널운영사) 공모사업 참여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 존재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항만공사
- (사업대상자) 항만 하역사업자(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 하역사업자(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LNG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 * 충전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참여 가능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등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유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야드트랙터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려는 항만공사(1차 보조사업자) 및 민간 터미널운영사(2차 보조사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유 야드트랙터의 LNG 야드트랙터 전환(동력계통 설비 개조 등) 소요 비용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25%, 항만공사 25%, 민간 50%
- (사업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야드트랙터 LNG 전환 규모 이상을 명시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23년 총 50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야드트랙터 LNG 전환 1대당 12.75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야드트랙터 1대 전환(개조) 기준 단가 51백만원의 국고보조율(25%) 적용

- 국비 및 항만공사 지원금 이외의 초과 비용* 및 LNG 충전소 설치비용 등 민간사업자 자부담

* 50대 전환(개조) 대상 국비 638백만원, 항만공사 638백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물가 상승 등 개조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비 초과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국고보조금 지원 총액) 총 638백만원

$$- 51\text{백만원(대당 단가)} \times 25\%(\text{국고보조율}) \times 50\text{대(대수)} = 638\text{백만원}$$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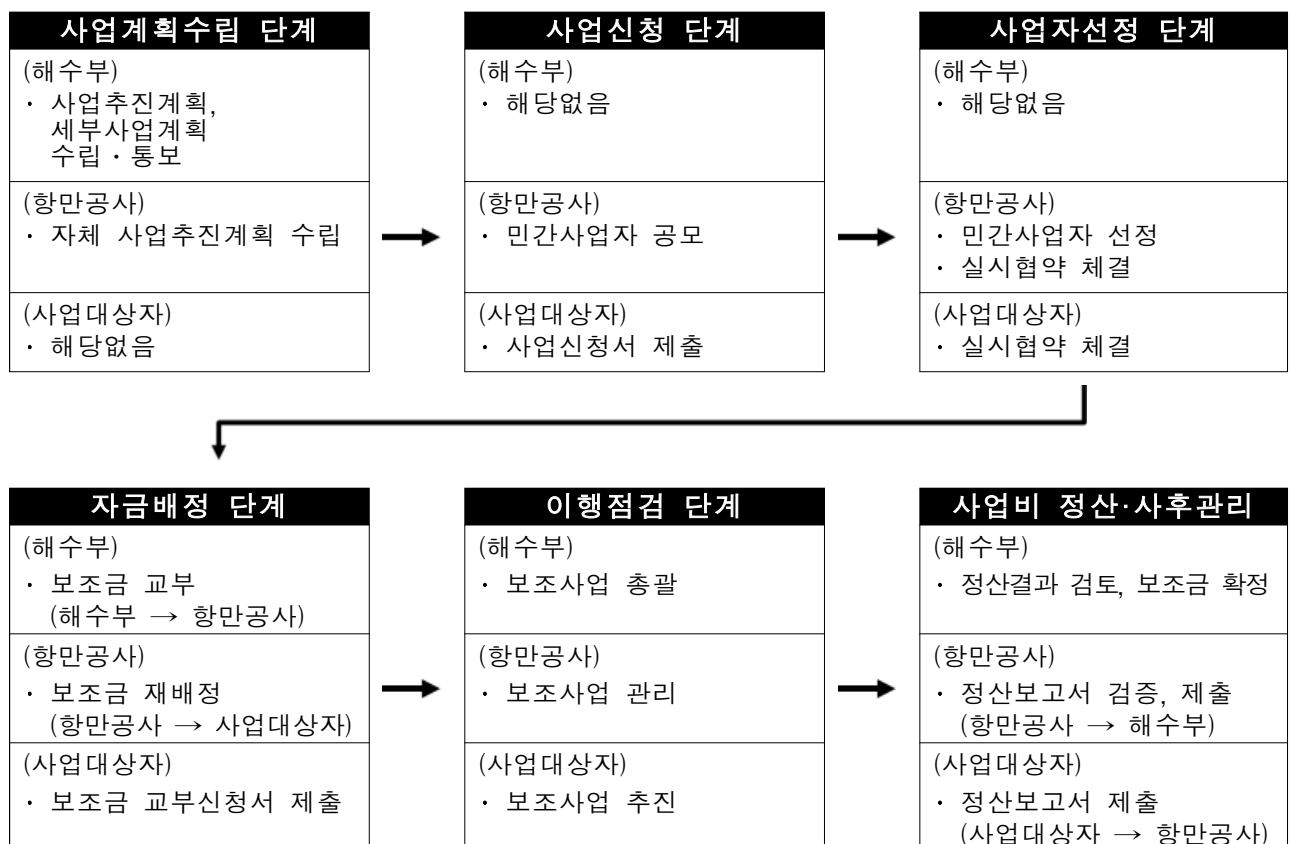
구 분	(추정)사업비*	국비	보조사업자 (항만공사)	사업대상자(민간)
사업비	2,552	638	638	1,276
분담비율	100.0	25.0	25.0	50.0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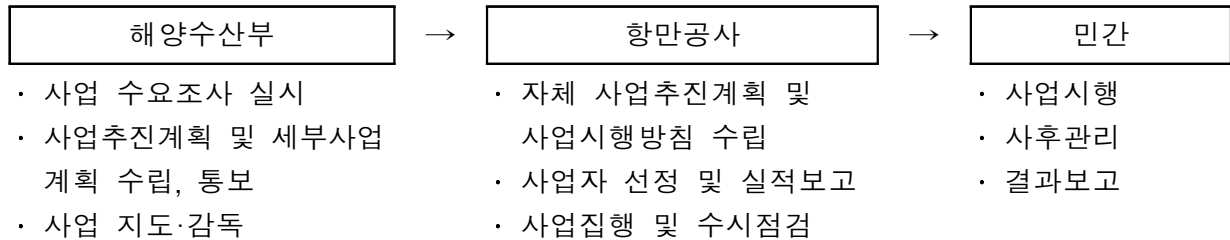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23.1월
-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통보 : ~'23.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항만공사
- (사업자 모집 공고) '23.3~4월
 - * 단, 공고 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1차공고 이후 사업자 선정 결과 예산 잔액 발생시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 공고 가능
- (신청절차) 사업자(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항만공사에 제출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약서 1부, 사업계획서 7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등
 -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설립·본 사업 참가 협약서 1부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항만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란 참고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한 실시협약 체결(선정주체 : 항만공사)
- (지원금액의 적정성) 항만 내 미세먼지 등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국비 25%, 항만공사 25%, 민간사업자 50%씩 부담하여 공모사업의 원활한 참여 및 추진 도모

- (선정방법)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야드트랙터 LNG 전환 사업계획, LNG 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보조금 교부조건(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등 보조금 교부 관련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되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 ⇒ 민간 보조사업자
 - *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교부조건을 부가할 경우, 해당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항만공사

-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 및 항만공사 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에 재배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만공사

- 정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법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항만공사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해양수산부) 및 사업자 공모(항만공사) 별도 실시

②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이민석 서기관 구분찬 주무관 조성진	044-200-5750 044-200-5753 044-200-5754

I. 사업개요

1. 목 적

- 경유 트랜스퍼크레인(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DPF를 기부착한 야드트랙터(YT)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항만 미세먼지 등 유해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하여 친환경 항만 구현

2. 근거법령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
 - 항만 내 운송수단(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지원 관련 근거 명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으로의 전환촉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전국 YT·TC 저공해전환율(%)	87	신규	신규	82	85	매년 말	저공해 전환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892	1,892	1,892	1,892
- 국 비	1,288	1,288	1,288	1,288
- 항만공사	428	428	428	428
- 자부담	176	176	176	176

* '24년 이후 사업비는 항만별 하역장비 운영상황, 민간(터미널운영사) 공모사업 참여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 존재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항만공사
- (사업대상자) 항만 하역사업자(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 하역사업자(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로 경유 트랜스퍼크레인 및 경유 야드트랙터를 보유한 자

* 충전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참여 가능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등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유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 항만을 지속 관리·운영하기 위해 항만 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20년 우리부 야드트랙터(YT) DPF 부착사업(309대)을 통해 YT DPF를 기부착한 항만의 항만공사(1차 보조사업자) 및 민간 터미널운영사(2차 보조사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유 트랜스퍼크레인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비용 및 DPF 기부착 경유 야드트랙터 유지보수비용*

* (근거) '22년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내 단가와 동일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① (TC DPF 부착) 국고 45%, 항만공사 45%, 민간 10%(PA항만)
국고 90%, 민간 10%(일반항만)
 - ② (YT 유지보수) 국고 50%, 항만공사 50%(PA항만)
국고 100%(일반항만)
- (사업시행조건)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하역장비 DPF 부착(TC) 및 유지보수지원(YT) 규모 이상을 명시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23년 총 1,288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① TC DPF 부착, ② YT DPF 유지보수)
- ① (TC DPF 부착) TC DPF 1대당 46.35백만원(PA항만) / 92.7백만원(일반항만)

- ② (YT DPF 유지보수) YT 1대당 0.225백만원(PA항만) / 0.45백만원(일반항만)
- 국비 및 항만공사 지원금 이외의 초과 비용* 등 민간사업자 자부담
- * TC DPF 부착비용은 국비 1,205.1백만원, YT DPF 유지보수비용은 국비 82.125백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유지보수 시 추가 부품 소요 등 사업비 초과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국고보조금 지원 총액) 총 1,288백만원

- ① 103백만원(대당 단가) × 45~90%(국고보조율*) × 13(대수) = 1,205.1백만원
- * TC DPF 1대 부착비용 기준 단가(103백만원)의 국고보조율(45~90%) 차등 적용
- ② 0.45백만원(대당 단가) × 50~100%(국고보조율*) × 309대(대수) = 82.125백만원
- * YT DPF 1대 유지보수비용 기준 단가(0.45백만원)의 국고보조율(50~100%) 차등 적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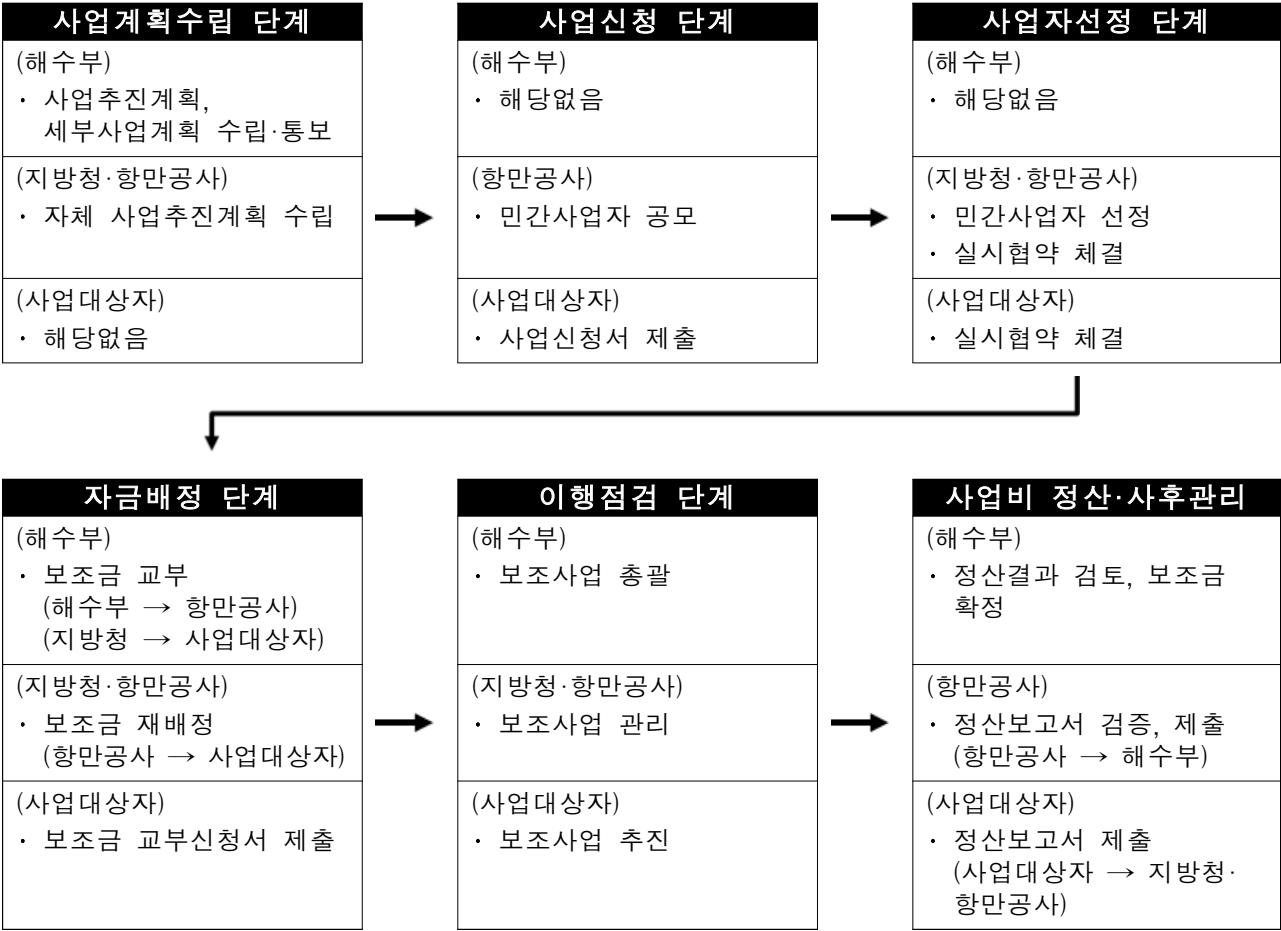
구 분	(추정)사업비*	국비	보조사업자 (항만공사)	사업대상자(민간)
사업비	1,892	1,288	428	176
분담비율	100.0	68.1	22.6	9.3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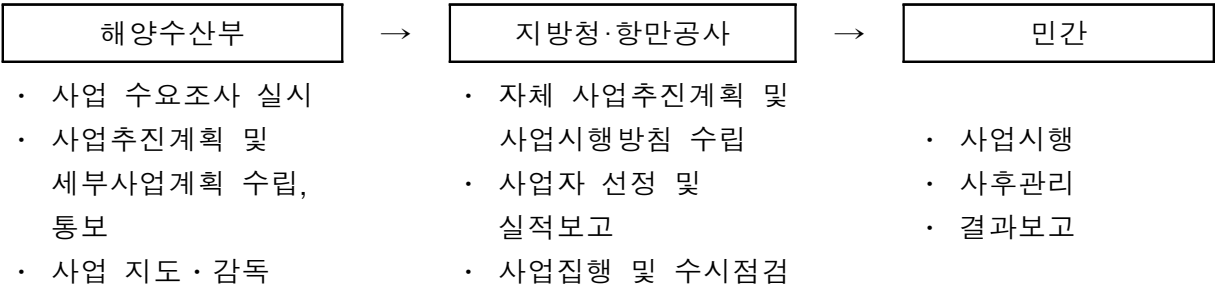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23.1월
-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통보 : ~'23.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
- (사업자 모집 공고) '23.3~4월
 - * 단, 공고 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1차공고 이후 사업자 선정 결과 예산 잔액 발생시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 공고 가능
- (신청절차) 사업자(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청·항만공사에 제출
- (구비서류)
 - ① (TC DPF 부착)
 - 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약서 1부, 사업계획서 7부, 정관 및 법인등기 부등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등
 -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설립·본 사업 참가 협약서 1부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입찰정보')란 참고
 - ② (YT DPF 유지보수)
 - 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약서 1부, 준공보고서* 1부, 유지보수 계획서 1부** 등
 - * '20년도 YT DPF 부착사업 참여장비 제원을 포함해야하며('20년도 사업참여 확인용), 대여 및 매각 등 사유로 장비를 관리하는 항만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함께 명기할 것
 - ** 사업자는 유지보수비용 총 지원 금액(터미널별 지원대상 대수 × 0.45백만원)에 상응하는 YT DPF 연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필터클리닝(○○회), 부품 교체 등 계획 포함)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 ① (TC DPF 부착)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한 실시협약 체결(선정주체 : 항만공사)
 - * 지방청은 공모 과정을 생략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평가 추진(적합 여부 판단 등)

② (YT DPF 유지보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선정 주체 : 지방청, 항만공사)
- (지원금액의 적정성) 항만 내 미세먼지 등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국비 45~100%, 항만공사 45~50%, 민간사업자 10%*씩 부담하여 공모사업의 원활한 참여 및 추진 도모
 - * (YT DPF 유지보수비용 지원) '20년 우리부 YT DPF 부착사업을 통해 DPF를 부착한 장비를 대상으로 의무부착기간(2년)이 경과된 이후 유지보수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친환경 하역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PA항만 : 국비50%, PA50% / 일반항만 : 국비100%)
- (선정방법)
 - ① (TC DPF 부착)
 -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트랜스퍼크레인 (TC) DPF 설치 사업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보조금 교부조건(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 등 보조금 교부 관련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되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 ⇒ 민간 보조사업자
 - *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교부조건을 부가할 경우, 해당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항만공사

-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 및 항만공사 보조금을 민간 보조사업자에 재배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만공사

- 정산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정산(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법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항만공사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수요조사(해양수산부) 및 사업자 공모(항만공사) 별도 실시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

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내용별 규모 (량)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 ○ ○ (보조사업자)

1. ○ ○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 국고보조 비율 : ○○%

○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법, ○○○○시행령)과 ○○○○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4. ○

[illegible]

○ ○ ○ ○ 년 ○ ○ 월 ○ ○ 일

해양수산부장관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허만욱 사무관 박찬수	044-200-5710 044-200-5716

I. 사업개요

1. 목 적

- 외항화물선사가 친환경 선박 신조 시 탄소배출 저감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국내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여 해운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조발주 증가를 통한 해운·조선 상생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 척수(척)	7	-	-	-	'23년 신규	매년 말	지원대상 선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000	13.000	13.000	13.000
- 국 비	13.000	13.000	13.000	13.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국가인증(친환경선박 인증)을 적용하여 친환경선박(LNG 등)을 신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인증 친환경 선박 신조 자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최대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탄소배출 저감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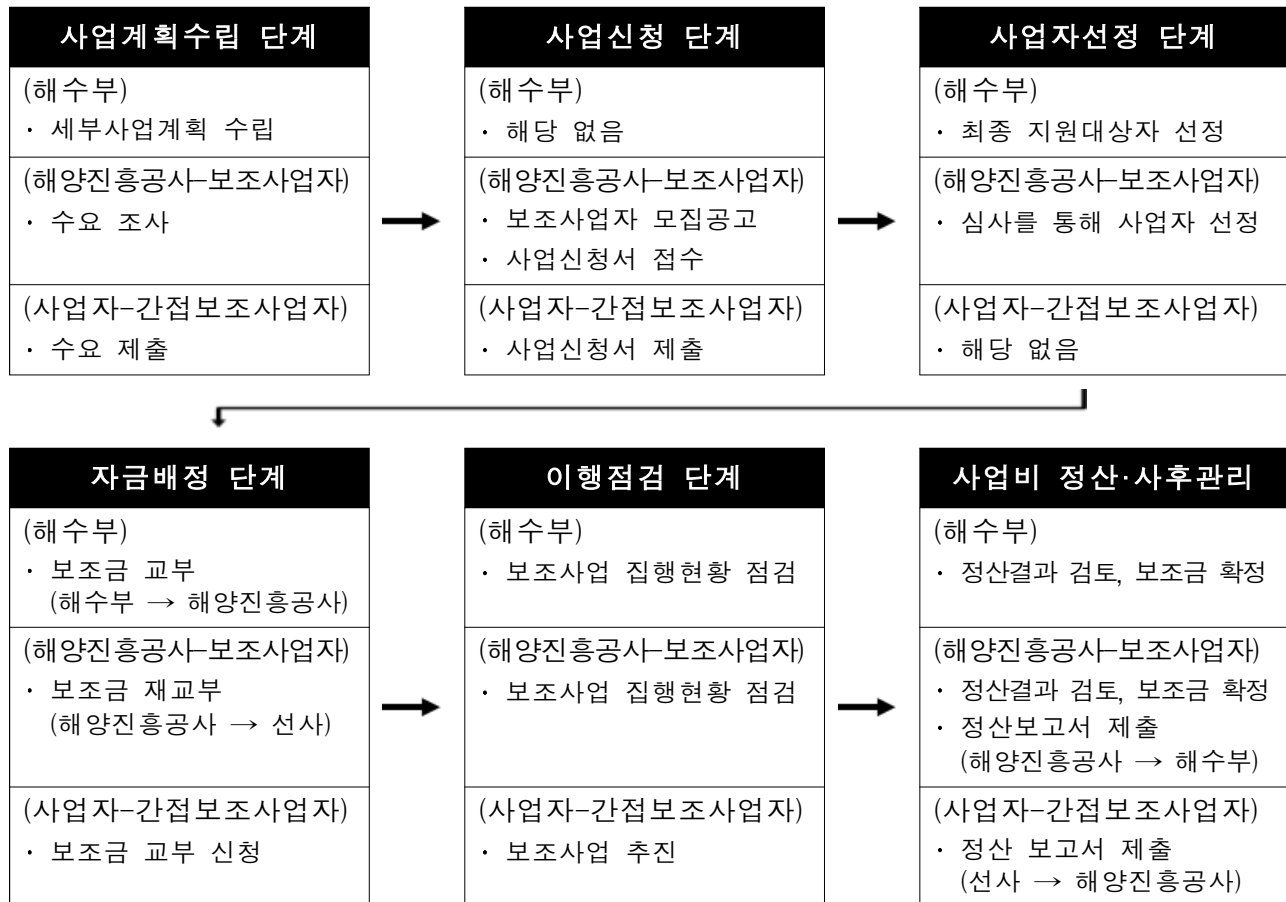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등급별 점수	보조율
1등급	65점 이상	10%
2등급	50점 이상	9%
3등급	35점 이상	8%
4등급	25점 이상	7%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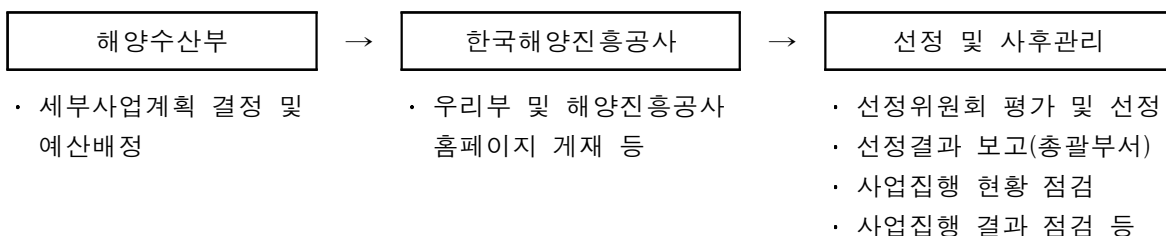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해양수산부) : 2022.12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23.3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한국해양진흥공사

- 사업관리주체 : 한국해양진흥공사
- 공고시기 : 사업기간과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 신청절차 : 각 선사에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진흥공사에 사업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 신청서 접수 :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요건에 맞추어 신청되었는지 접수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후보자 선정 위원회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금액 등 검토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취소 등이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 후 해양수산부 승인을 통해 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최종 선정 결과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별도 통보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한국해양진흥공사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간접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간접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 (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자본금		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건조계획	건조선박	G/T (DWT)	선종		
		총 건조비	만원	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	2차년	3차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㉑+㉒)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㉑)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㉒) (보조금 포함)	만원	만원	만원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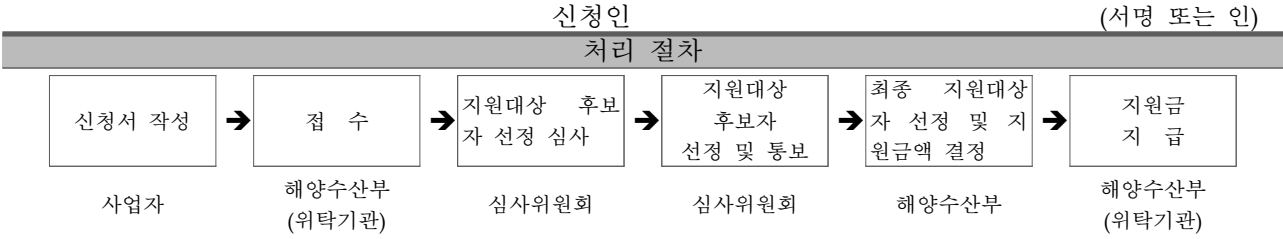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별지 제2호) 2.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별지 제3호)
-------	--

신청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업 위탁기관이 사업 신청정보를 통하여 신조 금융 지원(사전상담, 지원범위 산정)등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김 환	044-200-5770 044-200-5775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 항만 재직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항만 인력 양성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참여 (단위 : 명)	160	-	-	194	집계예 정	매년말	교육과정 당 참여하는 교육인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52	652	652	-
- 국 비	296	296	296	-
- 자부담(BPA포함)	356	356	356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훈련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3. 지원대상

- 부산항 북항 기존 재직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항만 재직자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장비 임대료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교육훈련비 지원) 국비 50%, 민간부담 50%
 - (교육훈련장비 임대료 지원) 국비 25%, 민간부담 75%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장비임대료 지원
 - (교육훈련비 지원) 국비 50%, 민간부담 50%
 - (교육훈련장비 임대료 지원) 국비 25%, 민간부담 75%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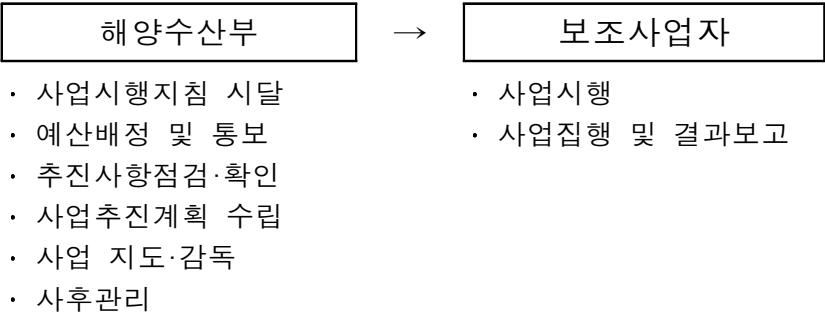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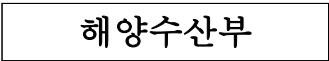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신청	사업시행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 확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관의 세부 사업 추진 일정 등 검토 사업계획에 따라 설명회 및 입찰 공고 추진, 보조사업자 선정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사업 착수, 진행, 완료 보고회 참석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 요청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 총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시 사업점검 및 중간평가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조기 종료 검토 보조사업 이행 완료 확인 등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보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사용계획 수립 보조금 요청 	(보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세부 공정 등 관리 이행 점검 관련 자료 제출 	(보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실적 보고 보조사업 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제출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공고시기)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공모 추진
- (신청절차) 전담기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공모 신청
- (구비서류)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4. 사업자 선정단계

- 보조사업자 공모(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스마트항만 전문 인력양성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수행협약 체결
- 사업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심의·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2회 교부 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사업기간 도래 전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 준공확인서 및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사업비 지출 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집행 시 국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실적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장기봉	044-200-5770 044-200-5773

I. 사업개요

1. 목 적

-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항만하역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 근거법령

- 항만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민간투자율(70%) + 전년 동기대비 재해감소율(30%) (투입, 0.7 / 결과, 0.3)	95%	-	-	-	집계 예정	다음해 초	$\begin{aligned} & \{ \text{민간사업자 재해예방시설 투자액} / \\ & \text{목표액(25억원)} \times 100 \} \times 0.7] \\ & + \{ (\text{항만하역사업장} \\ & \text{전년도 1·2분기 재해건수} \\ & / \text{당해연도 1·2분기} \\ & \text{재해건수}) \times 100 \} \times 0.3 \end{aligned}$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00	2,000	2,000	-
- 국 비	2,500	2,000	2,000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공모로 선정
- 간접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공모로 선정(항만하역사업자 및 배후단지 입주업체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자 자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허위의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항만하역사업자 및 배후단지 입주업체, 항만하역 유관 단체 등으로 재해예방시설 투자 민간기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투자 민간기업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국고 25~50%
 - * (항만공사 설립 항만) 국고 25%, 항만공사 25%, 민간 50%
 - ** (항만공사 비설립 항만) 국고 50%, 민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해예방시설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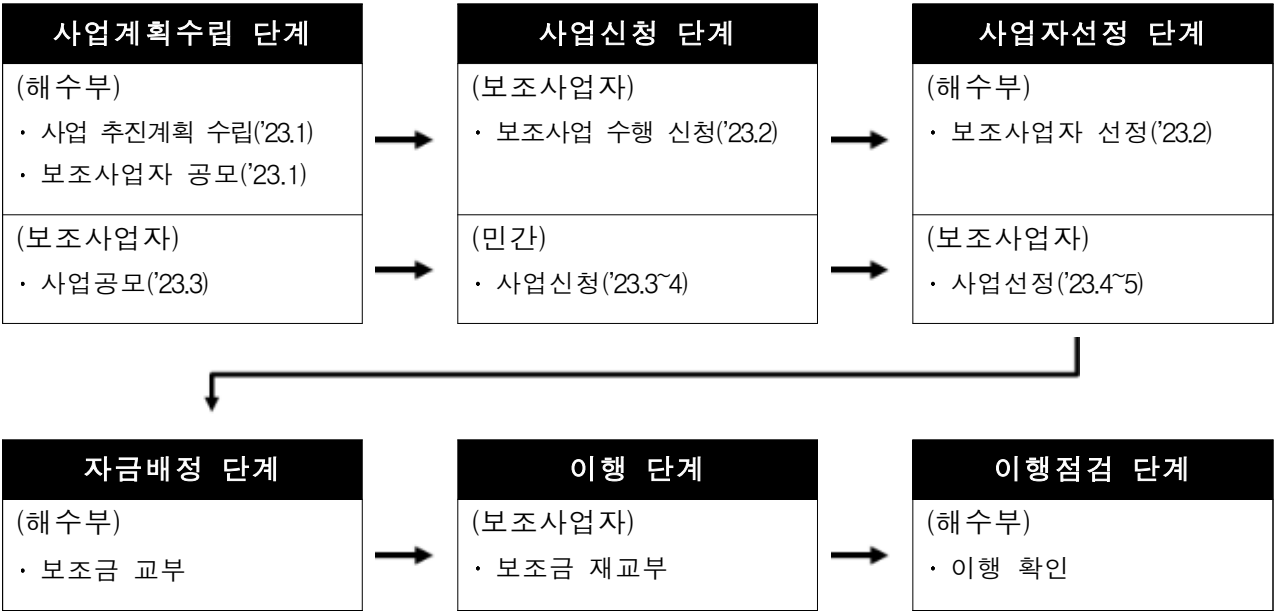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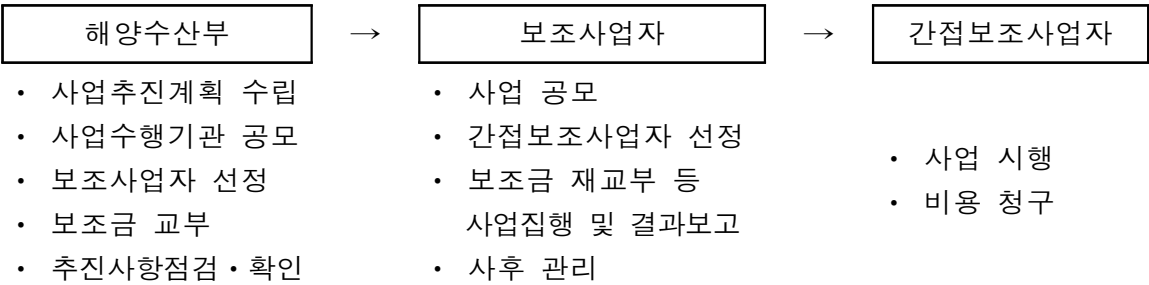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전체적인 사업추진 프로세스와 기관별 역할) 해수부가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 공모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해수부(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보조금 재교부) ⇒ 간접보조사업자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23. 1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23. 1월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공고시기) 연 1회(1월)

보조사업자

- (신청절차) 보조사업 수행기관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 기타 사업관련 자료, 증빙서류
- (신청서접수 관련 절차)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공모 및 선정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주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 능력 판단)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등
- (사업자 선정 절차) 내·외부 위원회 구성,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통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해양수산부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에 나누어 교부
- (사업수행상황 확인) 보조사업자 사업수행상황 수시 확인
- (정산 확인을 통한 보조금 교부 확정)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 회수 조치(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재교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월별로 보조금 재교부
- (사업수행상황 보고)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
- (결과 보고 및 사업 정산) 사업종료 후 2개 월내에 결과 보고 및 정산자료 (통장입출금 내역, 사업비 지출 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보조금 사용의 적적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등을 점검
- 사업추진 실적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물/보조사업자

- (부당집행·부정수급 확인 시 지급 보조금 환수)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기타사항》

보조사업자

- (지원시설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시설에 대해 사용연수 동안 활용여부 등을 관리(최소 10년 이상)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황진실	044-200-5730 044-200-5738

I. 사업개요

1. 목 적

- 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운영하여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2. 근거법령

-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만족도(단위 : 점)	4.43	4.40	4.35	4.53	-	매년 말	이용객 만족도 조사 (리커트 5점 척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6,498	15,190	15,494	15,804
- 국 비	16,498	15,190	15,494	15,804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조항로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보조항로 경쟁입찰 공고일 당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선정

- (사업운영) 선정된 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사업자 선정 시 제시)을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분할 지급

3. 지원대상

- 국가 지정 보조항로를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 유류비, 선박수리비, 여객·선원·선박보험(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비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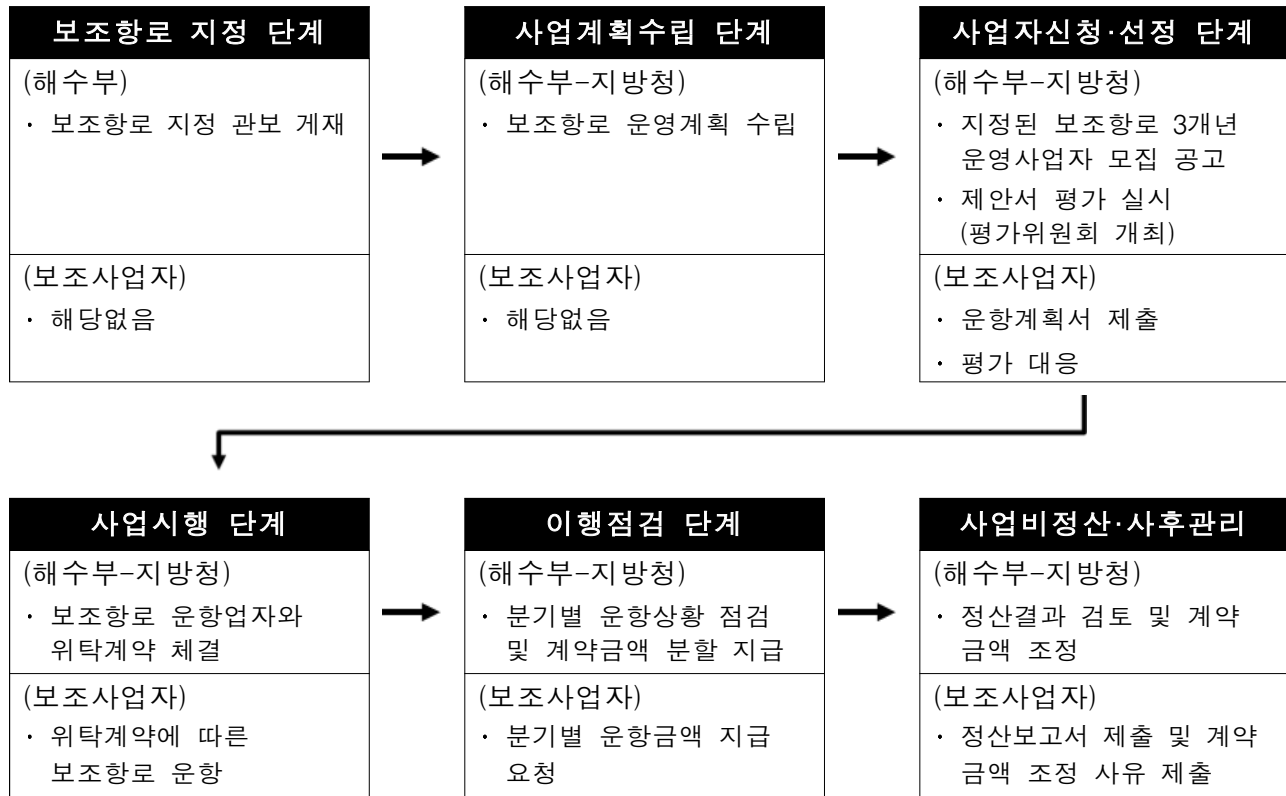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보조항로 운영사업자와 맺은 3년 단위 장기계속계약 금액 내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보조항로 지정 단계

해양수산부(본부)

- 보조항로 지정 관보게재
 - 보조항로 지정일자, 지정사유(사업채산성이 없어 일반항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항로(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3.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보조항로 운영계획 수립(장기 계속계약체결 계획)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 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4. 사업 신청·선정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방청)
- 공고시기 : 장기계속계약(3년) 종료 전
 - ※ 지원과제 공모가 저조한 경우 추가공모 실시
- 공모절차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소지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 공모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과제에 대한 평가
- 선정기준
 - 기술능력(사업계획 타당성, 경영상태, 신인도, 안전관리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선박수리비 집행계획, 입찰가격 산정의 적정성, 재무위험 등 결격사유) 90%, 입찰가격 10% 등

보조사업자

- 운항계획서 제출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대응

5.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보조항로 운항업체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보조사업자

- 위탁계약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

6.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보조사업자의 위탁계약 이행실태 지도·감독
- 매 분기별 보조사업자와의 계약금액 분할 지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운항금액 지급 요청

7.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을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음
 - (유류비) 분기평균 3% 이상 유가 변동 시
 - (수리비) 보조사업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이면서 계약금액 미반영 시
 - (수 입) 외생변수로 인한 증감 시
 - (기 타) 기항지, 운항횟수, 운임, 선박 등 변경 시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수입금 등 조정

보조사업자

- 회계연도 운항금액 정산보고서 제출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제출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도경식 서기관 김승룡	044-200-5730 044-200-5731

I. 사업개요

1. 목 적

-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및 적자 누적으로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2. 근거법령

-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만족도(단위 : 점)	4.43	4.40	4.35	4.53	-	매년 말	이용객 만족도 조사 (리커드 5점 척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300	3,300	3,300	3,300
- 국 비	3,300	3,300	3,300	3,3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육지-도서 간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은 항로 또는 최근 2년 운항수지가 연속으로 적자인 항로를 운항하는자
- (사업운영) 지정된 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의 일부를 연말 일괄 정산 및 지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대상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국가 지정 연안여객 안정화 항로를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 유류비, 선박수리비, 여객·선원·선박보험(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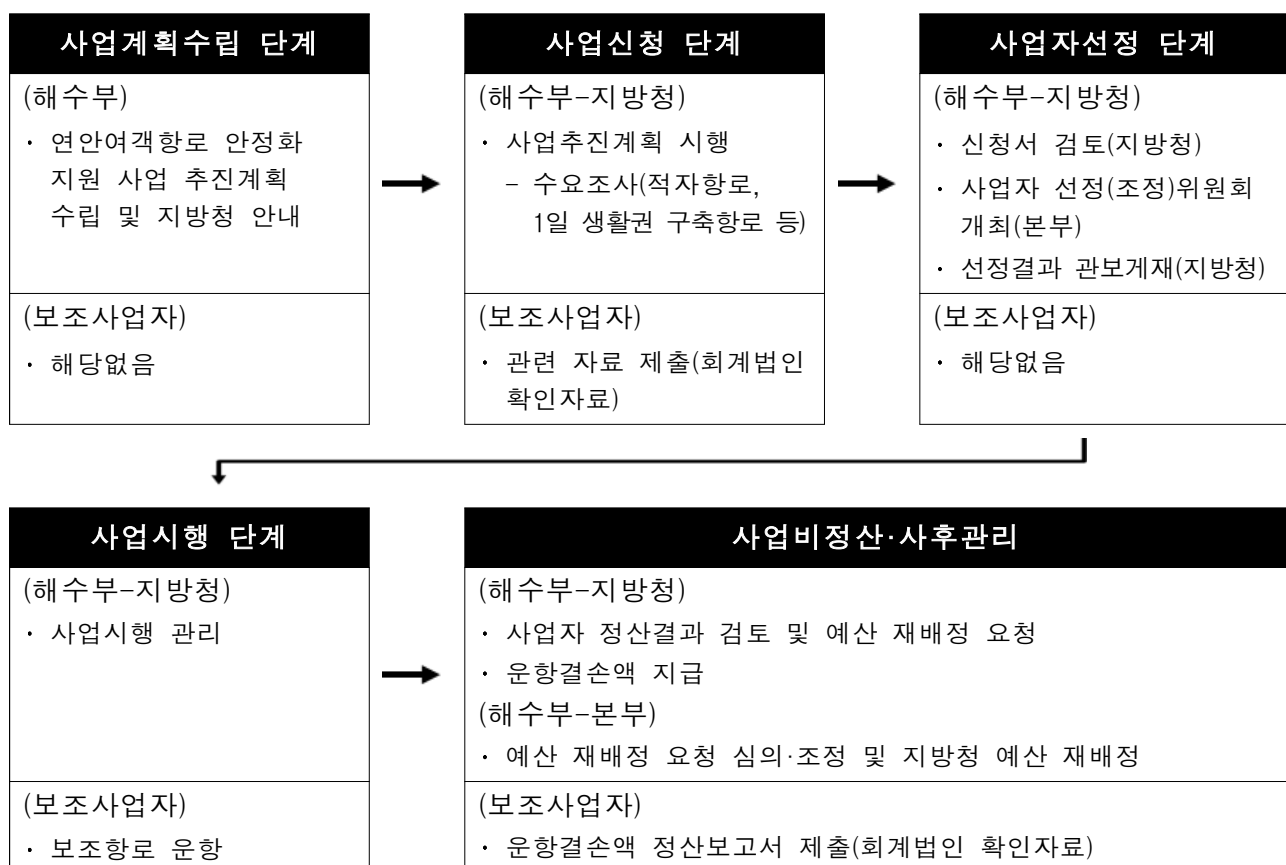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국비 50 ~ 70%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육지-도서 간 1일 2회 왕복운항 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로 운항한 부분 운항결손금의 50%
 - 연속적자 항로 : 운항결손금 70% 이내

5. 중요재산 관리(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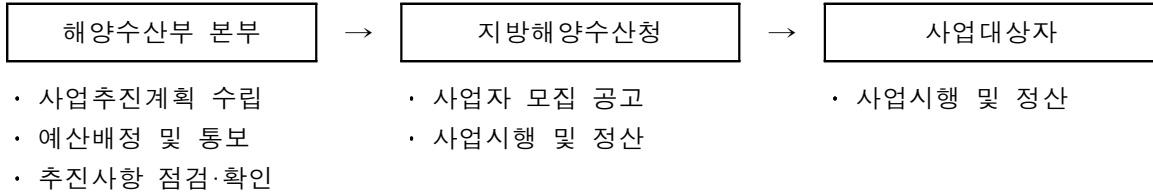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해양수산부 본부) : 2022. 10월 말
- 사업자 모집공고(지방해양수산청) : 2022. 11월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공고시기 : 연 1회(전년도 11월)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하는 지원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No	신청서류	비고
①	준공영제 확대 지원대상 신청서	공통사항
②-1	사업계획서(예산 소요경비 내역 등 포함)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신청 시
②-2	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	2년간 적자 항로 신청 시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상세내역 포함) 및 증빙자료	
	운항결손현황을 검증·확인한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운항결손현황을 검증·확인한 회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③	확약서	공통사항
④	최근 2년간 재무상태표	공통사항
⑤	운항계획	공통사항
⑥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공통사항

- 신청서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자공모에 접수한 항로에 대하여 신청요건, 항로현황, 지원 타당성 등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22. 11월)

- 항로 선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보조항로를 관보에 게재(22. 12월)

해양수산부(본부)

- 항로 선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22. 12월)
- 평가기준 : 예산소요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 충실성, 선박 운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5.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시행 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항로 운영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본부에 예산 재배정 요청

해양수산부(본부)

- 지방청의 검토결과 및 예산 재배정 요청을 심의·조정하여 지방청에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해당연도 운항금액 정산보고서 제출

*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자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운항 항로(기항지)					
운항 현황(횟수 등)					
보조항로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1일 생활권 구축항로 <input type="checkbox"/> 2년간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 계획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청인 : 인</div>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제출서류 1.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신청 시 : 구축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예상 소요 경비 내역 등 ※ 추가운항에 따른 운항결손금에 한함 2. 2년간 적자항로 신청 시 : 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최근 2년간 적자증빙 서류 ※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확인 자료					

사업 계획서

(○○-○○항로 1일 생활권 구축)

0000. 00

○○해운

☐ 회사 개요

- 연 혁

☐ 운항선박 현황

- 선명, 선종, 톤수 및 운항항로 등

☐ 조직 구성도

- 육상(매표원 포함), 해상 근무인력 현황

☐ 1일 생활권 구축배경

- 운항 현황 및 문제점

☐ 1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 운항계획(운항시간, 운항횟수), 항로명세(항로거리, 소요시간)
- 추가운항에 따른 선박 확보계획, 운항선박 명세
- 기종착별 운임(일반인, 도서민 구분)

☐ 1일 생활권 구축에 따른 인력운용계획

- 선원직
- 육상직

□ 1일 생활권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추정)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수입 총계	
지출 총계	
운항결손액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운송수입	여 객	
	차 량(화물 포함)	
	소계	
기타수입	지원금	
	기타(선내수입 등)	
	소계	
합 계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상세내역
가. 인건비	추가 운항에 따른 급여 및 제수당 지출액 (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 포함)	
나. 유류비	추가 운항에 따른 실 유류사용량 적용	
다. 선박수리비	추가 운항에 따른 실 수리비	
라. 선용품비	추가 운항에 따른 실 지출액	
마. 임시용선료	추가 운항선박 수리 등으로 인한 타 선박 용선비용	
바. 보험(공제)료	추가 운항에 따른 각종 보험료, 운항관리비용 매표시스템 사용료	
사. 운항관리비		
아. 전산매표수수료		
자. 일반관리비	운항원가의 5%	
합 계		

최근 2년간 운항결손 확인서

확인자	법인명(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확인 사항	주요내용	○○~○○항로에 대한 최근 2년간 수입지출내역		
	산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로 및 운항선박	/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
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위해 작성된 최근 2년간 운항
결손 현황이 누락없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수입지출 내역 1부(증빙자료 포함)
2. 확인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3. 확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황진실	044-200-5730 044-200-5738

I. 사업개요

1. 목 적

- 여객선, 도선 등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소외도서 항로 운항횟수 (단위 : 회)	2,000	-	-	-	-	매년 말	지자체 운항실적 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900	1,800	2,250	2,500
- 국 비	450	900	1,125	1,250
- 지방비	450	900	1,125	1,25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여객선, 도선 등이 미기항하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의 해상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항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 공모에 응하여 사업계획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 (선정 제외대상) 선박 확보 및 항로 운영계획, 지방비 확보 계획 등이 부적정한 지방자치단체

3. 지원대상

- 소외도서 항로 운영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원인건비, 유류비, 선박검사 및 수리비, 보험료, 선용품비 및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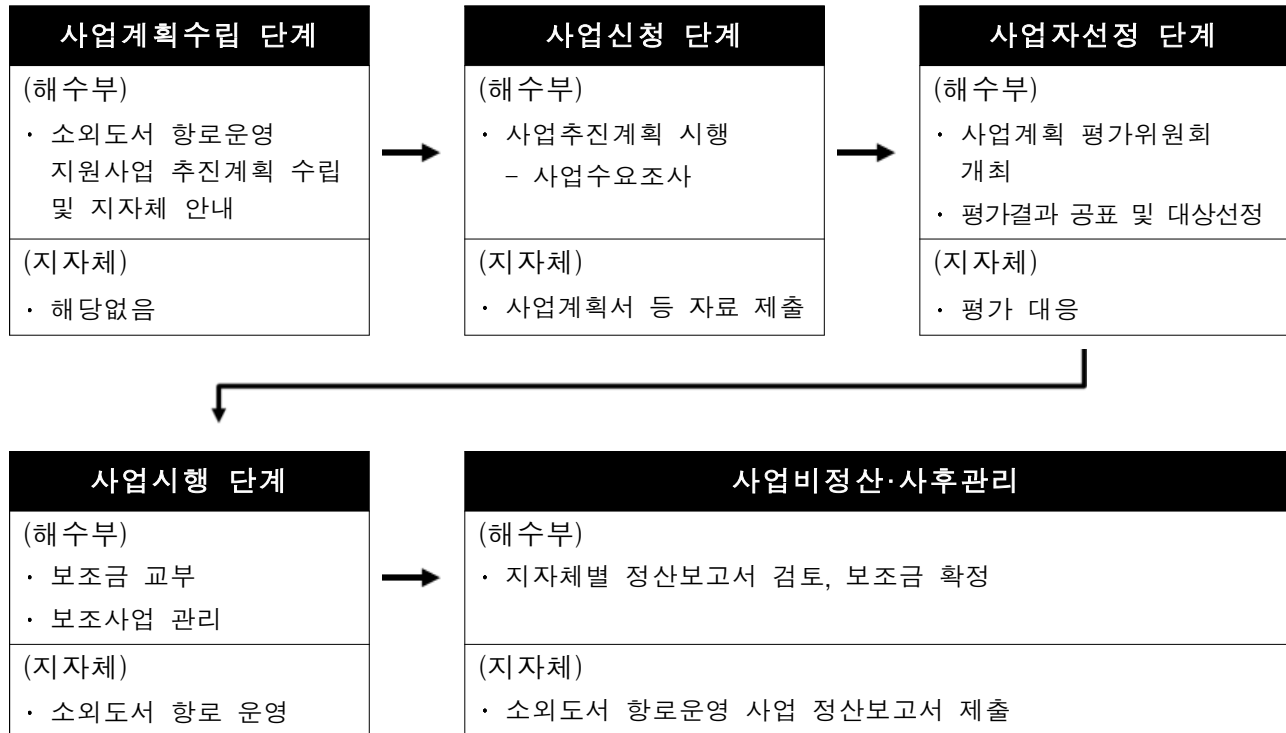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사업자 공모 시 제출한 예상 사업비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22.4분기)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지자체 대상 소외도서 향로운영 사업 공모(2023.1분기)

지자체

-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공고시기 : 2023.1분기
 - ※ 지원과제 공모가 저조한 경우 추가공모 실시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 선정기준 : 선박 및 인력 확보, 운항계획, 대응지방비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지자체

- 선정(조정)위원회 평가 대응

5.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선정(조정)위원회 결과 선정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지자체

- 소외도서 항로 운영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산서 및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관리

지자체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액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철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황신혜	044-200-5730 044-200-5733

I. 사업개요

1. 목 적

- 도서민이 부담하는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

2. 근거법령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제4조(재원부담)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도서민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도서민 수송실적 (단위 : 천명)	3,330	3,558	2,994	2,966	3,000 (잠정)	1월	연말 기준 도서민 수송실적 집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6,352	29,280	29,280	29,280
- 국 비	13,176	14,640	14,640	14,640
- 지방비	13,176	14,640	14,640	14,64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7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도서민이 거주하는 도서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교부결정 취소기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서민에 대한 ①여객운임 및 도서민 소유 차량에 대한 ②차량운임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정률 지원
- 사업의무량
 - 해당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및 한도
 - 여객운임 :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정규운임*이 8,340원 미만인 구간(생활구간)에 대해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
 -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일반 대인운임

<운임 구간 별 도서민 운임 현황>

정규운임	8,340원 미만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도서민 운임	2천500원 이하	5천원	6천원	7천원

- 차량운임 : 차량*운임의 20%(국비 10%, 지방비 10%), 다만, 2,500cc 미만 승용차 중 1,000cc 미만은 50%, 1,600cc 미만은 30%, 5톤 미만 화물차는 50%지원

* 비영업용 국산 차량(2,5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15인승 승합차)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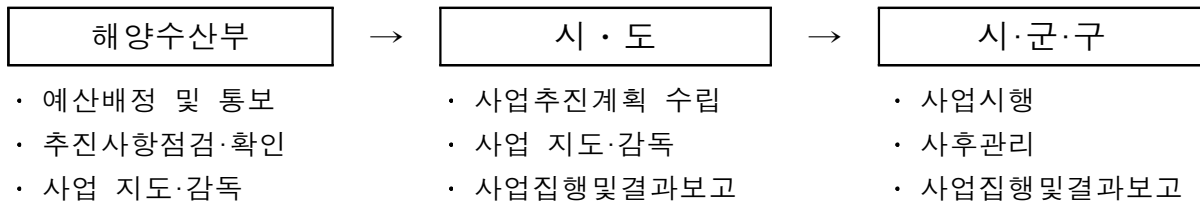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임시 통보(가내시) : 전년 9월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 :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1~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계획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연 1회, 1월)

지자체

- 각 시·도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1월말)
 -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선정 주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승인(2월)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연 2회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 기준 :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정산 시기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정산 방법 : 제출된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관리주체가 보조금을 확정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요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시·도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게 국고보조금 정산서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4호 서식】를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시·도에서 제출한 정산서 및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최종 확인한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시·도에 요청하여 국고 회수 조치

지자체

- 시·도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시·군에 교부
- 시·도는 사업종료 후 시·군 정산결과 취합 후 국고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심사, 보조금액 확정 통보 및 집행잔액 등 반납토록 조치
-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제재》

해양수산부

- 계획 대비 사업이행도 및 매칭비율 미준수 등 기준 미달 시 차년도 지원액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정산서등 제출 요청(1월)

지자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속(기관명)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 성 명 :

3. 사업 시행기관 :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5.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보 조 금 교부신청액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6 사업시행 기간 : 2023. 1. 1 ~ 12. 31.

위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의 국조보조금을 신청하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023년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위 치 : ○개 시·군, ○개 도서(○항로)
- 사 업 량 : 여객선 이용 도서민과 차량 운임지원 1식
- 사 업 비 : 총 천원

2. 보조금의 산출기초

- 총사업비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사 업 명	시·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합 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 ○ 시· 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차량에 대한 운임 지원금 집행

4. 보조금 이외의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

- 부담금액 : ○ ○ 천원(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부담방법 : 지방비(도비, 시·군비)

5. 보조사업의 효과

- 도서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완화로 삶의 질 향상
- 섬 여행 활성화 및 이도현상 완화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1. 2023 예산소요액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군·구	사 업 비				지원대상 (‘22.12.31 기준)
		계	국비	광역	기초	
내항 여객 선 운임 보조 사업	○ ○ 군					- 도서수: 개 - 인구수: 명 - 연간이용객: 명 - 총 차량대수: 대 - 지원차량대수: 대
	여객					(영업용 차량, 외제차, 5톤이상 화물차, 2,500이상 승용차, 15인 초과 승합차 등 제외)
	차량					

2. 산출내역(시·군별)

□ ○ ○ 시·군

○ (여객) ○ ○ ○ 천원

○ (차량) ○ ○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2022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서

1. 작성개요

기관명	작성일	작성자	확인자	비고

2. 정산내역 ※ 세부내역 별첨

* 여객 및 차량간 예산 조정이 있는 지자체는 당초 국비 교부액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기관명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고
				계	시도비	시군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 이자발생액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3.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여객 :

○ 차량 :

【별지 제4호서식】

「2022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서

1. 사 업 명 : 2022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3. 사업추진내용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기관명	교부결정액(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집행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기관명	집행액 합계			국비			지방비			지방비 부담비율 (C/A)
	계(A)	여객	차량	계(B)	여객	차량	계(C)	여객	차량	

☐ 여객 및 운임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대)

기관명	대상도서 (0시군/00개소)	도서민 지원대상		도서민 지원실적	
		인구수 (천명)	차량대수 (대)	여객총량 (천명)	차량총량 (대)
	/				

* 도서 및 인구수는 '21.12.31기준 지자체 주민등록 및 차량등록통계 기준

** 차량은 영업용 차량, 외제차, 5톤 이상 화물차, 2,500cc 이상, 승용차, 15인 초과 승합차 등 제외

4. 제도개선사항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백정호	044-200-5730 044-200-5735

I. 사업개요

1. 목 적

- 도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연료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리 강화

2. 근거법령

- 「해운법」 제44조제2항

☐ 해운법 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상운송비 지원 만족도 (단위 : 점)	80.4	-	75.8	81.9	집계 예정	매년 말	해상운송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선사 및 수혜가구 대상 조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200	3,200	3,200	3,200
- 국 비	1,600	1,600	1,600	1,600
- 지방비	1,600	1,600	1,600	1,6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8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및 기초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8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및 기초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및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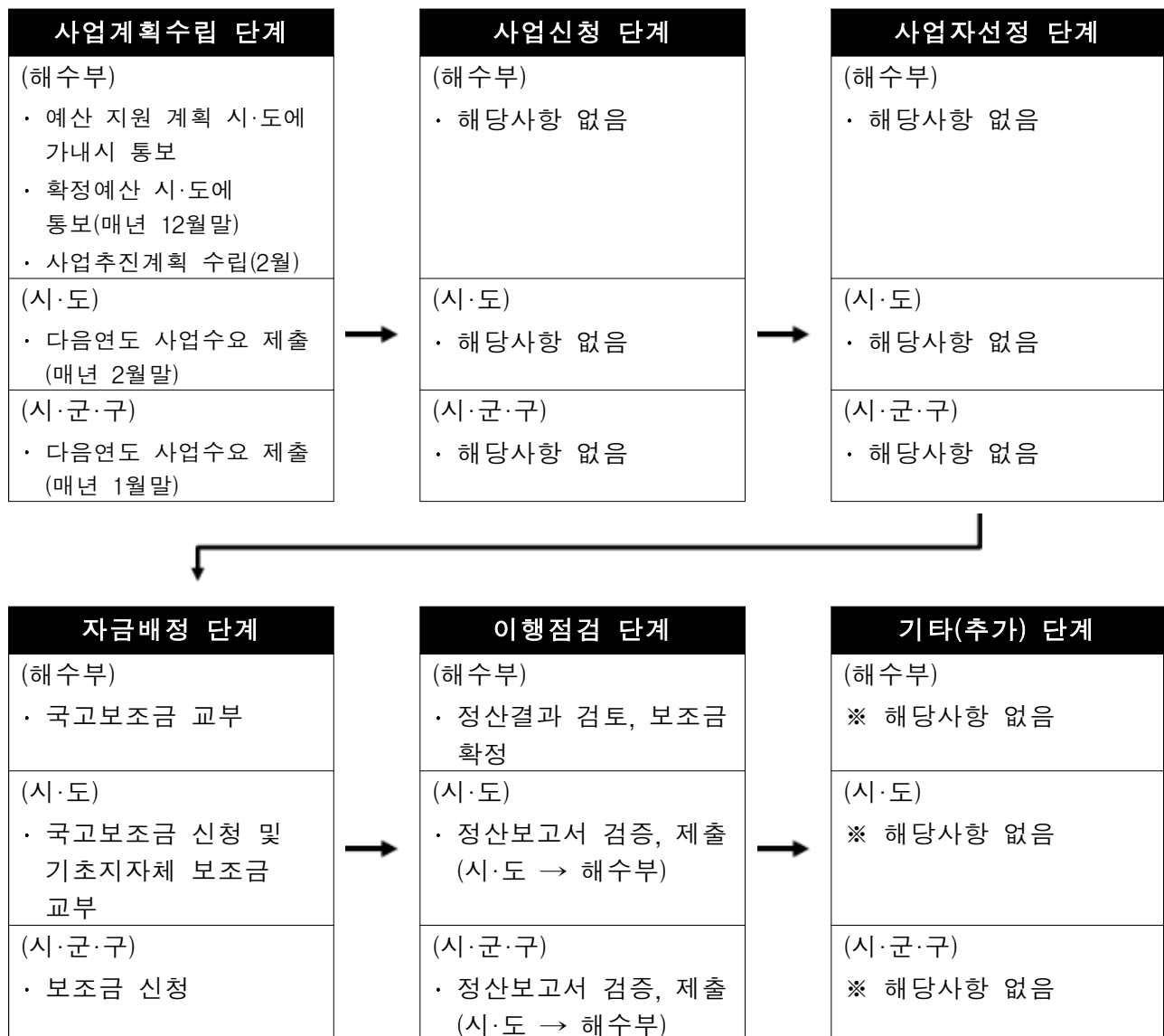
-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2월말)

지자체

- 다음연도 사업수요 제출(지자체 →해수부)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 시·도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시·군에 교부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심사, 보조금액 확정 통보 및 집행잔액 등 반납토록 조치

-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제재》

해양수산부

- 계획 대비 사업이행도 및 매칭비율 미준수 등 기준 미달 시 차년도 지원액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정산서등 제출 요청(1월)

지자체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도경식 서기관 김승룡	044-200-5730 044-200-5731

I. 사업개요

1. 목 적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연안여객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 좌석,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 지원

2. 근거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여객선 내 이용객 편의증진을 (단위 : %)	70	-	-	16.6	44.7	매년 말	교통약자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여객선 중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00	-	-	-
- 국 비	500	-	-	-
- 자부담	180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연안여객선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연안여객선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지원대상)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연안여객선
- (지원자금 용도) 연안여객선에 교통 약자용 좌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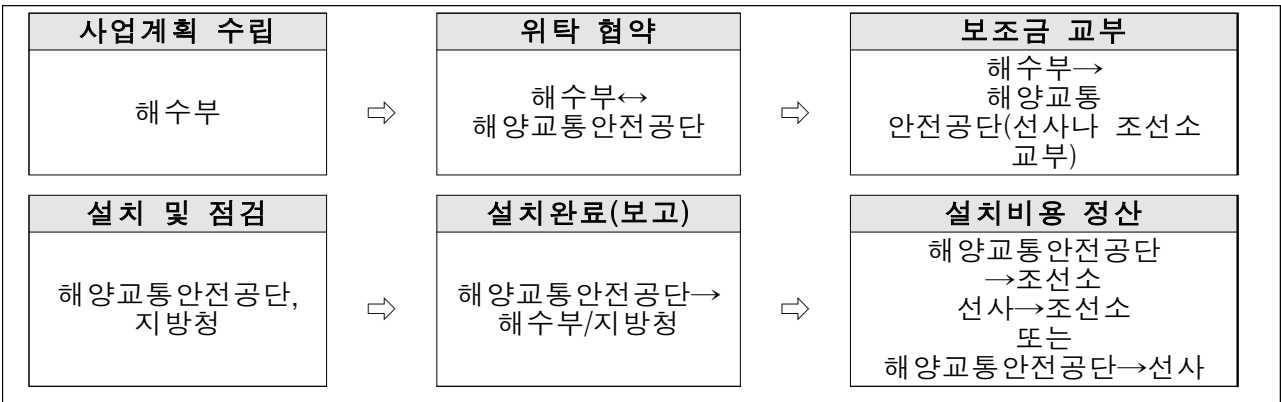
- (지원조건) 국비 70%
- 선박에 적용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5. 중요재산 관리(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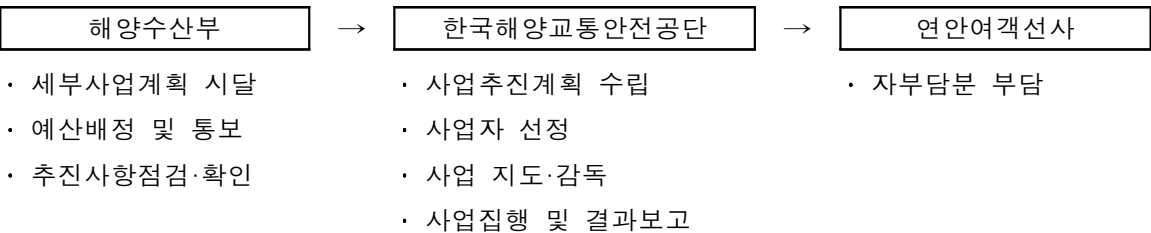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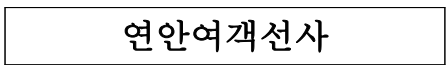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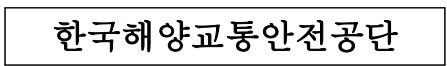
- '23년도 업무위탁 협약 체결(해양수산부—해양교통안전공단)
- '23년도 시설물 설치계획 사업계획서 제출(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수산부)



3. 사업신청단계



- 연안여객선사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시설 설치 신청



-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사조사 실시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선박 실사조사 등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시설물 결정

5.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각 여객선별 시설 설치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지도·점검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객선사 지도·감독

《제재》

- 보조금을 교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객선에서 제외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백정호	044-200-5730 044-200-5735

I.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조의2(사업의 범위)
 - 석유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2001.8.10 신설)
- ☐ 해운법 41조(재정지원)제2항
 -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4. 1. 1., 2017. 3. 21.>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수혜업체 만족도 (단위: 점)	80.3	86.2	79.0	81.1	집계 예정	매년 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받은 화물선사 대상 개별조사 실시
유류비 지원업체 수 (단위 : 개)	267	292	244	250	집계 예정	매년 말	유류비 지원실적 현황자료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1,099	31,099	31,099	31,099
- 국 비	31,099	31,099	31,099	31,099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해운법」 제 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연료유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액의 차액 보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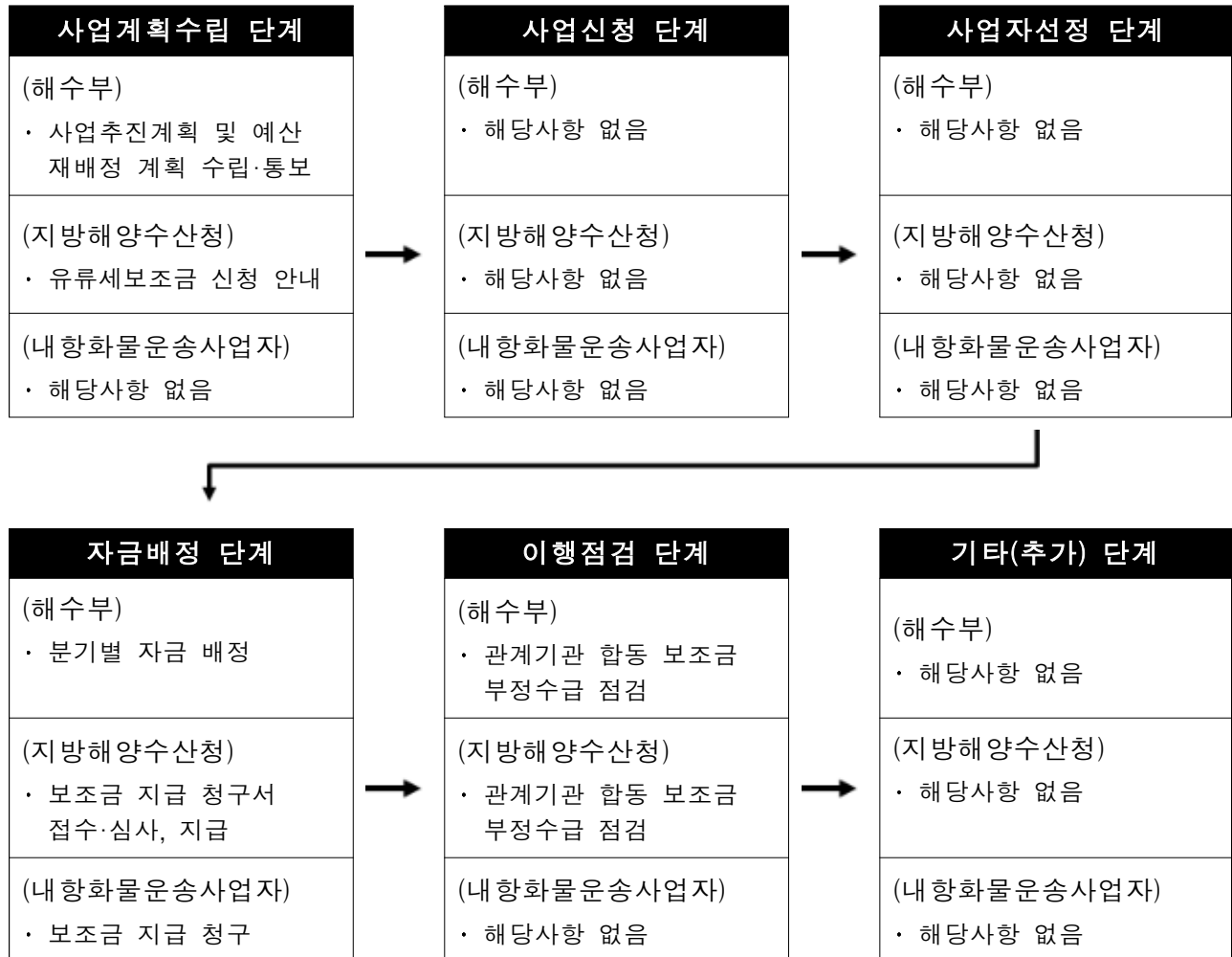
- 지원기준
 - 유류세보조금 지급 단가는 현재 경유유류세(원/L)와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L)의 차액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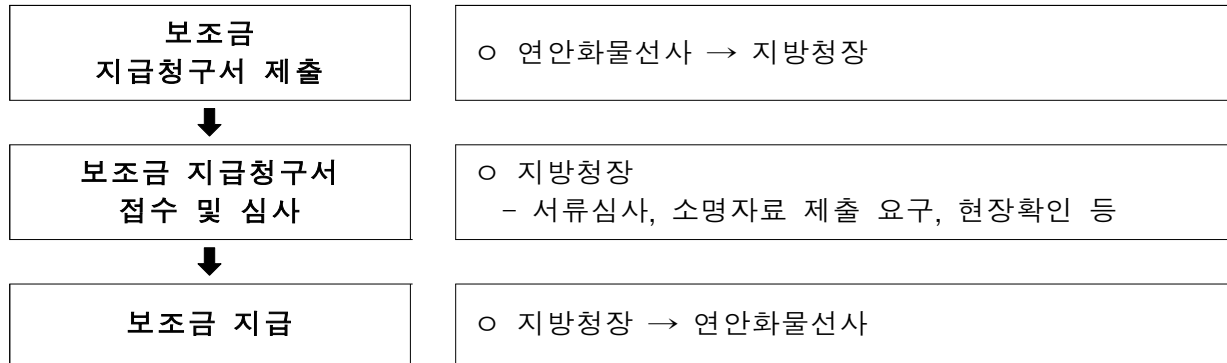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재·배정계획 통보(매년 12월)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매년 1~2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분기별 자금 배정

지방해양수산청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별지1, 별지2) 접수(매년 3월, 6월, 9월, 12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보조금 지급 청구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와 지급대상인 아닌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개정('19.10.10.)에 따라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중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
 - 실제 선박운항 없이 보조금만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을 통해 선박의 운항사실 및 이동거리 확인을 통해 보조금 신청내역과 운항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주유량, 운항사실 등을 확인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지방청 및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하여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일건서류를 생산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이상 보존하게 함

- 지방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PART

해운·해사·항만 분야

5. 해사안전국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한승현	044-200-5810 044-200-5811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해양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근거법령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제1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제6항
 -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선박검사 실적(척)	20,044	23,495	26,452	23,897	20,233	익년1월	해당연도 검사 실적
여객선 법정안전 점검실적(%)	100	98.1	95.8	100	100	익년1월	해당 안전점검(월례,특별,노 후선) 이행 연안여객선 척수 / 연안여객선 척수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2,318	62,318	62,318	62,318
- 국 비	40,160	40,160	40,160	40,160
- 지방비	-	-	-	-
- 자부담	22,158	22,158	22,158	22,158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설립목적), 제9조(사업), 제10조(자금의 조달)에 따른 자격 충족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사업주체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하며, 사업 수혜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및 연안여객선 직접이용 국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인건비·경상비)에 우선충당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재원): 국고보조금(수지차보전)
- 사업의무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44,318백만원

7. 중요재산 관리: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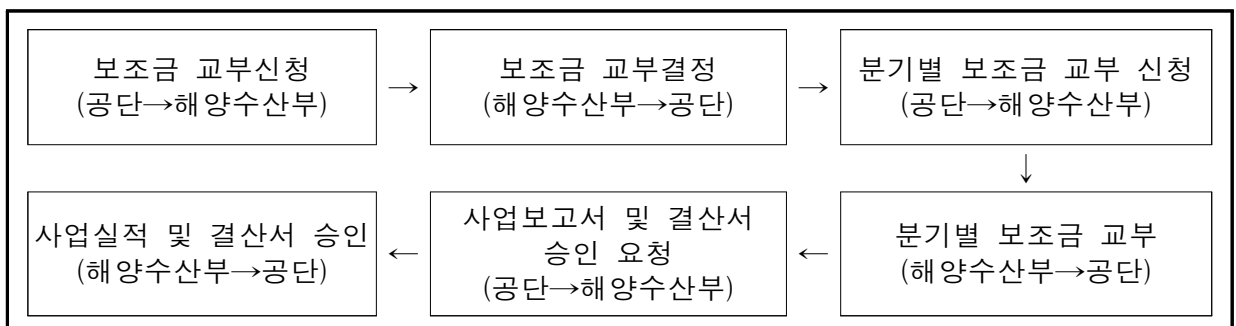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사업관리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신청절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 선정: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사업계획수립 단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공단과 차년도 사업 추진계획 및 규모 협의(매년 4~8월)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공단)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공단) · 차년도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규모 등 협의	(공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공단→해수부)	(공단) · 보조사업 추진	(공단) · 정산보고서 제출 (공단→해수부)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3. 사업신청단계

- 신청절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 확인
-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확인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민간보조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이윤희	044-200-5810 044-200-5829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안전 문화 정착, 기술 및 장비 전문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2.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관람객 수(명)	15,667	15,113	-	-	-	매년12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및 행사장 현장등록 관람객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60	360	360	360
- 국 비	180	180	180	180
- 지방비	180	180	180	18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부산광역시('15년부터 사업추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해사안전법」 제4조에서 정한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민간단체 또는 지자체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 해양안전 산업 전시회
 - 해양안전 유관기관 및 업·단체에서 해양안전 기자재, 항해·통신장비, 해양 수색·구조장비, 개인안전장비, 선상작업·산업안전용품 등 전시
- 해양안전 예방 홍보전
 - 각종 해양사고 및 재난발생 사례 전시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전시 홍보
 - 해양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정책과 홍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관 구성
 - 해양안전의 핵심인 조선, 해운계 최신 해양안전 기술 홍보관 전시 구성
- 해양안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최신 해양안전 기술 공유를 통해 미래지향적 해양안전기술 확보

-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해양재난 및 사고 예방기술 소개
- 해양사고 주요요소인 “인적요소” 강화 세션을 통한 사고예방 및 대처법 교육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시장 임대, 전시장 주요 설치 및 운영비·홍보비·해외바이어 유치비,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및 기타 부대행사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정액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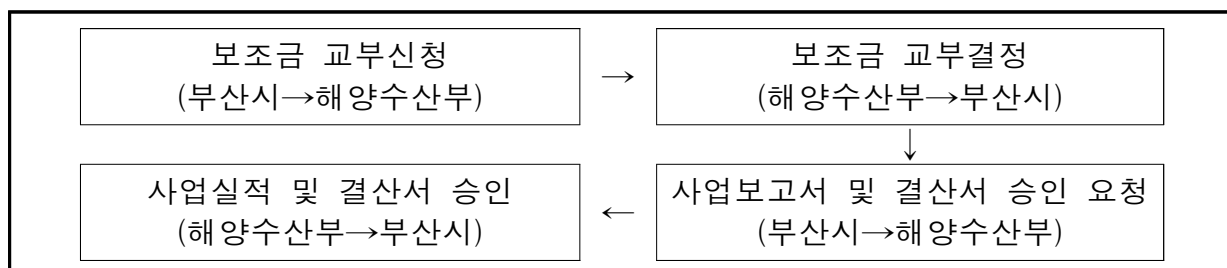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180백만원
 - * 지방비 1.8억원, 민간투자액 추가 확보 필요
- 기준 및 범위: 전시장 임대, 전시장 주요 설치 및 운영비·홍보비·해외바이어 유치비,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및 기타 부대행사 비용

7. 중요재산 관리: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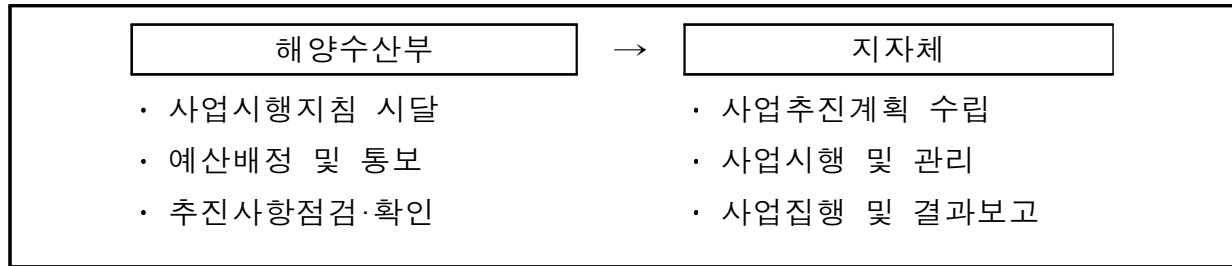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사업계획 접수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지도·감독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자 선정단계: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최소 2차례에 나누어 송금)

지자체

-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안전 문화 정착, 기술 및 장비 전문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자

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민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보조금 신청

-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지도 감독: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자체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또한, 보조금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 방법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기타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삭감비율 : 1회 20%이내, 2회 30%이내, 3회 50%이내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분을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민간보조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0.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가. 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이윤희	044-200-5810 044-200-5829

I. 사업개요

1. 목 적

-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및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체험관 운영 지원

2.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4호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 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	-	100	100	매년12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율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325	3,325	3,325	3,325
- 국 비	1,995	1,995	1,995	1,995
- 지방비	1,330	1,330	1,330	1,33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기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단체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관리
 - 체험관 운영·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등
 - * 시설안전(건축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재난 등), 안전관리(안전수칙, 인명사고 대처, 비상연락·협력체계(MoU등) 구축(인근 병원·소방서 등), 안전보험의무 가입), 수질관리(수영장 수질관리, 물 교체주기 등), 위생·감염병관리(위생안전관리, 감염병 안전수칙 등)
 - ※ 매뉴얼 등 작성시 관련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유사시설에 대한 법령 준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관리 비용 지원
 - 관리팀(행정, 대외협력, 시설관리, 서무, 예약, 건축·기계·전기·방재, 경비·미화 등), 교

육팀(교육기획, 안내·접수, 교관(일반·수조)*, 간호직, 수상안전요원** 등) 등 인건비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신청매뉴얼」 준용

**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준용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 구조사 1명 및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 수도·전기·가스, 관리비(보험가입 포함) 등 공과금·관리비

- 사무기기, 안전용품(구명조끼·소화기 등), 의약품, 피복비 등 자산취득

- 안전체험 표준교안, 홍보물품 제작·배부 등

- 입장료*·임차료(식당, 카페테리아 등)** 등 수입은 전체 운영비용에서 제외

*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등 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지자체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정률 60%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1,995백만원
- 기준 및 범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관리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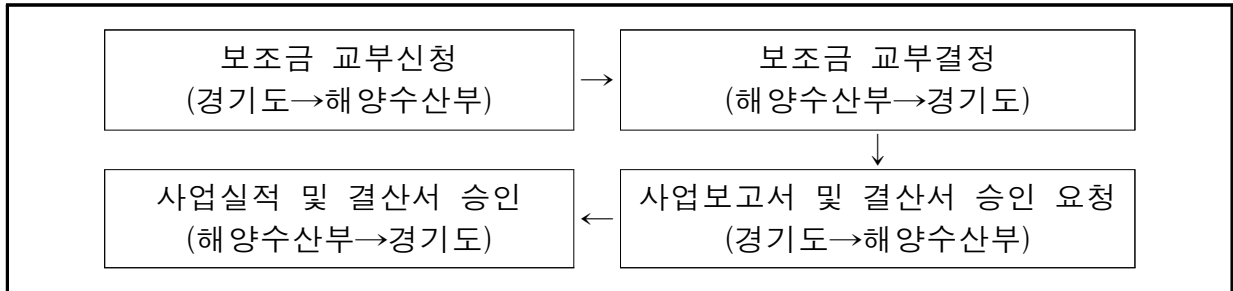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해양안전체험관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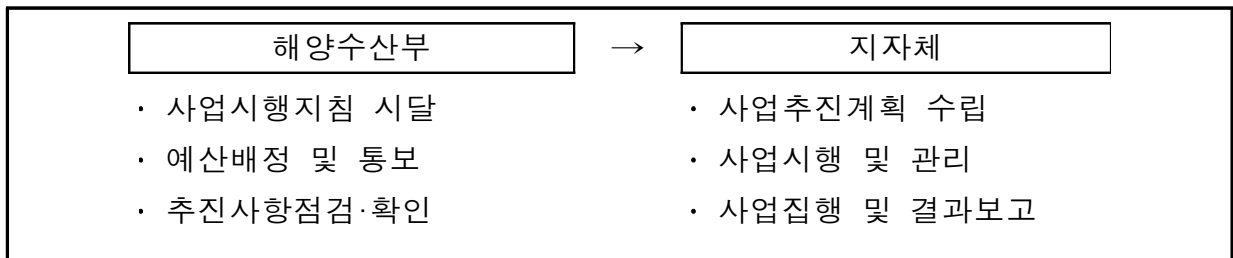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사업계획 접수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지도·감독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자 선정단계: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최소 2차례에 나누어 송금)

지자체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실적 점검: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매분기 1회 이상(4월10일, 7월10일, 10월10일, 4분기는 사업비 정산으로 같음)
 - *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업추진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지도 감독: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 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지자체

- 사업실적 보고: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제출
-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실적을 분기별 보고에 포함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또한, 보조금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는 중요재산의 별지 제12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 방법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기타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삭감비율 : 1회 20%이내, 2회 30%이내, 3회 50%이내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분을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민간보조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0.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가. 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이윤희	044-200-5810 044-200-5829

I. 사업개요

1. 목 적

-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및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지원

2.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4호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 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100	-	-	-	-	매년12월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율 (실집행액/보조금 교부금액)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38	2,538	2,538	2,538
- 국 비	1,523	1,523	1,523	1,523
- 지방비	1,015	1,015	1,015	1,015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진도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전라남도(진도군) 또는 전라남도(진도군)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관·단체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 국민해양안전관 운영·관리
 - 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추모공원 포함) 운영·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등
 - * 시설안전(건축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재난 등), 안전관리(안전수칙, 인명사고 대처, 비상연락·협력체계(MoU 등) 구축(인근 병원·소방서 등), 안전보험의무 가입), 수질관리(수영장 수질관리, 물 교체주기 등), 위생·감염병관리(위생안전관리, 감염병 안전수칙 등)
 - ※ 매뉴얼 등 작성시 관련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유사시설에 대한 법령 준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해양안전관 운영·관리 비용 지원
 - 관리팀(행정, 대외협력, 시설관리, 서무, 예약, 건축·기계·전기·방재, 경비·미화 등), 교육팀(교육기획, 안내·접수, 교관(일반·수조)*, 간호직, 수상안전요원** 등) 등 인건비
 -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신청매뉴얼」 준용
 - **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준용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 구조사 1명 및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 수도·전기·가스, 관리비(보험가입 포함) 등 공과금·관리비
 - 사무기기, 안전용품(구명조끼·소화기 등), 의약품, 피복비 등 자산취득
 - 안전체험 표준교안, 홍보물품 제작·배부 등
 - 입장료*·임차료(식당, 카페테리아 등)** 등 수입은 전체 운영비용에서 제외
 - *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준용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지자체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 정률 60%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1,523백만원
- 기준 및 범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관리

7.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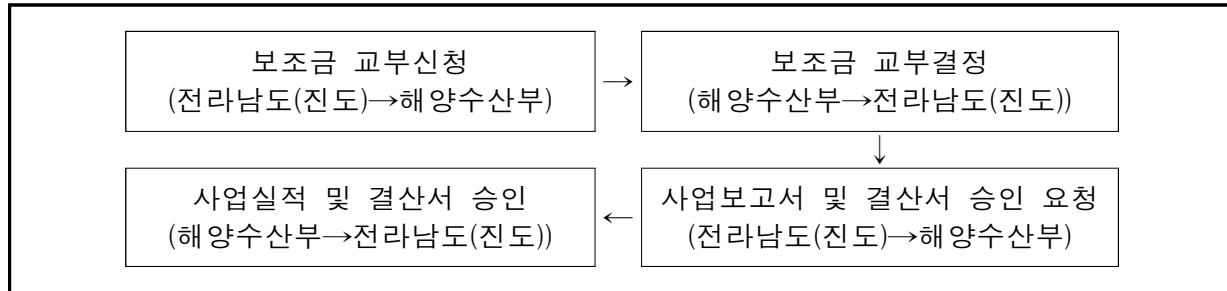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토지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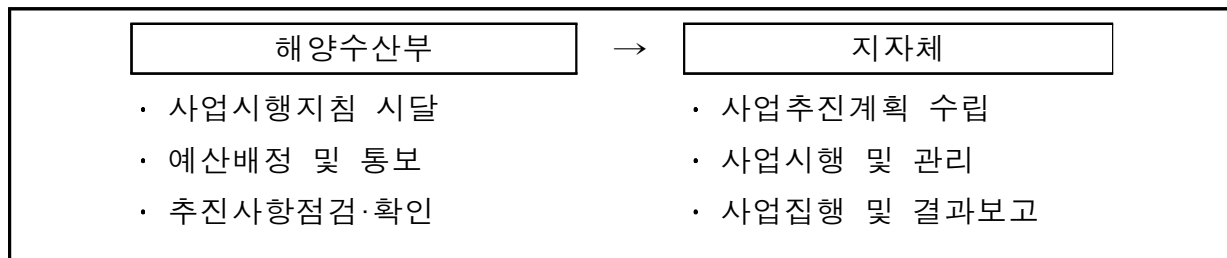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사업계획 접수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지도·감독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자 선정단계: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최소 2차례에 나누어 송금)

지자체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실적 점검: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매분기 1회 이상(4월10일, 7월10일, 10월10일, 4분기는 사업비 정산으로 같음)
 - *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업추진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지도 감독: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지자체

- 사업실적 보고: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제출
 -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실적을 분기별 보고에 포함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또한, 보조금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는 중요재산의 별지 제12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 방법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기타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삭감비율 : 1회 20%이내, 2회 30%이내, 3회 50%이내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분을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민간보조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0.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가. 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e-Nav 선박단말기 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팀 장 권순태 사무관 이삼준 주무관 유창균	044-200-6141 044-200-6030 044-200-6144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 구매 보조를 통해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2. 근거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실적행률(%)	80% 이상	99%	86%	추진중	추진중	사업 종료 후	(실집행액/ 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450	-	-	-
- 국 비	2,225	-	-	-
- 자부담	2,225	-	-	-

* 재정투입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가감 조정 예정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및 어선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e-Nav 선박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선박의 소유자
- 선정 제외대상
 - 2톤 미만, 원양·내수면·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 「선박법」, 「어선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선박(어선)검사증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
 - 일반사항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로 함
 - ① 신청일자가 빠른 순
 - ② 신청일자가 같을 때에는 톤수가 적은 어선

3. 지원대상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 희망 하는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 구매 비용 보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민간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일부 국고
- 지원조건(재원) : 정률보조(국고보조 50%)
-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말기 실구매가액(설치 부대비용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범위 내 정률 지원 (단, 최대보조금은 15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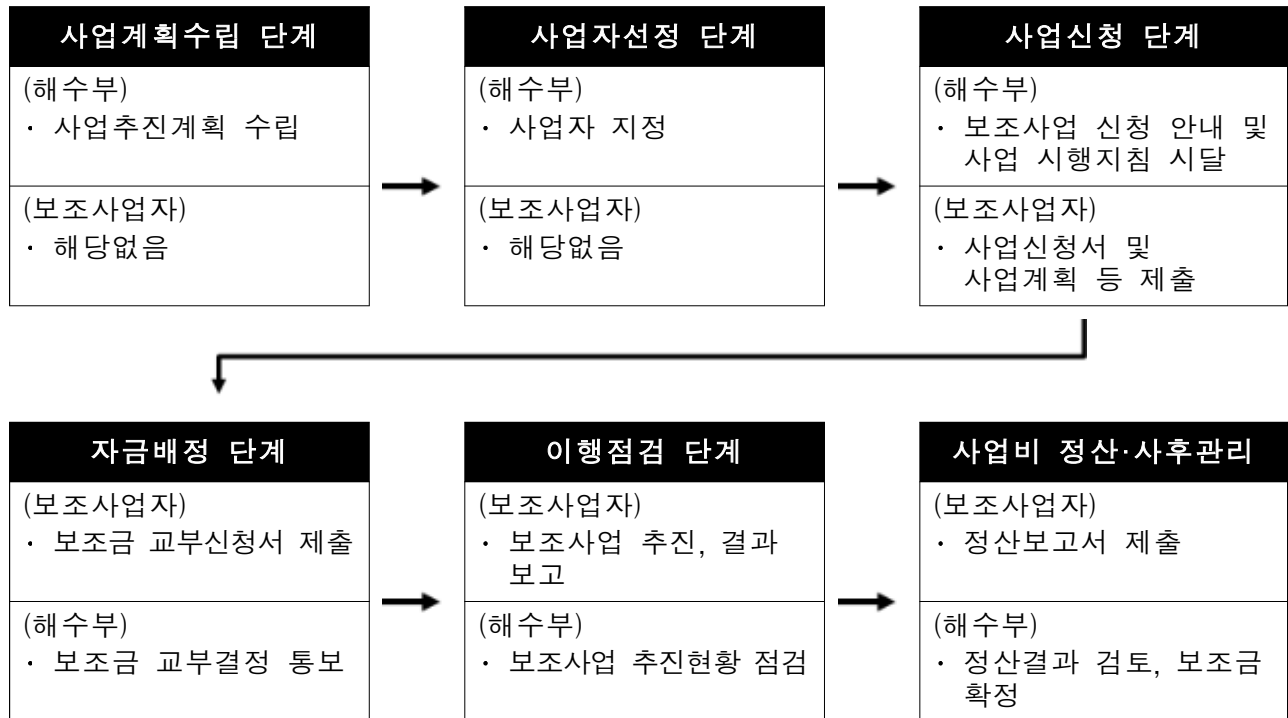
* 설치 시 부대비용 : 설치비, 무선국 검사수수료, 계통 구매 수수료 등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지정 및 신청 안내
-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
-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 검토 후 사업계획 미반영 사항 등 수정 요구(필요 시)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수립·제출
 - 해양수산부의 수정 요청 반영(필요 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검토·지정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국고 보조금은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최종정산보고서 접수·확정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 및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해양수산부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 보조금을 지급받아 e-Nav 선박단말기를 구매한 자는 5년간 의무사용기간 준수
 - 의무사용기간 내 e-Nav 선박단말기의 매각,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이 제한되며, 처분이 필요한 자는 중앙관서장(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 필요
 -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단말기를 처분한 자는 보조금 환수 가능
 - 소유권 변동 시 의무사용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보조사업자는 보급사업 신청자에게 의무사용기간 및 처분제한 등 단말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말기 구매자에게 사전 안내
 - e-Nav 선박단말기 구매자는 소유자, 선박정보 등 변경으로 “지능형 해상 교통정보서비스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 후 변경등록 신청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e-Nav 선박단말기 보급·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팀 장 권순태 사무관 이삼준 주무관 유창균	044-200-6141 044-200-6030 044-200-6144

I. 사업개요

1. 목 적

-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단말기 보급·관리체계 운영 등 보급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실행률(%)	80% 이상	99%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사업 종료 후	(실집행액/ 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00	-	-	-
- 국 비	200	-	-	-
- 자부담	-	-	-	-

* 재정투입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가감 조정 예정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 선정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3. 지원대상

-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 홍보·신청접수 및 단말기 설치·보급 관리 등 보조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자금의 재원 : 전액국고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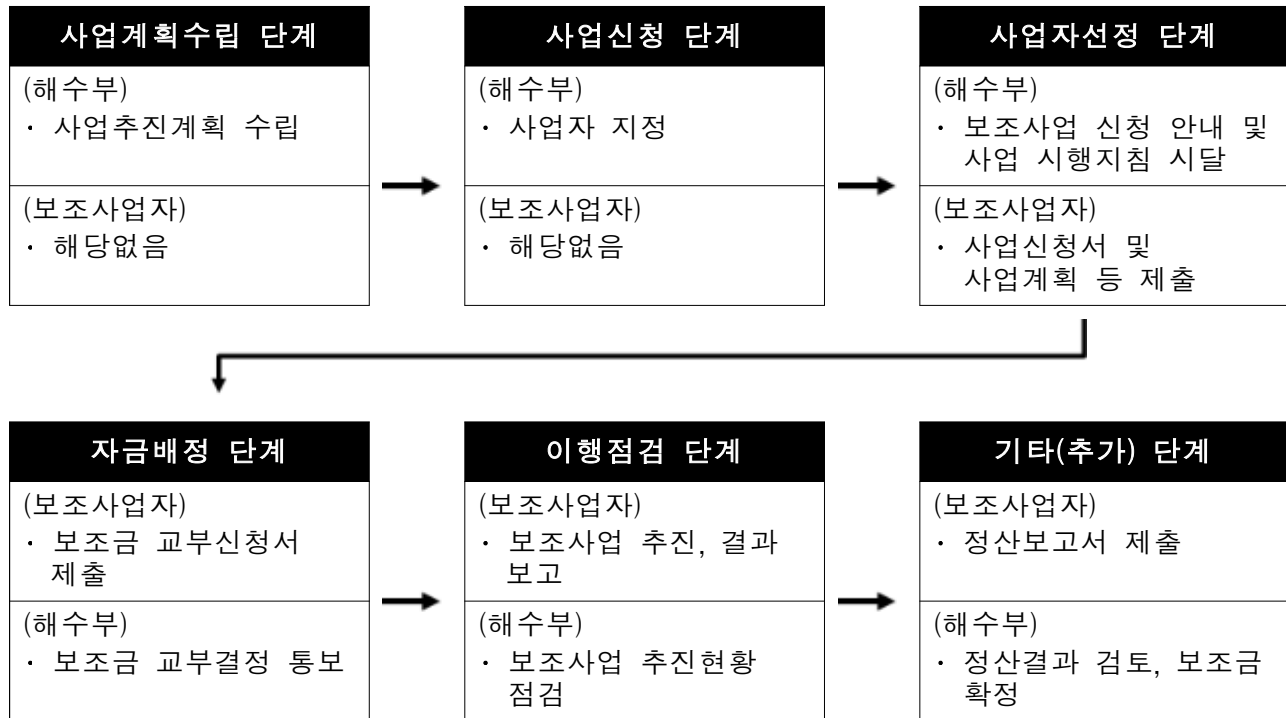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
 - 사업 추진현황에 따른 사업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사용 계획 수립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지정 및 신청 안내
-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
-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 검토 후 사업계획 미반영 사항 등 수정 요구(필요시)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수립·제출
 - 해양수산부의 수정 요청 반영(필요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검토·지정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국고 보조금은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최종정산보고서 접수·확정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 및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해양수산부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따른 정보공시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③ LTE-M 활용 내항선 응급조치지원 시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팀 장 권순태 서기관 김성재	044-200-6141 044-200-6142

I. 사업개요

1. 목 적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내항선 원격 의료서비스 지원

2. 근거법령

- 「선원법」 제88조(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60	-	-	-	-	매년 말	서비스 수혜자의 5%를 무작위로 추출 선정하여 면담 또는 전화 방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484	600	650	700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승선 중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제공범위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 종사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내항선 선원 해상 원격 의료서비스 지원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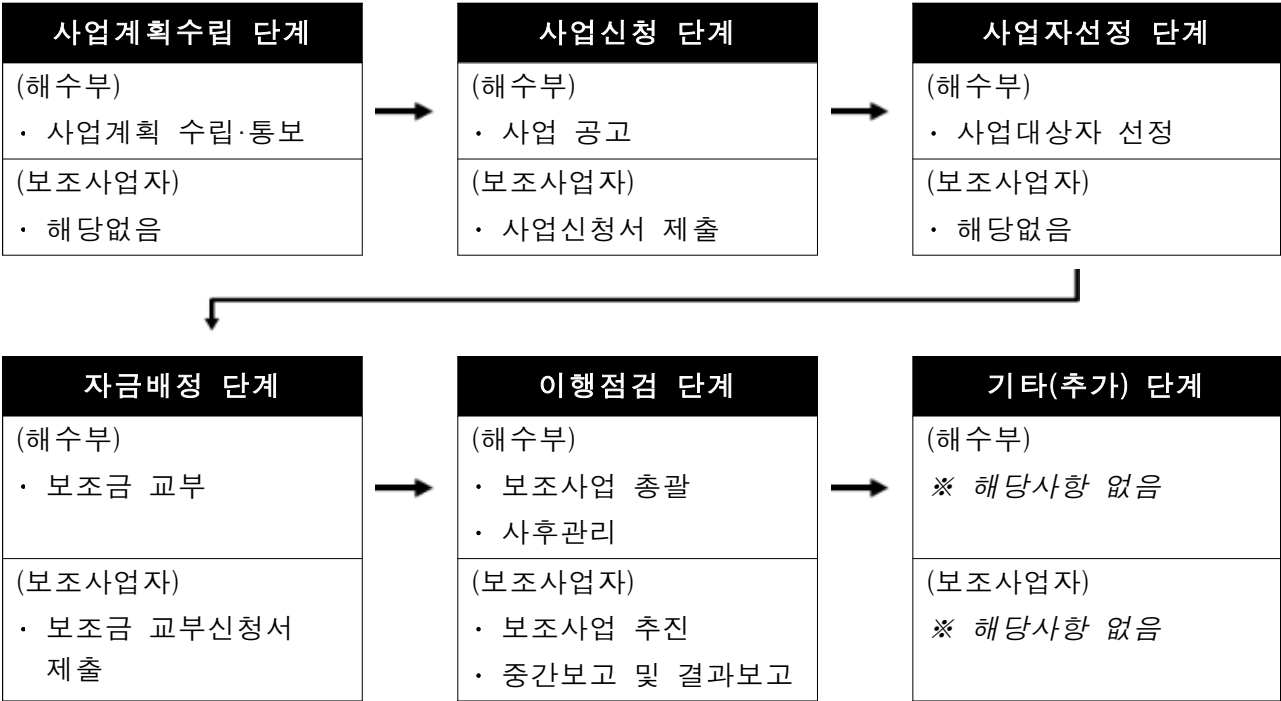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사업예산범위 내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세부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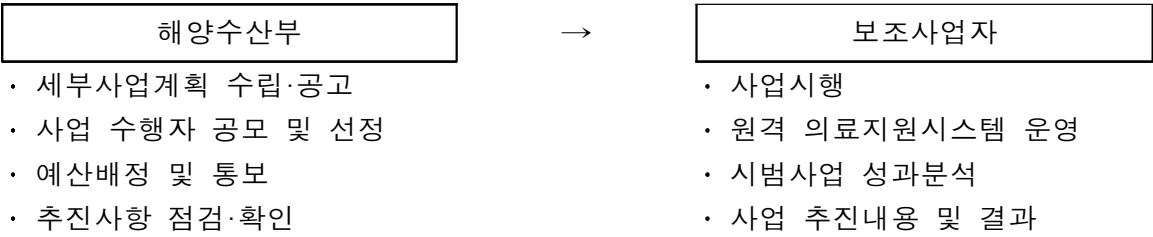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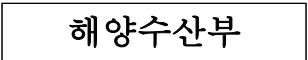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첨단해양교통관리팀)
-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보조사업자

- 신청절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보조사업이력서(별지 제3호서식)와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사업 관리주체에 제출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첨단해양교통관리팀)
- 관련기관·단체 직원 및 예산·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5.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관리주체가 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숙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함께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가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연 2회)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보조사업자에게 수령하도록 함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정산보고서를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관리주체에게 사업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고 사업 완료 시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는 예산집행 현황,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보조금법」 및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본 세부사업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내용에 따름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과 장 이창용 사무관 김세준	044-200-5830 044-200-5838

I. 사업개요

1. 목 적

-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국내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 및 해운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

2.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친환경인증선박 건조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율 (단위:%)	100	-	-	100	100	매년말	(교부금액/보조금예산)×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7,500	55,000	60,000	65,000
- 국 비	14,250	16,500	18,000	19,500
- 자부담	33,250	38,500	42,000	45,5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자격 충족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3. 지원대상

- 사업 수혜자는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선박(LNG, 전기추진 등)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

※ 사업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 ①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②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③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 ⑤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⑥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⑦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⑧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선박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기 위한 건조비용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최대 30%, 자부담 최소 70%
- 사업의무량 : 예산범위 내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친환경선박 1척당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선가에 따라 차등 지원

선가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지원비율 (최대)	30%	20%	10%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중요재산명	중요재산 구분	처분제한기간
친환경인증선박	선박	준공일로부터 7년

- 중요재산 관리대장

재산명	재산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취득가액 (백만원)	현재가액 (백만원)	담보설정	
						여부	설정금액 (백만원)
탄금호 일렉트릭	선박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2길 41	2020.04.06.	1,500	1,500	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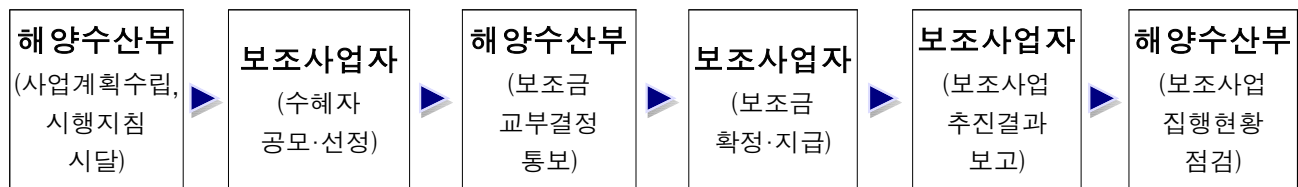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사업관리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신청절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 선정: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사업계획수립 단계	수혜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 수혜자 선정 공고 · 후보자 중 최종 지원대상 (수혜자) 선정	(해수부) ·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사업 집행 점검 및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 신청서 접수 · 신청자 심사 및 후보자 선정 · 최종 지원대상 통보	(보조사업자) · 최종 지원대상에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실적, 정산 등 결과 보고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2022.12월
- 사업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신청절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 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

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민간보조사업자에 한하여 적용),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연구개발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과 장 정준호 사무관 김영진	044-200-5870 044-200-5877

I. 사업개요

1. 목 적

-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항로표지의 기능향상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

2.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항부터 제6항,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관 제4조(사업)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1) 기술 특허 출원(건)	4	4	4	4	2	차년도 2월	항로표지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도출되는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2) 연구 논문 게재발표(건)	5	4	5	6	4		항로표지 연구개발사업 관 련 논문 게재발표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450	450	450	4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 사업운영
 - 항로표지 설치 및 기능 조사·연구·기술자문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
 - 항로표지의 안전조사, 기능향상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 국제항로표지협회의 최신 기술 및 정보를 항로표지관련 업·단체에 제공 및 지도
 - 항로표지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항로표지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3.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술연구소
 -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항로표지의 기능향상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항로표지 연구개발 소요예산
 -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항로표지의 기능향상 및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45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항 및 제5항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3.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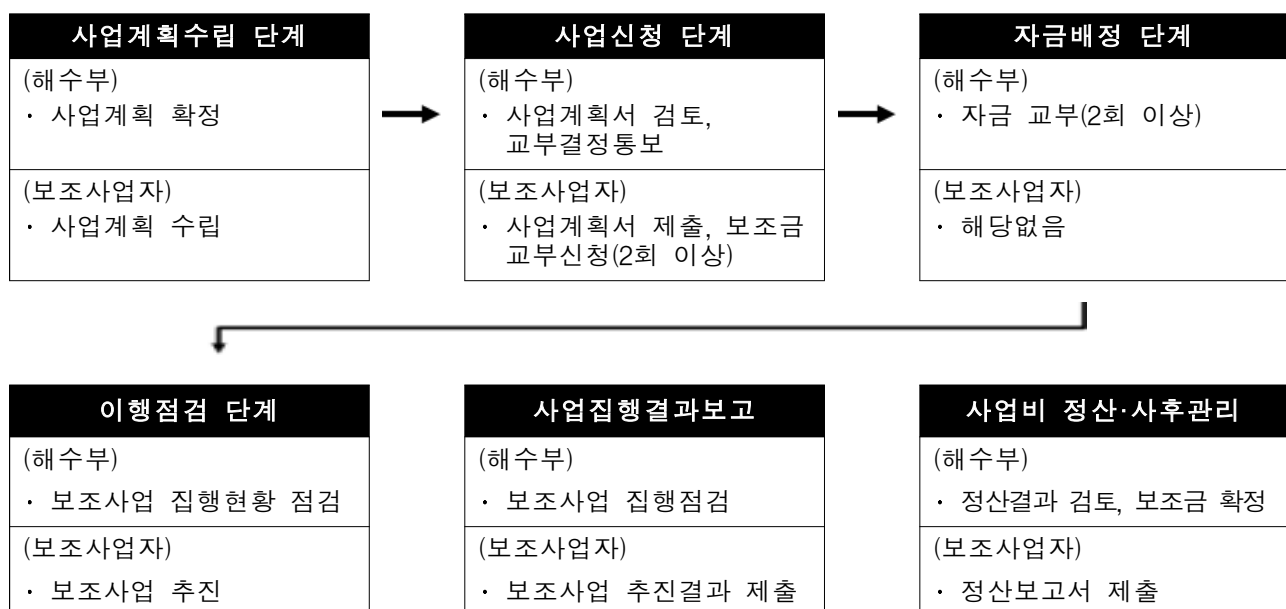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중요재산 관리: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민간보조(비공모사업)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계획 통보(해양수산부)
- 2023년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보조사업자) 및 제출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 신청절차: 사업 수행기관 지정(비공모사업)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검토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자체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사후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② 항로표지 전문교육센터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과 장 정준호 사무관 김영진	044-200-5870 044-200-5877

I. 사업개요

1. 목 적

-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2.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교육과정 수료자(명)	374	306	117	310	593	차년도 2월	교육과정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 수 - 직전 3개년 평균 인원 (기준치) × 11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209	209	209	209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임
- 사업운영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함
- 항로표지법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제3항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강사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교육자료의 수집·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항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항로표지 관련 교육자료의 수집·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고보조 100%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면적[내벽(内壁) 간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교육장비	1)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용품을 확보할 것 2) 교육생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장구를 확보할 것
2. 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항로표지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3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구분		지정기준
3. 교육과정	가. 교육 과정의 구성 및 운영	다음의 사항을 따를 것 1) 교육과정명, 교육목표, 교육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것 2)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강사구성, 교육장소 및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3)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분석 등을 실시할 것
	나. 안전관리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경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209백만원
- 지원기준 및 범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법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중요재산 관리: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2023년도 사업시행계획 통보(해양수산부)
- 2023년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보조사업자) 및 제출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계획 통보(해양수산부)
- 2023년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보조사업자) 및 제출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신청절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사업계획 검토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자체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집행점검
 - 점검항목: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집행점검
 - 점검항목: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없음

PART

해운·해사·항만 분야

6. 항만국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연안정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과 장 황상호 사무관 강지호	044-200-5980 044-200-5985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연안관리법」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18	47	5.2	9.1	14	'22.12	(연안정비사업집행누계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9,250	-	-	-
- 국 비	38,351	-	-	-
- 지방비	20,899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
- 다만,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 시행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연안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제2,3항에 따라 동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사용 가능(이 경우 우리 부에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 제출 필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친수연안사업 : 국비 50%(지방비 50%)
 - 연안보전사업 : 국비 70%(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비 최대 7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최대 70% 지원
- 기준 및 범위
 -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범위 : 총사업비에 국비 최대 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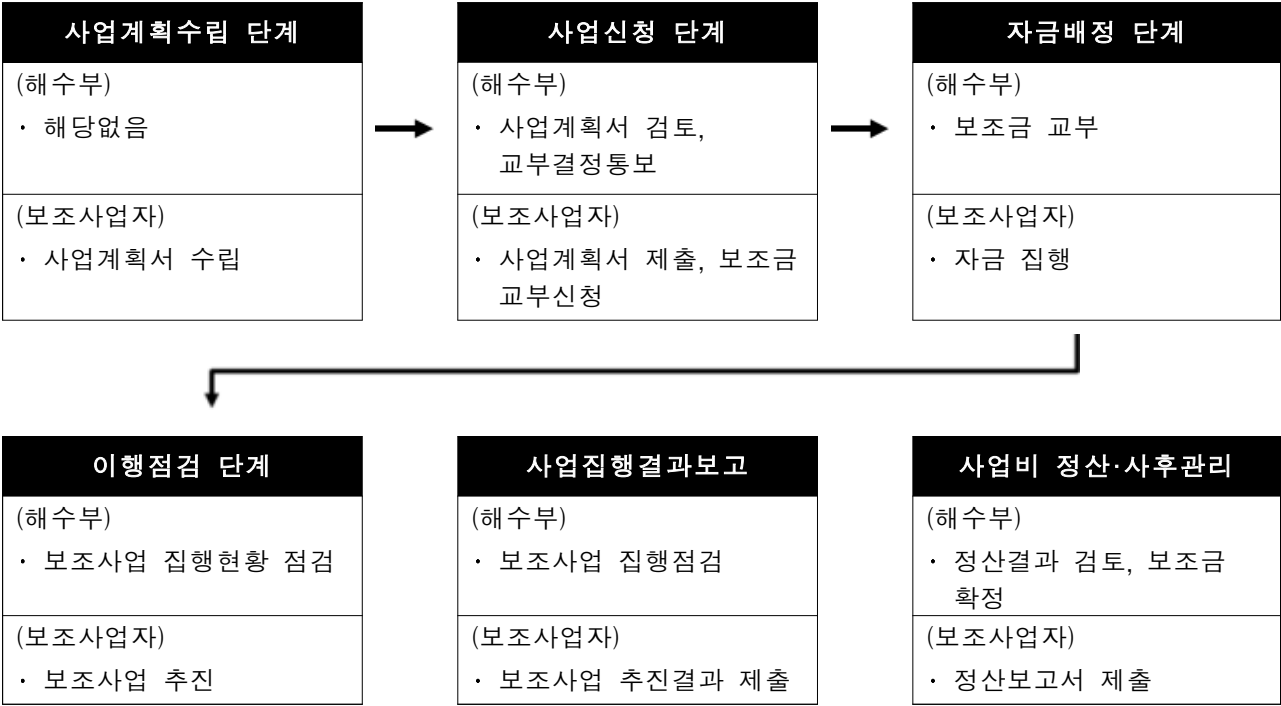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추후 결정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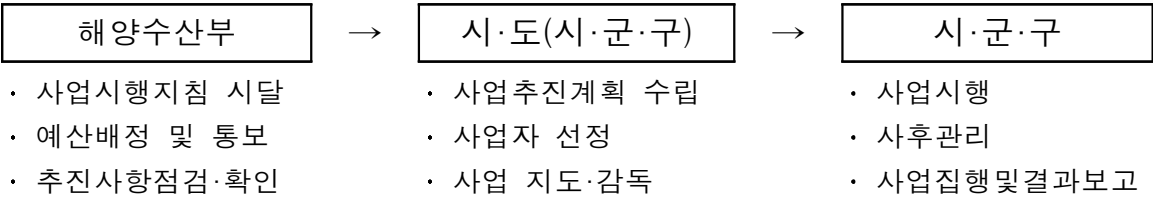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지자체 보조(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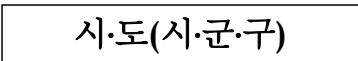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각 시·도(시·군·구) 보조(비공모)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 공고시기 : 사업 시행 전
- 신청절차
 -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기본 계획에 포함된 시급한 사업구역에 대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 구비서류 : 예산요구서
- 신청서 접수 : 해수부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관할 지자체에서 조달청 또는 자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시공할 시공사 선정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해수부 및 관할 지자체
- 사업자 변경 : 지자체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관할 지자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에 예산 사전통지(전년 9월)
-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4호서식)와 사업 계획서(공통 제5호서식)와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안정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과 장 황상호 사무관 강지호	044-200-5980 044-200-5985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연안관리법」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18	47	5.2	9.1	14	'22.12	(연안정비사업집행누계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109	-	-	-
- 국 비	778	-	-	-
- 지방비	331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
- 다만,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 시행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연안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제2,3항에 따라 동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사용 가능(이 경우 우리 부에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 제출 필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친수연안사업 : 국비 50%(지방비 50%)
 - 연안보전사업 : 국비 70%(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비 최대 7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최대 70% 지원
- 기준 및 범위
 -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범위 : 총사업비에 국비 최대 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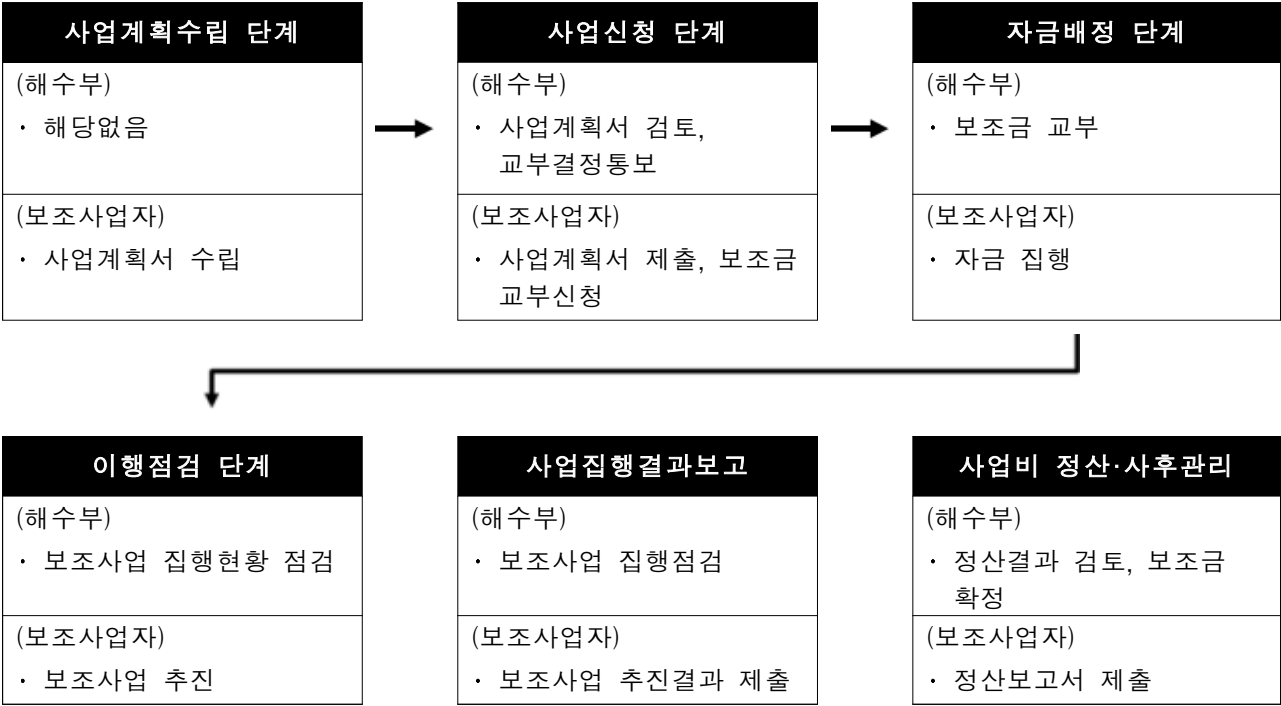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추후 결정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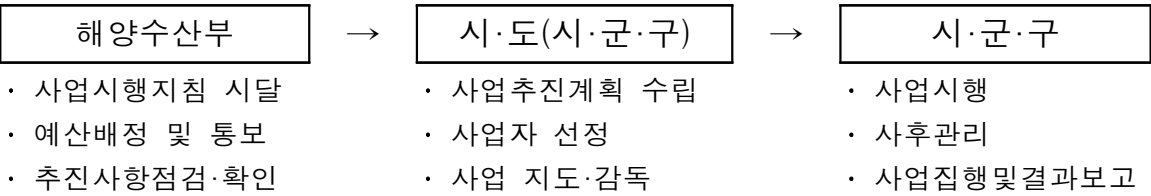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지자체 보조(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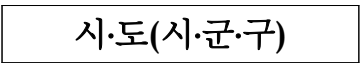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각 시·도(시·군·구) 보조(비공모)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 공고시기 : 사업 시행 전
- 신청절차
 -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기본 계획에 포함된 시급한 사업구역에 대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 구비서류 : 예산요구서
- 신청서 접수 : 해수부

4.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관할 지자체에서 조달청 또는 자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시공할 시공사 선정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해수부 및 관할 지자체
- 사업자 변경 : 지자체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관할 지자체
- 사업자의 자격 박탈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에 예산 사전통지(전년 9월)
-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4호서식)와 사업 계획서(공통 제5호서식)와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강릉 순긋 ~ 사근진 지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과 장 황상호 사무관 강지호	044-200-5980 044-200-5985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완충구역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연안관리법」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18	47	5.2	9.1	14	'22.12	(연안정비사업집행누계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70	11,000	10,430	-
- 국 비	400	7,700	7,300	-
- 지방비	170	3,300	3,130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자체(강원도, 강릉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연안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비 70%(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비 최대 7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최대 70% 지원
- 기준 및 범위
 -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범위 : 총사업비에 국비 최대 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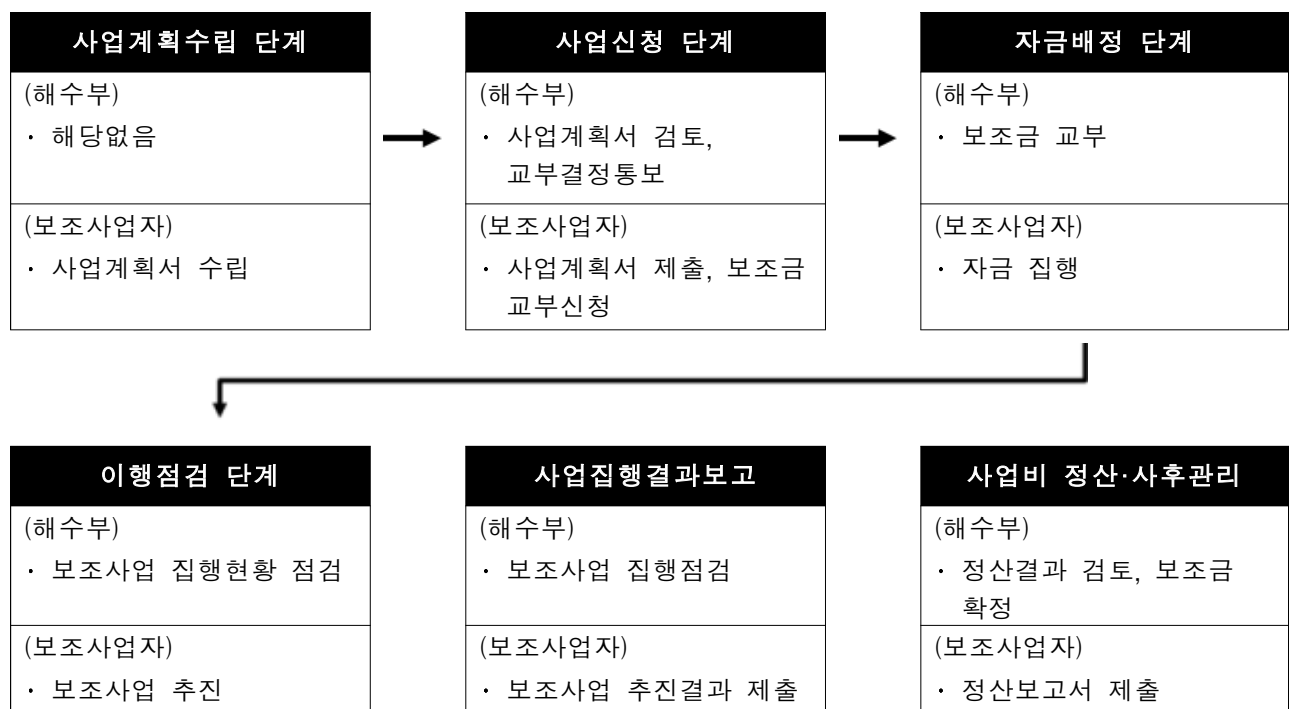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추후 결정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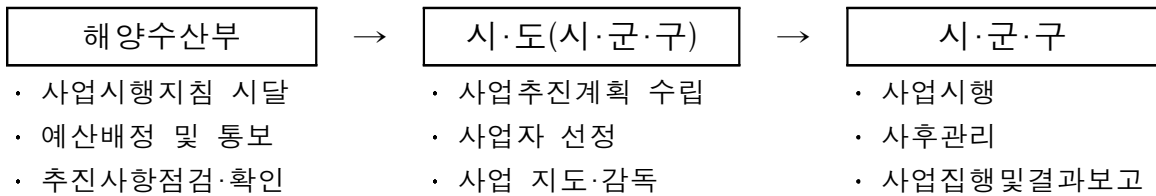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지자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시·도(시·군·구) 보조(비공모)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에 예산 사전통지(전년 9월)
-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4호서식)와 사업 계획서(공통 제5호서식)와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고창 명사십리 지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과 장 황상호 사무관 강지호	044-200-5980 044-200-5985

I.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완충구역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연안관리법」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18	47	5.2	9.1	14	'22.12	(연안정비사업집행누계금액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570	15,000	14,430	-
- 국 비	400	10,500	10,100	-
- 지방비	170	4,500	4,330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자체(전라북도, 고창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연안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비 70%(지방비 30%)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비 최대 7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최대 70% 지원
- 기준 및 범위
 -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범위 : 총사업비에 국비 최대 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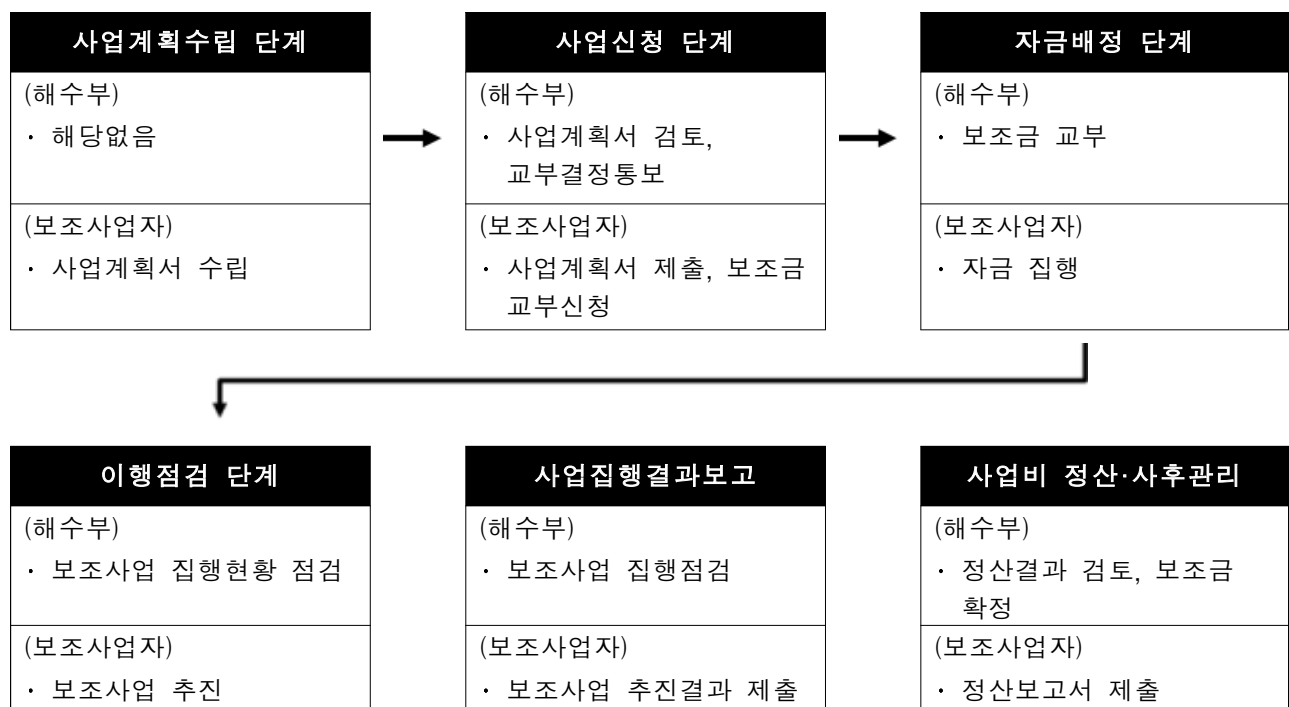
7. 중요재산 관리

- 추후 결정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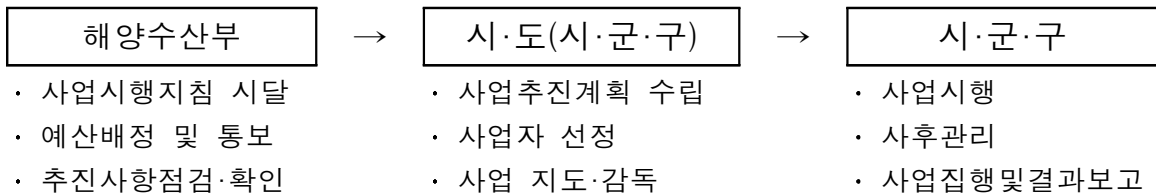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지자체 보조(비공모)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시·도(시·군·구) 보조(비공모)
- 사업 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시·도)에 예산 사전통지(전년 9월)
-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4호서식)와 사업 계획서(공통 제5호서식)와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① 배후도로 확포장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김기현	044-200-5930 044-200-5937

I. 사업개요

1. 목 적

-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광양항 수송망 확충을 위한 도로 확·포장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0조(국고 보조 등)
-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4조(비용부담의 원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고보조금 집행률(%)	100%	-	100%	100%	100%	연말	국고보조금 지급(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0,306	9,247	7,824	-
- 국 비	2,246	2,247	-	-
- 지방비	8,060	7,000	7,824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자체(광양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 「항만법」 제67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 확장하고자 하는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당없음

3. 지원대상

-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실시하는 도로 신설, 확장과 관련된 건설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항만도로 신설 및 확장과 관련한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 지원기준 및 한도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의 50% 이내
- 기준 및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시된 건설보조금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총 대상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해당없음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당없음

3.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광양시
- 공고시기 : 해당없음
- 신청절차 : 건설지원 신청서 제출(지자체) → 건설지원 신청서 검토(해양수산부)
- 구비서류 :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8조에 의거한 건설지원신청서
- 신청서 접수 : 건설지원 신청서 제출('18. 1. : 광양시 → 해양수산부)

4.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별표 1]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건설지원 신청서 검토용역 '19.1.~'19.4)

- 사업자 변경: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 교부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송금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교부금 집행실태 등 점검

사업시행자

- 보조금 사용집행 등의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제재》

- 점검결과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건설지원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건설보조금

원정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②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김기현	044-200-5930 044-200-5937

I. 사업개요

1. 목 적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가 '21년 전체 입주 완료 예정에 따라 부족한 용지공급을 위한 배후단지 조성사업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및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고보조금 집행률(%)	100%	-	-	-	100%	연말	국고보조금 지급(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6,673	6,626	6,926	10,199
- 국 비	1,063	1,277	1,702	1,277
- 지방비	-	-	-	-
- 자부담	5,610	5,349	5,224	8,922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당없음

3. 지원대상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 및 부대시설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조건(재원) : 국고 25%, 민자 75%(협약에 의한 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전체 사업비의 25%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의 25% 이내
- 기준 및 범위 : 협약에 의한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해당없음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당없음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에 따른 협약체결(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에 따른 협약체결(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 교부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송금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교부금 집행실태 등 점검

사업시행자

- 보조금 사용집행 등의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제재》

- 점검결과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③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김기현	044-200-5930 044-200-5937

I. 사업개요

1. 목 적

-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에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2.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20조(국고 보조 등)
-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고보조금 집행률(%)	100%	-	-	-	100%	연말	국고보조금 지급(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8,000	163,168	217,558	163,170
- 국 비	69,000	81,584	108,779	81,585
- 지방비	-	-	-	-
- 자부담	69,000	81,584	108,779	81,585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 : 해당없음

3. 지원대상

- 항만시설(기능시설*)의 건설사업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항만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사 및 부대시설비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민자 50%(협약에 의한 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전체 사업비의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의 50%
- 기준 및 범위 : 협약에 의한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해당없음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당없음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에 따른 협약체결(여수지방 해양수산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에 따른 협약체결(여수지방 해양수산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 교부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송금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교부금 집행실태 등 점검

사업시행자

- 보조금 사용집행 등의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제재》

- 점검결과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암물류2단지 접속 지하차도(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김기현	044-200-5930 044-200-5937

I. 사업개요

1. 목 적

-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와 주간선도로인 아암대로 간 접속부의 교통흐름 개선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19.4)」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고보조금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연말	국고보조금 지급(dBrain)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5,725	9,961	10,796	-
- 국 비	14,000	8,236	8,236	-
- 지방비	1,725	1,725	2,560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인천광역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19.4)」 제4조(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업시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19.4)」 제12조(협약의 해지)

3.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인천광역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하차도 460m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86.9%, 지방비 13.1%
- 사업의무량 : 아암지하차도 460m 건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19.4)」에 따라 총사업비 459억원 중 국고 86.9%(399억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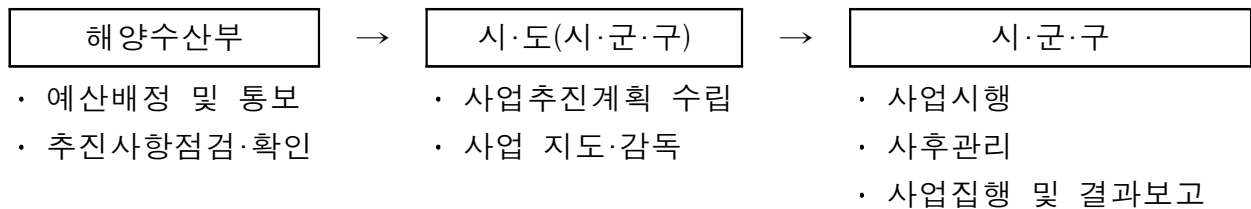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협약서에 따라 시행)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결정 : 2023.1.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해당사항 없음(협약서에 따라 시행)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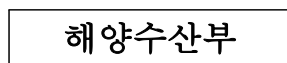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사항 없음(협약서에 따라 시행)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협약서에 따라 시행)

5. 자금배정단계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총사업비 중 분담율(국비 86.9%)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정산시점 : 건설사업 준공 공고 후 3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준공 공고 후 총사업비 확정 및 집행잔액 및 이자 정산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 및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에 의함

시·도(시·군·구)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1월까지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확보한 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 불가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가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한 경우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 제12조(협약의 해지)

《기타사항》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계산서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교 부 조 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 (‘19.4)」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 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 목적인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사업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보조사업비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6. 보조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1. 교부된 보조금의 이월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상기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19.4)」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과 장 황상호 사무관 김용수 주무관 김선년	044-200-5980 044-200-5981 044-200-5984

I. 사업개요

1. 목 적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지구의 원활한 오·폐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 근거법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부담)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 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국고보조금 집행률(%)	100%	-	-	-	100%	연말	집행시스템 (디브레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2,200	1,106	1,105	-
- 자부담	2,200	1,106	1,105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 운영 : 해당없음(기반시설 조성 공사)

3. 지원대상

- 항만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중 오·폐수처리시설 조성 비용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공사 및 부대시설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해당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국가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50% 지원

7. 중요재산 관리 : 추후 결정

- 보조사업자가 시설물 설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지자체)로 귀속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 해당없음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당없음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모 절차에 따라 기 완료)

5.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 교부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시행자의 교부금 집행실태 등 점검

사업시행자

- 보조금 사용집행 등의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제재》

지방해양수산청

- 점검결과에 따라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기타사항》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이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광양항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보조금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과 장 전충남 사무관 박호진	044-200-5950 044-200-5957

I. 사업개요

1. 목 적

- 대형선박이 항내 정박 중 배출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설치하여 친환경 항만 구축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1항

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000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0년	00년	00년	00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000	-	-	-
- 국 비	80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1,200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3. 지원대상

- 광양항 제품부두 3선석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감리비, 부대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40%, 자부담 60 %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비에 대해 정부 40%, 여수광양항만공사 자부담 60%의 비율로 사업예산을 분담하고, '23년 사업비 8억원을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정부 부담 40%인 8억원
- 기준 및 범위
 -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사업 관련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감리비, 부대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 단, 사업시행 중 물가상승, 현장여건 변동 등에 따른 물량변경 및 추가로 발생하는 과업에 대한 금액은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사업완료 후 준공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예산 정산처리
 - 자기부담금을 우선 소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여 집행
 - * 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2항1호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자기부담은 국고보조금으로 선 집행
 - 설계기간 소요 및 공사 입찰공고 등 사업이 연내 완료가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이월하여 집행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3.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보조사업자에 통보(매년 12월말)

4. 사업자 선정단계 : 비공모 공공기관 보조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사업비 집행계획을 해당 사업 개시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통지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실시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집행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과 장 최국일 사무관 이민영	044-200-5960 044-200-5961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외 항만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 컨설팅 비용 등을 보조하여, 해외항만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고 수주 성과를 제고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지원사업건수(건)	3건	-	-	2	2	매년말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
- 국 비	900	900	900	900
- 지방비	-	-	-	-
- 자부담	매칭(30%)	매칭(30%)	매칭(30%)	매칭(3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개발 사업의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기업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 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개발 사업
 -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 관련 모든 공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업의 해외진출·투자사업 발굴·추진·수주 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대상 기업이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용역비(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인정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보조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별 3억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 가능
- * ① 국내 공기업이 참여한 K-컨소시엄 구성이 확정적인 사업, ②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 ③ 사업수주에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④ 최소수입보장이 있는 사업, ⑤ 수소항만 및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
- 지원 범위 :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용역비(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인정 불가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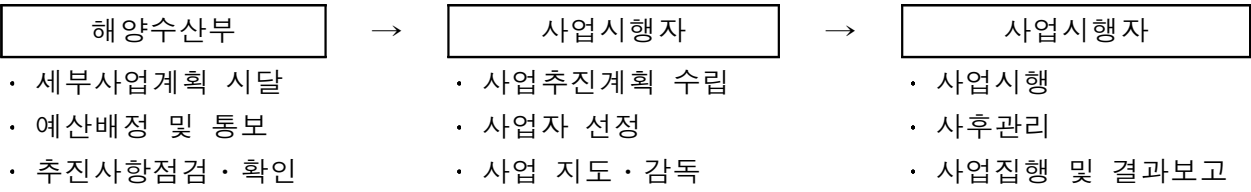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결정(해양수산부) : 2023.1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사업시행자) : 2023.2월
- 사업추진체계



3.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관리주체 : 사업시행자
- 공고시기 : 연 2회 이상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절차 : 기업 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2부(<별지 제2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 접수

4.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시행자(한국항만협회)
 - 항만산업 관련 연구기관,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컨설팅 총 소요비용에 대해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 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결과보고

해양수산부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관리주체가 보고한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홍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주 소 :			(Tel)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개요	대상국가 (국가명, 지역명)			사 업 명		
	발주처		발주처 종류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input type="checkbox"/> 공기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단체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사업 내용	○ ○				
	예상 사업비	백만불(USD)		사업기간	-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 ○				
	타당성 조사 추정금액	백만원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	
	사업 책임자	부 서		Tel		
직 위			Fax			
성 명			E-mail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항만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12부(전자파일 첨부)

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23.

(신청기업명)

※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표기업 기재

1. 지원신청 요약서

※ 모든 항목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표기

가.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명			영위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등에 따른 등록·허가 업종 기재		
	매출액/자 본금 (최근3년)	20XX년		영업이익 (최근3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영업이익률 (최근3년)	20XX년	20XX년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형태	<input type="checkbox"/> EPC <input type="checkbox"/> 투자개발형 <input type="checkbox"/> PPP <input type="checkbox"/> 설계,감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찰방식	<input type="checkbox"/> 공개경쟁 <input type="checkbox"/> 제한경쟁 <input type="checkbox"/> 수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금액			재원			
사업 주요 내용	○ ○ ○ ※ 사업 추진사유 등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추진 경위	○ ○ ○						
사업 추진 계획	○ ○ ○						
자금 조달 계획	○ ○ ※ 참여주체 및 투자주체별 투자비율 명시 등 구체적으로 작성						
기대 효과	○ ○ ○						
정부 합목 적성	○ ○ ○						
타당성 조사 내용	○ ○ ○						
보조금 신청 금액	○ 타당성조사 전체비용(vat.포함) : ※ 세부 산출근거서는 별도 첨부 ○ 보조금 신청 금액						
증빙 서류	<input type="checkbox"/> MOU <input type="checkbox"/> LOI <input type="checkbox"/> 관련 letter <input type="checkbox"/> 관련 의향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 국가·지역
- 예상 사업금액
- 예상 사업기간
- 사업재원
- 입찰(계약, MOU 등) 예정일 :
※ 개발사업 등 사업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사업내용

나. 추진경위

- 추진 및 지원신청 배경
- 사업 정보 입수 경위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 내용 등

3. 사업 실현 가능성

가. 재원조달 가능성

- 소요자금(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금액을 작성)

(단위 : USD, 원)

비 용 항 목	금 액
예시) 건설 비용	
예시) 토지 수용	
예시) 초기 운영비용	
.....	
총 액	

※ 비용항목은 신청기업이 추진사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USD, 원)

자 금 원	금 액	비중(%)	조달방법 또는 계획
총 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현재 시점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작성)

나. 대상국가의 사업추진 환경

○ 국가 신용등급

* S&P(Standard&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등의 발표자료

○ 사업 대상국 개요

구 분	내 용
국가명	
인구수	
수도	
정치 체제	
산업구조 및 비율	
수출입 규모(달러)	수출액 : 수입액 :
주요 자원	
경제적 강점 및 약점	

다. 사업시행 기관 개요 및 추진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예상 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 국가적 정책적 사업, 기존사업 및 연관사업 실적, 본 사업의 추진의지 등

< 발주처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

- 정부명 :
- 그간 추진현황 :
- 정부 정책 :
- 향후 추진계획 :

[illegible]

다.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사업의 국내외 수행실적 또는 수주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대상국가	사업금액	추진현황

-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대해 상세 기술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라. 신청기업의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마. 사업수행 계획

- 추진방식,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등

6. 사업 기여도

가. 수익성 및 수익구조

※ 구체적인 수익성 근거가 있으면 제시

나. 사업 기대효과

※ 외화가득 효과, 신흥 물류시장 진출, 신규화물 확보, 해당 사업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순위 상승 수준, 신청기업의 전체 사업 중 해외 물류사업 비중의 증가 수준 등을 기술

다. 정부지원의 합목적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 사업 여부(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에 대한 기업 간 의사결정(성사단계 / 협의단계 / 검토 단계 / 제안단계 등)을 증빙하는 자료 별도 제출

○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과 협업 가능성 여부

○ 신청기업의 정부 인증 획득 여부(최대 3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물류정책기본법」 등 물류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선정 등의 여부 작성(증빙자료 별도 제출)

※ 물류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이외의 부처로부터 인증·지정 등을 획득한 사례도 작성 가능(증빙자료 별도 제출)

○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파급효과

※ 국내 인력의 고용증가 효과, 연관산업 파급 효과, 국산 장비·기자재 활용 효과 등

○ 기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

7. 사업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사업제안서 작성, 기술적 타당성분석 등)

○ 타당성 조사 기간

○ 타당성 조사 전체 비용

※ 해당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재

구 분	비용(원)
• 총 사업비용	
• 타당성 조사 전체비용(추정)*	
- 국고보조금 신청 금액	
- 기업 부담 금액	

○ 타당성 조사비용 세부 산출 내역

※ 타당성조사 용역에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용 등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표기(견적서로 대체 가능)

※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해당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시: 직원 출장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8. 회사 소개서(자유 양식으로 별도 제출 가능)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신청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사업 선정과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정책 수립 등의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하고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000000000000 귀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한경록	044-200-5930 044-200-5914

I. 사업개요

1. 목 적

- 크루즈·해양관광 중심항만 육성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제주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25	233.7	74.8	45.4	53.5	연말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500	349	167	-
- 국 비	2,500	349	167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항 건설 업무 수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 이관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수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항만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25조, 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항 건설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23년도 제주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사업량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항 건설사업 중 '23년도 시행예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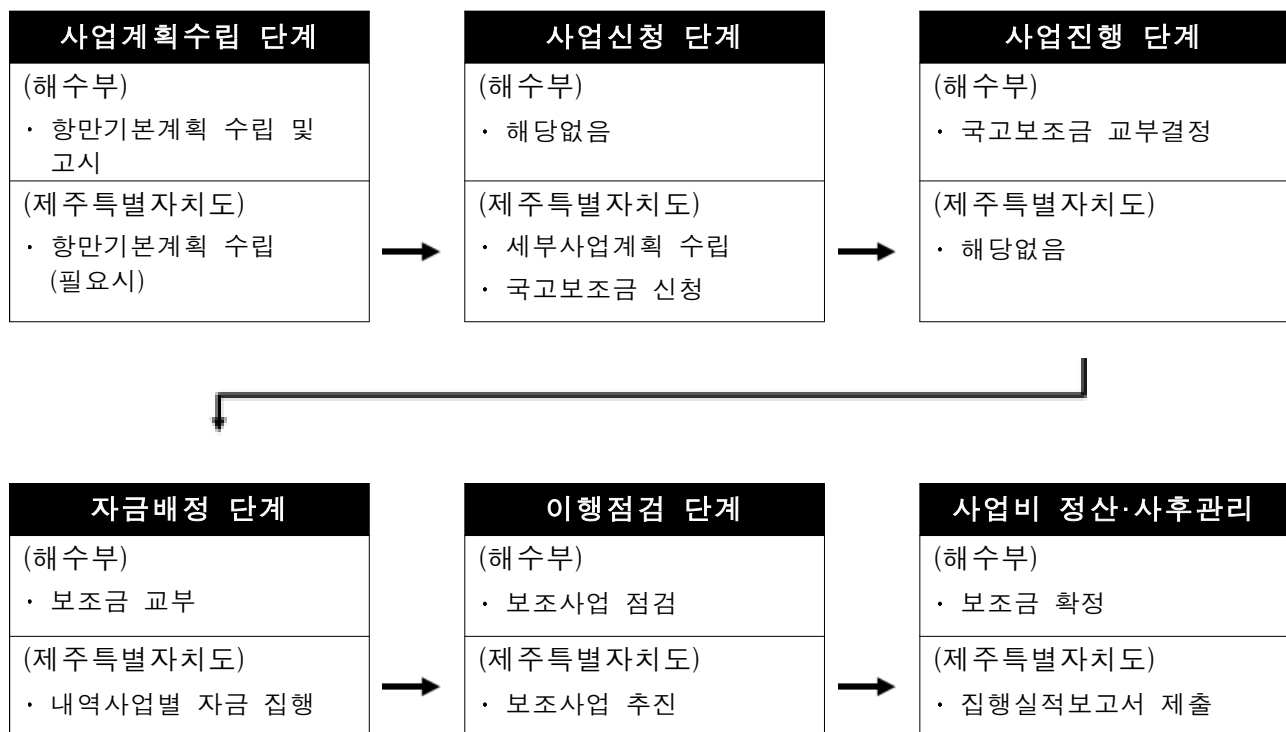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년도 사업량 및 예산
 - 육상전원공급장치설치 1식,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소요비용 2,500백만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정기계획 10년, 수정계획 5년)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 수립된 항만기본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요구(해양수산부)

3. 사업신청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기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5. 자금배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신청 시 자금배정계획 및 보조사업 추진계획·실적 등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제주항 사업 전에 종료 후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사업 전체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해양수산부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한경록	044-200-5930 044-200-5914

I. 사업개요

1. 목 적

- 제주 서남해역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 항만 및 제주 서남지역 원자재 중심 항만 육성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화순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78.8	10	47.9	51.7	99.4	연말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7,875	12,188	6,343	-
- 국 비	7,875	12,188	6,343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화순항 건설 업무 수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 이관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수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항만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화순항 건설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23년도 화순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사업량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화순항 건설사업 중 '23년도 시행예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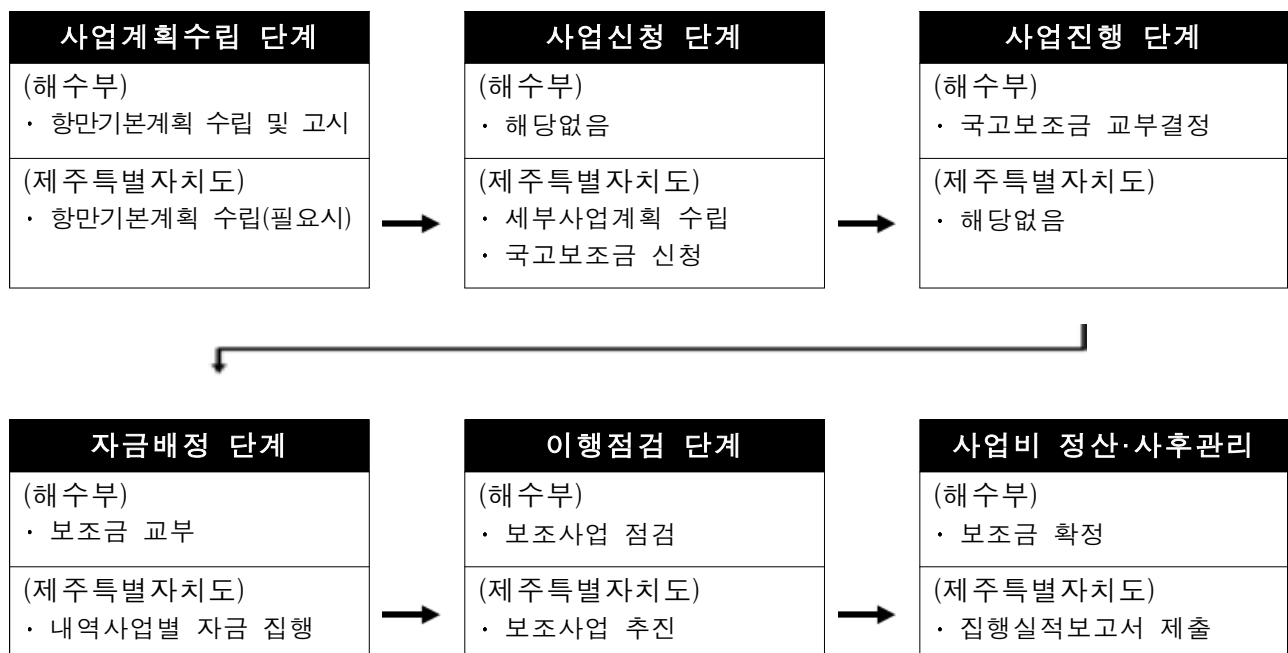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년도 사업량 및 예산
 - 진입도로 565m, 관공선부두 160m,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어업피해보상 1식 7,675백만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정기계획 10년, 수정계획 5년)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 수립된 항만기본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요구(해양수산부)

3. 사업신청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기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5. 자금배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신청 시 자금배정계획 및 보조사업 추진계획·실적 등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화순항 사업 전체 종료 후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순항 사업 전체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해양수산부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한경록	044-200-5930 044-200-5914

I. 사업개요

1. 목 적

- 남해서부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항만 및 지역주민 정주 편리 항만 육성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추자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22.9	30	28.7	37.1	68.9	연말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294	5,000	5,000	6,714
- 국 비	2,294	5,000	5,000	6,714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추자항 건설 업무 수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 이관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수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항만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추자항 건설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23년도 추자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사업량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추자항 건설사업 중 '23년도 시행예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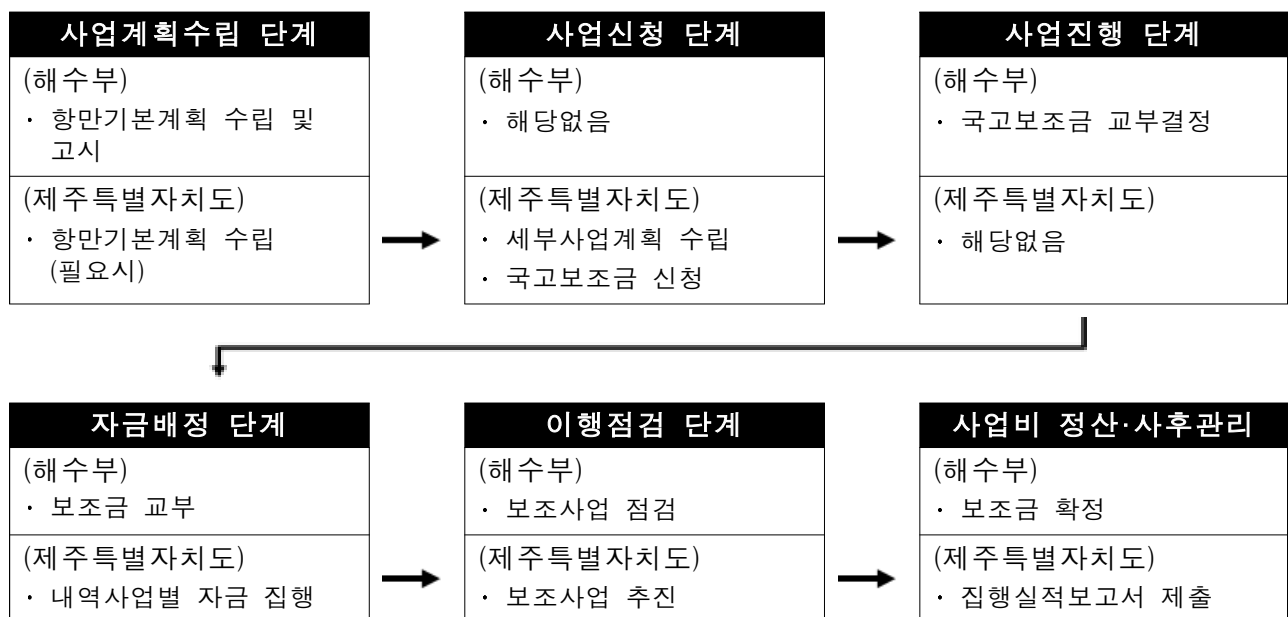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년도 사업량 및 예산
 - 물양장 정비 282m, 수제선 정비 162m, 파제제 230m 2,294백만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정기계획 10년, 수정계획 5년)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 수립된 항만기본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요구(해양수산부)

3. 사업신청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기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5. 자금배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신청 시 자금배정계획 및 보조사업 추진계획·실적 등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추자항 사업 전체 종료 후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항 사업 전체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해양수산부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한경록	044-200-5930 044-200-5914

I. 사업개요

1. 목 적

- 서귀포항 : 제주 남부지역 해상수송 지원 항만 육성
- 애월항 : 제주 서부지역 여객·물류 복합형 중추 항만 및 제주지역 에너지 공급항만 육성
- 한림항 : 제주 서부권 물류거점 및 여객지원 항만 육성
- 성산포항 : 제주 동부권 농수특산물·관광 전용항만 육성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제주일반항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116.2	146.5	142.0	151.3	129.1	연말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1,623	30,572	31,660	23,775
- 국 비	11,623	30,572	31,660	23,775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일반항 건설 업무 수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 이관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수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항만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25조, 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일반항 건설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23년도 제주일반항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사업량 :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일반항 건설사업 중 '23년도 시행예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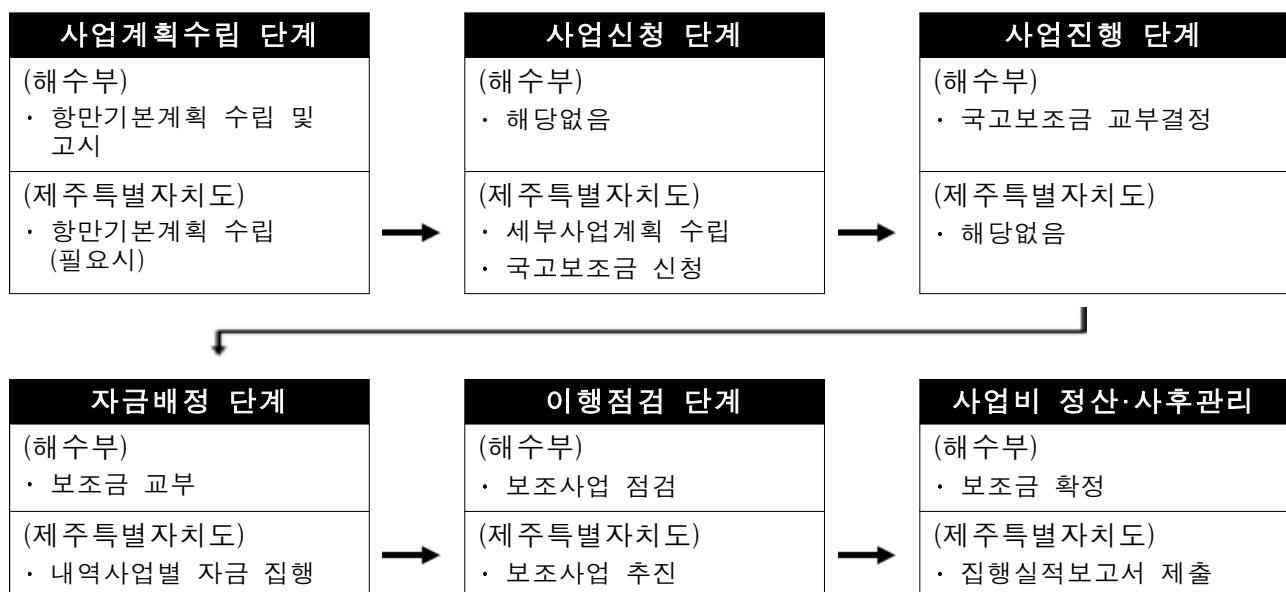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년도 사업량 및 예산
 - 서귀포항 재정비 1식, 애월항 동부두 확충 350m,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420m,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 390m, 진입도로 확장 400m 11,623백만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정기계획 10년, 수정계획 5년)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 수립된 항만기본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요구(해양수산부)

3. 사업신청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기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5. 자금배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신청 시 자금배정계획 및 보조사업 추진계획·실적 등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제주일반항 사업 전체종료 후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일반항 사업 전체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해양수산부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김규섭 사무관 한경록	044-200-5930 044-200-5914

I.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 항만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로 항만기능 정상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집행 (단위 : 억원)	115.0	58.8	89.6	125.4	75.0	연말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1,500	7,500	7,500	7,500
- 국 비	11,500	7,500	7,500	7,500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항만시설유지보수 업무 수행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무 이관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수행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항만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25조, 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23년도 항만시설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사업량 : 제주권 내 7개 항만의 유지보수사업 중 '23년도 시행예정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3년도 사업량 및 예산
 - 항만시설유지보수 1식 11,500백만원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정기계획 10년, 수정계획 5년) 및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 수립된 항만기본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요구(해양수산부)

3. 사업신청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 (기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5. 자금배정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부신청 시 자금배정계획 및 보조사업 추진계획·실적 등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전체종료 후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전체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해양수산부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PART

세월호후속대책

7.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①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과 장 김태환 사무관 박옥하	044-200-6270 044-200-6267

I. 사업개요

1. 목 적

- 4·16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관 운영비 지원

2. 근거법령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0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100	100	100	100	'23.12월	$\frac{\text{국고 보조금 교부율}}{\text{국고보조금 예산}} \times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56	356	356	356
- 국 비	356	356	356	356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가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수행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인천광역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

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356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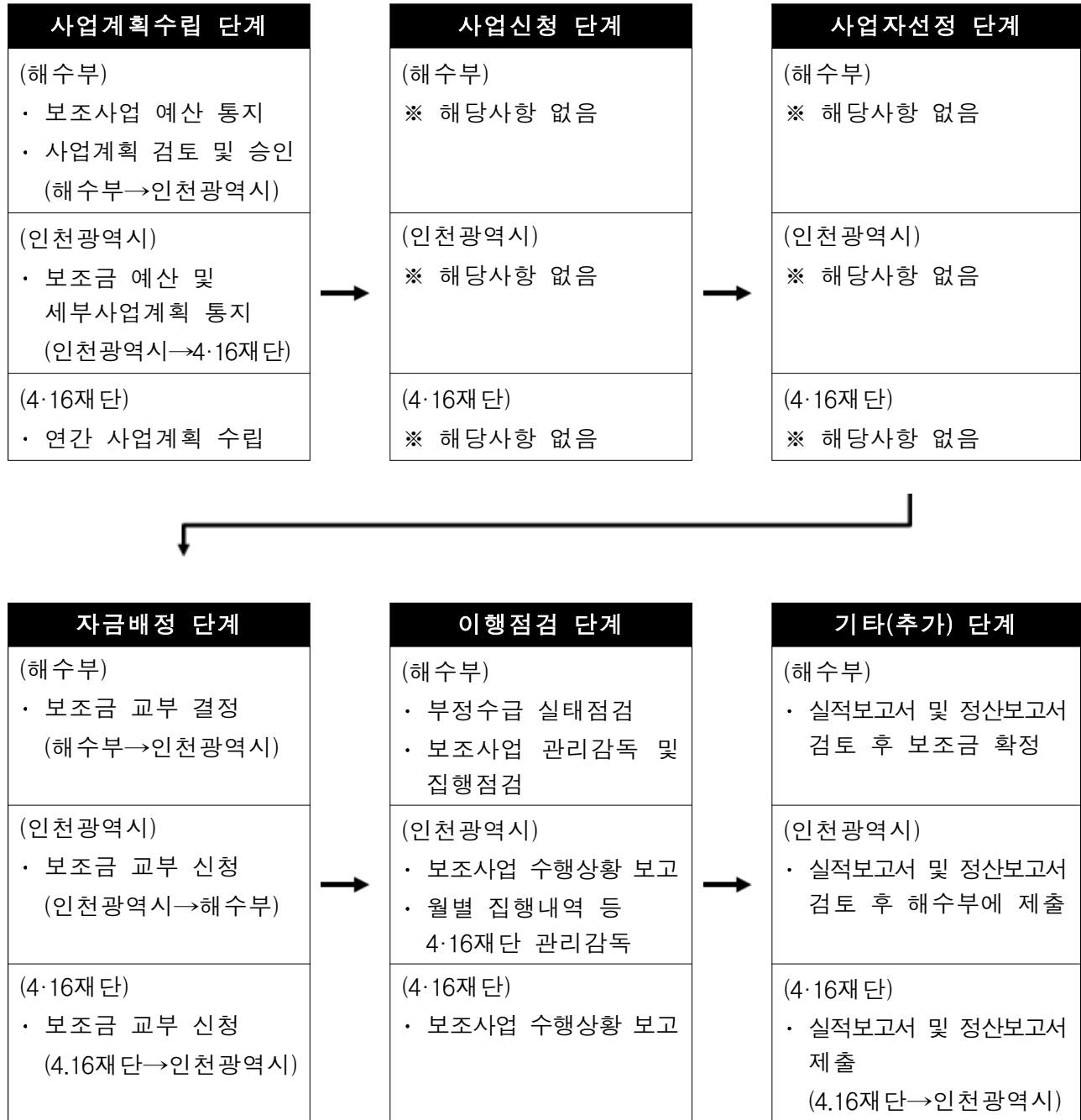
- 지원한도액 : 국비 356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매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 규모 결정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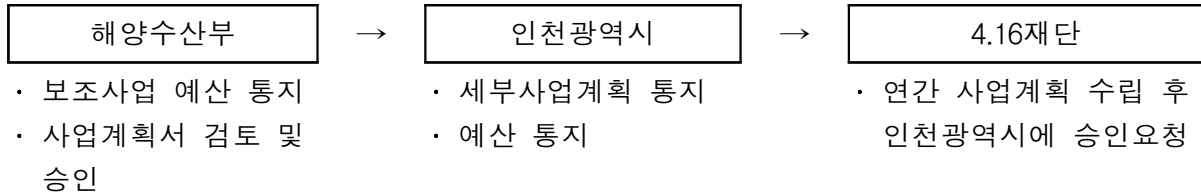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도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보조사업 시행 공고 및 계획 수립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인천광역시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우리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교부조건을 기재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시점 등
 - 지급방법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종료 후 3개월 이내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 점검항목 :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용도의 사용, 집행내역 등 부정수급 여부, 교부조건 준수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인천광역시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후 우리부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4·16재단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재》

해양수산부

-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② 안산 추모시설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과 장 김태환 사무관 배철수	044-200-6270 044-200-6271

I. 사업개요

1. 목 적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조성

2. 근거법령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6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안산 추모시설 건립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	100	100	100	'23.12월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국고보조금/교부금액) x100 보조금 예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1,758	13,417	12,353	-
- 국 비	9,290	12,388	12,353	-
- 지방비	2,468	1,029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경기도 안산시가 안산 추모시설 건립 사업 수행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 건립(경기도 안산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전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국고 9,290백만원, 지방비 2,468백만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9,290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9,29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매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으로 정함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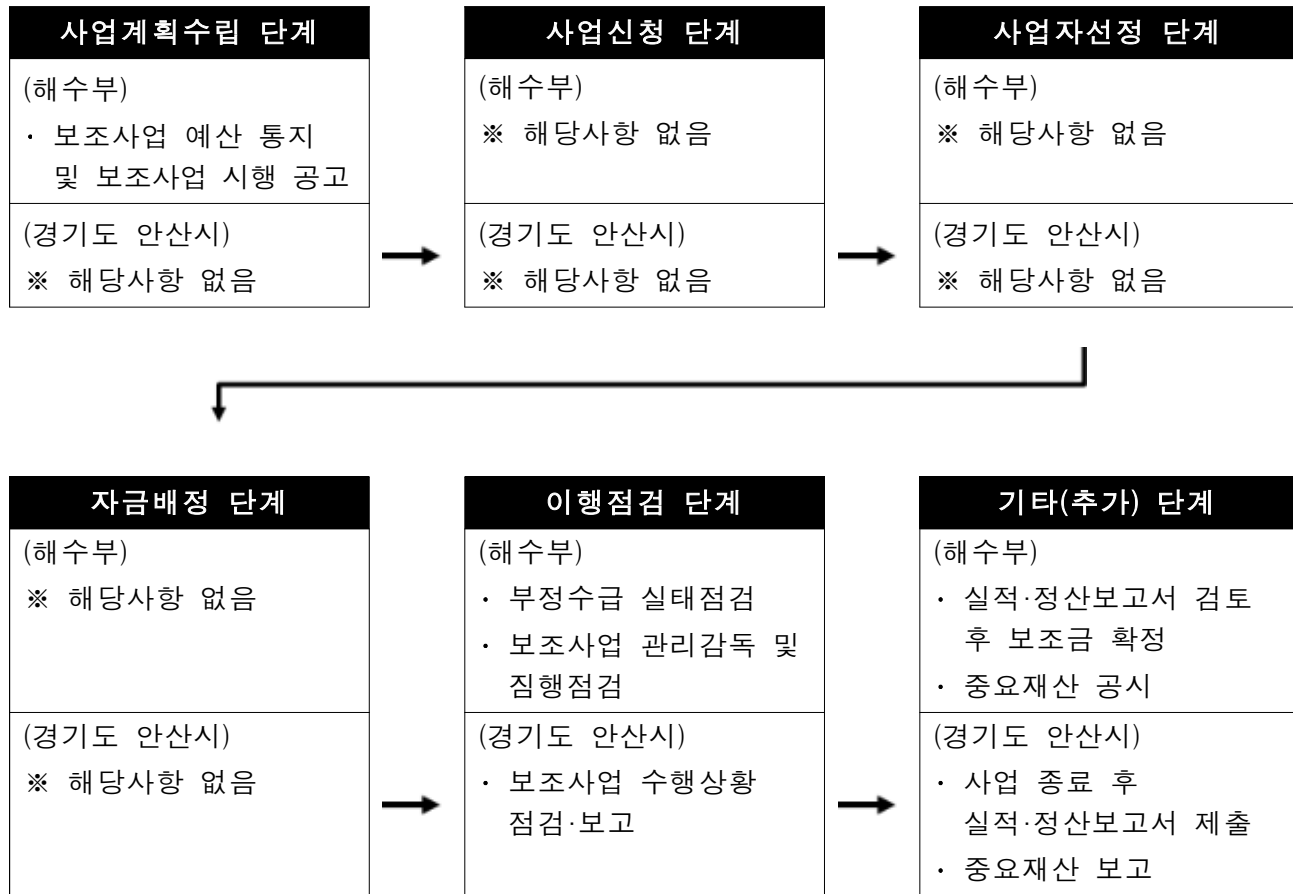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안산 추모시설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3년도 안산 추모시설 건립 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고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경기도 안산시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교부조건을 기재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시점 등
 - 지급방법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 점검항목 :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용도외 사용, 집행내역 등 부정수급 여부, 교부조건 준수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경기도 안산시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후 우리부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재》

해양수산부

-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안산시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우리부에 제출
 - 우리부는 안산시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③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과 장 김태환 사무관 배철수	044-200-6270 044-200-6271

I. 사업개요

1. 목 적

- 안산 추모시설과 연계하여 노후된 화랑유원지 재정비를 통해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근거법령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6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안산 추모시설 건립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	-	100	100	'23.12월	$\frac{\text{국고 보조금 교부율}}{\text{국고 보조금 예산}} \times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9,442	-	-	-
- 국 비	9,442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경기도 안산시가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수행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경기도 안산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

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국고 9,442백만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9,442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9,442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매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으로 정함

7.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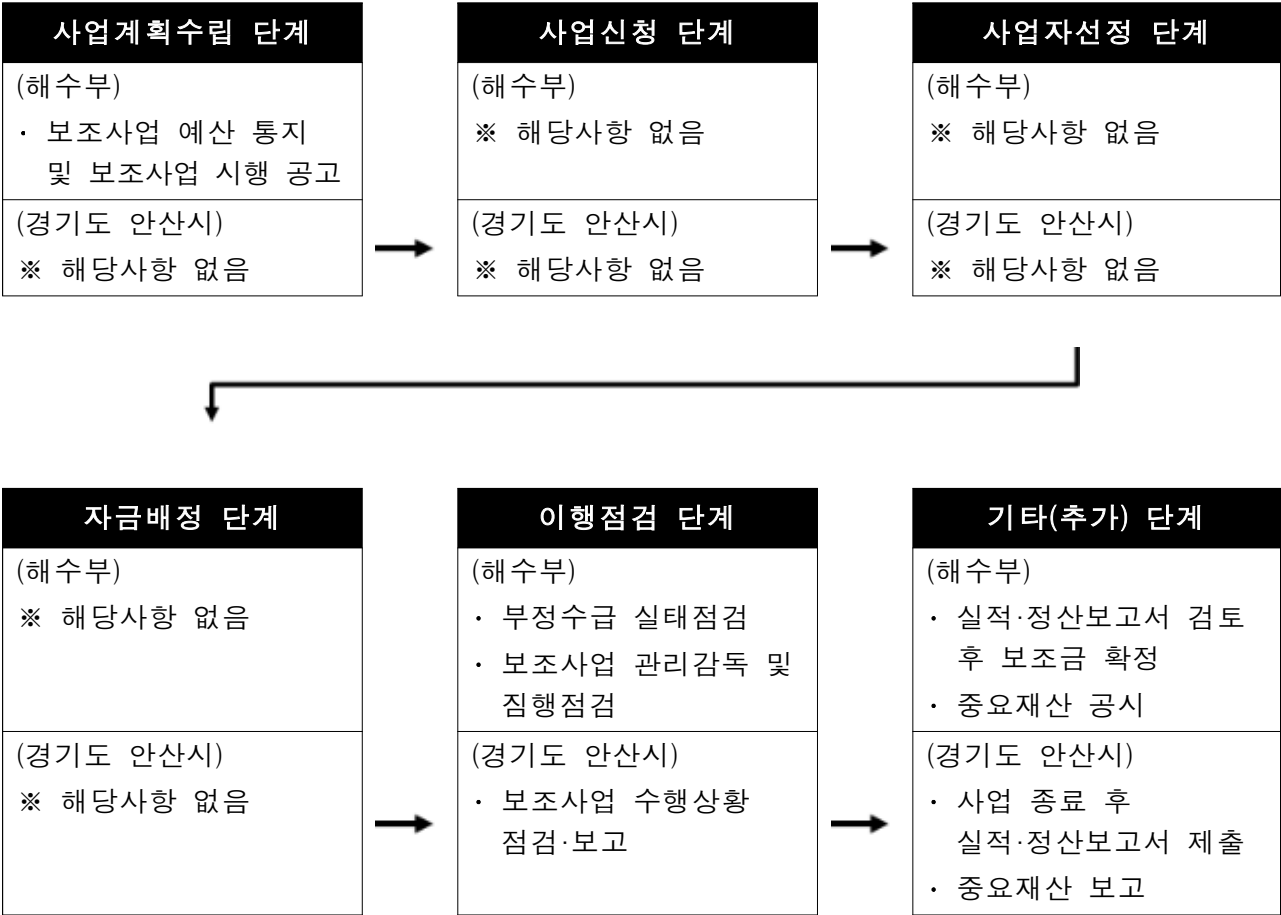
재산명	재산구분	사후관리기간
다목적체육시설 및 화랑F&B	부동산	준공일로부터 50년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3년도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고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경기도 안산시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교부조건을 기재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시점 등
 - 지급방법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 점검항목 :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용도외 사용, 집행내역 등 부정수급 여부, 교부조건 준수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경기도 안산시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후 우리부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제재》

해양수산부

-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안산시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우리부에 제출
 - 우리부는 안산시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④ 4·16재단 운영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과 장 김태환 사무관 배철수	044-200-6270 044-200-6271

I. 사업개요

1. 목 적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4·16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근거법령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0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4·16재단 운영 지원 사업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100	100	100	100	'23.12월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국부금액/보조금 예산)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110	2,110	2,110	2,110
- 국 비	2,110	2,110	2,110	2,11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4·16재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민법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된 4·16재단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19.2.27.)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3. 지원대상

- (재)4·16재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0조에 따른 추모사업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 지원기준 및 한도 : 2,1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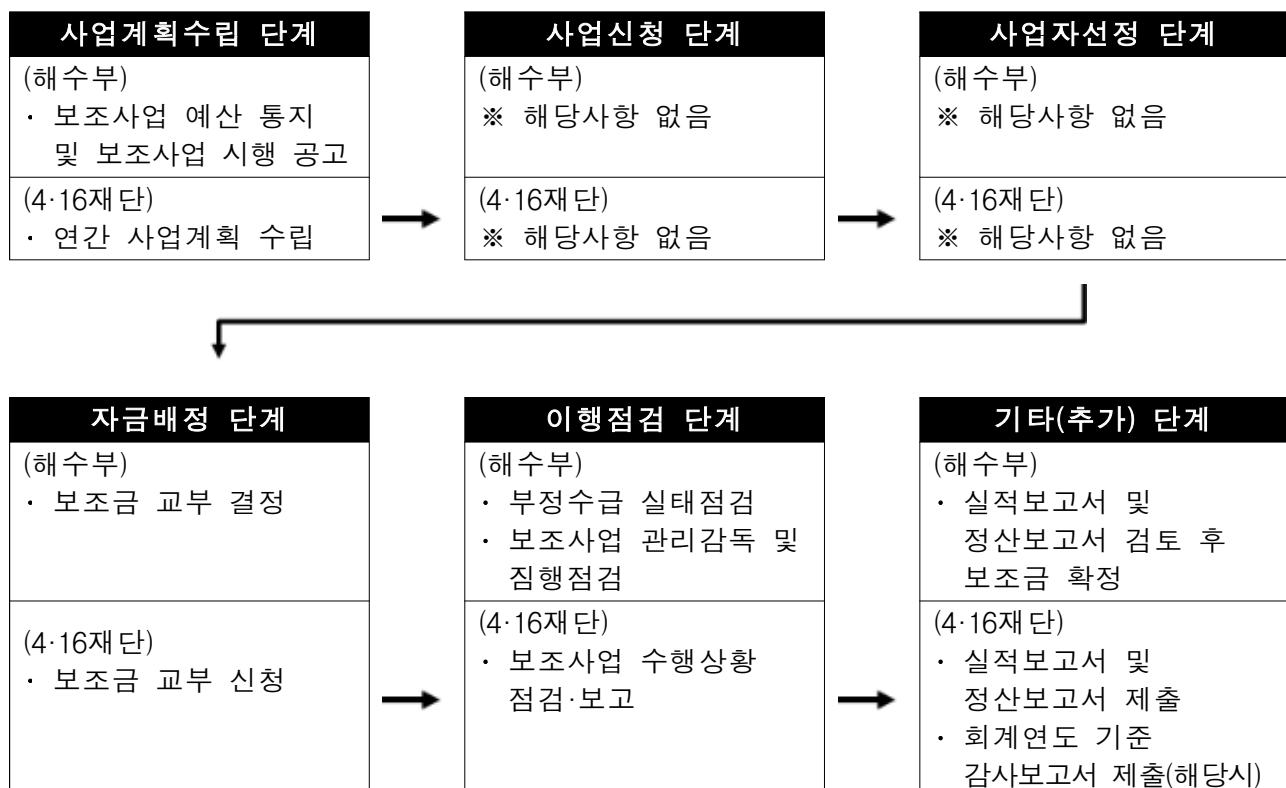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비 2,11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4·16재단 설립 후 10년간('19년 ~ '28년) 예산을 지원하며, 매년 재정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 규모 결정

7.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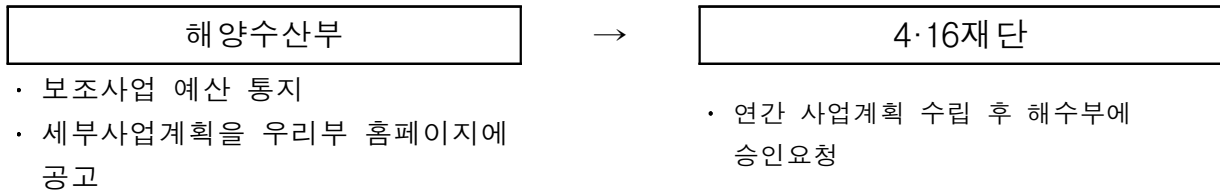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2. 사업계획수립 단계

- '23년도 4·16재단 운영 지원 보조사업 공고 및 계획 수립



3.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4.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5. 자금배정단계

4·16재단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 4·16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교부조건을 기재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 점검항목 :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용도의 사용, 집행내역 등 부정수급 여부, 교부조건 준수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4·16재단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후 우리부에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제재》

해양수산부

-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4·16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 및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정리하여 우리부에 제출
 - *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생략 가능
 - 우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관계법령·예규·지침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용도의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기부담금 집행)**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제시한 자기부담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시 동물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집행방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수익금의 국고반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있을 경우 국고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정명령 및 조사)**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10일 이내에**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의 이월제한 및 최소화 책무)**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자는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실적보고서의 제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출증빙자료 포함, 이하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산잔액 및 이자의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아래 각목의 경우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3. **(수익금의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용내역 증명서 구비 및 보존기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재산목록, 중요재산 관리대장 및 처분조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의 수익반환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관계법령·예규·지침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용도의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자부담금의 집행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의 집행원칙)** 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집행방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6. **(수익금의 국고반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경우 국고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사업자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라.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정명령 및 조사)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의 이월제한 및 최소화 책무)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실적보고서의 제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때,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출증빙자료 포함, 이하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산잔액 및 이자의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아래 각목의 경우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3. (수익금의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용내역 증명서 구비 및 보존기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재산목록, 중요재산 관리대장 및 처분조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관계법령·예규·지침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용도의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자부담금의 집행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의 집행원칙)** 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집행방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수익금의 국고반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있을 경우 국고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정명령 및 조사)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10일 이내에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의 이월제한 및 최소화 책무)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실적보고서의 제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때,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지출증빙자료 포함, 이하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산잔액 및 이자의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아래 각목의 경우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3. (수익금의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

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용내역 증명서 구비 및 보존기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재산목록, 중요재산 관리대장 및 처분조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2항의 수익반환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예규·지침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4·16재단 운영 지원」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자부담금의 집행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의 집행원칙)** 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집행방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수익금의 국고반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경우 국고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사업자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라.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정명령 및 조사)**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10일 이내에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의 이월제한 및 최소화 책무)**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공고·입찰계약 등)**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실적보고서의 제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때,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

히 한 계산서, 지출증빙자료 포함, 이하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산잔액 및 이자의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아래 각목의 경우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라. 그 밖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수익금의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용내역 증명서 구비 및 보존기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재산목록, 중요재산 관리대장 및 처분조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